

GOVP 12001790

통계보도기사모음집

('93. 1. 1~'94. 6. 30)

1994. 11

통 계 청

머 리 말

최근 우리사회는 안팎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밖으로는 우리나라가 '96년에 OECD에 가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등 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통계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우리 통계청에서는 통계의 신뢰성 제고와 신규통계개발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지난 '90. 12. 27.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통계청으로 승격된 이후 국가통계발전을 위하여 기본통계의 개선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각종 지역통계개발에 주력하여 지역내 총생산(GRDP) 및 지역산업활동동향 등의 통계를 생산하여 지역경제정책 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에 대한 인식제고와 조사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사통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통계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망(KOSIS)을 통하여 통계자료를 확대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확대하여 통계자료 제공범위도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 승격이후 '94년 상반기까지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등에 보도된 각종 통계관련 기사를 종합정리하여 통계청의 발전과 위상을 재정립 해보는 의미에서 「통계보도기사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통계를 통한 당시의 경제사회상을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여 놓은 것으로서 향후 국가통계발전과 홍보방향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부문은 물론 기업경영과 연구분야에서도 유익하게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그간 통계조사와 보도에 협조하여 주신 조사대상처와 각 언론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청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4. 11.

통계청장 이 강 우

목 차

□ '93년 1/4분기(1~3월) 보도기사

○ '91년 광공업통계조사 결과	5
○ 남한 사는 북한출생 인구	10
○ 한국표준직업분류 제4차 개정 결과	11
○ 구두 미화원과 언어(言語) 인플레이	14
○ '92년 한국의 사회지표	16
○ '92년 한국의 사회지표관련 사설	24
○ '90년 기준 산업생산지수 개편결과	25
○ '93년 1월중 소비자물가동향	27
○ '93년 1월중 소비자물가동향관련 사설	32
○ '9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33
○ '9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35
○ 제조업 고용창출로 실업을 줄여야(사설)	36
○ 서비스업 고용편중의 심각성(사설)	37
○ '92년 4/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38
○ 실업률 통계 현실과 거리 멀다	40
○ '93년 2월중 소비자물가동향	41
○ '93년 1월중 산업활동동향	43
○ '93년 1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45
○ '92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47
○ '93년 2월중 산업활동동향	49

□ '93년 2/4분기(4~6월) 보도기사

○ '93년 3월중 소비자물가동향	55
○ '93년 3월중 소비자물가동향관련 사설	58
○ 통계 '공표협약' 존폐 논란	60
○ '90년 기준 도·소매 판매액지수 개편 결과	61
○ '93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	62
○ '93년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64
○ '93년 4월중 소비자물가동향	65
○ '93년 1/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67
○ '93년 1/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68

○ 지난 10년간('83~'92년) 실업구조의 변화	71
○ 경기 좋다는데 실업 왜 느나(사설)	74
○ '91년 가구소비실태조사 결과	75
○ '85~'91년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결과	77
○ '85~'91년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결과관련 사설	88
○ 張明秀 칼럼 (지역총생산)	93
○ 지역내총생산(GRDP)관련 만화	94
○ '93년 5월중 소비자물가동향	95
○ '93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	97
○ '93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98
○ 한국의 고령자실태분석	100
○ 한국의 고령자실태분석관련 사설	105
○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제조업 취업자수 추월	108
○ '93년 5월중 산업활동동향	110

□ '93년 3/4분기(7~9월) 보도기사

○ '93년 5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117
○ '93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119
○ 세계인구의 날에 살펴본 「한국인구」	123
○ '92년 건설업통계조사 잠정결과	128
○ '92년 도·소매업통계조사 결과	132
○ '93년 6월 및 상반기 산업활동동향	136
○ '93년 6월 및 상반기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138
○ '93년 7월중 소비자물가동향	139
○ 경제교실(물가통계)	140
○ '92년 인구이동 집계결과	146
○ '92년 인구이동 집계결과관련 사설	152
○ '92년 서비스업통계조사 결과	153
○ 통계로 본 광복 전후의 경제·사회상	156
○ '93년 2/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164
○ '93년 2/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167
○ '93년 7월중 산업활동동향	168
○ '93년 8월중 소비자물가동향	170
○ 지역내총생산(GRDP) 업무 이관 싸고 내무부와 시·도 승강이	172

- 지난 30년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변화 173
- 경기종합지수 개편 178
- '93년 8월중 산업활동동향 178

□ '93년 4/4분기(10~12월) 보도기사

- '93년 9월중 소비자물가동향 185
- 통계자료 접근 쉬워진다. 186
- '92년 운수업통계조사 결과 187
- 국감현장(통계청) 189
- 통계청 자료 일반개방, 내년 PC통신망 통해 189
- '93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190
- '93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관련 사설 193
- 통계 이야기(외식비) 194
- '93년 9월중 산업활동동향 195
- '93년 10월중 소비자물가동향 197
- 통계 이야기(성장과 물가) 201
- 통계조정기능 개선 방향 202
- '92년 광공업통계조사 결과 205
- 경제를 알자(「물가 상승률」 계산 어떻게 하나) 208
- '91년 생명표 209
- '93년 10월중 산업활동동향 214
- '93년 11월중 소비자물가동향 216
- '93년 3/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218
- 시·도별 평균수명 비교 222
- '93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223
- '93년 사회통계조사 결과(교육·문화·여가 부문) 226
- '92년 사망원인 통계 232
- 통계청도 경제전망 내린다 238
- '93년 12월중 소비자물가동향 239
- '93년 11월중 산업활동동향 240

□ '94년 1/4분기(1~3월) 보도기사

- 경제지표 예보작업 활기 247
- 정부통계 일반에 팝니다 247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248
- 통계청장 피부물가 현장답사 249
- 통계청 국산 주전산기 도입결정 250
- '93년 한국의 사회지표 251
- '9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259
- 경제공부 합시다(물가지수) 264
- 경제데이터 이렇게 보자(물가지수) 265
- '94년 1월중 소비자물가동향 266
- '94년 1월중 소비자물가동향관련 사설 271
- 새 경제통계 많이 생긴다 272
- 이 아침에(통계를 통한 진단) 273
- 통계청장에 들어본 요즘 경기 274
- '94년 2월중 소비자물가동향 276
- '94년 1월중 산업활동동향 280
- '93년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286
- '93년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설 290
- '93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291
- '94년 3월중 소비자물가동향 292
- '94년 2월중 산업활동동향 294
- '94년 2월중 산업활동동향 및 3월중 소비자물가동향관련 사설 301

□ '94년 2/4분기(4~6월) 보도기사

- 한국통계월보('94. 2월호)에서 본 통계 특징 305
- 지난 30년간 국민건강수준 변화 309
- 통계로 본 주요질병 316
- 통계로 본 노후관(노령인구 매년 급증세) 318
- 다이제스트 경제학(물가통계 허실) 320
- 경제데이터 이렇게 보자(경기종합지수) 321
- 통계정보 일반에 공급확대 322
- 한국통계월보('94. 3월호)에서 본 통계 특징 327
- '94년 4월중 소비자물가동향 331
- '94년 3월중 산업활동동향 333
- '94년 3월중 산업활동동향관련 사설 340
- 여성사회참여 확대의 이모저모 342

○ 그린 GNP를 아십니까	347
○ 경공업에도 근로자가 돌아온다	348
○ 우리나라의 가정현황	349
○ 우리나라의 가정현황관련 사실	355
○ 이번 경기회복 완만한 편('85, '89년 시점과 비교분석)	357
○ 국가통계조사 상승 불응자 고발 검토	358
○ '94년 1/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	358
○ '94년 1/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관련 사실	364
○ '94년 5월중 소비자물가동향	368
○ '94년 4월중 산업활동동향	370
○ 소비자물가 어떻게 조사하나	372
○ '92년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결과	373
○ 지자체 실시 앞두고 지방통계 수요는 폭증하는데 통계 조직은 되레 감축	383
○ 생필품 값 「정부억제선」 3배 이상 뛰어	387
○ 주당 근로시간 매년 늘어난다	388
○ 그림으로 보는 보건의료(늘어나는 노인인구)	388
○ 노령화 추세 급속히 진전	389
○ '94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390
○ '94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관련 사실	397
○ '94년 6월중 소비자물가동향	398

1993 년 보 도 기 사

여 백

1/4분기 보도기사

(1월~3월)

여 백

제조업인력 3년째 減少

91년 鑛工業등 重化學비중 매년 커져

91년도 국내 광공업(鑛工業)은 성장세가 둔화되고 제조업 인력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전년에 비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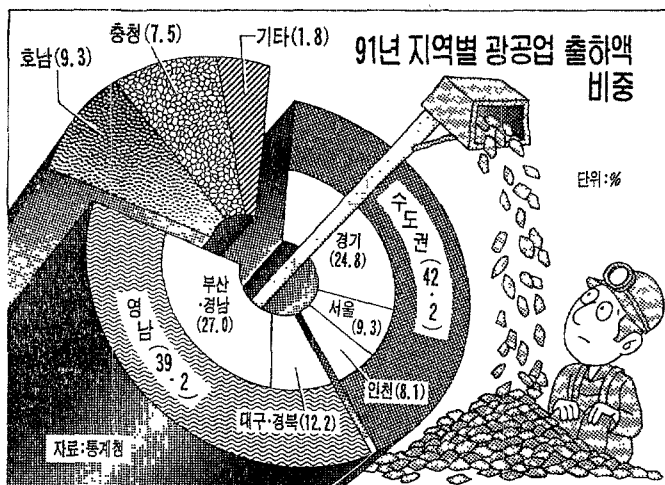
제조업 인력 수는 89년 이래 3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계 설비 등 유형 고정자산의 비중도 91년 20.9%로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광공업의 비중은 20.8%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인력 중 고령 인력 비중이 19.3%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15~24세 인력은 19.3%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제조업 인력 중 15~24세 인력은 19.3%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15~24세 인력은 19.3%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제조업 인력 중 15~24세 인력은 19.3%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15~24세 인력은 19.3%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감소했다.

전년도보다 각각 20.8%, 17.8%나 크게 증가했지만 이 증가율은 91년에 비하면 모두 1%포인트 이하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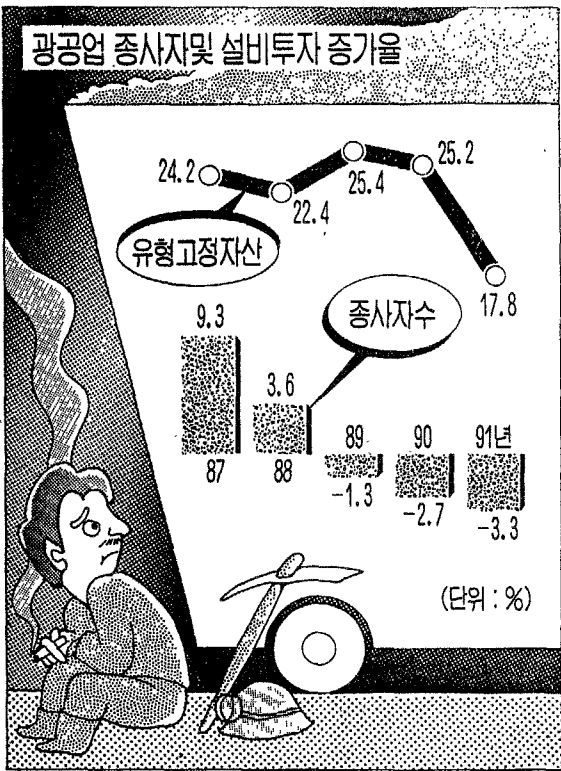


鑛工業종사자 3년째 줄었다

광공업 종사자 인원이 3년째 줄어든다는 소식이다. 91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공업 종사자 인원은 87년 24.2%에서 88년 22.4%, 89년 25.4%, 90년 25.2%, 91년 17.8%로 줄었다.

과외 파견업체 91년 말 현재 광공업 부문에 91년 말 현재 5만 9천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는 87년 5만 9천 명에 비해 5%가 줄었다.

광공업 종사자 인원이 3년째 줄었다. 91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공업 종사자 인원은 87년 24.2%에서 88년 22.4%, 89년 25.4%, 90년 25.2%, 91년 17.8%로 줄었다.



통계청 「91년조사결과」

自動化대체... 고정 부가가치·出荷額

業體 57% 몰려

91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공업 종사자 인원은 87년 24.2%에서 88년 22.4%, 89년 25.4%, 90년 25.2%, 91년 17.8%로 줄었다. 이는 87년 5만 9천 명에 비해 5%가 줄었다.



93. 1. 7

90년도와 경우 출하액 증가율이 18.7%부가가치액이 23.2%로 말해 91년도보다 2.8%포인트 이상 높았다.

출하액의 산업별 증가율은 철강업이 10.1%, 기계·정밀업이 10.0%, 화학·정유업이 9.9%, 섬유·의복업이 9.8%, 금속·기계·정밀업이 9.7%, 기타 9.6%로 나타났다. 이중 기계·정밀업이 2.8%포인트 상승했다.

만 7천5백45개로 전체 광공업체수의 23.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의 기계·정밀업 9천1백43개로 12.3% 증가, 철강업이 5천8백85개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출하액 비중의 상승은 화학업이 13.4%로 가장 높고 다음의 섬유·의복업 13.1%, 기타 12.7%, 운수장비 11.1% 순이다. 이들 4개

다나 중소기업에서 자동화 설비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왕성한 편이므로 조사됐다.

산업체수 증감을 시도별로는 보면 수출과 부산 판매 각각 0.5%, 0.9%, 2.7%씩 감소한 반면 수출과 대외시장의 증가율은 10%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도시의 업체들이 주연이므로 증가하고 있음에 보였었다.

출입체수의 57.3%가 수출과 인천 경기의 불황으로 불이 수도권 업체만이 계속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규모와 몇몇 출하액의 산업별 순위가 크게 부각됐다. 철강업이 산업체수의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자산의 비중 전체의 13.7%만 차지하고 있다. 17.4% 출하액의 비중이 20.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대외시장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수출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통계청)

자산은 늘어 증가세 둔화

수도권 집중과 여진

9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연의 비중은 8.3%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11%의 증가가 각각 감소한 것이며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과 여진 1

수도권 지역의 전체 출하액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여진 10 36.6% 20 49 30.4%로 나타

◇지역별 분포 <단위=%>

구분	91년		91년	
	사업체수(개)	증감률	출하액(10억원)	증감률
전국	73,997	5.0	204,465	15.8
서울	17,436	-0.5	19,209	4.5
부산	7,013	-0.9	13,519	0.3
대구	5,018	4.0	6,807	18.4
인천	4,800	8.5	16,496	14.3
광주	784	-2.7	3,595	20.4
대전	1,141	14.3	3,472	11.6
경기	19,375	5.8	50,732	15.3
강원	1,317	7.9	3,404	18.5
충북	1,388	18.3	6,699	30.9
충남	2,059	12.9	5,143	27.1
전북	2,122	7.4	4,733	29.0
전남	2,723	11.6	10,587	20.0
경북	3,871	17.8	18,096	18.9
경남	4,712	8.7	41,769	21.1
제주	238	2.1	203	17.3

부가가치액과 86주8천2백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有形 고정자산 총액은 91주2천200억원으로 17.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율은 총이익이 18.7% 부가가치액이 23.2%, 유행 고정자산이 25.2%씩 각각 늘어난 것인 90년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란 평론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형 고정자산이 큰 폭이던

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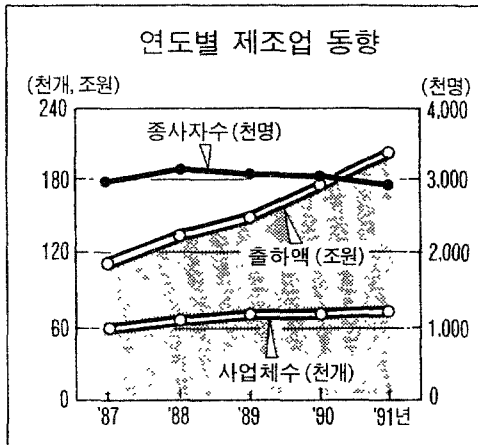
힘은 생산직 인력을 기계자동화설비로 대체하려는省力化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성장 둔화속 업체 7만4

(# 7.1%) △음식·담배(# 3.3%) △1차금속(# 2.4%) 등 은 증가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 △대전(14.3%) △충남(12.9%) △전남(11.6%) 등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과 공업단지 조성 등이 불을 이루고 있는 대도시 주변 市道의 사업체 신설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총이익은(충북)30.9%(전북)29%(충남)27.1%(광주)20.4%(경북)21.1% 등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며 유망업종의 규모가 장래 市道인京畿로 50주까지 3백20억원이었고 다수의 기업서울 결과를 보였다.

연도별 제조업 동향



統計廳 「91년 10월 10일 현재」 발표

제조업, 판매 등 業
業부의 성장세가 둔
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
간, 자영업 등 대차하기 위
중자수준 감소세를 지
속하던 것이 눈에 나
다졌다.

7월 통계청이 발표한 「91년 10월 10일 현재」 제조업, 판매 등 業부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간, 자영업 등 대차하기 위중자수준 감소세를 지속하던 것이 눈에 나타났다. 또 수출업의 2월 4주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
금수출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사람마저 구하기

사자 3년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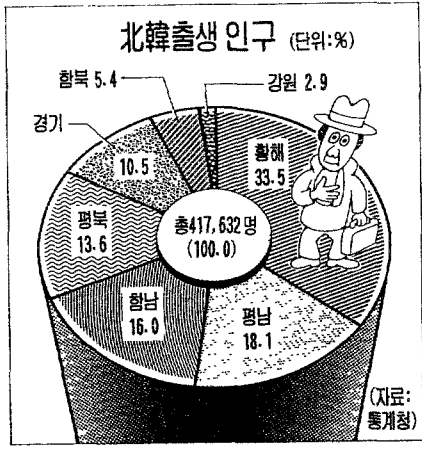
自動化투자 꾸준히 늘어 천곳... 90년보다 5%증가

이전년대비 10%나 감
소한 것을 비롯, △공부
플래그(마이너스) 8.
1% △가구 및 기타()
8.2% △전기·통신

또 수출업의 2월 4주
호황이 눈에 인하여 대
규모의 투자로 수출업
제조업이 36.4%나 늘
어난 것을 비롯, △비금
수출(28.7%) △스기
계·장비(25%) △의료
광학기기(22.1%) △
목재·나무(20.2%)
△선유·화학(18.2%)
△1차금속(15.8%)
△음식·담배(15.5%)
등이 비과전 부문의 신
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수출업 외 대
한 비중이 50%인 5
백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가 47.3%를 차지, 전
체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3백~4백99인
이 7.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사
업체수가 전년 대비 0.
5% 감소한 것을 비롯
△부산(마이너스) 0.
9% △광주() 2.
7% 등 대도시 지역은
사업체수가 줄어드는 추
세를 보인다. 반면 △충북
(18.3%) △전북(17.



통계청 90년11월 현재 조사

현재 南韓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北韓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흔히 우리가 1천만

이산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숫자에는 이산가족 당사자 뿐만 아니라 2세들도 포함한 것

이어서 실제 北韓출신 인구(北韓에서 출생한

南韓사는 北韓출생 41만 7천여명

전체人口 1%...60代가 13만여명
서울·京畿·仁川·釜山順 많이살아
黃海道출신 最多...통일원 "너무 적다" 의아해

사람)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0년11월 1일 현재 南韓

에 살고 있는 北韓출신 인구는 모두 41만 7천 6백 32명으로 南韓전체 인구의 4천 3백 41만 1천 명의 1% 수준이었다.

北韓출신 인구 가운데 6·25 당시 20대 이전 60·69세 연령층이 전체의 31.3%인 13만 7백 93명으로 가장 많았

는데 이 숫자는 이 연령 대 전체인구의 6%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35·39세의 北韓출신 인구는 4천 6백 71명이 포함돼 있으며, 40·44세의도 3만 6천 7백 50명이 들어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러나 70세 이상의 연령층은 사망으로 인해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北韓출신 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23만 3천 7백 64명, 여자가 18만 3천 8백 68명으로 여자 1백 1천 9백 24명(남자 27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北韓출신 사람들의 사는 지역은 서울이 18만 2천 9백 81명(전체의 43.8%)을 차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京畿 8만 4천 3명(20.1%) ▲仁川 4만 7천 98명(11.3%) ▲釜山 2만 8천 9백 23명(6.9%) 등의 순이었다.

충이구에 대한 비율은 仁川이 인구 1백만명 중 2·6명이 北韓출신으로 가장 높고 서울(1·7명) 京畿(1·4명) 江原(1·3명) 등이 그 뒤를 이어 北韓전지역에 北韓출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北韓 출신 사람들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黃海道 출신이 13만 9천 8백 50명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平南 7만 5천 6백 21명, 18.1%(咸南) 6만 6천 6백 32명, 16%(平北) 5만 7천 68명, 13.6%(咸北) 2만 4천 5백 29명, 5.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통일원은 통계청이 파악한 北韓출신 인구가 예상보다 너무 적다며 이를 제기했으나 통계청이 조사요원들이 가구별로 직접 방문조사한 것이어서 정확한 집계 '라고 밝혔다.

〈朴義後기자〉

로봇조종원등 35職種 새로 추가

統計廳 「표준직업분류」 19년만에 개정

첨단산업·여성관련직종 세분화

각종 직업을 제 몇 관련 정 책과 사고보상기준등에 쓰 이는 標準직업분류가 지난 74년 이후 19년만에 개정, 고시됐다.

통계청은 11일 급속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職務 內容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직업분류단계를 세분 화하고 새로운 직종을 추 가하는 등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 「92년 韓國표준직 업분류」를 고시, 금년 1 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

다. 새 표준직업분류는 분 류체계를 종전의 4단계에 서 대·중·소·細·細細 분류 등 5단계로 나뉘, 직 업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국제표준교육분류(ISC ED)에 따른 교육수준별 직업분류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양으로 우리나라 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 는 직업의 종류는 종전의 8개 대분류·83개 중분류· 2백86개 소분류·1천5백 32개 細분류에서 10개 대분

류·28개 중분류·1백16개 소분류·3백97개 細분류· 1천5백67개 細細분류로 바뀌어 35개 직종이 새로 추가됐다.

새 표준직업분류에는 특 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반영, 비서·보모·모델 등 여성관련직종의 분류가 세 분했고 종전에 없었던 점 단산업의 등장에 따라 컴 퓨터시스템설계·프로그 램 위화작업을 해설했다.

또한, 「UN」식 명칭 바꾸기도

「UN」식 명칭 바꾸기도

이런 직업을 말하는데 직업의 종 으로 지류는 약 3만종의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많은 종 류의 직업을 일일이 늘어 놓아 가지고는 직종별 통 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종 직업을 일 의 성격에 따라 비슷한 것 끼리 묶어 체계적으로 모 아놓는 것이 직업분류이고 이를 통계법에 따라 국가 적으로 통일한 기준이 표 준직업분류다.

이같은 표준직업분류는 직업에 관한 각종 통계정 보를 수집하는데 쓰이려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인력 수급정책, 직업교육에 정 부의 정책에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표준직업분 류는 지난 63년 처음 만들 어진 후 지금까지 모두 4 번 개정됐는데 이번에는 지난 74년 이후 19년만에 이루어진 전면개편으로 분 류체계가 대폭 바뀌었 다.

마침 UN에서 지난 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를 20년만에 개정, 각국이 이 를 적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표준직업 분류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3년여의 작업 끝에 개정분류를 내놓게 된 것 이다.

〈金鍾秀 기자〉



「解說」

직업이란 돈벌이(경제활동)를 위해 개인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같이 많은 종류의 직업을 일일이 늘어 놓아 가지고는 직종별 통계가 불가능하다.

새 직업분류 35개 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파
라 산업구조변동지수(중
점부동산지수와 비교비
율)에 의해 산업구조변
동지수의 새로운 지수로
분류된다.

또 행정인구부미화원
수공예노동자 등 비공식
부문직종의 취업현황도
통제로 잡히고 구두파의
장수부 패업의 취업
이탈도 구두미화원 취업
미화원 취업현황이
분류된다.

통계청 표준직업 개정

대한민국표준직업분류
를 기존의 1천5백32개
에서 1천5백67개로 늘
려줄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74년
직업분류를 개정한 이래
직업이 다양화되고 첨단
산업이 발달하는 산업
구조가 바뀐에 따라 약
20년만에 개정된 것이
다.

이와따라 앞으로는 기
업들이 끊임없이 수단을
지급하거나 보험회사에
서 교통사고보상외과생
명보험의료비 등을 지급할
때 새로운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삼게된다. 뿐
만 아니라 정부에서 작성

하는 養老보상기준이나
직종별 심정표도 바뀌게
된다.

이전에 개정된 직업분
류의 특징은 ▲첨단산업
직종 추가 ▲여성직업의
참여가 활발해진데 따른
여성직종세부 ▲세미업
등 비공식부문의 추가 ▲
日帝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직업명칭의 변경을
우선 첨단산업직종을
보편 기준의 「체계분석
기술훈은 컴퓨터보조원
으로, 「기타자동차리기
조직원은 컴퓨터 조
직원으로 각각 분류됐

다. 「기타 자동차기기
조직원」은 컴퓨터 조
직원으로 각각 분류됐

또 앞으로는 세부자료
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직
종에서의 취업정보도 알
수 있게 된다. 수공예근
로자(목재 섬유 가죽) 행

여성관련·尖端산업 부문등 細分 기존 1천532개서 1천567개로 늘어

가든 컴퓨터시스템설계
가 컴퓨터시스템분석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등
로 세분화되고 전자기포
로그래머는 컴퓨터프로
그램머로 바뀌었다.

또 기타 전기 및 전자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단
자에서 「기술인」로 명칭
했다.

이와함께 직종의 명칭
이 「기타」이므로 풀
나는 직업이들도 日帝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취

다. 「기타 자동차기기
조직원」은 컴퓨터 조
직원으로 각각 분류됐

다. 「기타 자동차기기
조직원」은 컴퓨터 조
직원으로 각각 분류됐

孫熙植기자

주택임대차 계약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계약이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는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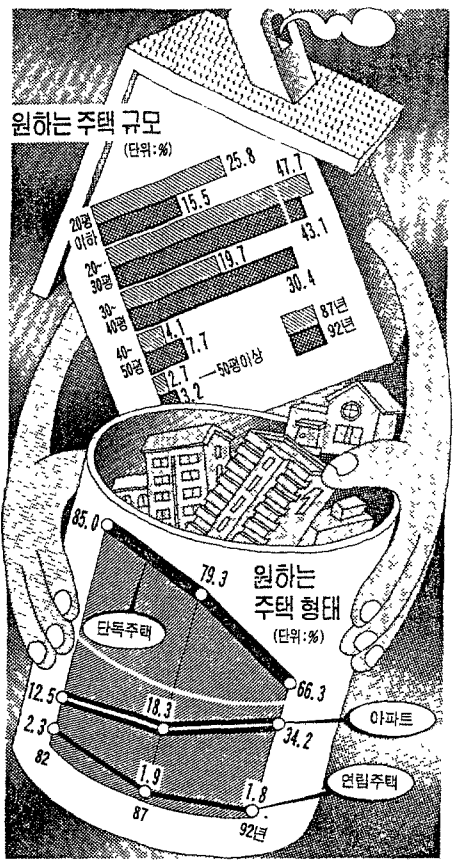
주택임대차 계약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계약이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는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계약이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는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계약이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는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이상 계약이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는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3 개 짜리 27평



<그림: 박춘환기자>

교통사고사망 10만명당 31명 유치원보낸다 12년새 8배로

교통사고사망 10만명당 31명, 유치원보낸다 12년새 8배로.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교통사고사망률은 10만명당 31명으로,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유치원보내다의 인원은 12년새 8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消費지출중 都市가구 8.5%

도시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8.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8.5%로, 이는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8.5%로, 이는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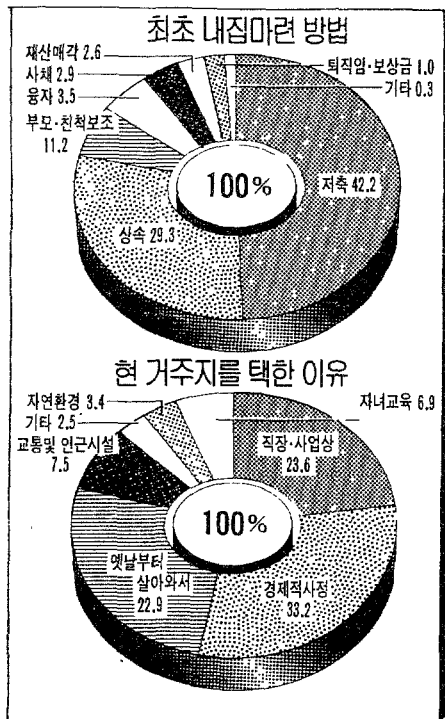
노로포포장률 91년 77% 上水道 80%

<연세대학교>

내집 마련前 원하는 주택

이 조사의 연구 목적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 있다. 특히 6월의 주택시장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관련 산업의

◇ 내집 마련 =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초로 내집 마련의 꿈을 품은 해는 1987년 조사 때의 8.4%이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마련할 예정이다.



갖고 싶은 내집으로만 단독주택(63.3%)을 꼽고 있다. 만 그 비율은 갈수록 낮아져 세인 반면 아파트는 87년의 18.3%에서 92년 34.2%로 크게 증가해 아파트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주택 유형이 「직장·사업상」(23.6%)과 「옛날부터 살아와서」(22.9%)로 나타났다. 「경제적사정」(33.2%)은 87년 22.9%에서 92년 33.2%로 증가했다. 이는 그동안의 집값 상승때문에 직장인이나

라도 경제형편에 맞추어 주거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던 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만

족하고 있다」는 가구는 87년의 25.5%에서 92년 21%로 줄어든 반면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립주택 거주자의 불만율은 49.7%에 달해 가장 높았고 아파트 거주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주택에 대한 불만이 무뎠는 「모용량·화장실·부엌」의 부대시설이 미흡해서」가 31.9%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주택규모(합소)」(28%) 「주택의 노후」(23.7%) 「의수」(87년에는 주택규모 협소가 가장 큰 불만이었으나 최근에는 부대시설의 불충족을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택규모 협소로 인한 불만은 도시지역, 自家 소유, 아파트 거주

심 = 중학교 진학률 99.8%, 고등학교 진학률 98.5%로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치원 취원율은 34.4%로 80년의 4.1%에 비한다면 8배 이상 높아진 셈. 대학생 비율도 80년 1.6%에서 92년 3.6%로 크게 증가했고 국민의 평균교육연수는 80년의 7.6년에서 90년에는 9.5년으로 높아졌다. 또 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가구가 80년 6.2%에서 8.5%, 농가가 9.9%에서 10.6%로 각각 증가, 교육비가 가계살비에 미치는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光賢기자】

거주지역 불만이 유 公害 - 교통 불편 順
高校진학률 98%·유치원취원율 34%

3.4회 이사 평수 27.1坪

92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발표>

통계청이 16일 우리나라 국민생활의 질적·양적 수준을 알 수 있는 92년 한국 사회지표들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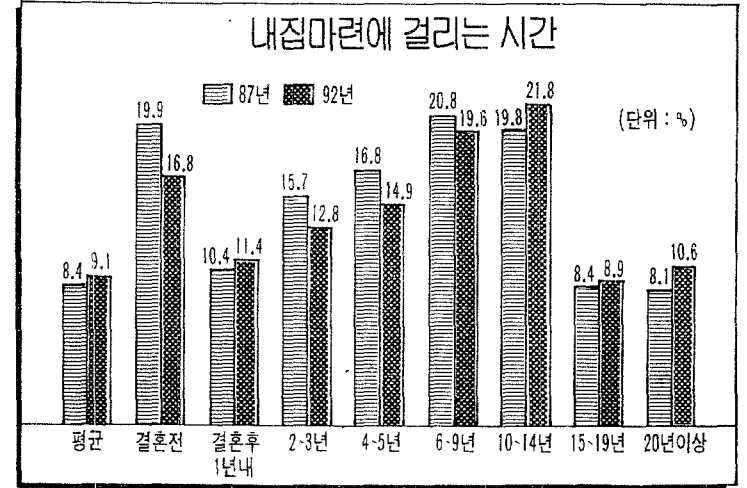
주말판의 양적 변화는 주말판이 5.9% 증가했다. 주말판의 양적 변화는 주말판이 5.9% 증가했다.

화요일의 품질을 자기접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져 가구주가 대도시의 인구는 5.9% 증가했다.

92년, 국물이 하 11.6%의 질적 지표다. 또 최후로 내진을 마련하기까지는 평균 3.4회의 이사를 다녀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이사를 한 노년층에 내진을 마련한 인구는 21.6%의 비율로 나타났다. 1~2회가 27.5%, 3~4회가 21.1%, 5회 이상은 7.4%로 나타났다. <전국 가구주 100만명>의 이사율은 16.8%로 나타났다.

트렌드성향의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도시인구, 화요일의 품질을 자기접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져 가구주가 대도시의 인구는 5.9% 증가했다. <전국 가구주 100만명>의 이사율은 16.8%로 나타났다.

30세 미만 53% 아파트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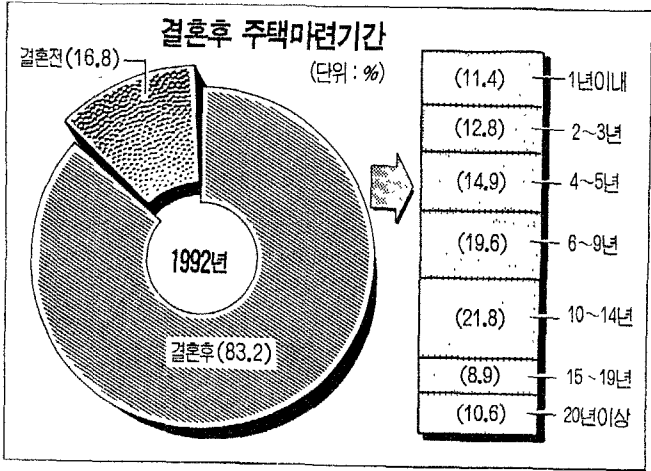


주거구입수용률은 92년 평균 9.1%로 나타났다. 특히 10-14년 사이에 구입한 비율이 21.8%로 나타났다. 이는 87년의 19.8%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전국 가구주 100만명>의 이사율은 16.8%로 나타났다.

노년소득보장

大卒 결혼후 5.9년 國卒은 11.6년 걸려

통계청 발표 「92년 사회지표」



5년새 평

우리국민(가구주)들이
결혼후 평균 5.9년 이상
주택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이므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의 소유가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주택의 소유는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주택의 소유는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주택의 소유는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주택의 소유는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주택의 소유는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관·이·7·년·길·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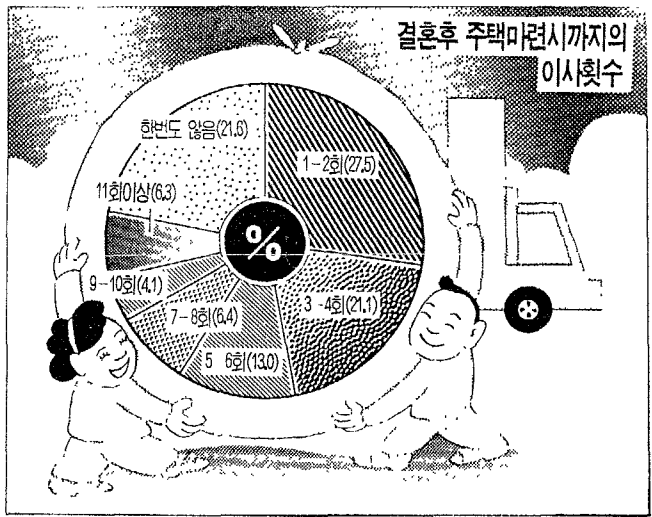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집사기전 이사횟수는 평균 3.4회 방3개, 27.1평형등 선호규모 커져 유치원 취원을 34% ... 80년의 8배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관·이·7·년·길·어·져

「민중」 47.3% 「경제」 28.5% 「문화」 12.1% 「사회」 12.1% 「과학」 9.8% 「스포츠」 9.8% 「예술」 9.8% 「종교」 9.8% 「정치」 9.8% 「역사」 9.8% 「문학」 9.8% 「철학」 9.8% 「과학」 9.8% 「스포츠」 9.8% 「예술」 9.8% 「종교」 9.8% 「정치」 9.8% 「역사」 9.8% 「문학」 9.8% 「철학」 9.8%

14년인 소년과 소녀가 21.8%로 가장 많았으며 20년 이상 숙련된 기술자가 10.6%로 나타났다. 또 경제학, 법학, 의학, 공학 분야의 석사 학위 취득자가 21.6%로 나타났다. 이 중 11.5%는 3~4회, 21.2%는 2회, 3.4%는 1회, 2.2%는 0회, 5.7%는 1회 이상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사 학위 취득자가 16.8%로 나타났다. 이 중 49.2%는 1회, 28.3%는 2회, 23.3%는 3회, 3.5%는 4회 이상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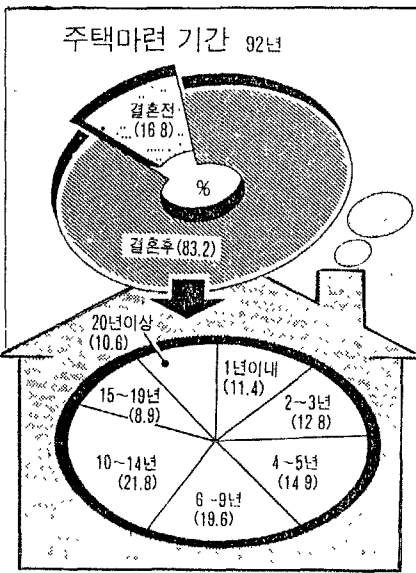
1%의 노년층이 33.2%로 가장 많았으며 77.1%는 33.7%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하의 82%는 24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11%는 24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의 10%는 24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의 2.8%는 24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하의 2.8%는 24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하의 2.8%는 24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하의 2.8%는 24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대 이하의 2.8%는 24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0대 이하의 2.8%는 24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이하의 2.8%는 24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 87% 「경제」 48% 「문화」 28% 「사회」 12% 「과학」 10% 「스포츠」 10% 「예술」 10% 「종교」 10% 「정치」 10% 「역사」 10% 「문학」 10% 「철학」 10% 「과학」 10% 「스포츠」 10% 「예술」 10% 「종교」 10% 「정치」 10% 「역사」 10% 「문학」 10% 「철학」 10%

민중

13.8%로 나타났다. 반면 1개년 이상인 2.1%로 나타났다. 1.1%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분야는 11.9%로 나타났다. 9.1%로 나타났다. 8.1%로 나타났다. 7.1%로 나타났다. 6.1%로 나타났다. 5.1%로 나타났다. 4.1%로 나타났다. 3.1%로 나타났다. 2.1%로 나타났다. 1.1%로 나타났다. 0.1%로 나타났다.

10%로 나타났다. 9%로 나타났다. 8%로 나타났다. 7%로 나타났다. 6%로 나타났다. 5%로 나타났다. 4%로 나타났다. 3%로 나타났다. 2%로 나타났다. 1%로 나타났다. 0%로 나타났다.



여성경제활동 참여 47.3%

평균勤勞 48시간... 中高진학 100% 육박
총인구 4천3백66만·평균연령 29세

특히 부업이나 취미로 34.1%로 나타났다. 경제학 분야는 21.6%로 나타났다. 이 중 11.5%는 3~4회, 21.2%는 2회, 3.4%는 1회, 2.2%는 0회, 5.7%는 1회 이상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사 학위 취득자가 16.8%로 나타났다. 이 중 49.2%는 1회, 28.3%는 2회, 23.3%는 3회, 3.5%는 4회 이상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社說

92년 社會指標에 비친 住宅문제

정부는 지난79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社會指標年報를 발표해오고있다. 국민의 생활 수준과 社會상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하는 이 지표는 인구 교육 보건 주택 환경등 9개부문으로 망라되어 있으나 매년 이중 한두개 부문은 특별히 중점 조사한다. 가령 지난90년에는 교육 문화 여가부문, 91년에는 고용 노사 社會 공안부문을 조사한 것등인데 최근 발표된 「92년 社會지표」의 경우는 지난 87년에 이어 주택분야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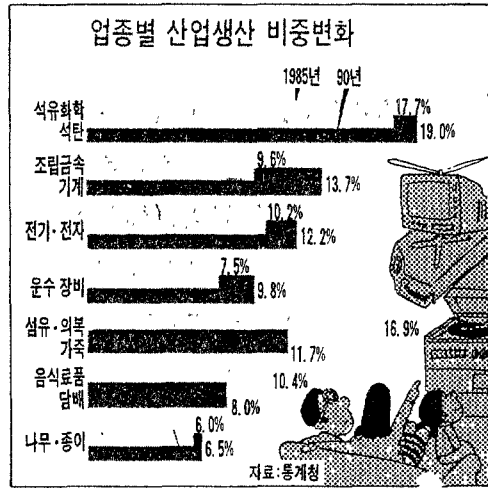
때마침 정부는 盧泰愚대통령 집권5년간의 國政을 종합자세평가하는 모임을 지난 주 청와대에서 가진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주택200만호 건설과 부동산투기억제 조치등이 주요 업적으로 소개되었다. 또 이 무렵 건설부는 주택보급률이 지난해에 76.9%로 91년대비 2.4%포인트가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5년전인 87년의 그것은 69.2%까지 떨어졌었다.

그러나 5년만에 전국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관련지표를 다시 한번 조사한 이번 社會지표내용은 국민의 내집마련 욕구나 원하는 주택의 욕구충족 기회가 5년 전과 비교해서 별로 개선된 기미가 안보인다. 개선은 커녕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 즉 결혼후 내집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지난87년의 8.4년에서 9.1년으로 더 길어

졌다는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대한 만족도가 25.5%에서 21%로 낮아진것등을 지적할수 있다.

원하는 주택의 크기가 평균 24평에서 27.1평으로 더 커지고 아파트 선호비율이 18.3%에서 34.2%로 확대된 것은 국민의 생활수준향상과 급변하는 세태를 반영한다. 따라서 그것은 주택정책이 참고는 해야 할지언정 어떻게 할 재간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대단한 업적인양 自讚할 정도로 많은 물량을 無理를 무릅쓰고 공급했는데도 내집마련이 더욱 힘들어졌고 주거불만이 여전히 크다고 한다면 그건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이런 현실은 결국 크게 3가지에 원인이 있다. 첫째 집값이 너무 비싸다. 최근에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나 소득수준등에 비추어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 둘째 주택금융이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원활하지 못하다. 高금리도 문제지만 주택금융에 제약과 기복이 많다. 40%이상이 상속 또는 부모친척보조로 집을 마련한다는것은 그만큼 금융의 역할이 취약함을 뜻한다. 셋째 공급문제이다. 물량이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지역, 크기와 형태등에서 불균형이 심하다. 물론 물도 문제지만 質, 특히 가격안정이 장래주택정책의 초점이 돼야 할것이다.



산업생산지수 개편

3월부터 90년基準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 우리나라 광공업통계의 기준이 되는 산업생산지수의 품목과 가중치가 지난 85년 이후 5년간에 90년기준으로 전면 개편되는 3월부터 적용된다.

산업생산지수에 포함되는 대표품목은 연간 생산액이 3백50억원 이상인 산업의 3백50억원 이상인 품목 가운데 업종별 대표성과 신장세를 감안, 선정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생산지수 개편결과에 따르면 생산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산업용노릇·캠코더·항공기부품·중화학공업제품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대체효과가 큰 치즈·냉동식품·가스난로 등 모두 59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에 산업구조변화와 정에서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重石·재생타이어·탈곡기·섬유노릇·가습기 등 40개 품목은 조사대상에서 탈락했고 용도 및

업종별부가가치액에 비례하여 석유·가스·식품·화학·금속·기계·전기·전자·운수장비·섬유·의복·가죽·음식료품·담배·나무·종이·석유화학·석탄·조립금속·기계·전기·전자·운수장비·섬유·의복·가죽·음식료품·담배·나무·종이

연간생산액 3백50억이상 「대표품목」 산업용 로봇·치즈 등 추가

국내산업구조의 변화로 지난 85년부터 90년까지 5년 사이 연간생산액 3백50억원이상의 「대표품목」에 자동공고시스템 산업용

로봇·치즈 등 59개 품목이 새로 추가된 반면, 중석·모피제품·섬유노릇 등 40개 품목은 탈락했다. 통계청의 6백66개에서 6백78개로 12개 늘리고, 중화학

산업대상이 되는 품목과 가중치를 지난 90년기준으로 변경, 대표품목을 중점적으로 6백66개에서 6백78개 품목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수체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産業생산지수 算出대상품목

12개 늘려 678개로

지수체제도 개편

통계청은 20일 국내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지수의 산출대상품목을 종전 6백66개에서 6백78개로 12개 품목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번으로 반영으로 지수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산업생산지수 일부 기계류 등 최근 들어의 기준연도를 85년에서 90년으로 변경, 새로운 산출방식에 의한 신지수를 3월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59개 대표품목은 연간 생산액이 3백50억원 이상(국내 총생산액의 5천분의 1) 인플레이션에서 선정됐으나 캠퍼터, 비디오게임기 등 기계류 등 최근 들어 급성장되고 있는 유망품목들은 생산액이 이에 못미치더라도 포함시켰다. 또 85년 기준지수에 포함됐던 플라스틱 합성유류 등 재생타이어 등 40개 품목은 제외됐다. 이번 지수개편으로 제조업의 비중은 85년의 90.5%에서 94.2%로 3.7%포인트가 높아졌다.

정부가 산업활동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산업생산지수의 기준연도가 85년에서 90년으로 변경되고 구성품목도 중화학제품 비중이 높아지는 등 크게 달라져 오는 3월에 발표할 2월분 산업생산지수부터 적용된다.

統計廳 지수개편

20일 통계청이 확정 발표한 90년기준 산업생산지수 대표품목 및 기준 연도 개편안이 중전의 6백66개에서 6백78개로 늘어나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57.9%에서 65.7%로 높아져 산업구조의 변모를 보여 준다.

통계청이 선정하고 대

産業대표품목 크게 바뀐다

678개로 확대... 기준연도 90년으로 변경
산업용로봇 등 추가 重化學비중 높아져

표품목은 시장규모가 국내 총생산(명목생산액)의 0.02%(약 3백50억원) 이상인 제품들로 이번 개편과정에서는 산업용로봇 등 59개 품목이 새로 추가된 반면 중화학내 화 등 40개 품목이 탈락했고 일부 품목이 분할 또는 통합돼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12개 품목이 늘어났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산업용 로봇의 예 자동차용 고시시스템 수치제어기기 항공기 부품 등 중화학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요발증세를 보이고 있는 캠퍼터, 비디오 게임기 등이 추가되고 생활수출품에 따라 수요가 높고 있는 치즈, 냉동식품, 훈연햄 등도 가나 품목도 포함됐다. <華>

소비자物價 0.8% 상승 1월 중

작년비 0.1% P 올라... 농산물 2.6%로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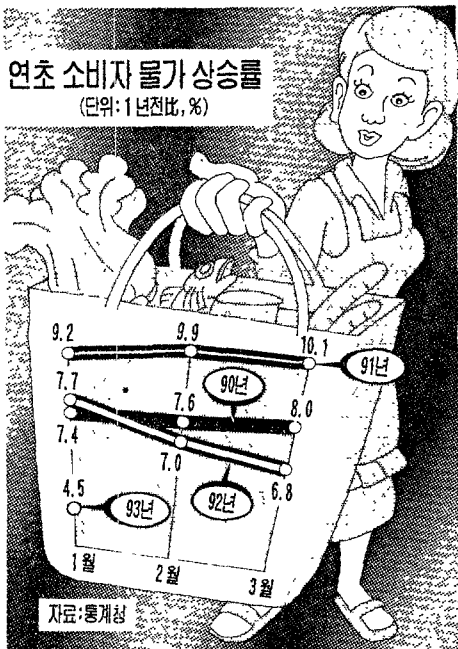
工業品 0.4% 그쳐 안정세

통계청·韓報 등 영향 발표
 1월 중 소비자물가는
 0.8% 상승했다(1월 전월 대비).
 이는 지난해 1월 중의
 물가상승률(0.7%)보다
 0.1%포인트 높았다. 1월
 중 소비자물가는 1월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중의
 물가상승률(0.7%)보다
 0.1%포인트 높았다. 1월
 중 소비자물가는 1월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과 집체비(1월 전월 대비)는
 0.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중의 집체비
 상승률(0.3%)보다 0.1%
 포인트 높았다. 1월 중
 소비자물가는 1월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중의
 물가상승률(0.7%)보다
 0.1%포인트 높았다. 1월
 중 소비자물가는 1월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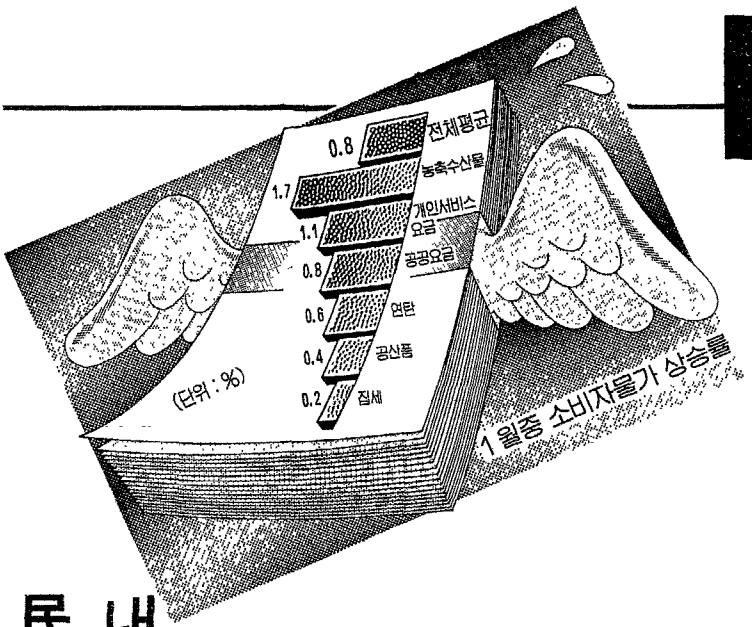
구류가 절반이 소폭 올랐
 을 통해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는 0.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0.3%)
 보다 0.1%포인트 높았다.
 1월 중 소비자물가는 1월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중의
 물가상승률(0.7%)보다
 0.1%포인트 높았다. 1월
 중 소비자물가는 1월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통신비
 포함)은 1.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중의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
 (0.9%)보다 0.2%포인트
 높았다. 1월 중 개인서비스
 요금은 1.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중의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
 (0.9%)보다 0.2%포인트
 높았다. 1월 중 개인서비스
 요금은 1.1% 상승했다.



<그림: 김라켓기자>

1월 소비자價 0.8% 상승 채소·생선은 3.6% 경향



올해 1월 소비자價가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物

올해 1월 소비자價가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價

올해 1월 소비자價가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동향

< 1월말현재 >

품목	동향률		1월중 주요동향품목
	비전월	비전년	
◇ 식료품	1.2	2.4	
곡류	0.6	6.1	이유식 (10.4) 부부 (2.8) 참쌀 (2.2)
육류	1.1	4.9	닭고기 (13.1) 수입쇠고기 (0.3)
계란 우유	0.6	3.2	알걀 (2.2) 배달우유 (0.1)
어개류	-1.3	-1.5	조기 (2.0) 물오징어 (1.6) 고등어 (-4.0)
채소	3.9	-0.8	상추 (91.7) 고구마 (-12.3) 당근 (-13.8)
과실	7.5	-18.9	밀감 (18.6) 사과 (부사) 14.1) 밤 (9.2)
유지조미료	-0.8	6.7	설탕 (1.4) 고추 (-2.4) 고춧가루 (-1.4)
외식	1.0	7.5	비빔밥 (3.6) 설렁탕 (3.2) 갈국수 (1.4)
◇ 식료품 외	0.6	5.6	
주거비	0.2	5.9	관유리 (1.7) 월세 (0.3) 전세 (0.2)
광열수도	0.3	7.3	도시가스 (0.8) 연탄 (0.6)
가구집기	1.0	2.9	화장대 (8.4) 침대 (3.2) 커피세트 (3.0) 양복장 (2.9) 책상 (2.7) 저울 (2.3)
피복신발	-0.3	2.8	한복 (3.8) 양복세탁료 (1.1) 바지 (0.4)
교육 오락	0.8	6.9	생화 (9.8) 참고서 (사전) 15.4) 고교 1.3) 주산화원비 (5.5) 입학원비 (단과) 2.3)
교통 통신	1.4	8.4	시외버스 (6.8) 고속버스 (6.4) 시내버스 (일반) 6.3) 학비 6.7) 좌석 3.4)
기타 잡비	0.4	4.1	미용료 (파마) 2.0) 목욕료 (실인) 0.8) 아도 (0.9) 숙박비 (호텔) 0.8) 휴먼지 (-0.5)

< 단위: % >

들

올해 1월 소비자價가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먹

올해 1월 소비자價가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상추 92% 밀감 닭고기 15% 올라
새학기 수업료까지 「리소움직임」
기획원 "3월 이후 안정 찾을 것"

올해 1월 소비자價가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소비자價가 0.8% 상승한 것은 197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내달 鐵道 우편료 등 인상 대기
民自景氣 부양 거론 不安 가중

物價 상승세 심상찮다

통계청·韓銀 1月동향 장바구니指數 3.6% "경중"

소비자物價는 0.8%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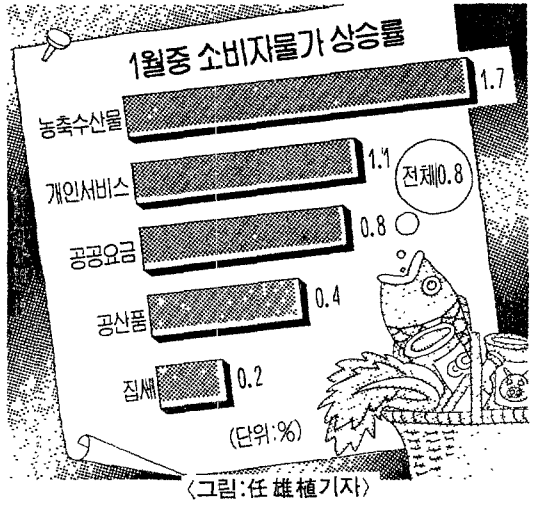
새해 첫달부터 물가가
불안하다. 1월중 소비자물
가 상승률이 0.8%를 기
록, 당초 우려보다는 비교
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만 장바구니 물가를 반영하
는 과일 채소 생산 등 신선
에 따르면 이달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1월
(0.7%)보다 약간 높은
0.8%를 기록했으며 생
산자물가 상승률은 작년과
같은 0.4%로 조사됐다.

이른올 1월에 설날 특需
가 있었고 버스요금인상이
단행되는 등 여러 단의 비
해 물가 불안요인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안
정세가 유지된 것으로 평
가 된다.

그러나 주부들의 장바구
니에 직접 부담을 주는 신
선식품가격은 3.6%가
올라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고 특히 상추(9.1%
7%) 사과(14.1%) 밀감
(18.6%) 배(18.3%) 등
이 폭등세를 보였다.

경제기획원은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25
일자로 인상된 버스요금
3월에는 수입료 인상이 예
정돼 있고 3월까지의 공
공요금 부분에서 불안요인
이 있으나 4월 이후로는
크게 우려할 요인이 없어
안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物價안정 意志보여라

안정물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물가가 안정되어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社說

안정물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물가가 안정되어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는 매년 5% 정도 상승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아무리 實價金制가 내리고 기업을 투자유인이 삼아도...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있다. 정부는 이 제부담과 물가를 장악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先行지수기지가: 설비투자도 "꿈틀"

국내경기기간「저출판」에
서 과면케 9월 것인나. 정부
당국이 분점한 통계지표등은
황三月이 되면 체첸대로 침
체되어 있던 국내경기가 기지
개를 펼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2~3개월 후의 경기상
태를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
수(12월기준)가 1.8%의 비
교적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
이다. 적어도 지수상으로는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은전추가 보인다. 그러나
결정인 경기회복을 전자기에
는 우려했던 것이다. 우리경
제의 일종적인 수출경기가 아
직도 포용력이 떨어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이 경기회복의 전환
여부와 관련한 난관이다. 일파
다 통계당국의 예측이 적잖은
일여가 의 없다. 전이다. 경
기선행지수와 대한 신뢰감이
아주 낮다.

5월 통계청의 발표한「92
년12월의 산업동향」에 따
르면 생산 소비 투자의 각종
지표가 적은 폭이나 회복세
로 반전, 경기선행지수의 전
월대비 상승률이 11월 1.7
%에서 12월에는 1.8%로
0.1%포인트 더 오른 것이
로 나타났다.

부동산도 보면 산업생산중
가동(전년동기대비)이 11월
은 1.4%를 기록
했다. 12월에는 0%로 자체
가동설비를 뜻하는 것이 지
만 전월보다 감소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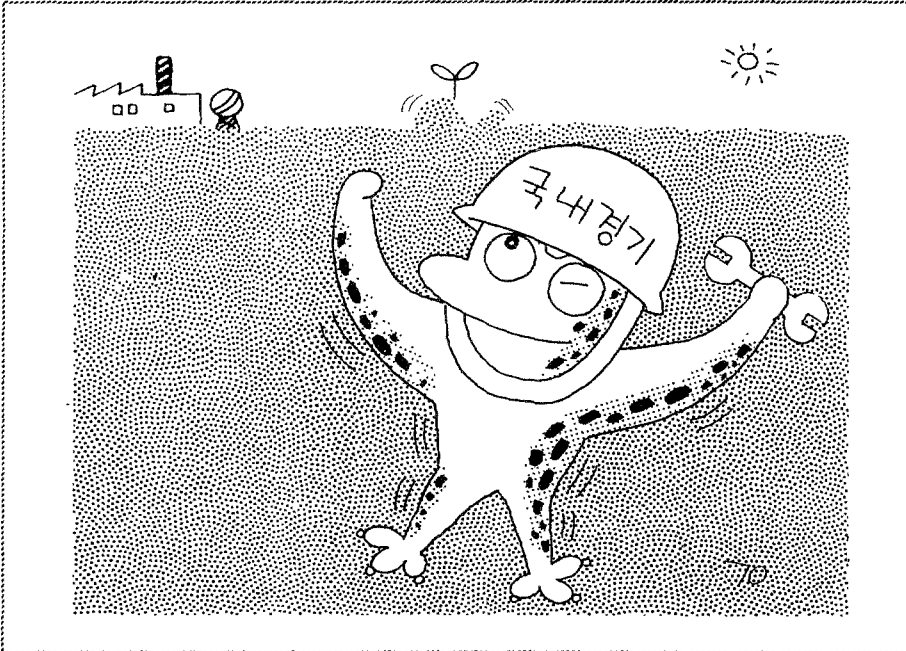
는 점에서 경기추세에 있어
상용과 면에 접어들었다. 나
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투자도 지수상으로는 높은
기이다. 대표적인 투자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10월과 11월
에 이의 12월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12월의 건축허가면
적이 전년동기대비 1백40.3
%(2.4배) 증가했다. 설

비투자액 있어서도 국내기
수수가 전년동기대비 27.2%
신장했다. 특히 자동차 조
등 민간제조업의 국내기
주 증가율이 지난해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
했다.
내수경기의好不況 여부를
판단

길고긴 不況터널에 "한줄기 빛"

통계청 발표 12월 産業동향



內需用출하·소비도 상승무드 "수출전망 어두워 樂觀은 금물"

집적주는 내수출하와 소비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내수
상승세의 증가율이 11월 마

【李百萬기자】

내수 1.0%에서 12월에는
3.2%로 4.2%포인트
도소매판매증가율은 3.7%
에서 4.6%로 0.9%포인트
트 상승했다. 재고도 줄었다.
생산자재품재고증가율이 11
월 8.8%에서 12월에는 4
.3%로 두달 떨어진 것이다.
경제기획원의 張榮祥기획부
장은 5일(9일)에 "국내경기가
내용면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
구면의 진입해가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고 다소 낙관적
인 전망을 밝혔다.
문제인 수출이다. 수출증
가율이 11월 5.4%에서
4.2%로 낮아졌다. 향후의
수출전망은 다소 관망감만
가 하기도 했다. 수출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
를 늘린다는 한계가 있다.
통계청에서도 불이 되어 경기
가 심어진다. 그것은 전월경
기를 주춤으로 한 내수신장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
기회복이 어느 나라도 물론 하
고 전월경기부터 시작되는데
이제까지의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
에서는 건설경기회복이, 수출
경기회복이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보편적인 경기회복은 불
가능하다. 또 일종의 투자의
유이 되실아 나는데는 많은 사
일이 걸릴 것으로 보며 건설경
기회복이 수출경기회복에 여
느 정도의 차이를 줄지자 본격
적인 경기회복의 관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4.4분기의
신산업신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0%로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0년 3.4분기(미니스) 2.
9%(이후 분기별로는 12년만
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社 說

제조업 雇傭창출로 失業率 줄여야

지표상으로는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해도 통계청과 노동연구원이 밝힌 雇傭동향과 전망은 失業문제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통계청이 분석한 지난해의 고용동향 특징은 취업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失業率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제조업취업자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취업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의 경기침체와 中企의 잇단 도산사태, 수출부진, 10년내 최저의 성장률로 미루어 失業의 증가는 예견됐던 일이며 서비스산업으로의 고용집중현상은 제조업의 부진과 이른바 3D기피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내고용문제의 심각성은 1년동안 失業率이 0.1% 증가했다는 데 있는게 아니라 지표를 통해 상황을 볼수가 없고 그 지표나마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서비스산업으로의 노동력유입을 막기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용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당국은 지표만을 보고 느긋한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실업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되기 이전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失業率 2.4%는 선진국이 부러워할만한 완전고용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求人時代에서 求職시대로 바뀌고 있고 중소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에까지 人力 축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상황과 통계의 지나친 불일치의 결과로 밖에 볼수가 없다.

노동연구원은 失業率이 올해는 2.6%로 높아지고 기업들이 감량경영을 계속할 경우 고용조정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에는 3%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성장아래서도 자동화투자 등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예전과 같을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업문제에 대비한 직업정보, 전직훈련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영합리화를 인원감축보다는 원가절감을 통한 生産性향상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失業상황과는 거의 무관하게 서비스산업의 취업자증가는 제조업에 대한 정책적배려가 아직 부족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조업근로자에 대한 병역문제등 여러 특혜적 조치가 서비스업근로자의 상대적근로이익을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서비스업 내지는 그 종사자에 대한 稅政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비대화는 결국 산업의 空洞化를 초래, 국가경쟁력의 후퇴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30여년간 우리경제의 성장배경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人的자원의 우수성이 있었다. 그 우수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제조업중심의 고용창출이 이뤄지도록 오늘의 고용상황을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社說

서비스業 고용편중의 심각성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92년중 고용동향」 통계는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취업구조면에서 새삼스럽게浮刻시켰다.

91년에 비해 취업인구는 광공업이 2.5% 줄어든 농림어업과 함께 3.5%가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등 제3차산업은 5.7%가 늘어나는 고용집중 심화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총 1,892만명에 달하는 산업취업인구의 구성비율은 91년 전체취업자의 26.9%를 차지했던 광공업이 25.5%로, 그 핵심인 제조업 역시 26.5%에서 25.2%로 각각 떨어지고 농림어업도 16.2%에서 16%로 비율이 낮아졌는데 3차산업만은 56.4%의 구성비율이 92년엔 58.5%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서비스부문의 노동인력이동 집중현상의 문제는 실물경제의 핵심부문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劣惡化가 계속 진행중이며 빨리 유효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그것이 加速化됨으로써 우리산업의 전체 경쟁력은 회복될 기회가 영영 없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제조업의 실상은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비중의 국제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밝혀진 상공부의 기업경영에 관련된 국제비교분석은 우리의 제조업비중이 臺灣의 34.1%(90년), 西獨의 32.2%(87년), 日本의 28.9%(89년)에 크게 뒤떨어진 27.

5%(91년)이며 美國의 19.3%(87년)에만 앞서 있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구조가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의 순서로 그 비중이 옮겨가는 경향이 있음은 일찍이 페티나 폴린 클라크 같은 경제학자가 法則化한바도 있어 꼭 否定的으로만 볼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3차산업 비대화와 이에 따른 그 부문에의 인력집중화는 소득증가 소비수준 향상에 따라 위험하고 힘들고 불결한 일을 싫어하는 소위 「3D」기피라는 근로윤리의 타락에도 적지 않은 원인을 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시될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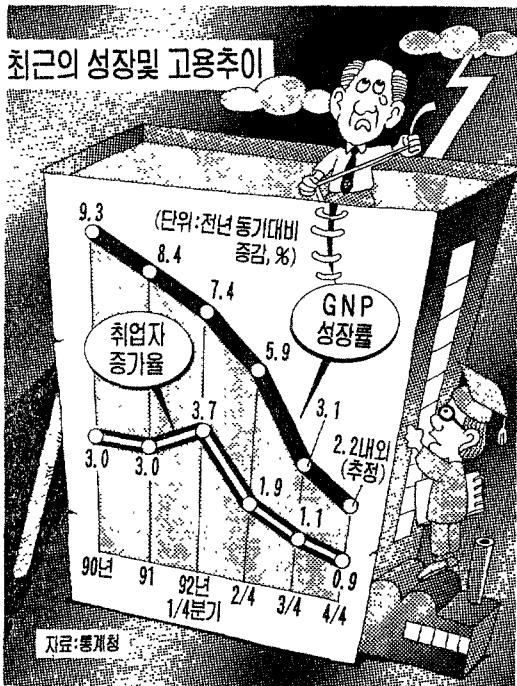
또 美國의 경우처럼 전자 소프트웨어 통신등 첨단적인 지식산업의 발전에 따르는 3차산업 취업자 증가가 아니고 제조업의 생산, 기술과 수출엔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소비성 유흥업과 도·산매상업에의 노동인력 편재라는 데에 더이상 방임될 수 없는 심각성이 있다.

이제 우리정부나 생산기업은 제조업을 기피하는 3차산업에의 인력편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대책의 핵심은 제조업에 다른 산업보다 높은 매력과 긍지를 느끼게 수익성 소득 사회적 인식을 보장하는 일이다. 이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꼭 이룩해내야 한다.

실질 실업률 비상

평균 취업시간 감소
 家事인구 계속 증가
 일 없는 젊은층 늘어

통계청, 작년 經濟활동인구 分析



<그림: 김弘烈기자>

실업률계에는 잡일이 많
 는 실업률인 실업의 높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들의 평균
 취업시간이 88분이후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일사후
 조 및 1회 17시간 이하 일
 하는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家事인구가 이례적
 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4·4분기 및 연간
 조부 및 조부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週54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체 취업

자의 48.1% (9백10만 5
 천명)로 91년의 50.9%
 (9백44만)에 비해 2.8%포인트(3.0
 백) 90년의 51.8%에
 비하면 3.7%포인트가
 줄었다.
 반면 주 17시간 취
 업자는 91년 22만6천명에
 서 92년 25만8천명으로
 14.2% 증가한 1.2%로
 1.4% (일사후자는 91
 년 11만7천에서 92년
 15만2천으로 29.9%
 증가) 0.6%로 0.8%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 88년의
 주당 55.7시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업률
 취업자의 지난해 52.3사
 간으로 전년(53.2시간)
 보다 0.9시간의 감
 소했다. 또 지난해 4.4
 분기 취업자 증가율이 0.
 9%로 1991년 5.5%에 그쳐
 지난 84년 8.4분기 이후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
 진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이례적으로 2.3%로 28만
 3천명(나늘어났고 이같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여성이 24만명) 전년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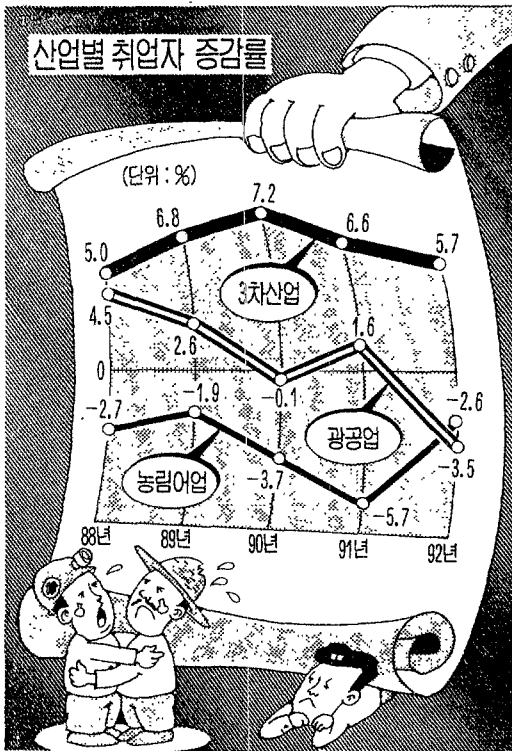
4만1천명)를 초과한
 구가 21만1천명(전년동
 기 5만9천)의 두 배가
 되고 있는 실업률에
 하지는 주부인구의 실
 질 실업률이 지난해 11.5%
 상승을 보였다고 있다.
 여성은 15.19
 세의 실업률이 지난해 10.
 2%로 전년(9.3%)
 보다 0.9%포인트 증가

했고 한편으로는 대졸이상
 실업률이 3.5%로 91년
 (3.6%)보다 0.1%
 포인트 줄어했지만 여전히
 고졸(3.3%), 중졸이
 하(1.1%)보다 높게 나
 타났다.
 지역별로는 6대도시의
 실업률이 평균 3.3%로
 9개도(평균 1.6%)보
 다 두 배 이상 높고 시도별
 로 보면 大邱의 실업률이
 3.7%로 가장 높으며 濟
 州·江原이 0.9%로 가
 장 낮다. 서울의 실업률이
 3.3%로 91년과 같은 수
 준이다.

高學歷일수록 노이노이 6대도시 평균 道 지역보다 두 배 이상

고학력·저연령층 실업 증가

통계청 작년집계 大率 3.5%·15~19세 10.2%



청소년층과 고학력자의 실업이 높고 있다. 산업별로는 大邱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고용연령」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천8백92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9%(34만5천명)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4·4분기에는 취업자 증가율이 0.9%를 기록, 지난 84년 3·4분기의 마이너스 1% 이후 8년간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고용연령별로는 15~19세 청소년층이 9백7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2.9%가 늘어난 반면 20~24세 청년층은 1백76만7천명으로 3%

산업별률 2.4%...총 46만명

市道別로는 大邱가 3.7%로 최고

산업별로는 농업·어업 취업자가 2.5%·7만8천명(광공업은 3.5%·17만7천명)이 각각 감소한 반면 3차산업 부문은 5.7%(60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광공업 부문 취업자는 4.4분기 중 5.3%가 줄어든데, 지난 81년 1.4% 이후 1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연령별로는 15~19세 청소년층이 9백7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2.9%가 늘어난 반면 20~24세 청년층은 1백76만7천명으로 3%

실업률은 작년 중 평균 0.9% 포인트 높아진 10.2%를 기록했으며, 화령별로는 충청이 1.1%에, 마포·반면·고흥은 3.3%, 대동·이상·3.5%도 청소년층과 고학력 계층의 취업난을 반영했다.

지연별로는 지난해 6대 도시의 실업률이 3.3%로 91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도지역의 1.6%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선유업종의 영향을 반영, 3.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서울·충남(3.3%) △인천·대전(3.2%) △광주(2.9%) △경기(2.2%) △전북(2.1%) △충북(1.9%) △경남(1.5%) 등의 순이었고, 강원·제주도 0.9%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5세 이상의 인口中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보다 0.3%포인트가 증가, 사상 최고인 68.9%를 나타냈다.

실업률 통계 현실과 거리 멀다

‘ILO 방식’...주 1시간 일해도 취업분류 “완전고용” 발표에 “믿을수 없다” 비판

통계청, 불신해소 위해 임금자만 대상 추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체의 감원 등에 따른 고용불안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통계청의 고용통계는 우리 경제가 여전히 완전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조사·작성 방식이 잘못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일주일에 한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한다”, “일자리를 잃은 주부라도, 구직노력을 해봐야 결과가 신통할 것 같지 않아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는 등의 현행 고용통계조사방식을 접한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고용통계는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 통계청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계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다. 통계작성방식과 고용동향에 대한 이해부족이 고용통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통계조사방식은 세계적으로 크게 두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많이 쓰는 이른바 ‘직업안정소방식’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및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방식’이 그것이다.

직업안정소방식이란 실업보험을 타기 위해 직업안정소에 등록된 사람을 실업자로 간주하고, 각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농어민, 자영업자 등을 취업자로 파악해 실업률 통계를 낸다.

반면 국제노동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방식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업자와 취업자를 조사한다. 조사원이 15살 이상 60살 이하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의 경제활동을 조사하는데, 일주일 동안 한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또 일을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에 따라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처리한다. 일을 하고 싶고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실업자로, 일하고 싶지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각각 분류한다.

통계청의 고용통계에 대한 불신은 여기서 시작된다. 일주일에 한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과, 일자리를 잃은 뒤 구직노력을 해봐야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안한 주부를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야 하는냐는 비판이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일주일에 한시간”이란 기준은 임금이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며, 일자리를 잃은 주부

의 경우 일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해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했다고 설명한다.

일부에서는 고용통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통계조사방식을 유럽식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계청은 유럽식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즉 유럽은 실업보험이 시행되고 있어 실업자 조사가 쉽고, 취업자도 전체의 90% 정도가 임금노동자여서 취업자 파악이 간편하기 때문에 직업안정소방식을 택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실업자들은 실업보험을 타기 위해 거의 대부분이 직업안정소에 등록하고 있어 실업자 파악에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아 실업자 수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취업자 역시 농민과 자영업자가 많아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취업자 중 비임금노동자는 전체의 40%나 된다. 또 현행 취업자통계가 비농림어업의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상용노동자로 한정돼 있어 10인 이하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고, 10인 이상 사업체라도 비상용 노동자는 제외돼 있다.

통계청은 최근 실업통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통계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고용동향은 경기변동

과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통계를 작성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또 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여기서 조사된 통계를 반영할 계획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조사방식에서도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률이 변해왔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70년대 중반까지는 5% 수준이었고 80년대 와서는 3.5~4.0%였으며, 87년부터 3저호황으로 경기가 좋아지자 인력난이 발생하면서 실업률이 3% 밑으로 떨어졌다.

그는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유럽도 경기가 호황이었던 70년대 초에는 실업률이 1~3%로 낮았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일본과 대만의 실업률이 각각 2%, 1.5% 수준인 것은 우리처럼 경제성장률이 높은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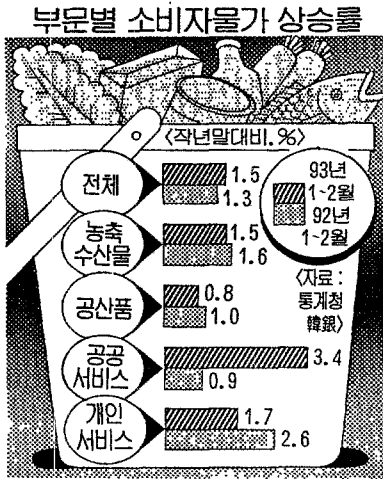
그는 “최근 고용통계조사에서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가사활동인구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으며 일용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경기침체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는 것은 기업체가 인력감축을 쉽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고용관행이 감원을 쉽게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현만 기자

物價 많이 올랐다

公共料 주도 2월 消費者 0.7%

물가 상승률도 92년 1-2월 1.3%에 비해 93년 1-2월 1.5%로 상승했다. 특히 공공서비스가 3.4% 올랐고, 개인서비스가 2.6% 올랐다.



수업료 및 대학등록금이 올랐고, 의료보험수가 등도 인상돼 의정인사 공공요금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월 물가 상승률과 한류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 동안 소비자물가는 0.7% 상승했다. (도매) 물가는 0.1%씩 올랐다.

이외에 소비자물가는 2월말 현재 작년말보다 1.5%가 상승, 작년 1~2월(1.3% 상승)보다 0.2%포인트 더 올랐으며, 1년 전인 작년 2월말에 비해선 4.6%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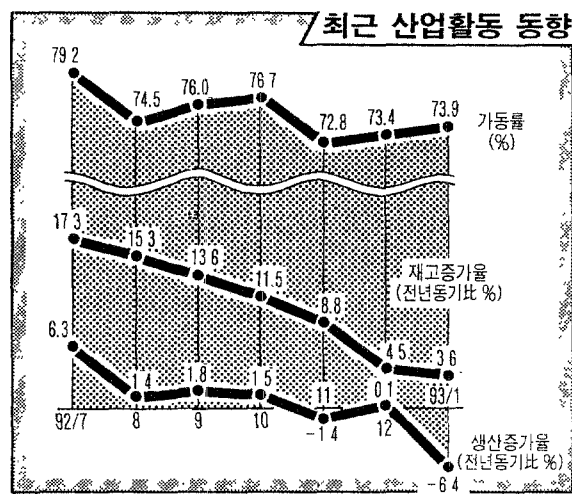
올 1~2월 공공요금 상승률(3.4%)은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의 두 배를 넘은 것이며, 작년 같은 기간 공공요금 상승률(0.9%)의 3.8배에 달했다.

이같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특히 올들어 두달 동안 농축수산물, 공산품, 집세, 개인서비스(도매)의 상승률이 각각 2.1%, 1.7%, 3.4%나 높았기 때문이다. 상승률이 평균 1.5%인

물가단위관리제 도입 2월에 소비자물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한 것은 지난 1월 25일 단행된 버스요금 인상(20%)의 일부 2월 1일 시행된 지하철(20%)인상(20%)과 지하철(20%)인상(50%) 등 공공요금의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다.

景氣회복기대 무산 「겨울잠」 지속

「1월중 産業활동이 1분기」



전체를 살펴보면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바탕이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이렇지 않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감소 80년 9월 이후 最惡 「1분기 성장 2~3% 그칠것」 우려

2~3%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의 경기상향을 알리주는 경기중요지수도 작년 5월 이후 8개월만에 감소로 돌아선다.

특히 투자지표는 분기별로는 증가했지만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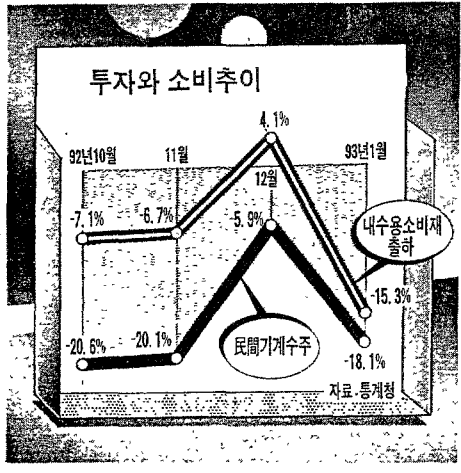
이러한 경기상향은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중 산업활동이 1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沈滯상황 생각보다 심각

1월중 산업활동 동향 분석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조만간 회복되리란 일부 낙관론자들의 기대를 무색 중 지표를 우리 경제가 깨하고 있다.



산업생산·출하·소비·투자·고용을 어느 지표 하나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정화정책의 주효이었던 기획원마저이 약 2%대로 급락했을 때만 해도 『軟着륙』에 실패하지는 했지만 이제는 경기 가바닥을 치고 급년부터는 다소 회복세에 접어들

요인도 무엇보다 투자와 소비등 국내수요가 얼어붙은데다 수출마저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는 내수용 소비재 출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3%가 줄었는데 서할 수 있듯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위축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비

消費 줄고 輸出 위축 심화

經濟 팀 妙策 못 찾아 고민

같은 부진현상이 단기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생산의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나 감소한 것은 '다수'의 의미라고 표정이다. 경제기획원의 성장률의 지난해 0.8%로 떨어지후 4분기에는 1.1%에

양하기도 어렵고 건설경기 부추기는 것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새로 출범한 李經權정체팀의 고민도 경제를 이 상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마땅한 수단도 없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안정을 해칠 정도의 인위적인 단기부양책은 쓰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완화와 실체기업의 인화능력을 통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개선한다던 정부의 대책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金鐘秀기자 <

社 說

株價하락에 産業동향도 심상찮다

최근의 株價하락과 産業활동동향은 우리경제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함을 새삼 깨우쳐 주고 있다. 産業활동동향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지표이며 株價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반영되는 중요한 實物자료다.

두가지 지표가 바닥을 모르고 계속 해매고 있지만 묘책 또한 쉽게 찾아지질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중의 産業활동은 생산·출하·소비·투자 어느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 특히 産業생산은 1년전 수준에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한 경제부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지난 연말을 바닥으로 금년초부터는 회복의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았으나 이제 그러한 낙관론은 당분간 유보돼야할 상황이다. 신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株價의 하락행진은 지금까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도 별로 없고 서둘러서 타개를 위한 대안을 내놓을 움직임도 없어 보인다.

최근의 경제현상이 신정부가 물려받은 경제적 유산이라고 치부하고 있어서라고는 보지 않는다.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의 경제문제를 타개해야할 사람들은 새정부의 경제팀이다. 주초에 열린 첫 경제장관회의는 상황인식과 대응과제를 제기했고 개혁과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방향과 원론만이 제기됐다.

새정부출범후 부활된 첫 黨政會議에서도 경제장관회의 수준이상의 代案은 제시되지 못했다.

경기활성화나 株價침체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침체가 구조적인 문제로 귀결되어 있는데다 국민정서가 안정을 희구하고 있다. 또 과거처럼 정부가 株價를 떠받치는 임기응변적 證市정책이 바람직하냐는 의문도 많다.

그러나 수단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고해서 강건너 불처럼 여길 사안도 아니다. 證市상황은 實名制등 改革과제와 맞물려 있다해도 投資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증시붕괴가 걱정된다. 경기先行指數 또한 비관적이다. 개혁과 안정화의 지속, 경제활성화가 삼각고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본질속에는 불확실성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개혁의 구체성이 조기에 명료화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 개혁으로 인한 일시적 혼란이나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그 대가를 최소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경제에 있어서 심리적으로인만큼 큰 變數도 없다. 심리적으로인에 의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첫번째 타개책이며 그것은 불확실성을 감싸고 있는 개혁의 구체성을 조속히 명료화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경기활성화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社說



新경제시대의 景氣대책

개혁이 투자인욕을 위축시키선 안된다

春來不似春인가. 개혁이후가 여간시련이 많은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이후의 경제는 물론 개혁이후의 정치도 개혁이후의 문화도 개혁이후의 생활도 개혁이후의 모든 것이 개혁이후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후의 경제가 개혁이후의 정치와 문화와 생활과 모든 것이 개혁이후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후의 경제가 개혁이후의 정치와 문화와 생활과 모든 것이 개혁이후의 것이 될 것이다.

반면 개혁이후의 景氣대책

통계청이 발표한 「1월형 생산업황」에 따르면 1월형 생산업황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산업생산 총액 대비 투자 비중은 20.1%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1월형의

은 1월형의 생산업황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산업생산 총액 대비 투자 비중은 20.1%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1월형의

와 時機를 놓치지 마라

경제가 개혁이후의 정치와 문화와 생활과 모든 것이 개혁이후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후의 경제가 개혁이후의 정치와 문화와 생활과 모든 것이 개혁이후의 것이 될 것이다.

정책의 예측가능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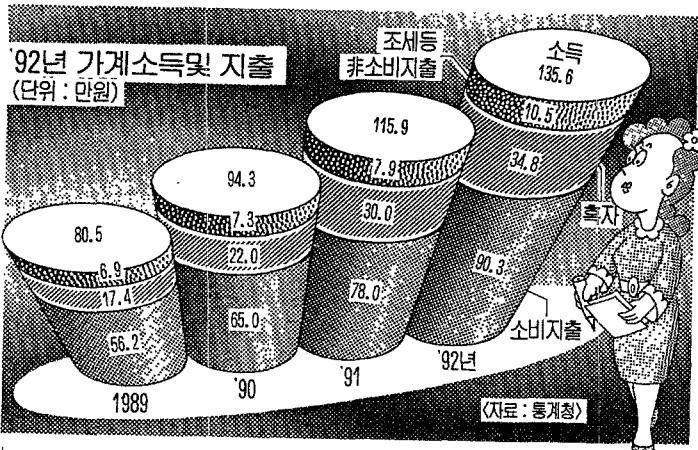
정책의 예측가능하게. 경제가 개혁이후의 정치와 문화와 생활과 모든 것이 개혁이후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후의 경제가 개혁이후의 정치와 문화와 생활과 모든 것이 개혁이후의 것이 될 것이다.

내부인재 없다. 정권교체의 경제의 안정을 위한 방안은 물론이고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새정부가 투자인욕을 위축시키선 안된다. 그러나 개혁이후의 경제가 개혁이후의 정치와 문화와 생활과 모든 것이 개혁이후의 것이 될 것이다.

경제가 개혁이후의 정치와 문화와 생활과 모든 것이 개혁이후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후의 경제가 개혁이후의 정치와 문화와 생활과 모든 것이 개혁이후의 것이 될 것이다.

경제가 개혁이후의 정치와 문화와 생활과 모든 것이 개혁이후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후의 경제가 개혁이후의 정치와 문화와 생활과 모든 것이 개혁이후의 것이 될 것이다.

都市근로자 가구 한달 가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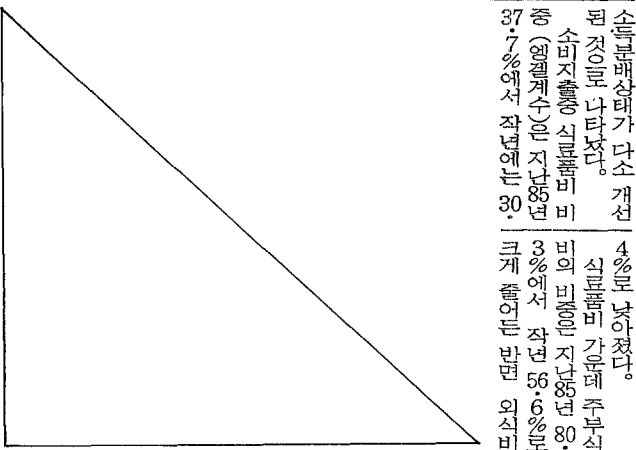
1년새 소득 20만원 지출 15만원 증가 외식費 크게 늘어 식비의 25%나 차지

소득 百35萬6千원 지출 百萬8千여원

통계청 작년 조사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35만6천원, 지출은 1백18만8천원으로 가구당 한달에 34만8천원의 흑자를 올렸다고 나타났다. 또 지난 87년 이후 매년 증가해오던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소득 중 가구주(세대주)를 제외한 가구원소득 비중이 작년에 처음으로 50%에 육박했다. 한편 식비 비중이 지출액의 24.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 4천5백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92년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의 근로 소득 중 가구주(세대주)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75.1%에서 91년엔 71.6%로 차츰 줄었으나 작년에는 72.7%로 다시 높아졌다. 이는 작년경 기침체로 실업이 늘면서 주로 가구원들의 취업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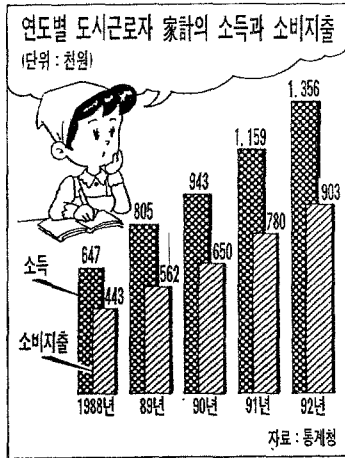
소득분배상대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중 식비 비중이 37.7%에서 작년에는 30.3%로 줄었다. 반면 외식비 비중은 4.1%에서 24.9%로 크게 늘었다. 작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91년 1백15만9천원에 비해 92년 1백35만6천원으로 17% 증가한 91년 85만9천원보다 14만9천원(17.3%)씩 각각 늘었다. 한편 월평균 소득 중 근로소득은 1백15만7천원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을 기탁 소득이다. 작년 가구당 소득에서 세입자(비소득) 비중이 1백25만1천원으로 1백7만9천원보다 1791만2천원(15.9%)이 늘었다. 한편 세입자 비소득 비중은 91년 7만9천원에서 작년 10만9천원으로 2만6천원(32.5%)이 늘었다는 데 이는 소득세의 누진 체계로 소득 증가에 비해 조세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이다.

도시가口 작년月所得 135만원

前年比 17%늘어- 저축 34만원

교육비 증가율은 29%로 급증

34만원의 저축은 전월평균 280만원의 소득에서 246만원의 소비지출을 차감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월평균 소득은 1백55만원6천6백원(前年 대비해 0.2%포인트



지난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35만6천1백원으로 91년의 1백15만8천6백원보다 17% 증가상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10.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74%인 1백만7천7백원 (증가율 17.3%)을 소비하거나 저축을 내는데 쓰고 나머지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봉급생활자의 가계소득과 지출은 경기침체로 예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했으나 임금인상의 대부분 상반기중에 결정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의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의 비중이 85.3%인

통계청, 「가계지수동향」조사

높아졌고 특히 경기부진의 여파로 가구주의외의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가정의 근로소득비중이 91년의 71.6%에서 72.7%로 1.1%포인트 올라갔다. 상위 20%소득계층의 월평균소득은 2백55만원10로 상위 20%의 평균소득(57만7천원)에 비해 4.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5년의 5.13배에 비해서는 점차 소득계층간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의 비중(영양계수)은 30.4%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교육비증가율이 지난 85년 9%에서 지난해에는 29.2%로 높아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월 산업景氣 회복세

생산·소비·투자 등 늘어

통계청 자료 失業率은 3.4%로 더 악화

생산·소비·투자 등 각종 산업지표에서 2월은 1, 2월의 누계치가 전월 및 전년 대비 다소 나아져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월의 실업률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어 9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3.4%를 기록, 취업난이 심각한을 나타냈다.

정부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내수의 회복 추세 및 수출회복이 기대되고 있어 향후 경기는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언제부터 경기가 회복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해 경기가 여전히 침체국면에 있음을 시사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지표」에 따르면 2월 중 산업생산은 자동차·컴퓨터·복사기 등 무회계용기기, 영상용기기 및 통신기기의 생산증가로 전월 대비 2.6% 전진(전월 대비 6.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부문에서도 판매는 전제품 철물 농약 건축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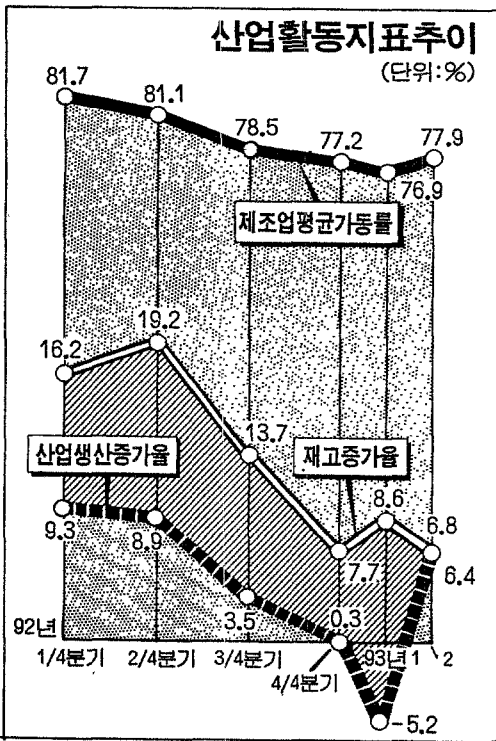
금속 등의 판매가 증가해 1월에 비해 10.8% 늘었다. 그러나 판매는 설비(1월) 특수가 지나면서 백화점 판매와 의복 등의 판매부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5.3%의 감소세를 보며 전체적으로는 전월 대비 1.8% 전진(전월 대비 9.3%의 증가를 보였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승용차 선택기 진공청소기

가소대인지, 가스용보일러 등 내구용 소비재의 증가가 전년동월 대비 26.7%를 나타냈고, 비내구용 소비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를 나타낸 가운데 소주(17.0%)와 위스키(33.4%)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소비부자의 경우 국내기계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로 보합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자동차 기계 등 민간제조업부분의 경우

14.9%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기계류 수입 허가도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호조를 보였다.

2월 중 건설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4% 감소, 전설수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은 공기업체들이 정권교체와 관련, 2월 중에 각종 공공공사의 발주를 늦춘 때문이다.



93. 3.31

2월 景氣 소폭 회복세

산업동향 발표

국내경기가 지난 2월 중 미약한 회복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실업률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趙秉甲 조사국장 은 30일 발표한 「2월 중 산업활동지표」에서 『생산·소비·투자의 각종 지표에

서 2월과 1, 2월의 누계치가 전년 대비 다소 나아졌다』면서 『앞으로의 경기는 내수 및 수출회복이 기대되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생산은 지난해 1월 중 마이너스 5.2% (전년 동기 대비)의 감소를 보였다가 2월에는 자동

차, 컴퓨터와 영상용기기 등 가전제품의 내수 및 수출증가의 선유화 제품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6.4%의 증가세로 크게 반전했다. 그러나 1, 2월의 누계로 비교했을 때 산업생산은 0.4% 증가에 그쳤다. <羅鍾顯기자>

통계청·産銀발표 2월산업동향분석

국내경기가 밑바닥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경기 회복과 면의 점진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황이

지표양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확실하나 확실한 회복과 면이라고까지 보긴 어렵다. 체감경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여부를 말해주는 생산과 출하가 지난 1월을 각각 5.2%, 3.5%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월에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6.4%의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실질인류를 감안하면 증가폭의 의미를 부

경기指標 호전

정부의 갖가지 투자촉진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월중 기계수주는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했다. 그러나 1, 2월을 통틀어 총 4.3%의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민간부분의 기계수주는 줄어들

보였다. 그동안 공공사업이 늘었던 내수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소비가 되지는 않고 있다. 기업들은 앞으로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보고 가급적 공장을 적게 틀리면서, 설비투자에 물들

기수준엔 미치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말과 같은 최악의 상태에선 벗어났지만 아직 경기회복이라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양호도의 경기 전망. 통계청의 생산 소비 투자 등 각종 지표가 다소 나아져 양호도의 경기는

다. 실물경기가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는 데다 경기침체의 기간이 워낙 길었던 만큼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관건이다. 신중재 1

백인계회과 경제행정규제 완화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기까지는 상당한 시

84에서 2.4분기 1백3으로 높아졌다. BSI는 기업경영자들에게 향후 경기가 조사시점의 경기예비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보느냐, 또는 악화될 것으로 보느냐를 묻는 것으로 1백을 넘으면 호전, 아래면 경기악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BSI가 1.4분기 84에서 2.4분기 1백3으로 높아지는 것은 1.4분기의 침체국면에서 다소나마 회복기미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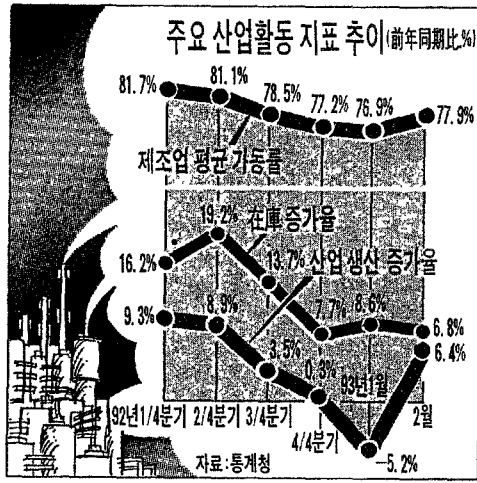
기업생산·出荷증가세 반전
설비투자에는 회복기미 감감

도소매판매액 늘어...內需 점차 살아나

生産 오름세 反轉

소비재 內需 증가

景氣 미미한 회복세



지난 2월 중 국내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중 산업활동지표」에 따르면 2월 중 1월 중에 전년대비 5.2%가 감소한 산업생산의 2월 중 6.4% 증가로 반전했으며 수출 역시 1월의 3.5% 감소에서 6.4% 증가로 돌아섰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평균가동률도 2월 중 77.9%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이후 설비재증가세를 보였다. 2월 중 생산활동이 이처럼 점차 회복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운수장비·철강·精油業 호조 신용대출이 3.4% 늘어

2월 산업동향

이로써 작년에는 2월에 끼여 있던 설비재증가율에 대한 1월에 끝난 2월의 작업 일수가 작년보다 2월이 많았기 때문이며 이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실제 산업생산증가율은 2.6%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공업은 수장비(22.6%증가), 철강(12.8%), 석유정제업(12.5%) 등이 호조를 보였으며 시멘트·섬유·나부제품업이 부진했다. <판매사 3면> 투자부문의에서도 주요 선행지표들이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다.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허가면적은 건축규제제에 힘입어 2월 중 12.8% 증가했다. 32.8%가 증가했다. 공업부동산지표인 전체 업종의 국내계수가 작년 동기와 보합세(증가율 0%)를 보였다. 제조업은 14.9%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는 도·소매판매업의 증가율이 3.4%로 나타났다. 그나마 고용부문에서는 작년 12월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다. 2월 중 실업률이 3.4%를 기록, 작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기보다 2만 6천 명 증가했으며 실업자는 모두 83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2월 중 경기선행지수는 전월의 0.4% 감소에서 1.1% 증가로 돌아섰고 동행지수 수확면 등치도 전월의 0.8% 감소에서 1.1% 증가로 반전,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2/4분기 보도기사

(4월~6월)

여 백

3월 소비자물가 치솟아

통계청·한은 발표 등록금등 공공요금 인상영향

1.3% 올라 한달 상승률 5년만에 최고

각급학교 등록금, 의료보험수가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받아 3월중 물가가 큰폭으로 올랐다.

31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한달 동안 1.3%나 급등했다. 이는 한달간 상승률 기준으로 88년 3월(1.5%)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3월까지 소비자물가는 2.7%나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런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올해 물가관리목표 4~5%를 위협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서비스요금과 농산물값이 오를 경우 물가 관리목표의 준수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와 자금지원 확대, 통화신축공급 등의 총수요확대정책을 펴고 있어 물가불안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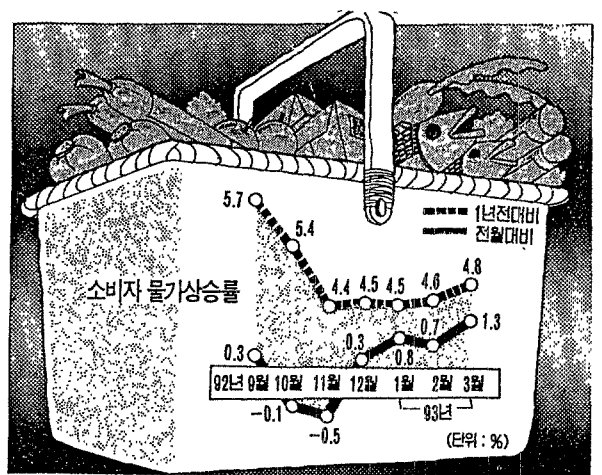
3월중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각급학교 등록금(12.5%), 의료보험수가(4.4%), 시내전화료(20.7%), 교과서(5.0%) 등의 인상으로 공공요금이 3.7%나 오른데다 밀감(17.2%), 바나나(15.7%), 돼지고기(5.7%) 등 농축수산물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배달우유(11.2%)와 시판우유(14.2%), 합판(10.5%), 국교참고서(7.7%), 생화(15.0%) 등 공산품값도 0.8%나 올라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됐다.

경제기획원은 "3월 물가는 지난해보다 공공요금을 앞당겨 조정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높아졌지만, 의료보험수가, 우유값 등의 상승분을 제외하면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기본생활품값은 1.0%, 신선식품값은 0.3%상승에 그쳐 생활물가는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기획원은 "연말까지 공공요금 인상이 없고 공산품값도 안정될 전망"이라서 농축수산물값과 서비스요금만 안정되면 연간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관리목표를 크게 웃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3월중 생산자물가는 전월보다 0.6% 올라 올해 들어 3월까지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0%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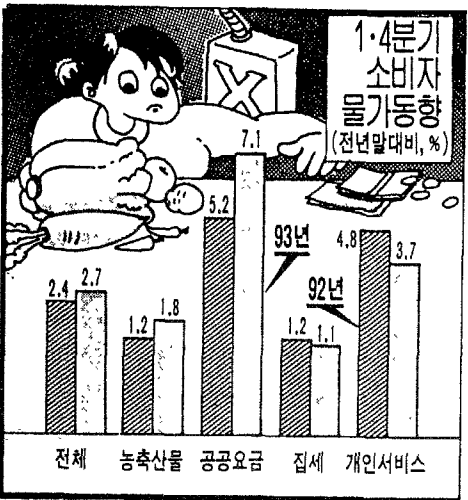


物價불안정차可視化

3월 상승률 위험水位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3월중 물가동향을 보면 물가불안의 요인들이 비교 적인게 드러난다. 8월한

또한 지난해 연말 대비 3월말까지도 2.7%나 올라 지난해 1.4분기의 2.4%를 넘어선고 있다.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다. 3월중 물가동향을 보면 물가불안의 요인들이 비교적 드러난다. 8월한

新경제 총수인플레이션수반

달물안 소비자물가는 ▲답 입력 다폭인상 ▲의료보험 수가 조정 ▲牛乳값 인상 ▲농산물가격의 대폭상승 등 4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요인은 ▲농산물 가격의 대폭상승이다. 이는 지난해 8월의 물가상승률 1.1%를 크게 웃도는 5.2%인상률로

부진인 저의 불가항변 부
표가 될 무산이 된다.
3월의 물가가 이처럼
크게 오를 것이 무산이라
이 위와 같은 불이로 올랐기
때문. 사립화(15.1%) 국
립화(11.3%) 전분화(20
.4%) 비화(10.1%)와 당
이 올랐던 것임(10.4
%) 사립화(9.5%) 포탄
고(9.3%)를 각각 단련
없이 일제히 올렸다. 여기

했던 가장 산불가항변 소위
「중저급화」로 인한 반
등으로 있다. 밀전(17.2
%) 편지고기(5.7%) 파
나(15.7%) 같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지난해 동등
부양했던 물가의 파급이
덜어졌던 농산물도 모두
오르지는 않았고, 지난해
물가안정의 2차 공약을
모두 들뜨서리고 있는 것

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
하더라도 말이다. 아랑곳하지
수 없다. 그리고 밀전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물가안정
을 추구했던 공산품이 주
류를 이루는 도매물가의
시상세를 보이며 오르고
전를 보면 물가불안인 일
시점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
다. 공산품 값을 부느냐지
만 유동성까지 묶어 버린 어
렵기 때문이다. 또 화산화

가 불안인 밀전과 수면 바로
이래 전분화, 오징어, 메
신경제, 1월 일계화, 물가
불안 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
문이다. 어제 보면 도화선
만 엮으면 물가가 폭발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
정확히 수역화(도시철도
정비)와 물가불안의 우려
가 확대되는 점을 지적, 공
무원의 올해 동향이라고 개
인서비스(여론)를 지적하

관전 이 약속이 지켜질 것
이 아니다.
공산품가격 개인서비스
여론(10%) 정부가 강경한
행정조치를 하면 전기 정
도 안정을 거둘 수 있지만
농산물가격이 급등한다.
물가안정(농산물)은 막대적 장
바구니물가만 안정시키면
문제.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물론 전부는 경제 정책
을 통해 관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동등부양
정책이 옹호해 오고 있다. 민
간자영업정책을 포함하여 부
유계층에서 상층 부류 계
급까지 전진시켜 왔다.
민중부담을 아예 없애
물가불안이 정제된 나쁜 것
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충수요(물)를 통해 정제를
할 것인가? 물가안정 정책이
누가 지지 가능한지 주목
하겠다. 당장 물가가 주파
된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경제활성화가 비관적이
지나지 않는다. 개혁의 성
패가 바로 물가안정인 것
이다. 【물가안정】

요학대... 증폭가능성 맨 「저품」재현우려도

어디의 보합수가(4.4
%) 지난해와(20.7%)요
합이 올해보다 높았을 것
이다. 3월의 물가안정(3
%)은 3월의 물가안정(3
%)의 정세를 나타낸다.
특히, 지난해 물가안정
정책(10.1%)과 물가안정
정책(10.1%)과 물가안정

이다. 어제 보면 안심할 만
한 부분이 없는 편이다.
다만 개인서비스(의류)만
이후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부 상층의 정세를 제외하
면 지난해보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제(10.1%) 「공」과 정
제(10.1%) 정제(10.1%) 정제(10.1%)

가고 있는 물가불안(전)은
사회적 불평등과 다소 상
승하고 있는 수역화(도시
부양)에 대한 우려를
다. 이미 지난해 연말 대
을 전후해서 물가안정(10.1%)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른 재계도 재평가(과
정)은 3월의 물가안정(3
다.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다.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다.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다.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다.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다.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다.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다.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정제(10.1%)

社 說

다시 物價를 경계한다

물가걱정이 되살아나고 있다. 3월중 소비자물가가 5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 자체도 심상치 않으려니와 새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新經濟 1백일계획과 관련해서 향후물가추이가 걱정스럽고 경계되는 것이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가 3월중에 1.3%나 오르고 1·4분기중에 2.7% 상승한 것은 일부 공공요금의 조기현실화와 농산물가격의 상대적상승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물가동향에 물가당국은 연내에는 추가적인 공공요금의 조정이 없고 신경제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제품가격에 대한 사실상의 동결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4월부터는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불과 3개월동안의 물가상승률 치고는 지나치다. 벌써 올 물가억제목표의 절반선 이상이 무너졌고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 정상적인 물가관리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그동안의 안정화시책이 새정부출범과 신경제 1백일계획의 추진으로 경제활성화라는 당면과제에 우선순위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신경제계획은 그동안의 2차에 걸친 파격적 금리인하와 함께 총수요면에서 돈을 많이 풀도록 짜여 있다. 3월까지의 물가에는 이러한 신경제영향이 아직 반영되지도 않은터

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제추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보고있는 분야가 물가다. 활성화에 경제시책의 무게가 실리다 보니 안정화 의지는 퇴색되어 있는게 아니냐는 심정의 발로다. 물론 새경제팀은 인상요인이 있는 전기요금·고속버스요금·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조정을 금년말까지 동결기로 하고 개인서비스요금도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해놓고는 있다.

공산물 가격도 1년간 정부가 동결을 호소, 이미 상당수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적극 호응을 선언해 놓고는 있다.

또한 공무원 월급의 동결이 기업체의 임금차제에 이어지도록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부의 이러한 물가안정노력은 지금부터 可視化 될것이라는 전망에 큰 이견을 달지 않는다. 그러나 균형적인 고통분담을 기저에 깔고 있는 물가안정노력이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합리적 경영으로 원가상승요인을 흡수하는 것도 한정적이다.

동결만으로 물가가 모두 잡히지 않으려니와 인플레이잡복을 주시해야 한다. 고통의 균형적 분담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각 경제주체가 노력함은 물론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에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할것이다.

통계 '공표협약' 쟁쟁논란

발표전 통계청서 조사결과 '5~7일 점검'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꼭 통계청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니, 62년 1월 통계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공표협약'에 대해 민간연구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경련·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 한국·산업·주택은행 등 통계조사·분석활동을 활발히 하고있는 기관들은 통계조사결과 발표 때마다 표본의 규모와 선정방법, 조사결과의 분석방법 등 통계조사 경위를 통계청과 협의하고 있다.

공표협약이라고 불리는 이 협의는 통상 5~7일씩 걸리지만 어떤 때는 10일을 넘기

기도 한다. 이에 따라 통계조사기관들은 통계조사 시의성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정책이나 정치권력의 구미에 거슬릴 경우 통계청쪽이 협의과정에서 발표를 유보시키거나 조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미루면서 발표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까지 한다.

통계작성기관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공표협약은 본래 통계활동을 지원하되 정확성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현행 통계법에는 통계조사 주체는 결과를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해 협의한 뒤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표협약의 업무는 통

계청장에게 위임돼 있어 통계작성기관들은 매년 조사결과를 들고 통계청으로 찾아가 담당 국·과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들 기관들은 통계조사의 신뢰는 궁극적으로 조사기관의 문제이며, 신뢰도가 떨어지면 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표협약의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표협약은 군사독재 시절 정부가 민간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서 "이제 민간기관의 조사분석 능력도 향상돼 있으므로 효과도 없고 불편만 초래하는 이 제도는 마땅히 없애야

으로 한 뒤 이를 토대로 금융긴축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식으로 각자의 필요에 따라 통계조사를 해 마구잡이로 발표하면 통계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국민의 혼란이 가중돼 장기적으로는 통계조사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통계조사 전에 통계당국과 사전협의하는 제도가 있고 유럽은 통계조사업무가 한 기관에 집중돼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공표협약의 폐지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현재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협의의 면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령을 거쳐 산업·주택은행 등도 면

민간 통제수단...시의성 잃기 십상 폐지입장

마구잡이 발표 땀 국민 혼란 초래 존속입장

하며, 그래야만 통계조사활동도 촉진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통계청은 "공표협약 폐지 주장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이렇게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은 민간기관들의 통계조사·분석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즉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기관들은 표본추출과 분석능력이 떨어져 조사결과와 분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태형 통계청장은 "경제단체들은 종종 금융긴축 완화 필요성이 생기면 표본추출과 분석을 자의적

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경제단체들은 당분간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공표협약의 폐지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계조사 활동을 펴고 있는 곳은 전경련·대한상의 등 8개 기관이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주택·중소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등도 통계조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정부기관으로는 전매청과 상주인구조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조사를 해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신현만 기자**

都·小賣 판매액지수 기준연도 90년으로 통계청

통계청이 도·소매 판매액 지수의 기준연도를 85년에서 90년으로 바꾸는 동시에 27일 통계청이 도·소매 판매액 지수의 기준연도를 90년으로 바꾸면서 조사대상 표본업체수를 도매는 2천개에서 2천3백70개, 소매는 2천개에서 2천1백30개로 모두 5백개를 늘리고 가중치도 도매업에

통계청

자동차·기계 판매比重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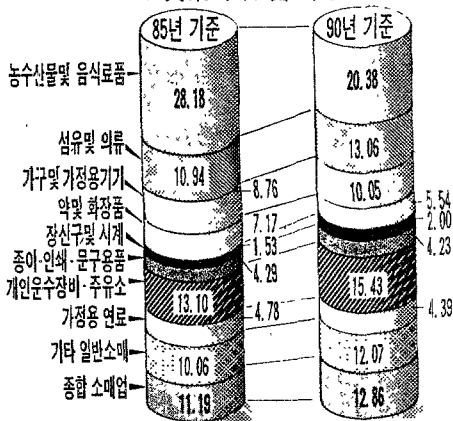
都·小賣 판매액 지수

수출수준이 높아지고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농수산품 및 의류의 판매액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자동차나 기계류, 의류, 제철 등의 비중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도·소매 판매액지수의 기준연도를 종전의 85년에서 90년으로 변경하면서 조사대상 업종

별 판매액의 증감을 따져 새로 산출해낸 업종별 가중치에 따르면 도매업의 경우 운수장비는 자동차생 산 및 판매증가에 힘입어 종전의 4.05에서 9.68으로 두배이상 커졌으며 기계도 컴퓨터·복사기 등 사무용 판매증가에 따라 5.84에서 9.75로 3.91포인트가 각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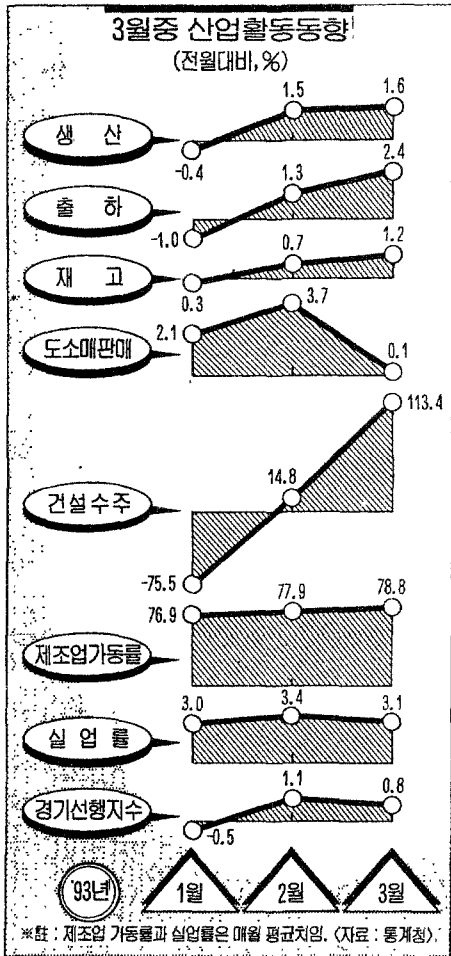
小賣業의 新·舊 가중치 비교



景氣 회복 조짐 보인다

자동차 家電 수출 늘어 생산 2% 증가
실업률 3.1% 재고증가로 아직 불안

통계청 발표 「3월중 산업동향」



지난 3월중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과 출하가 소폭 증가하고 제조업가동률은 산업생산과 출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미약

하거나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률이 3.1%로 여전히 취업여건이 개선되지 않았고 재고는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내수 및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1.6% 증가한 2.3%씩 증가했으며 제조업가동률은 2월 77.9%에서 3월 78.8%로 0.9%포인트 높아졌다. 도소매판매는 휘발유가 전제품 능력이 증가했으나 철강을 비롯한 각종 제품의 수요가 감소했다. 대외 무역은 아파트 공사 착공률로 건설경기가 상당히 회복되면서 취업이 증가, 3월중 실업률은 3.1%로 전월(3.4%)보다 다소 낮아졌다. 작년 3월(2.7%)보다 0.4%포인트 높았으나 3월 평균 실업자수는 61만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2, 3월의 내수 관련 생산 및 소비지표의 증가와 최근의 투자 및 수출 회복세를 감안할 때 경기가 지난 1월을 저점으로 차츰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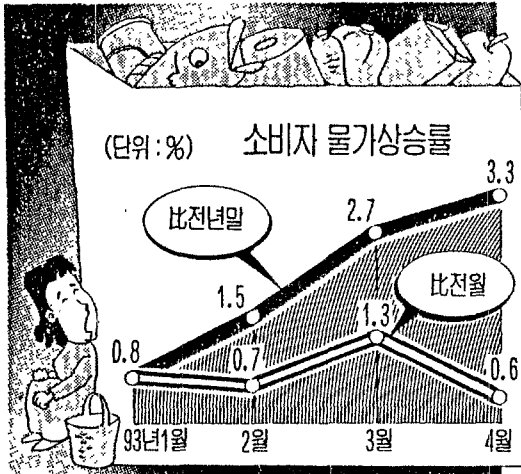
*註: 제조업 가동률과 실업률은 매월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物價오름세 한풀 꺾였다

4월 「소비자」 상승 0.6% 그쳐 公共·서비스料金 안정策 주효

도매는 0.3% 올라

4월중 물가는 지난 3월
의 큰 폭 상승세가 꺾이고
예년 수준을 되찾았다.
30일 경제기획원과 한국



3%가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4월중 소비
자 물가는 작년 말 대비 3.
3%, 생산자 물가는 3.
3%가 올랐으며 이는 작
년 동기 대비해 0.3% 포
인트 및 0.2% 포인트가 웃
도는 것이다.

4월중 소비자 물가 0.
6% 상승은 1월의 0.
8%, 2월의 0.7%, 3월
의 1.3% 상승에 비해 낮
은 것이다.
이는 新경제 1백일 제
획에 따라 공급요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정부의
고물담담 호소에 따라 공
산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이
안정세를 유지하는데 따른
것이다.
기획원 관계자는 지난해
의 경우 연간 4.5% 올랐
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4월까지 3.0% 오른 것
을 감안할 때 올해 4월까
지 3.3% 올랐지만 연간
억제 목표인 5%를 지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4월중 소비자 물가 동향
을 보면 일반미 가격이 농
가보유분 감소에 따른 출
하량 감소로 2.1% 올랐
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
로이 나온 콩고추 등 채소
류 가격의 상승으로 전달
에 비해 1.7% 상승했고
축산물 중 사육두수가 감소
한 돼지고기 가격 상승(8.
6%)으로 1.4% 올랐
다.
수산물 중 고등어, 멸태 등
의 어획량 증가로 0.9%
내렸다. 공산품은 고등화
생용참고서(8.0%), 합판
가격(1.9%)이 오르고

금반지 가격(△1.2%)은
내려 전체로는 0.3% 상
승했다.
공공요금들은 지난해 말
시판된 하나로 담배 가격이
시장점유율 제고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함에 따라
전체로 0.1% 개인서비
스 요금은 私표유비와 아
파트관리비, 외식비 등의
인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0.7%가 각각 올
랐다.

한편 4월중 생산자 물
가는 나완, 미송 등 목재류
관련 제품이 1.4분기에
이어 계속 상승세를 보인
반면 쇠고기, 달걀 등 축산
물 가격은 내려 생산자 물
가 안정에 기여했다.

올 3.3% 상승... 물가非常

4월 한달간 0.6% 올라

농축수산물·집세 등이 오름세 주도

“이대로 가면 두자리수 위협”

통계상승세가 꺾이지 않
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30일 발표
한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
비자물가가 4월 한달 동
안 0.6% 상승, 유흥·여
무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4.8%, 연평균 환
산하면 9.9% 상승한 것
으로 전년의 금년도 물가

관리목표(4.5%)를 위
협하는 것이다.
생산자물가(도매물가)
도 4월중 0.3% 올라
올해 4월까지 1.3%
전년동기 대비로는 1.8%
상승했다.
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농
축수산물이 1.3%, 집
세와 개인서비스 요금이

각각 0.7%, 공산품 0
.3%, 공공요금 0.1%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으로 농축수산물과 집세 개
인서비스 요금이 물가 상승
을 주도했다. 기본생필품
가격도 4월중 0.6%
올랐으나 전년말에 비해
서는 3.0% 상승에 그
쳐 전체 물가 상승률 약간
떨었다.

품별로는 콩고추(60.0%로 낮아졌다. 93년의
7%에 비해 22.9% 상승)는 3.3%로 다시 높아졌
다.
치(11.9%)·시내전화료
(12.9%)·코포합고서(8
.0%)·폐지고기(12.2
%)·김(12.6%) 등의 가
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
면 시외전화료(12.8%)·
생화(12.4%)·파(12.2
%) 등의 가격이 크게 떨어
졌다.

마지노선에 1~2% 차로 육박
安定무너지면 新경제 큰 타격

해설

「新경제」의 아
킬레스힐이로 평
가되던 물가가 여
전히 불안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물
가상승세가 물주의 다열된
부담이 우려되는 한편 인건
확보에 있어도 한지만
전체적인 물가상승세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다. 金價도 상승세가
물(부동산)·전부의 고
부담을 전적으로 부담
하듯 물가 상승세를
나타내 5월 말까지 주요

산물이 분해·축하될 것이
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세
로 정착될 것이란 「연
말 경제목표 발표」를 하지
킬수 있다고 다수 경제
인사들을 추구하고 있다.
문제도 정부정책이 여러
유 개인서비스 요금이다.
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
해 통화팽창을 추진하고 있
고 「新경제」와 화의에 호
기전도 개선책이 부가산
리물부추길 수 있다.
1~4월 물가 상승률 3
.3%(전년동기 대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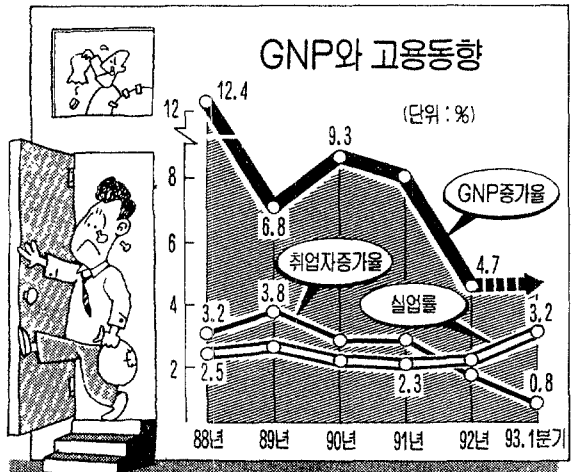
8%는 이미 정부의 연간
역제 목표선(4.5%)을
불과 1~2% 남겨놓고
거의 다잡힌 것이다. 앞
으로 「연말」 8개월 동안 물
가가 1~2%밖에 오르지
않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조금만 발전하면 마지노선
이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물가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
다. 「新경제」 초해부터 물
가 안정에 실패한 경우 「新
경제」 5개년 계획 「전체」도
가 뒤를 밀릴 수 있다.

1~4월중의 소비자물
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濟州가 4.7%로 가장 높
고 다음으로 大邱 大田
3.9%, 전남 3.7
% 등이다.
한편 연도별 1~4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1년
5.3%에서 92년에는 3.

【주요물가지수】

失業率 3.2%... 4년만에 最悪

1분기 大卒者·청년층서 특히 심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나빠져 올들어 3월 말까지 1.4분기중 실업률이 3.2%에 이르렀다. 1.4분기보다 올 때 지난 89년 1.4분기의 3.3% 이래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문대 이상 대졸 출신의 고학력자와 20~24살의 젊은층 남자의 실업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생산직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취업고 위압감이 일

서비스業 취업비중 60% 넘어서 고용구조 불균형 심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살 이상 인구 3천2백17만6천명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한 경제활동 인구는 81만5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만6천명이 늘었다. 는데 그중 89~92년 동기

중의 평균 60여만명 증가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이에 따라 15살 이상의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내 경제활동 참가율도 58.5%로 지난해 1.4분기 58.0%보다 0.5%포인트가 감소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20~24살의 젊은층이 60.5%로 전년 동기 대비 2.9%포인트가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는 농림어업(12.8%)과 광공업(25.4%)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분의 취업자 비중이 61.8%로 높아져 3차산업의 비중이 처음으로 60% 수치를 넘어선 고용구조의 불균형을 보여줬다.

社說

失業率증가와 人力難

고용구조변화·3D기피증주목해야

失業率이 심상치 않다. 실업률이 3.2%에 이르러 89년 1.4분기 3.3%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지난해부터 겪고 있는 불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문제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고용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추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고용정책의 출자 양에 의 문제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3년 1.4분기 고용정책의 실태'에 따르면 실업률이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는 3천2백17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17세 이상 취업 인구는 1천7백81만 5천 명으로 증가의 그쳐 89~92년 3년간의 60만 명 증가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 경제활동 인구는 2천9백1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 실업률이 3.2%에 이르렀다.

비스무척의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60%를 차지한다. 서비스업은 취업자의 31.4%에 이르렀고 제조업은 1.4% 감소했다. 6%가 줄었다.

서비스업 확대의 지체

실업률의 증가는 보면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에 비해 취업 인구의 증가가 뒤처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취업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고용구조변화 3D기피증주목해야

경제의 활력이나 경쟁력은 제조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제조업으로의 이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제조업의 취업 인구가 14만 1천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8.5%가 줄었다. 제조업의 취업 인구가 14만 1천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18.5%가 줄었다.

고령층 취업 증가 우려

고령층 취업 증가 우려

고령층 취업 증가 우려

피해자인 것 같다. 그 때문에 국내에서는 실업이 가장 큰 문제를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의 증가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7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 중 합법적으로 3D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이 1만 4천 명이 넘는다는 불만 체류자다. 정부는 이를 외국으로의 이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서 노동력을 구할 수 없는 3D업종은 해외로부터 자기가 빠져 나가면 결정적인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할 위기에까지 이를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고령층 취업 증가 우려

고령층 취업 증가 우려

고령층 취업 증가 우려

기업 자율채용 필요

기업 자율채용 필요

기업 자율채용 필요

기업 자율채용 필요

社說

高失業率과 인력난 不況터널

한국경제는 아직도 不況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失業率은 89년 1-4분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3.2%를 기록했다. 이러한 失業사태속에서도 일부 業種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失業사태 속에서의 人力難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일자리는 있으나 이른바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업종에는 취업을 꺼리고 있다는걸 나타낸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바로 극복해야할 과제인 하나이다.

경제도 企業도 사람이다. 이는 사람의 생각및 능력과 행동이 경제와 企業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企業의 경영실적이나 經濟成長은 사람에 달려 있다는건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열심히 땀흘려 일하려 하지 않고 不況탈출만을 고대하고 있다.

1-4분기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인구중 경제활동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동기예 비해 1.7%(21만5,000명)증가에 그친 반면 주부 학생등 非경제활동인구는 2.4%(31만명)증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일할 능력은 있으면서 취업의사를 포기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것을 말해주는 것일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그만큼 잠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도 제조업은 줄어들고 서비스업 도소매및 음식숙박업은 늘어났다. 이는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추세라고도 할수 있지만 3D업종 기피현상의 영향으로 볼수도 있다. 또한 高學歷자와 낮은 연령층의 실업률이 높았다. 생산직의 人力難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은 3D업종 기피현상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경제가 活性化된다는 것은 생산증가 기술혁신 수출증가와 같은 현상의 지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활성화는 능력있는 人力이 생산현장에서 제몫을 다할때 가능한 것이다. 현재 생산현장의 人力難은 참으로 심각하다. 어려운 일을 배우려고 하는 젊은층이 없어져 가고 있는것은 더욱 심각하다. 누구나 편하고 더 많이 받는 일자리를 원한다. 그러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굳은 일 힘든 일도 마다 않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거대한 기계장비라도 조그만 나사하나가 제구실을 못하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동안 일부업종의 人力難을 외국근로자로 매웠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인력은 7만명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중 합법체류자는 1만4,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강제출국대상자여서 이들이 출국하게 된다면 산업현장의 人力難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더욱이 이들 불법체류자는 3D업종의 中小企業에 많이 고용돼 있어 중소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생산직의 인력부족률이 20%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 해외인력이 출국하게 될때 구로 부평 주안 남동공단 외국인고용 69개업체의 평균가동률은 25.4%나 줄어들것이라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의 실태조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사람이 없어 공장을 못돌리는 상황은 분명 뭔가 잘못돼 있는 것이다. 自動化부자를 많이한 企業의 경우에도 자동화된 기계를 돌릴 일손이 부족해 기계를 세워두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賃金を 높일수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노동의 質이나 量으로 따질때 우리는 이미 국제경쟁을 하기 어려운 만큼 高임금이다.

생산현장의 人力難은 우리사회 여타 모든 부문의 行態와 직접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非생산직 서비스業에서 손쉽게 돈벌수 있는 기회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 사회분위기에 휩쓸려 땀 흘리며 일하는 젊은이의 모습이 바람직하게 비쳐지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 人力難에 어려움을 겪는 企業들이 필요한 人力을 스카우트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국민경제전체로 볼때 옳은 대책은 아니다.

人力難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술연수제도확대도 고려할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현재 우리의 경제발전단계로 미루어 볼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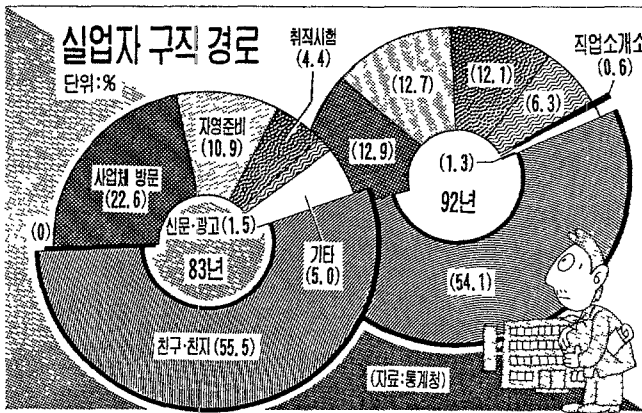
고급기술인력이 아닌 3D업종의 인력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사람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투철한 天職의식을 가져야 하고 한결을 더 나아가 匠人정신으로 일에 임해야 그들이 생산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경제의 先進化는 企業의 先進化를 통해 가능한 것이고 企業의 先進化는 企業구성원들이 일의 量이나 質에서 선진 경쟁국수준과 같아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일부업종의 人力難, 이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통계청 분석

1·4분기 실업률이 3·2%의 발목을 잡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은 1992년 12·7%에서 1993년 12·1%로 낮아졌다. 실업률의 하락은 실업자 수의 감소가 아니라 실업률의 분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업률의 하락은 실업률의 분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실업률의 하락은 실업률의 분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친구·친지소개로 求職 54%

직업소개소등 정부 실업자 대책 不實 새 직장 얻기까지 1~3개월이 56% 차지

업체에 직접 찾아가 직업을 얻은 경우가 12·9%로, 취직 시험을 다시 본 경우가 12·1%로, 신문·광고 등을 통해서가 6·3%로 나타났다. 새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고 자활을 준비하는 사람도 12·7%나 됐다.

그러나 직업소개소를 통한 求職 비중은 0·6%로 크게 떨어졌다. 이같은 求職 패턴은 10년 전인 83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그동안 실업자 대책에 소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참조〉

특히 여자는 친구·친지에 부탁하는 비중(전체 여자 실업자의 64·0%)이 남자(전체 남자 실업자의 48·8%)에 비해 높아 그만큼 새 직장을 구하기가 훨씬 어렵다.

실업자들이 새 직장을 얻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1~3개월이 56·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1년이 상은 3·7%였다.

한편 직장을 가졌다가 그만둔 前職 실업자는 83년 전체의 73·6%에서 92년 53·7%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취업난과 실업률의 상승이 그만큼 심각해졌음을 보여준다.

〈韓鍾范기자〉

고학력 失業者비중 10년새 2배로

통계청 실업구조분석

지난 10년간 힘든일을 기피하는 「3D(독조)」의 확산과 학력인플레이의 심화에 따라 실업인구중 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자의 비중이 2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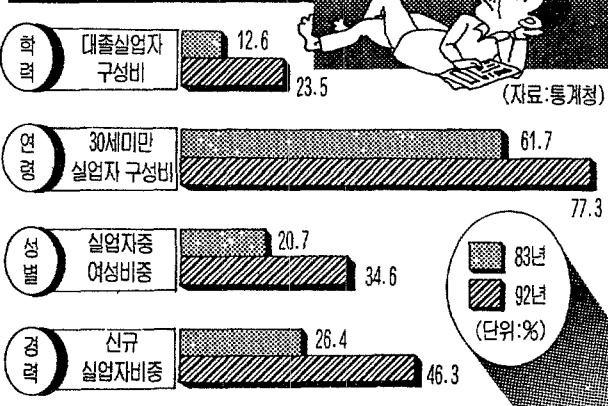
15일 통계청이 분석한 「83~92년간 실업구조변화」에 따르면 이 기간중 중졸이하 실업자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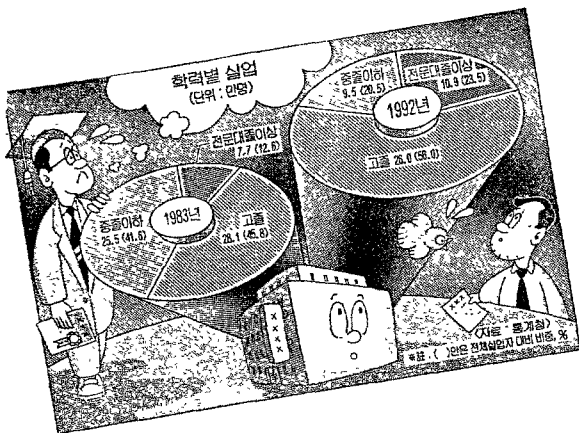


비는 41.6%에서 20.5%로 낮아진 반면 대졸이상 실업자구성비는 12.6%에서 23.5%로 높아졌다.

실업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5~24세, 25~29세층의 실업자구성비가 각각 42.3%에서 45.3%, 19.4%에서 22%로 높아진 반면 30세이상의 중장년층 실업자비중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10년간 실업구조 변화추이





지난 83년부터 92년까지 10년간 국민의 평균학력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중심으로 바뀌는 등 경제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실업의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실업률은 고용기회의 확대와 인력난 심화로 지난 10년간 크게 낮아졌지만 低연령 高학력층 일부계층에서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3D)일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 실업자비중이 커지는 추세였다.

통계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난10년간 실업구조의 변화」라는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83년에는 실업자수가 61만 3천명, 실업률은 4.1%였으나 작년에는 실업자수 46만 3천명, 실업률은 2.4%로 나타났다.

10~20대 「3D」 기피 뚜렷

작년 실업률 2.4%... 大卒者는 3.5% 「轉職실업」 이유의 39%가 "보수 적어서"

분류별 실업 : 산업부 증가 중
 화학과 공업업종으로 바뀌면서 남자의 취업기회는 확대되어 여자보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지난 83년엔 전체 실업자

중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30세 이상은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다.
 30세미만의 실업자수는 83년 37만 8천명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으나 작년엔 31만 2천명으로 전년

이하 실업률이 2.6%, 대졸 이상 6.1%였으며 작년엔 3.1%로 떨어졌다. 이 1.1% 대졸 이상이 35%였다.
轉職 실업 : 학교를 갓 졸업하고 취업

「사건별」인(10.8%) 자기 사업(하락)고(6.8%) 등임 나타냈다.
실업기간 : 3개월미만인 경우가 26만 2천명으로 전년

중 남자가 79.3%(46만 8천명)였으나 작년엔 65.4%(30만 2천명)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남자 실업률도 같은기간 5.2%에서 2.6%로 크게 낮아졌으며 여자 실업률은 2.2%에서 2.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연령별 실업 : 83년, 92년 모두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실업률이 대졸(전무)대졸후반(이)고 학력자 실업률보다 훨씬 낮았다. 83년엔 중졸

체의 67.3%를 차지했다. 연평균 실업률은 10년간이나 최근이나 평균이 높아 15~24세의 경우 83년 실업률은 9.2%로 작년엔 7.7%였다.
학력별 실업 : 83년, 92년 모두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실업률이 대졸(전무)대졸후반(이)고 학력자 실업률보다 훨씬 낮았다. 83년엔 중졸

실업률 구조변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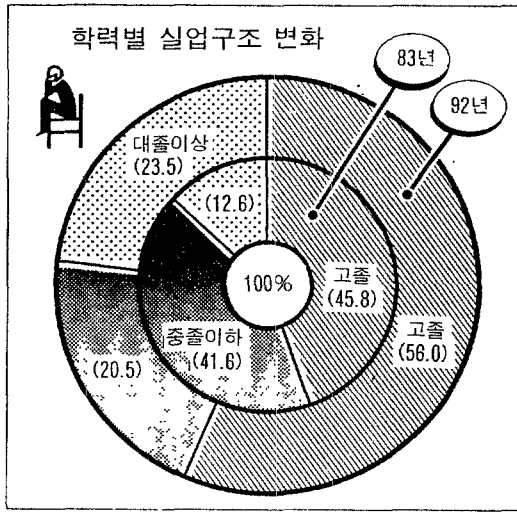
성별	연령			
	15~24세	25~29세	30~49세	
전체 실업률	4.1	2.5	2.4	
성	남	5.2	3.0	2.6
	여	2.2	1.7	2.1
	연령	15~24세	9.2	7.2
	25~29세	5.2	3.9	4.0
	30~49세	2.8	1.5	1.3
	50세 이상	1.0	0.8	10.7

(자료: 통계청)

친구나 친지 통해 구직 54% 차지

체의 56.5%를 차지했으며 1년 이상 실직상태인 사람은 1만 7천명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80년대 전반에 비하면 실업기간이 짧아진 편이나 88년 8월기에 비하면 실업기간이 약간 길어졌다.
 구직방법은 친구 친지를 통해서가 54.1%로 가장 많으며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구직률은 0.6%에 불과했다.
 (許承虎)

大卒이상 失業者 비중 10년새 2배



지난 10년간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실업자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중졸이하의 저학력자 비중은 절반이하로 낮아졌다. 이는 실업률 상승과 더불어 고학력자의 취업이

통계청 발표 83, 92년 실업구조 변화

조각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년간(83~92년) 실업구조의 변화에 따르면 대졸이상 실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이하인 83년 41.6%, 88년 26.2%, 92년 20.5%로 계속 비중이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30세미만의 젊은 실업자가 많아지고 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실업자의 구직경로변화 <단위= %>

구분	연도	83	88	92
친구·친지	추진	55.5	57.9	54.1
취직시험		4.4	11.3	12.1
신문·광고		1.5	3.9	6.3
직업소개소		-	0.5	0.6
자영준비		10.9	13.1	12.7
사업체 방문		22.6	12.2	12.9
기타		5.0	1.1	1.3

구성비를 보면 30세 이상의 경우 38.5%(83년)에서 32.7%(92년)로 낮아진 반면 15~24세는 42.3%에서 45.3%로 25~29세는 19.4%에서 22%로 높아졌다. 이 두 연령층(3D)은 평균 임금 상승률이 3D에 비해 높았으며, 임금인상은 부분적으로만 실업률 상승을 막아줄 수 있다. 또한 실업자 중에는 학교를 졸업한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신규 실업자가 직장을 옮겨야 하고 그만큼 전직 실업자보다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전직 실업자의 실업기간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우가 64%로 가장 많았다.

<徐廷禧기자>

3D 기피... 30세미만 젊은층 높아져

社說

景氣 좋다는데 失業 왜 느냐

인플레이션과 붐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失業率 증가는 設備투자부진과 더불어 우리 경제가 아직도 불경기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그것도 최근 『국내경기가 바닥을 밟았다』 『經濟企劃院의 보고서』에 나타난 것이다.

물론 「新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어 沈滯국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래서 예의 밑바닥을 통과한 후 「新경제」가 부진하거나 회복, 이때쯤이면 투자부진이나 失業率이 높다면 시작할 것이란 經濟企劃院의 분석에 모두가 기대를 건다. 하지만 이젠 「新經濟」의 전망이 모든 경제지표를 我田引水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과거의 오류를 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현재의 경기 부진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인플레이션과 設備投資의 현미경 수축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재고증가가 부활되고 가동률이 높아지는 것 같은 절기가 올면 冬眠으로부터 기지를 켜는 첫 신호이다. 반면 1분기중 실업률이 최근 4년만의 최고치(3.8%)를 기록했다는 것, 이

단 금리인하를 감행한 부양 조치에도 설비투자가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진단은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개현과 司正마련이 경제계에도 예외없이 불어다치고 있다. 마땅히 기업의 관망자세를 나타낼 수만은 없다. 경제집중화화란 대 경제야래 수요분산이 대신인 마당에 선풍 투자화대에 나설 마음의 안일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指標론은 나타낼 수 없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不確實性, 이로 인한 투자 위축감은 마땅히 暴露된 것이면 안 된다. 지금 民·官계 합쳐서 어떤 화신되고 있는 무사안일과 무기력증 또는 「新經濟」의 전망을 어둡게 개현부진(病候群)이 아닐 수 없다.

失業과 고령자 부양에 있어서는 좀더 진지한 고찰과 대안이 필요하다. 고령자 등의 경제기 불행 사회 안정과 진척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 안정을 통해 경제가 양기 부활까지 유리하면서 設備投資의 증진이 가능하다. 경기수축이나 구조조정에서 오는 실업은 각기 대책이 달라야 할 것이며 서비스부문으로 이전이 편중되는 인력수급에도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경기부양의 감행하게 추진되는 것은 좋으나 실업률 부양의 불가를 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전제조건 역시 고민거리이다. 내수와 건설위주로 成長이 성실하게 추구하고 또 通貨가 이를 위해 방만하게 풀린다 면 「거품경기」의 재연은 불가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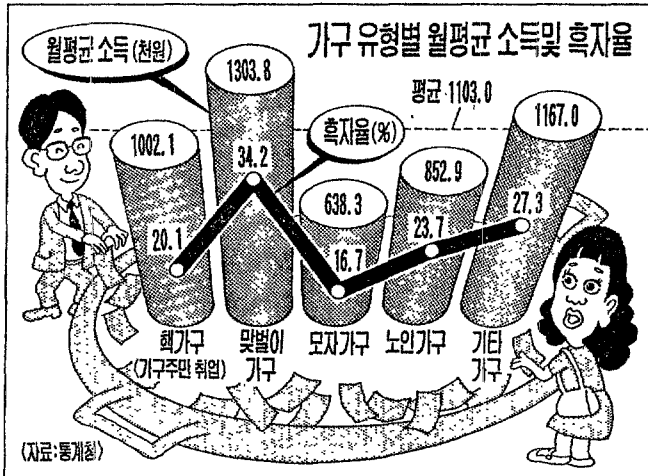
질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부기는 「신경제」의 실패조건인 고령화현상 또는 「민간」의 점에서 民·官은 「기」의 관망은 물론 「학계」·「시민」단체들까지 신중한 정책기조의 조율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팀의 열린 귀와 넓은 시야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근로자 家口別 소득편차 커

所得관계없이 내구재 대형화

말벌이 가구별의 소득수준이 평균가구(어머니와 18세미만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소득의 2배에 달하는 것을 보면 근로자 가구중에서도 소득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 일반중산층의 생활수준이 시종일관 88년부터 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영화, 고급화 추세가 나타날 것이고, TV 등 가구내부의 소비품과 함께 대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3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91년 10~11월 두달 동안 조사한 「가정소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

통계청 관계자는 「산업사회의 진척」으로 가구소득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라 같은 근로자 가구중에서도 소득편차와 함께 소비행태

자구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10만3천원으로 이 가운데 맞벌이 가구 소득은 1백30만4천원으로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으며 이 밖에 핵가족 1백만2천원, 노인가구(60세이상)의 노인연금 가구(85만3천원), 모자가구 63만8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탈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는 가구주 근로소득이 전체소득의 60.2%의 불과한 반면 아내의 사업 및 부업소득 비중이 8.2%로 높게 나타났다. 모자구구는 따로 살았을 남편, 친지의 생활비 등 이전소득이 16.9%, 노인구구는 부동산 임대료 등 재산소득이 14.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자구구는 소득이 맞벌이 가구의 절반수준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비를 맞벌이 가구(5만9천원)와 비슷한 수준인 5만3천원을 지출, 자녀에 대한 기댐가 부담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구내구제의 보급은 지난 88년 이후 전체의 경우 TV(99.9%), 냉장고(99.9%), 가스레인지(98.5%), 세탁기(89.9%), 전기보일러(89.1%) 등 거의 전가구의 보급률고 카세트(89.2%), 사전자(60.5%), 비디오(59.1%), 전자기구의 1대꼴로 보급된 것이 나타나고 있다.

市道別 1인총생산 慶南1위

年평균 6百32萬원 忠南 최하 3百37萬원

통계청 「85~91년 추계」 발표

전국 15개 시도의 1인당 道内총생산(GRP)은 91년 현재 평균이 6백32만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도의 3백37만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 道内총생산 규모는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이 전체의 45.8%로 수도권총생산의 1.1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청권은 28.8%, 호남권은 11.2%, 강원도의 4.2%, 7배에 이르는 것이란 드러났다.

지난 85년부터 91년까지 6년간 대부분의 시도에서 1인당 총생산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3차산업은 증가했다. (5면에 관련기사) 통계청 25일 이같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85~91년 道内총생산추계결과」를 발표했다.

도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GDP)에 대응하는 지방단위의 생산총계로 국내에서 GRP가 집계 발표되기 이전의 자료이며 통계청이 1991년 매년 GRP전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추계에 따르면 91년 현재 시도의 1인당 평균 도내총생산은 4백79만원(6천5백24원)이며 시

도별 1인당 평균이 6백32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 경기도를 넘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서울 대전 충북 전남 광주 부산 제주 강원 전북 대구 충청권 등 순이었으며 1인당 도내총생산액이 가장 많은 경남이 가장 적은 충남의 1.7배에 이

르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지역적 차이는 물론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작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도내총생산 규모는 서울이 전체의 24.6%로 단일 1위를 차지했고 경기 전남 부산 등이 그 뒤

를 이었다. 규모가 작은 곳은 제주 광주 대전 등 순이었다.

85년 이후 6년간의 산업 구조변화를 보면 道지역에서는 농업이 큰 감소세를 보이고 건설업 서비스업은 3차산업의 신장이 두드러졌다.

慶南 年632

1인당 생산액

으로 나타났다.
또 85년부터 91년까지 6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곳은 경기,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한 곳은 (6백31만7천원)으로

구분	금액 (10억원)	구성비 (%)	인구 구성비 (%)	1인당 생산액 (만원)
서울	51,102	24.6	24.5	482
부산	15,762	7.6	8.7	417
대구	8,490	4.1	5.2	382
인천	10,090	4.9	4.3	547
광주	4,860	2.3	2.6	427
대전	5,024	2.4	2.4	477
경북	33,699	16.3	14.7	530
충북	6,162	3.0	3.5	402
충남	6,526	3.2	3.2	476
전남	7,459	3.6	4.6	377
전북	7,713	3.7	4.7	384
경남	10,820	5.2	5.6	446
경서	14,594	7.0	6.4	524
경중	23,009	11.1	8.4	632
경남	2,088	1.0	1.2	409

「國富」수도권 비중 46%로 심화 성장을 京畿 최고... 江原 최하위

원(동) 주로 전남북과 경기 지역이었다. 반면 전남북과 충청, 강원, 제주 등 모두 전 시·도 평균 1인당 GRP 인 4백79만3천원(6천5백34달러)을 밑도는 하위권에 포진, 지역발전의 편중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수도권 총생산을 살펴보면 전체 시·도 총생

원(동) 주로 전남북과 경기 지역이었다. 반면 전남북과 충청, 강원, 제주 등 모두 전 시·도 평균 1인당 GRP 인 4백79만3천원(6천5백34달러)을 밑도는 하위권에 포진, 지역발전의 편중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수도권 총생산을 살펴보면 전체 시·도 총생

해금된 統計 眞容

「道內總생산」 첫 발표 의미

통계청이 발표한 「도내 총생산 추계결과」는 지역발전의 심각한 우려의 차이가 현재와 앞으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간 발표된 자료와 비교해 「속사정」이 었다. 바로 그 도내 총생산(GRP) 통계가 1991년 현재 15개 시도

집권총리해·지역감정우려, 공개「禁」 續·湖南 격차 확인... 균형투자 촉매 기대

의 1인당 GRP 규모를 비교할 때 전남이 1위, 경북이 4위인 반면 전남 전북은 각각 8위와 13위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과 대구는 전남북권이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과 섬유 등 주력 업종이 다양화된 영향으로 각각 10위, 14위로 떨어져 있다.

이 통계에서는 또 수도권 집중현상과 충남, 경북의 소외라는 또 다른 지역적 문제점도 발견된다. 서울을 포함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인구 비중이 전인구의 43.5%를 차지하는데, GRP 비중은 45.8%로 더 높다. 또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개발 확대와 인구집중을 반영, 85년 91년의 연평균 GRP 성장률도 경기(16.5%)와 인천(12%)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충남북과 강원은 1인당 GRP 순위가 각각 최하위인 15위와 7위, 12위 등으로 나뉘었다. 이들 3개 지역 G

인당 생산수준 격차를 드러내는 '변이계수'가 85년 20.6%에서 91년 15.7%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또 15개 시도 중 1인당 GRP가 가장 높은 지역(경남)과 가장 낮은 지역(충남)의 비율이 91년 현재 1.7인데, 85년에는 최상위인 경남과 최하위인 전북의 차이가 1.8로 더 컸었다고 통계청은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가 진전되면 지역격차는 더 줄어들 것이며 이번 공개된 GRP 통계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통계청 관계자는 기대했다.
이번에 공개된 GRP 통계는 한국은행이 분석, 발표하는 국민총생산(GNP)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국민총생산의 차감요인인 포함한 것으로 감안했을 때 GRP가 GNP 중 국내총생산(GDP)보다 3% 정도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諸責任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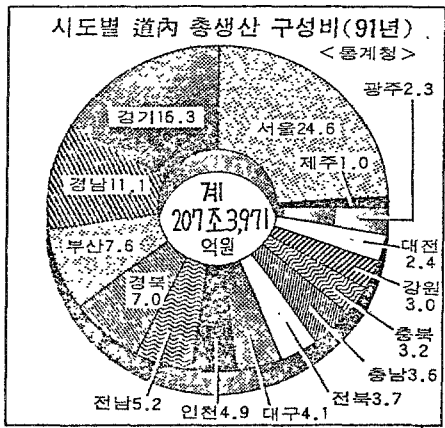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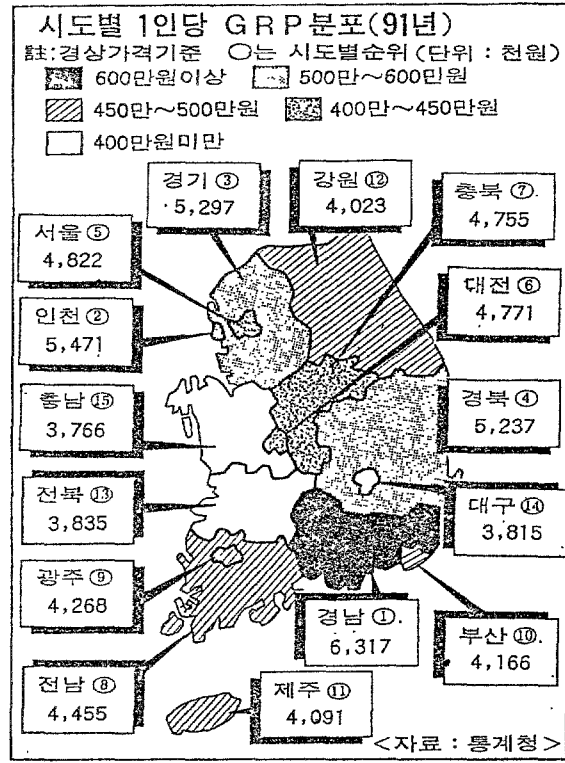
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GRP 추계 결과, 수도권 전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지역간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GRP는 수도권에서 산업별로는 임대업의 소득(부가가치)이 발생되었

통계청

이반의 발표된 GRP는 1인당 평균 GRP가 4백79만3천원(6천5백34달러)이며, 제주도의 개발한 수도권과 전북이 이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수도권의 소득 수준은 전남 인천 경기



서울 25조 880억원으로 1%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통계청 趙秉甲부총장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의 道내총생산이 전체의 45.8%를 차지해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수도권 전체의 43.5%와 함께 66%를 차지한다.

GRP의 규모가 크 서울 경기 경남 3곳

서울 51조 "규모선 총액증가 京畿 228 수도권 비중 45%

남북을 합한 영남지역의 道내총생산은 전체의 29.8%로, 광주 전남북을 합한 영남지역은 11.2%로 영남이 호남의 2.7배 가까운 경제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돼 영호남간 경제력 격차의 실상을 보여 주고 있다.

시도별 GRP는 85년 전국의 GRP는 85년

91년의 1인당 평균 GRP는 85년에 비해 2.5배가 증가했는데,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1백87.6%)이고 가장 작은 지역은 인천(1백11.9%)이다.

전남의 경우엔 광역제 철소와 원자력발전소의 생산액이 컸으며, 호남 인구는 감소하게 대신 생산액은 증가함에 따라 가용한 인구가 그만큼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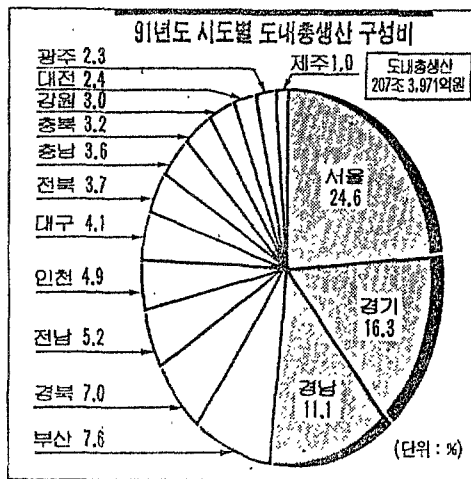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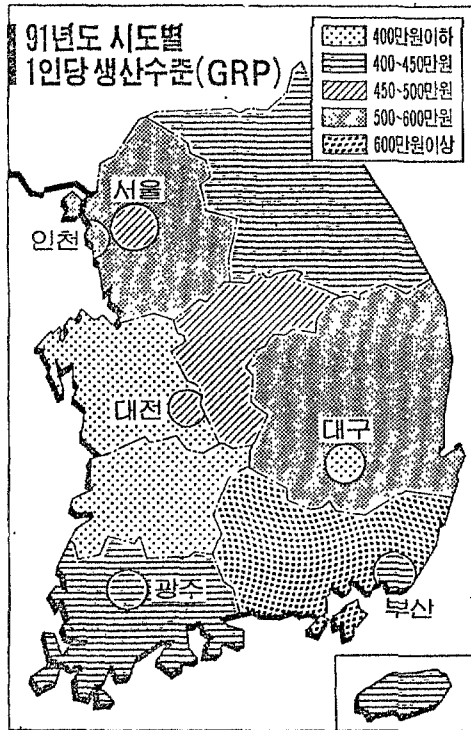
85년 이후의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대부분의 시도가 농업업의 비중이 줄고 산업업 비중이 늘어난데, 기타산업의 비중이 컸었다. 반면에 강원 부산 대구는 이례적으로 광공업의 비중도 줄었다.

강원의 경우는 잇따른 폐광이, 부산과 대구는 신발과 섬유산업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羅鍾鎰기자>

생산액격차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5~91년도 道内총생산(GRP) 추계결과'는 통계청이 조사한 지 7년여 만에 공개한 지역별 경제



경남 31·충남 78·대구 79 수준
대도시 증가율 낮고 道가 강세

1천원에 이르러 있는 것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인구의 1인당 생산액이 늘었다고 조사됐다. 지역별 1구의 감소로 인해 농촌 지역은 1인당 생산액이 늘었다. 91년도 도내총생산(GRP)의 합계는 2백7조 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농업 경기 인천 경남 지역이 평균치를 초과하는 성장세를 보인 반면 강원 전북 등 지역은 성장률이 낮았다. 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은 전남이 전국생산규모의 15.9%를 차지,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했고 광공업은 경기(25.4%), 기타산업은 서울(36.4%)이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金俊우기자】

◇GRP: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의 약자. 국내총생산(GDP)이 한 국가의 국경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총합이라면 GRP는 국가내의 일정한 지역(시·군)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총합체이다. 송파 등 이전수익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소득수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최고 255만원

통계청 85-91년도 시도별 GPP 공개

력 지표로, 해당 지역의 생산수준과 함께 수도권 수준을 가늠하는 통계다. 통계청은 그동안 국회 의원들이 정부에 요구받아 왔지만, 지역별 GDP를 발표하는 것은 85-91년 1인당 GDP를 발표하는 6백31만7천원의 증가를 나타내며, 서울(3백76만6천원)으로 최고와 최저사이의 생산액 격차가 2백5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GDP는 전국의 6백31만7천원의 증가를 나타내며, 서울(3백76만6천원)으로 최고와 최저사이의 생산액 격차가 2백5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GDP는 전국의 6백31만7천원의 증가를 나타내며, 서울(3백76만6천원)으로 최고와 최저사이의 생산액 격차가 2백5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년 시·도별 주요경제지표

시·도	인구구성비 (%)	도내 총생산 (경상, 10억원, 구성비%)	1인당도내총생산 (천원, 수준지수)	성장률 (불변, %)
서울	24.5	51,102.4(24.6)	4,822(100.6)	6.5
부산	8.7	15,762.0(7.6)	4,166(86.9)	4.8
대구	5.2	8,490.4(4.1)	3,815(79.6)	4.7
인천	4.3	10,089.9(4.9)	5,471(114.1)	8.9
광주	2.6	4,859.5(2.3)	4,268(89.0)	3.8
대전	2.4	5,024.0(2.4)	4,771(99.5)	10.7
경기	14.7	33,698.7(16.3)	5,297(110.5)	13.7
강원	3.5	6,162.1(3.0)	4,023(83.9)	3.5
충북	3.2	6,525.5(3.2)	4,755(99.2)	9.2
충남	4.6	7,459.1(3.6)	3,766(78.6)	5.1
전북	4.7	7,712.7(3.7)	3,835(80.0)	8.1
전남	5.6	10,819.8(5.2)	4,455(92.9)	8.0
경북	6.4	14,594.1(7.0)	5,237(109.3)	6.8
경남	8.4	23,008.7(11.1)	6,317(131.8)	14.2
제주	1.2	2,088.2(1.0)	4,091(85.4)	10.2
평균		계207,397.1(100.0)	4,793(100.0)	8.7

성장률은 경기16% 강원 5%
서울 총생산 51兆 제주 25배

서울이 전체의 24.6%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는 16.3%로 나타나 인천을 포함 수도권 지역의 총생산이 전국의 절반에 가까운 45.8%에 이르렀다. 이는 85년의 42.6%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타지역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 GDP는 서울 51조1천원, 경기33조7천원, 경남23조원, 부산15조8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GDP가 가장 작은 곳은 제주(2조원)로 서울의 25분의 1 수준이다. 85-91년 기간 중 평균 GDP 증가율은 10.8%로 나타났다. 경기와 서울이 16.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강원지역은 3.5%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압축성장」속 地域불균형 여전

첫發表 「道別GRP」의미

국정기획·개발부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재정부)은 1991년 10월 15일 「도별GRP」를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별 경제발전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정기획·개발부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재정부)은 1991년 10월 15일 「도별GRP」를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별 경제발전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도별GRP」는 1985~1991년 7년간의 평균치를 나타내며, 서울이 9.9%, 부산 8.3%, 대구 9.6%, 인천 12.0%, 경기 16.5%, 강원 5.1%, 충북 9.4%, 충남 8.8%, 전북 7.1%, 전남 10.6%, 경북 10.5%, 경남 11.6%, 제주 9.4%로 나타났다.

「도별GRP」는 1985~1991년 7년간의 평균치를 나타내며, 서울이 9.9%, 부산 8.3%, 대구 9.6%, 인천 12.0%, 경기 16.5%, 강원 5.1%, 충북 9.4%, 충남 8.8%, 전북 7.1%, 전남 10.6%, 경북 10.5%, 경남 11.6%, 제주 9.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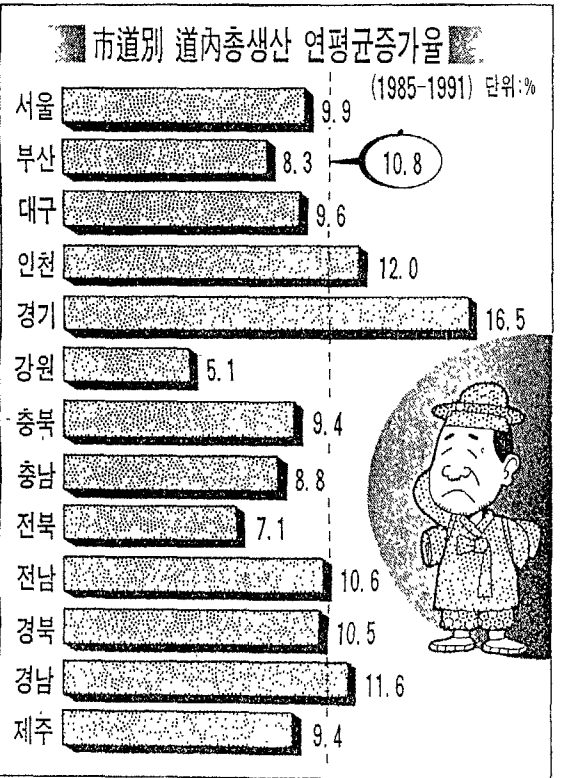
「도별GRP」는 1985~1991년 7년간의 평균치를 나타내며, 서울이 9.9%, 부산 8.3%, 대구 9.6%, 인천 12.0%, 경기 16.5%, 강원 5.1%, 충북 9.4%, 충남 8.8%, 전북 7.1%, 전남 10.6%, 경북 10.5%, 경남 11.6%, 제주 9.4%로 나타났다.

「도별GRP」는 1985~1991년 7년간의 평균치를 나타내며, 서울이 9.9%, 부산 8.3%, 대구 9.6%, 인천 12.0%, 경기 16.5%, 강원 5.1%, 충북 9.4%, 충남 8.8%, 전북 7.1%, 전남 10.6%, 경북 10.5%, 경남 11.6%, 제주 9.4%로 나타났다.

「도별GRP」는 1985~1991년 7년간의 평균치를 나타내며, 서울이 9.9%, 부산 8.3%, 대구 9.6%, 인천 12.0%, 경기 16.5%, 강원 5.1%, 충북 9.4%, 충남 8.8%, 전북 7.1%, 전남 10.6%, 경북 10.5%, 경남 11.6%, 제주 9.4%로 나타났다.

「도별GRP」는 1985~1991년 7년간의 평균치를 나타내며, 서울이 9.9%, 부산 8.3%, 대구 9.6%, 인천 12.0%, 경기 16.5%, 강원 5.1%, 충북 9.4%, 충남 8.8%, 전북 7.1%, 전남 10.6%, 경북 10.5%, 경남 11.6%, 제주 9.4%로 나타났다.

경제력「計量化」로 隔差 확인 江原·全北·釜山 등 발전 낙후



국정기획·개발부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재정부)은 1991년 10월 15일 「도별GRP」를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별 경제발전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정기획·개발부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재정부)은 1991년 10월 15일 「도별GRP」를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별 경제발전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정기획·개발부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재정부)은 1991년 10월 15일 「도별GRP」를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별 경제발전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정기획·개발부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재정부)은 1991년 10월 15일 「도별GRP」를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별 경제발전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정기획·개발부 경제기획원(이하 기획재정부)은 1991년 10월 15일 「도별GRP」를 처음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별 경제발전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인간애를 가진 대담가로서
 그의 글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었다. 그의 글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U.S.A.에서
 1900년경부터
 1950년경까지
 50년간
 활동했다. 그는
 'The New York Times'
 에 10년간
 기고했다. 그는
 'The New York Times'
 에 10년간
 기고했다.

「G.R.P.」가 여기까지

○ G.R.P.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출판물이다. 그것은
 1950년경부터
 1955년경까지
 5년간
 활동했다. 그는
 'The New York Times'
 에 10년간
 기고했다.

그는 U.S.A.에서
 1900년경부터
 1950년경까지
 50년간
 활동했다. 그는
 'The New York Times'
 에 10년간
 기고했다.

준비작업 10년만에 "햇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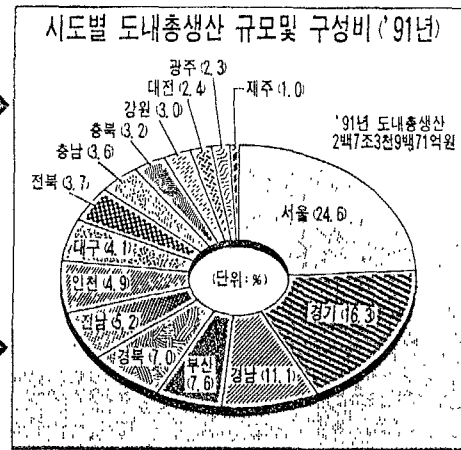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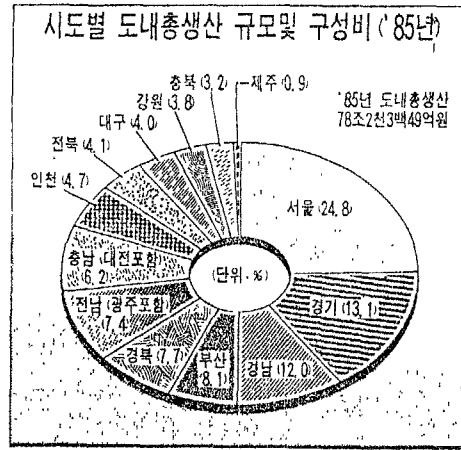
發表 유보하다 지표개선돼 公開결심

○ G.R.P.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출판물이다. 그것은
 1950년경부터
 1955년경까지
 5년간
 활동했다. 그는
 'The New York Times'
 에 10년간
 기고했다.

그는 U.S.A.에서
 1900년경부터
 1950년경까지
 50년간
 활동했다. 그는
 'The New York Times'
 에 10년간
 기고했다.

그는 U.S.A.에서
 1900년경부터
 1950년경까지
 50년간
 활동했다. 그는
 'The New York Times'
 에 10년간
 기고했다.

< 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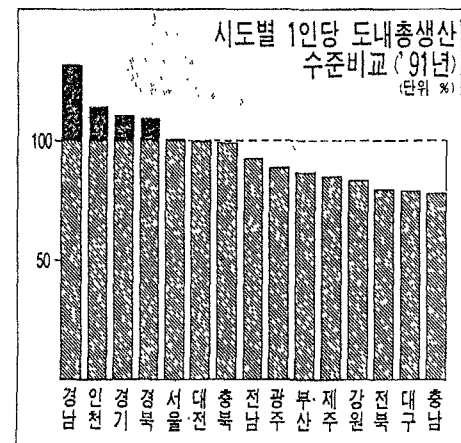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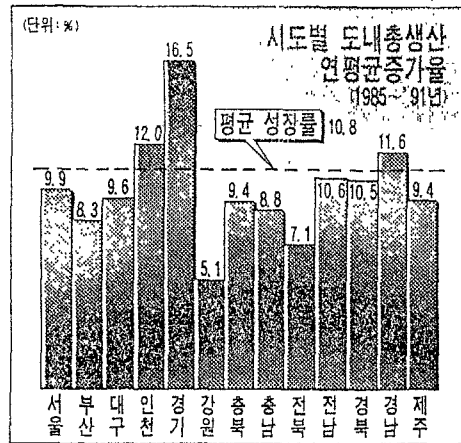
85년에서 91년까지 6년간 시·도별 총생산 규모 및 구성비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기지역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수도권지역의 중소도시에 공업시설과 인구가 집중돼 이처럼 생산비중이 85년 13.1%에서 16.3%로 전국 시·도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편 경남 부산 경북등 영남권의 주요지역은 도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전남(광주직할시포함)등은 비중이 늘어났다.

시·도별 道内총생산은 서울-지방간, 영남-호남간의 경제력격차가 클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을 재확인시켜준다.

91년 전국의 도내총생산규모는 207조3,971억원이며 서울 경기(16.3%) 인천(4.9%)을 합친 수도권의 생산규모는 전체의 45.8%(94조8,910억원)로 우리나라생산의 거의 절반이 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부산 대구를 포함한 영남지역의 생산은 전체의 29.8%인데 비해 호남지역은 11.2%에 그쳐 영남의 경제규모가 호남의 약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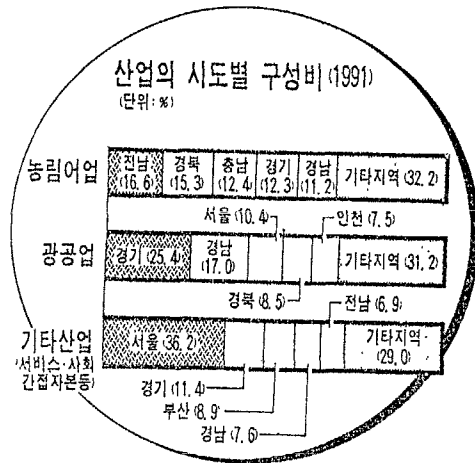


시도별 1인당 도내총생산 수준비교 ('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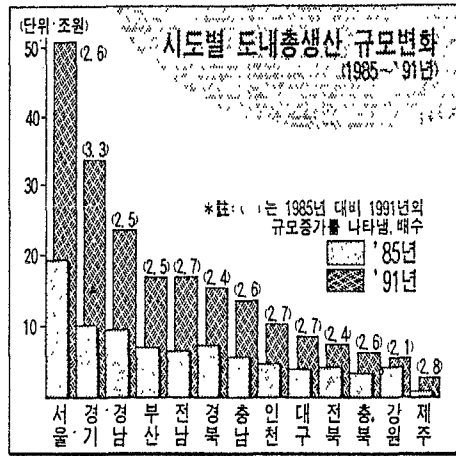
시·도별 경제성장은 수도권 및 영남지역이 대체로 높았던 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나 호남지역의 경우는 평균치를 밑돌아 지난 6년간 이들 지역간의 경제력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85년부터 91년까지 시·도별 연평균성장률은 86~88년의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10.8%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경기(16.5%) 인천(12.0%)등 수도권지역과 경남(11.6%)은 평균성장률을 웃돌았다. 이에 비해 강원(5.1%) 전북(7.1%)은 성장률이 평균치를 크게 밑돌아 이 지역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침체됐음을 읽을 수 있다.

시·도별 1인당 생산수준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수도권 영남지역이 큰 반면 제조업체가 별로 없거나 섬유 신발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충남 대구 전북 강원 제주 부산등은 1인당 생산수준이 낮았다.

91년 전국의 1인당 평균도내총생산은 479만3,000원(6,534달러)이었다. 경남지역은 631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547만1,000원) 경기(529만7,000원) 경북(523만7,000원) 서울(482만2,000원) 순으로 1인당 도내총생산이 많았다.



지역별 생산구조로 비추어 볼때 수도권 및 경남 부산지역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반면 전남 경북 충북 지역은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 산업발전이 더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85년부터 91년까지 대부분의 시·도가 농림어업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최근 건설업의 호황등에 힘입어 기타산업(사회간접자본 서비스)등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였다. 광공업은 대도시의 비중이 감소되는 반면 새 산업시설이 들어서서 도지역은 증가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85년 78조2,349억원이던 도내총생산은 91년 207조3,971억원으로 6년새에 2.6배 늘어났다. 이중 수도권 경남 전남지역등은 평균치를 웃도는 왕성한 성장을 보인 반면 부산 경북 전북 강원등은 평균수준에 못미치는 저조한 신장세를 나타냈다.

도내총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로 85년 10조2,614억원에서 91년 33조6,989억원으로 6년새에 3.3배나 팽창했다. 이에 비해 강원도는 85년 2조9,594억원이던 도내총생산이 91년 6조1,621억원으로 2.1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社說

시정돼야 할 지역偏重化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湖南부대집」에 「忠淸부대집」이란 말이 회자돼 왔다. 특정지역에만 편중된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꼬아 하는 말이었지만 이는 정부의 인사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 우리 사회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지역편중현상이다. 3개의 서부 지역은 5,000억을 차지해서 더욱 심화됐다. 무척럼 정부가 발표한 「85-91년 도내총생산(GRPA) 추계결과」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를 보면 국토개발에 있어 호남 지방이 연도별 편중이 있어 왔다. 부대집을 받았던 지역은 호남지역이 아니라 부대집을 받지 않았던 지역이었다.

는지도 이해하게 한다. 우리처럼 좁은 국토공간에서, 그 정도 집권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발전의 편중화 현상이 초래됐으니 실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양상을 보면, 지역개발정책의 편중현상은 단수적인 지역차별을 떠나 장기계획 자체가 이러한 지역발전 편중화를 불러오는 듯해 보였다. 7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국토개발기계획에서 울과 釜山을 축으로 한 한강강변개발사업의 兩極圈개발을 중점으로 해서 지역

였다. 이런 결과 이들 지역의 이삼비 대화와 함께 지역발전현상을 발달케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82년부터 시작된 제2차 장기계획은 이같은 1차 계획에서의 부조공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외의 과감한 정비와 함께 大田 光州 大邱 등 3대 도시를 중심한 성장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중간에서 圈域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내놓기지 변질되면서 5,6개의 국토개발미비로 유령도시해진 채 도리어 지역발전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특히 2차 계획의 대전제가 됐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마저 조성되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공식적으로 드러난 지역발전현상의 이렇듯 국가경쟁력 향상은 집권세력들이 자질라 높은 인위적 인 산물이다. 따라서 모든 행인구역 대정현에 있다. 국토개발이든 부무과달라 단기간에 어찌해볼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것이 아니다. 새정권이 보다 진중관심을 가지고 다투어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새정권 출범과 함께 위촉된 경제를 살리는 데만 급급해 국토의 균형개발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같이 하는 말이다. 지금처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안부에서 보아야 할 국토개발을 가급적 다룬다면 지역발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수도권부정비를 비롯, 국토의 균형개발에 정부차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社說

지역 經濟力의 첫 공개

통계청이 발표한 「道內총생산 추계 결과」가 9.1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그동안 단편적인 자료에 의해서만 유추가 가능했던 지역별 경제력과 지역간 격차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점이다. 물론 그동안의 지역 호황과 都農간 경제력과 생활 수준의 커다란 차이를 충분히 보고 들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에서 어떤 의의성을 찾을 수 있느냐는 장의 있다.

그보다도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별 생산량과 구조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국가 경제정책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보다 쉽게 이끌어낼 토대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어떤 한 자료가 있었는지 지역경제를 보면 열외로 우려가 있다. 政治的인 면피부의 공표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결국 그러한 면피부의 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구급증과 불신감을 쌓아온 것의 비하면 새정부의 이같은 발전의 국민 의 이해를 중요시하겠다는 뜻으로 평가하게 된다.

우리가 차제에 정부의 새로운 인식 이 바탕에 삼아온 지역경제의 양과 과 지역간 경제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의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번 지표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우리경제의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다. 그리고 영호남간 경제기반의 뚜렷한 격차이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률이 43.5%, 생산 비중이 45.8%에 이르러 아전도 그 비중이 높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수도권으로 인력과 資源이 집중되면서 농촌과 지방도시의 경제건은 더욱 악화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형의 광역에서 심한 경우 1인당 평균 생산량이 1.7배씩 차이가 나서야 어떻게 경제력의 신장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위화감도 무제지만 자원이 비균등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내총생산의 지역 주민들의 實質所得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지역간 생활 수준의 차이를 얘기할 수 없다. 생산 지수가 높다고 해도 소득의 큰 부분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고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와 반대로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생산지표와 함께 소득지표도 개발되고 하를 수 하 공표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올바른 판단에 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이는 늦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와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경제지표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숨겨지고 왜곡되는 현상도 안 된다 는 점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社說

市道G R P의 발표가 의미하는 것

우여곡절 끝에 통계청이 지난25일 발표한 市道별 「道內총생산」(G R P)이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G R P는 각지역의 산업별로 발생한 소득규모를 통해 지역경제실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주는 종합지표로서 국민총생산(G N P)과 마찬가지로 생산, 분배, 지출의 측면에서 각각 추계될수 있는데 이번 자료는 생산측면에서 파악된 것이다.

이미 내무부(65~86년)와 서울시(73~87년)에서 지역소득통계를 集計한적이 있으나 통계작성의 일관성과 정확도가 떨어져 통계청이 83년에 준비를 시작하여 85년부터 G R P실적치를 작성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통계자료를 발표하게된 까닭은 지역별 경제력격차가 G R P를 통해 확인되면 지역감정이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자료내용을 보고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예상대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수도권과 영남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91년도 G R P와 1인당 G R P를 봐도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남북과 서울, 경기, 인천등의 지역이 전국평균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는 전남북과 충남북 제주등지의 산업구조에서 농업비중이 작아지고 제조업 비중이 커지면서 85~91년간 1인당 G R P증가율이 영남이나 수도권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1인당 생산규모의 격차를 나타내는 變異係數도 85년의 20.6%에서 91년에는 15.7%로 줄어 지역별 경제력격차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는 85~91년간 道內총생산규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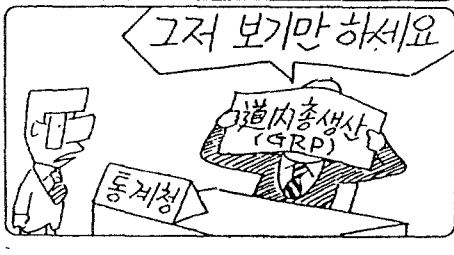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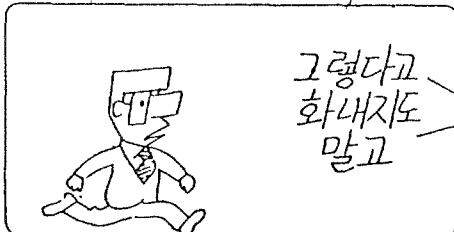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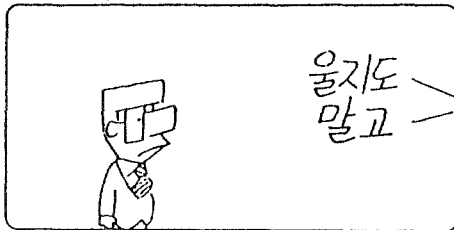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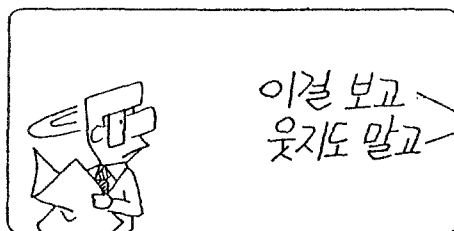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이며 그 결과 수도권의 비중이 85년의 42.6%에서 91년에는 45.8%로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80년대에 추진된 수도권집중억제, 나아가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1인당 G R P는 지역별 부가가치생산액만을 나타내줄뿐 市道간 소득이전을 고려하는 분배소득이 아니므로 이 자료가 지역별 소득격차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解明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생산활동은 지방공단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소득의 대부분이 가족이 살고 있거나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송금되는 현실에서 市道간 소득이전을 고려하면 경제력의 수도권집중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1인당 G R P도 최상위지역과 최하위지역이 2배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1.7배의 차이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지역격차가 덜하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오랫동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어온 선진국에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따라서 지역격차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의 행정과 경제를 좌지우지해온 우리의 경우 지역격차는 편파적인 정책집행의 탓이 크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일도 아년데 떠들지말고 덮어두자」라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왔다. 그러나 이제 文民시대를 맞아 밝힐 것은 밝히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같은 관점에서 이번 통계청의 발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소오갈 선생 (795) 안배롱



소비자物價

벌써 3.7% 올라

올연제목표선 위협 지난달엔 다소 안정

통계청 조사 발표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나타났다. 이는 1월 1.5%, 2월 2.7%, 3월 3.3%, 4월 3.3%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월 1.5%, 2월 2.7%, 3월 3.3%, 4월 3.3%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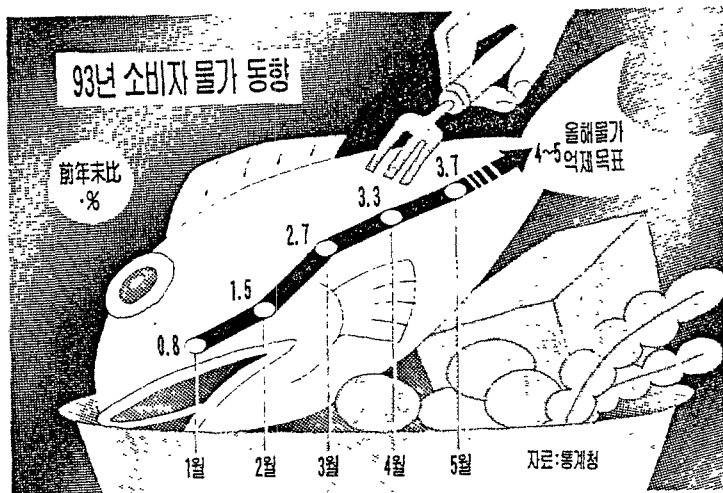
「물가통계」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0.3% 올랐고 1월 0.8%, 2월 0.7%, 3월 1.1%, 4월 0.6%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월 1.5%, 2월 2.7%, 3월 3.3%, 4월 3.3%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 상승했다.

통·축·수산물의 5월

물가는 다소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5월 물가안정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특히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5월까지는 3.7%에 달해 벌써부터 정부가 제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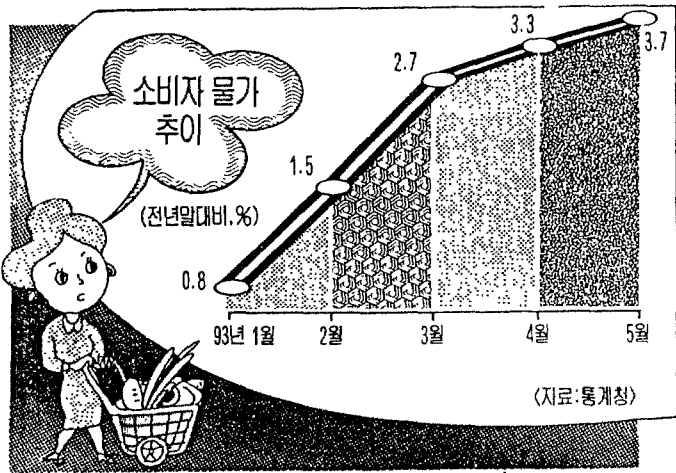
올해 물가안정목표(4.5%)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그 동안 상승률이 컸던 일반마(0.7%)와 일부 채소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참외(87.0%), 배추(9.2%), 토마토(48.6%)와 파(15.4%) 등 신유출하면 과일류·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전체적으로는 1.5% 올라 물가상승률 주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0.3% 상승 그쳐

物價 한풀 꺾였다



전년말비율 3.7% 올라

5월중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5월과 같은 수준 상승하는데 그쳐 연초부터 계속된 물가오름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올들어 5월 말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말 대비 3.7% 올라

생필품값 특별관리 힘입어 집세·개인서비스료도 安定

올랐고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일반미와 일부 채소류 가격이 5월에는 하락세로 돌아선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쌀, 쇠고기 등 20개 기본생필품가격은 5월중 평균 0.5%가 하락, 물가안정에 전인차 역할을 했다. 정부별 가격동향정보면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대부분은 동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5월중 전혀 오르지 않았고 집세와 개인서비스, 농수축산물은 각각 0.4%, 0.3%, 0.6%가 올라 상승률이 지난해 5월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 새로 출하된 의류가격의 영향으로 지난해 5월의 0.2%보다 높은 0.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5월들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진정되는 추세로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4.15%선에서 물가불 안정시킨다는 정부목표의 실현가능성이

도 다소 높아진 것으로 점되고 있다. 그러나 작황에 따라 변동폭이 큰 농수산물 가격과 활황국면으로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협할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생산자(도매)물가지수는 5월중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0.2%가 올라 전년말 대비 1.5% 상승을 기록했다.

기계受注 11.1% 증가

設備투자 호전 기미 : 회복 아직 불투명

통계청·産銀

기업의욕 아직 미흡 : 당초보다 0.209% 늘려

4월중 국내기계수출액이 작년동기에 비해 11.1% 증가했다.

그러나 기계류 수입 허가 유통의 감소세를 보이며 1백대 주요제조업체의 올해 투자계획도 당초보다 0.209% 증가의 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계획은 아직도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중 산업현황」에 의

하면 산업생산은 작년동월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특히 1.9% 증가로 1.4분기(1.7% 증가)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고 재고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로 지난 88년 4월(3.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재고조정이 끝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는 산업지표인 민간기계수주가 작년 동기보다 2.8% 늘어난 반면 5월 이후 12개월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하는 등 호전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기계류 수입허가는 일 반산업용 기계류 제외하고는 감소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23.2%나 줄어드는 등 부진상을 면치 못했다.

또 건설투자는 국내건설수수가 18.2% 증가하고 건설허가면적이 26.7% 늘어난 등 저축규제 해제에 영향을 받은 지수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작년 동기 대비 0.2% 증가로 작년 4월(2.2% 증가)보다 크게 둔화되고 실업률은 3.0%에 이르렀고 고용지수는 개선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社說

景氣循環에 뿌리 있는 침체

잠재된 경제가 언제쯤 되살아날 것인가. 지난 3월 통계청의 발표한 4월의 산업생산지수(1980년 10월을 100으로 보았을 때)가 101.4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그러나 4월의 산업생산지수는 100.8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했듯이 100인 체재인 산업생산지수의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특히 4월의 산업생산지수 0.2%의 상승은 3월의 0.1%에 불과하다.

지난달 통계국의 국민경제가 잠연하고 있는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20여개월이

나왔다. 게다가 경기수축현상이란 게 결코 모순된 표현이 아니다. 계속 성장해 왔던데도 불구하고 잠재력이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면서 경기수축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체경제가 지속적으로 팽창되고 있음을 노골

구하고 있음을 차차 부정당하고 있다. 정부의 경기수축현상, 그 현상을 통해 오는 부정당과 같은 현상은 잠재생산능력의 위축을 나타내며, 잠재생산능력의 위축은 경기수축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됐든, 정부가 경기수축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가 경제전반에 나타나는 경기수축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기수축현상과 부수적인 현상인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정부는 경기수축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나 실체경제가 지속적으로 팽창되고 있음을 노골

社說

4月中 産業動向과 投資분위기

통계청이 「4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작년동기 대비로 2.8%증가를 보인 민간기계수주를 제외하고는 생산 출하가 각각 0.1%, 1.9%증가에 그쳤고 제조업가동률에서는 오히려 前月보다 0.1%포인트가 낮아진 79.2%로 떨어졌음을 나타냈다.

언뜻 보기에는 경기회복세가 기대한 정도만큼의 페이스로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데 불과하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經濟活性化과제에 관해 많은것을 示唆하고 있다는 점에서 本欄은 이 「4월중 산업활동동향」을 주목한다.

새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생산 출하의 증가가 부진하고 가동률이 나아지지 않았다는것은 그만큼 그동안의 침체가 일반이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심각한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회복세가 뚜렷해지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가지 간단하고 중요한 示唆點은 급리인하나 규제완화같은 투자촉진책을 강구해주어도 경제활동을 이끄는 주체인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는 빨리 활성화될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司正寒波에다 정부의 大企業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불안감은 기업의 투자욕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작용을 했

다고도 볼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財界대표들에게 경제에 충격적이거나 강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金泳三 대통령의 발언은 얼어붙었던 기업가의 투자욕을 고무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것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대기업그룹들이 올해 투자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려 하고 있는 움직임은 좋은 신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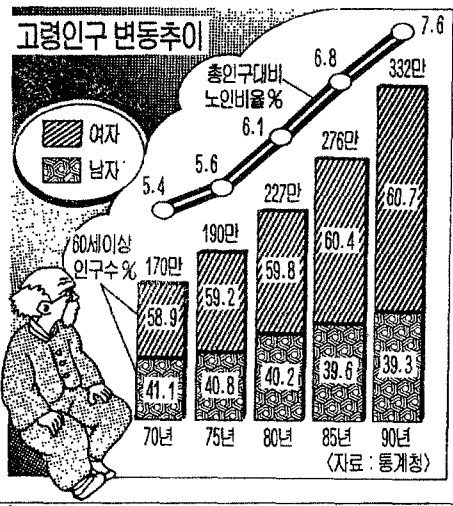
그러지 않아도 「4월중 산업활동동향」에서 이미 설비투자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돼야 한다. 투자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가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다는 사실은 작년5월이후의 감소세가 12개월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逆轉했음을 말하는 것일 뿐더러 전년동기에 비해 7.7% 증가를 기록, 지난 2월이후 3개월 연속되고 있는 민간제조업 분야의 설비투자 증가세와 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그런 투자의 꿈틀조짐을 「회복국면」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불안없이 경제활동에 專念할수 있게 투자여건과 환경기반을 조성해주어야 하고 또 기업은 진취적인 모험정신으로 신기술과 자동화및 생산성제고 등 경쟁력강화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

老人문제 이젠 "발등의 불"

통계청 85, 90년 실태분석

60세 이상 고령자를 가구주로 하는 노인가
90년사이 5년간 56.7% 증가



7%나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돼 이에 따른 경제 사회적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가구로 56.7%가 늘었다. 이같은 증가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이 기간중 증가율(18.6%)의 3배에 해당하

는 단독가구수가 85년 증가구의 1.8%인 17만 2천가에서 90년에는 2.4%인 27만 7천가로 61%나 늘어

나 노인의 경제 적 부담 고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

60세 이상 인구 7.6% : 가구수도 56% 급증

高齡化 추세 가속 經濟·사회적 과제 부상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고령자 실태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혼자 살거나 고령자가 가구주인 부부가구 등 고령자가구는 지난 85년 39만 5천

6만 9천에서 90년 61만 9천으로 56.7%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는 우리나라 총가구에 대한 고령자

의 비율은 85년 5.4%에서 90년 7.6%로 1.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고령자가 혼자

살거나 고령자가 가구주인 부부가구 등 고령자가구는 지난 85년 39만 5천 6만 9천에서 90년 61만 9천으로 56.7%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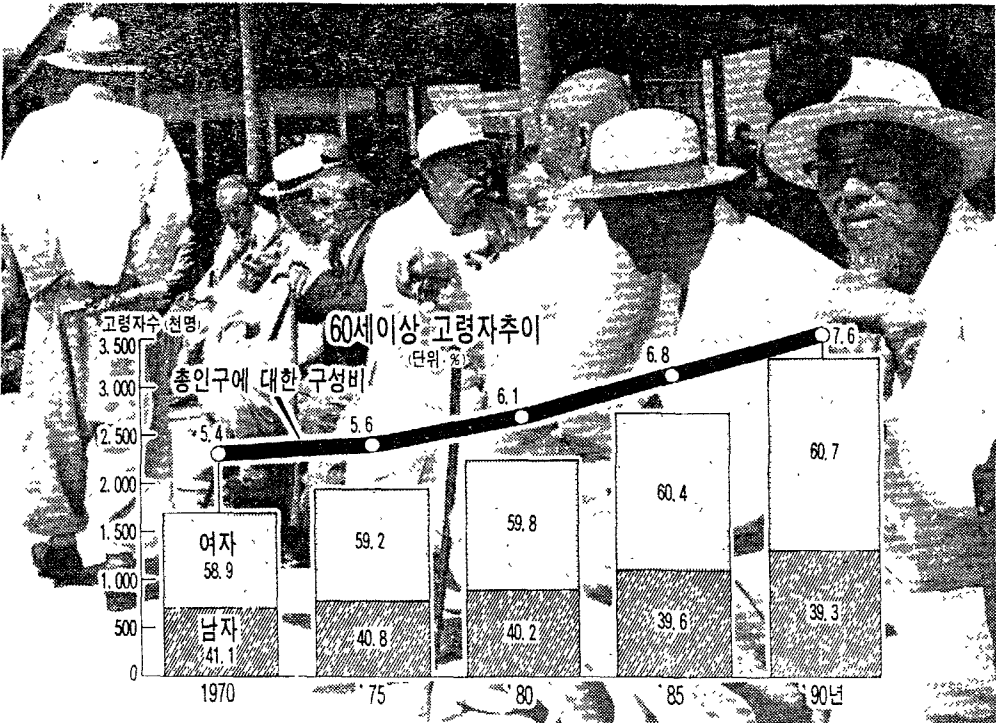
이같은 추세에 따라 15~59세의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노년부양비가 70년 10.3%에서 90년 11.5%로 늘어

나 노년층 인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90년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중 직업을 가진 사람은 28.3%인 94만 1천명인데, 이는 전체 취업자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도시지역의 고령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5%이며 농어촌지역은 14.2%로 훨씬 높게 나타나 농촌에서 고령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드러냈다.

고령취업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63.1%가 자영업, 18.8%는 농림을 맡고 가족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 14.2%는 임금근로자로 나타났다.

(責任 기자)

60세이상 7.6%... 高齢化사회 눈앞에



統計廳 90년 센서스 결과 실태 분석

65세이상 216만명... 10년내 진입 老年부양비 11.5%... 福祉대책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의 문턱에 서 있다.
16년 동안 90년 인
구추진총조사(센서스)결과
를 보면 전 연령별 인구의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총인구(4천3백38만명)가
무대 60세이상 인구가
6%(31만명)인 65
세이상 인구가 5.0%로
백(16만명)의 절반이상이
조사됐다.
60세이상 인구가 7.6
%로 이미 고령화사회
의 문턱에 서 있다.
전체인구의 23.5%인
17.5%(7백68만명)
가 60세이상 인구가
1%(6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6.0%인
15.4%(6백44만명)
을 차지하고 있다.

50만명 15~59세의 생
산기에는 전인구의 60%이
상 노년층의 70%이
상인 10만명 90년 11.5%
로 증가, 전인구의 11.5%
인 400만명 65세 이상
인구가 6.0%인 216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상 시금

△한국의 60세이상고령자
△일본의 60세이상고령자
△일국의 60세이상고령자
(1990년)

	한 국	일 본
고령자규모(만명)	332	2,164
(총인구대비율)	(7.6%)	(17.5%)
노년인구비율	29.8%	96.2%
노년인구부양비율	11.5%	27.2%
노년인구자살비율	64.8	74.3
고령자혼인상태		
혼인	54.9%	65.1%
유배	44.6%	29.4%
사별	0.3%	3.3%
미혼	0.2%	2.2%

노년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해 고령자 부양비율은 1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의 27.2%에 비해 15.7%포인트 낮다. 노년인구자살비율은 64.8로 일본의 74.3에 비해 9.5%포인트 낮다. 고령자 혼인상태는 혼인 54.9%, 유배 44.6%, 사별 0.3%, 미혼 0.2%로 나타났다.

일본은 고령자 부양비율이 27.2%로 한국보다 15.7%포인트 높았다. 노년인구자살비율은 74.3으로 한국보다 9.5%포인트 높았다. 고령자 혼인상태는 혼인 65.1%, 유배 29.4%, 사별 3.3%, 미혼 2.2%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7.2%로 한국의 11.5%보다 15.7%포인트 높았다. 노년인구자살비율은 74.3으로 한국의 64.8보다 9.5%포인트 높았다. 고령자 혼인상태는 혼인 65.1%, 유배 29.4%, 사별 3.3%, 미혼 2.2%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7.2%로 한국의 11.5%보다 15.7%포인트 높았다. 노년인구자살비율은 74.3으로 한국의 64.8보다 9.5%포인트 높았다. 고령자 혼인상태는 혼인 65.1%, 유배 29.4%, 사별 3.3%, 미혼 2.2%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7.2%로 한국의 11.5%보다 15.7%포인트 높았다. 노년인구자살비율은 74.3으로 한국의 64.8보다 9.5%포인트 높았다. 고령자 혼인상태는 혼인 65.1%, 유배 29.4%, 사별 3.3%, 미혼 2.2%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7.2%로 한국의 11.5%보다 15.7%포인트 높았다. 노년인구자살비율은 74.3으로 한국의 64.8보다 9.5%포인트 높았다. 고령자 혼인상태는 혼인 65.1%, 유배 29.4%, 사별 3.3%, 미혼 2.2%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령자 부양비율은 27.2%로 한국의 11.5%보다 15.7%포인트 높았다. 노년인구자살비율은 74.3으로 한국의 64.8보다 9.5%포인트 높았다. 고령자 혼인상태는 혼인 65.1%, 유배 29.4%, 사별 3.3%, 미혼 2.2%로 나타났다.

韓日 고령자 비교 (90년 기준)

구분	60세이상		65세이상	
	한국	일본	한국	일본
고령자수 (만명)	332	2,164	216	1,489
총인구중 고령자 비율 (%)	7.6	17.5	5.0	12.0
노년 부양비 (%)	11.5	27.2	7.2	17.3
고령자 性比 (%)	64.8	74.3	60.0	67.2
고령자분포 (%)				
市 지역	54.7	71.2	53.6	70.5
郡 지역	45.3	28.8	46.4	29.5
고령인상태 (%)				
배우자있음	54.9	65.1	47.2	57.4
배우자없음	44.6	29.4	52.4	37.6
사이미	0.3	3.3	0.2	3.2
혼	0.2	2.2	0.2	1.8

註 ①노년부양비는 60세이상 (또는 65세이상) 고령자의 15세이상60세미만 (또는 65세미만) 인구에 대한 비율
 ②고령자 性比는 여자고령자 1백명당 남자 고령자수 (자료: 통계청)

60세이상 인구 20년새 2배로

통계청 70~90년 비교

3백32萬명 전체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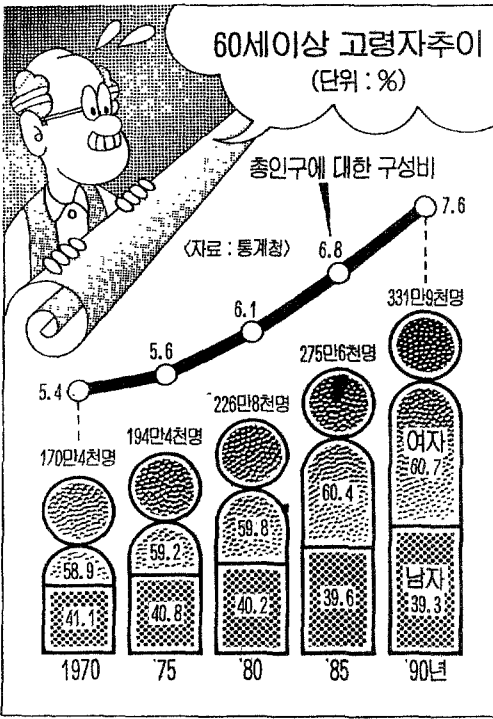
여성 1百명당 男 64명꼴

우리나라의 60세이상 고령자는 지난 70년 1백70만 명에서 90년엔 3백32만 명으로 20년 사이에 2배가량 늘었고 총인구에서 60세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에서 90년에는 7.6%로 높아져 급진적으로 증가 추세가 극진전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60세이상 고령자수는 1970년 170만4천명에서 1975년 194만4천명, 1980년 226만8천명, 1985년 275만6천명, 90년 331만9천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고령자수 증가율은 90년 기준 7.6%로 미국(16.8%), 일본(17.5%), 스웨덴(23.5%) 등 이미 고령화사회가 진입된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내용의 「한국의 고령자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국내에서 고령인구 문제와 관련, 본격적인 통계분석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60세이상 고령자수에서 차지하는 고령 인구는 90년 기준 7.6%로 미국(16.8%), 일본(17.5%), 스웨덴(23.5%) 등 이미 고령화사회가 진입된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개도국보다는 높다. 90년 고령자 性比는 64.8로 여자고령인구가 남자보다 약 1.5배 많았다. 이는 주로 여자가 남자보다 장수하는 경향 때문으로 고령층일수록 성비가 급속히 낮아져 85세 이상 고령자의 性比는 24.9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性比는 선진국(70~81)을 빼아나라 집트(브라질, 태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83~110)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후 통계자료를 입수한 20여 개국 중 우리나라의 性비가 가장 낮다」며 「40, 50대 남자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고령자의 생활

고령자수 8.3%가 혼자 살고 있고 17.2%는 부부끼리 72.4%는 직계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앞으로 월등 기사가 2.1%였다. 고령자일수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았다.

60세이상 인구중 54.9%는 배우자가 있고 44.6%는 사별했으며 이혼과 미혼도 각각 0.3%와 0.2%씩이었다. (許承虎)

社說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경제학의 중요 인가...

高齡化社會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고령화 사회의 대응책...

社說

高齡인력 활용방안 찾아야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어 1990년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령 인력의 활용 방안은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 인력의 활용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령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직업 훈련이다. 둘째, 고령 인력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여이다. 셋째, 고령 인력의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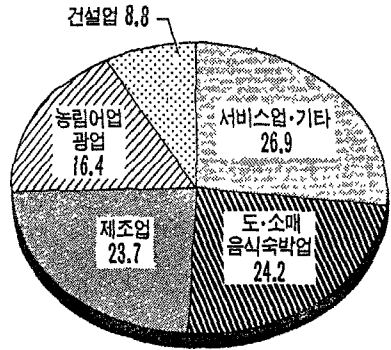
고령 인력의 활용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령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직업 훈련이다. 둘째, 고령 인력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여이다. 셋째, 고령 인력의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고령 인력의 활용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령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직업 훈련이다. 둘째, 고령 인력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여이다. 셋째, 고령 인력의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고령 인력의 활용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령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직업 훈련이다. 둘째, 고령 인력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여이다. 셋째, 고령 인력의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고령 인력의 활용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령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직업 훈련이다. 둘째, 고령 인력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여이다. 셋째, 고령 인력의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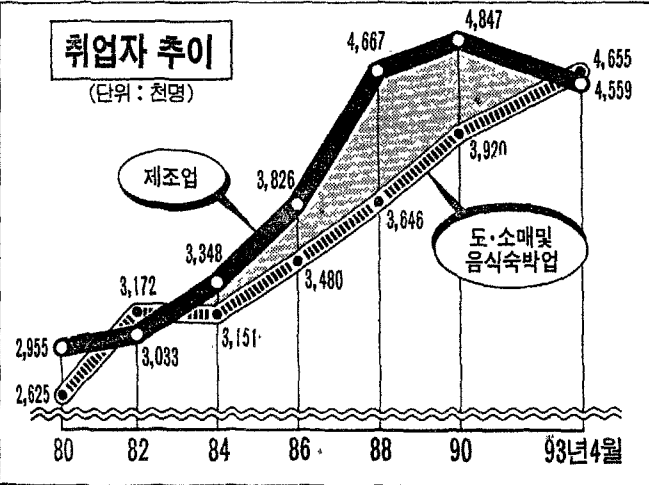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93년4월현재)



(단위: %)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 제조업 취업자수 추월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늘고 있고 마시거나 음용
인 음식·숙박업과 도소매
업의 종사하는 취업자수가
82년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
취업자수를 앞지른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제조업 취
업자수만 지난 91년 8월
처음으로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수보다 적어졌고 이를
늘려서 순전히 먹고 마
시고 사는 인종인 음식·숙
박업부와 도소매부 취업자
업자보다 숫자가 적어지
게 된 것이다. 제조업 취업
자가 이를 소비업 종사자
사보다 더 적어지게 된
것은 제조업의 고용이 빛의
에 따른 소비업의 고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90년
대를 오히려 앞지른 제조
업의 전체와 사회향상
및 소비업수익의 이산화
로 산업구조가 왜곡되고
그 결과 이들 업종의 인
공과 이윤격차가 크게 벌
어진 데다 사회의 만연한
일자리 기피 현상, 기술적
과 숙련도 부족에 따른 수
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3
년 4월 현재는 제조업 취
업자수가 4,559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수인 4,655
천명보다 96천명이나
나도 많이 줄었다.

고양이 울음소리를 심하게
고양이 울음소리를 심하게
전반의 「제조업 기피」부
위를 반영한 것으로 풀
이된다. 전문가들은 차제
에 산업정책의 틀을 노동
공급정책, 사회 정책 전
반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
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제조업 취업자
는 4백55만 천명이었으
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종사자는 4백55만 천명
으로 제조업보다 1만2천
명이 많았다. 3~4월을
더 살펴보면 4월의 제조
업은 4백55만 천명의
불발이었다. 음식·숙박업
은 4백55만 천명의 활
제 취업자보다 96천명이
나도 많이 줄었다.

취업자에 있어 제조업의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전반이 지난 82년 이후
추진되었던 것이다. 제조

82년이후 처음... 9
산업부老

만 6천여명 더 많아

화 의 미 : 대책 시급

◇93년 고용관련지수 추이 (단위: %, 천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실업률	3.0	3.4	3.1	3.0
실업자수	551	634	610	593
취업자수	17,937	17,955	18,758	19,212
·제조업	4,604	4,539	4,539	4,559
·건설업	1,534	1,536	1,648	1,69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577	4,551	4,598	4,655
·서비스업 및 기타	5,057	5,111	5,158	5,158
·농림어업 및 광업	2,165	2,218	2,815	3,144

외국인 갈수록 제조업의
블리해지고 있는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90
년대 들어 불황이 시작되
면서 제조업체, 특히 그 중
집약산업인 섬유 신발 완
구업체들이 무대거꾸로 산
하늘 등 막대한 타격을 받
았지만 서비스업의 비중이
되는 소비증가(1~3월
의 경우 GDP가 3.3%
증가, 민간소비도 5.5%
증가)로 그다지 불황이
타지 않았다. 덕분에 실업

수박업체인 제조업보다
높은 인원을 갖고 종사자
인원도 1년의 경우 월평
관 77만여명으로 제조업
의 69만여명보다 훨씬 많았
다. 여기에 더하고 합하면
우려한 300만여명 규모의 실
업이 우려된다. 실업률 증가

했고 국내 기업의 저임과
을 찾아 해외투자에 나선
데다가 경영숙련인부출현
상마저 가세했다. 돈 잘
벌리며 월급 받고 일하기
편한 서비스업의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
이었다.

【李伯奎기자】

업 취업자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91년 1월 5백1만명으로
피크에 달했으나 그해 8월
까지 증가를 반복하다가
같은세로 돌아선 반면, 음
식·숙박업은 불황에 아
달맞아지 않고 증가세를 지
속했다.
이같은 취업자 구성의



實物경제 회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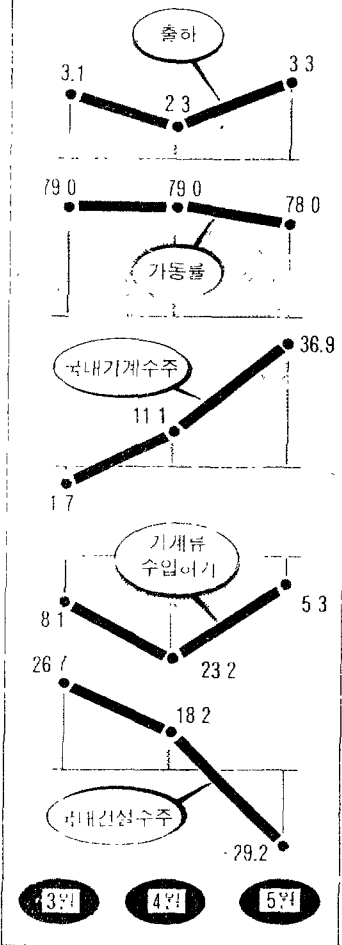
도「밀바다권」수출에서 맴 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7월 2일「新경제보고대회」이후로 연기는 문제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공업체들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생산의 경우 지난 4월이 전월대비 0.2% 증가에 그쳤는데, 5월들어서는「마이너스」1.7%로 곤두박질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4월의 0.3% 증가에서 1.1% 증가로 미미하게 확대되는 데 그쳤다. 趙秉甲통계청 통계조사국장은「전월대비「마이너스」

실제 광공업분야의 잠깐한 국산기통신장사의 전회교환 시설대체 부분만을 제외한 민간부문은 전월비 마이너스 4.0% 전년동기비 9.7% 증가에 불과한 수준이다. 趙국장은「그러나 이 중에서도 민간제조업은 지난 4월 중에 전년동기대비 7.7% 증가에서 5월에 19.8%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립 스텝기는 하지만 민간제조업 부문의 투자는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투자지표인 기계류 수입액은 4월의 전년동기대비「마이너스」23.2

趙국장은 향후 경기상황과 관련,「노사분규로 인한 파업, 재해 등 돌발적인 사태가 없을 경우 월별로는 다소 회복이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KDI는 최근 하반기 경기 전망발표에서 1.4분기 3.3%에 불과했던 성장률이 2.4분기에는 5.0% 그리고 3.4분기와 4.4분기 중에는 7.8%, 7.7%에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그러나 이번의 산업활동동세를 감안하면 생산이 전년

이 다소 활발하기는 하지만 수출장내도액 증가율이 5월의 13.8%에서 6월 들어서는 20일 현재까지 8.8% 증가로 둔화됐고 연간누계가 4.2%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측은 이같은 성장률의 저조하지만 국제수치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금년에는 국내 경기회복으로 수입이 마이너스로 반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자랄까 싶은 기운도 못되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대물림

〈산업활동 주요지표 (전년동기대비, %)〉



보다 나아질 것이지만「체감 경기」까지 개선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당국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徐廷驥기자>

5월 産業활동동향 분석

외로 부진

신경제 1백일 계획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발표된 「93년 5월 産業활동동향」은 생산·수출과 제조업가동률, 투자지표 등의 요건도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 경제팀에 지지율은 부단간을 추고 있는 분위기다.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은 당초 예상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던 각종 지표들이 아직

「에서」 마이너스 5.3%로 상대적으로 나아지지는 했지만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물자부문의서는 각종 건축규제 완화조치의 영향으로 건설허가 면적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0% 증가했지만, 실제 국내 건설수주는 마이너스 28.2%로 아직은 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제조업건설수주는 4월의 마이너스 32.3%에서 5월에는 14.9%로 반전돼 투자증가와 같은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통계결과를 근거로

동기에 비해 4월 0.3%, 5월은 1.1%에 불과, 6월중에는 생산설비가 대폭 확대되지 않았던 2.4분기 성장률 5.0%수준에서의 회복은 어렵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연속관계자들은 정부당국과 KDI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출몰한 희망적 관측만 내놓았다면서 경기회복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요즘 田高와 對중국수출증대에 현안어 수출

특별담화, 공급품값 억제 등의 강력한 행정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간예제목표(4.5%)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KDI 전문가들은 5월중 생산설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급변 하반기 경기는 비교적 점이 되는 작년 하반기의 성장이 극히 저조했던데 따른 반사현상만으로도 불충수출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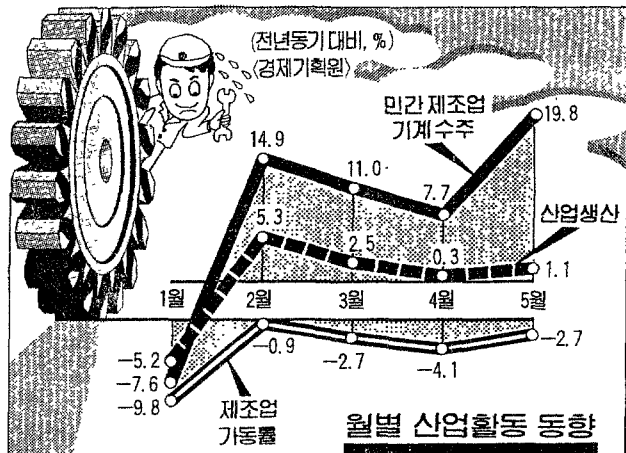
한류은행의 발표한 「기업경기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조업의 알뜰 BSI(기업실지수)는 1.4분기 72.2, 2.4분기 90에서 3.4분기에는 1백9로 1백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전문가들도 급변한 하반기중 「지수경기」는 상반기

생산·投資등 마이너스...경제팀 고공추진
2분기 성장률 5%線 회복 힘들다

실물경기 회복조짐 안 보인다

5월중 산업활동 동향 분석



경기부양을 위한 新경제 1백일계획이 본격 추진된 지난 5월중에도 산업생산과 소비 등 실물경기는 회복조짐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은 공

증가에 그쳐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철강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진해 4월에 비해 1.3% 감소한 78%를 기록했다.

국장은 28일 「5월중 산업활동동향」 발표에서 「민간 제조업 부문에서 기계수주와 건설수주 등의 투자지표가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의 景氣는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 재해 등 돌발사태가 없을 경우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5월중 재고는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에 그쳐 88년 4월의 3.2% 이후 가장 낮은 재고증가율을 보였다. 재고증가율이 낮은 것은 그동안 재고조정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지만 생산이 증가하지 못한 것도 큰 요인으로 분석했다.

도시매판에는 도매업에서 혼수용 주방용품과 자동차 등의 판매가 감소했

으나 소매업에서 여름철 가전제품, 생활필수품 중심의 판매증가로 전년동월비 0.2% 늘었다. 내수용 소비재의 출하는 전년동월비 1.2% 감소했다. 이는 중형승용차, 컬러TV, 에어컨 등의 공황 출하가 다소 부진한 데 기인한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86년 1백)는 4월의 96에서 5월에는 95.9로 감소했다.

자동차·油化 등 부진 산업생산 1.7% 감소 설비투자 공공발주 힘입어 4개월째 증가

공무원의 대량발주 등에 힘입어 4개월째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생산은 그동안의 주도업종이던 자동차와 석유화학들이 부품업체 노사분규와 용철 전기보수 영향으로 4월에 비해 1.7% 감소했고,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소폭인 1:1

5월중 국내기계수주액은 4월에 비해 17.1%, 작년동기에 비해서는 36.9% 증가했다. 민간제조업만은 4월의 7.7% 전년동기 대비(증가)에 이어 19.8%(증가, 설비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 趙繼甲 통계조사

0.1포인트 하락, 아직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는 통신공사가 전화교환시설 대체를 위해 대규모 물량을 발주한 데 기인했으며, 민간 제조업 부문에서는 시멘트

공업의 공작기계, 조선업의 내연기관 수주가 늘었다. 외국산 기계류의 수입액은 일반산업용기계를 제외한 모든 기종에서 증가, 전체적으로는 4월에 비해 6% 늘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3% 감소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전반적인 건설수주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29.2% 감소했다. 그러나 민간제조업에서 발주한 공장 연구소 및 기계설치 등의 수주는 호조를 보여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14.9% 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설비투자와 관련된 공업용 건축허가도 3월의 24.6% 전년동월비, 4월 6%에 이어 5월에도 10.5%의 증가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2.8%로 4월의 3%에 비해 회복됐으나 계절조정치로는 3.1%로 4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羅鍾顯기자

3/4분기 보도기사

(7월~9월)

여 백

社說

不況 재확인한 5월 産業동향

통계청이 엿그제 발표한 5월중 산업활동동향은 우리 경제가 지수와 감각경기할 것 없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경제계의 심각한 불경기호소에 정부는 시중 新경제100일계획의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응수해 왔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며칠전 현2·4분기중에는 경제성장률이 지난 분기의 3%대에서 5%로 높아지는데 이어 하반기에는 7.6~7.7%로 완전 회복될 것으로 예측한바 있지만 모두 설득력이 희박함을 말해준다.

이 동향은 어느것 하나 밝은 구석이 별로 띄지 않는다. 산업생산이 전달보다 되레 1.7%나 감소한 것을 비롯해서 제조업 가동률도 78%로 1%포인트 뒷걸음질쳤고 실업률은 계절조정기준으로 4월수준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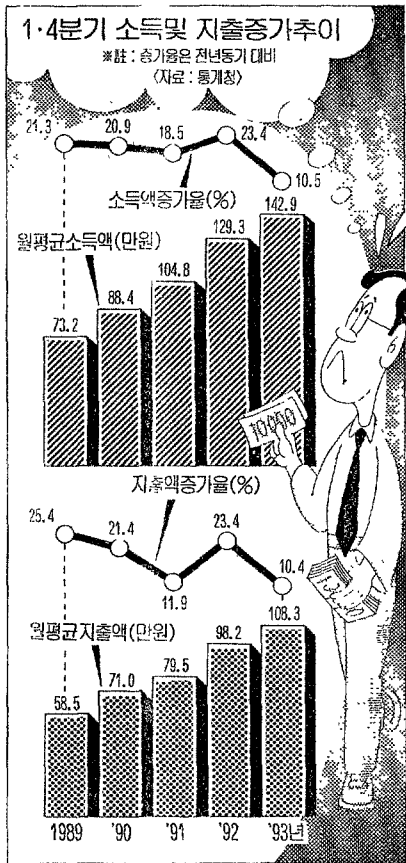
이같은 현상은 아플로산업등 부품업체의 노사분규로 자동차공업생산이 9.4%나 감소된데 크게 연유한것으로 분석됐는데

6월에는 그 여파가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도 중화학공업은 수출호조로 나온 편이다. 경공업생산은 전월의 8.2% 감소에 이어 5월에 다시 7.4%가 줄어 수출과 내수할것 없이 심한 불황의 깊이를 실감하게 만든다.

한가닥 엷은 위안은 기업설비투자의 선행지표라고 할 국내 기계수주액이 전달보다 17.1% 증가하여 투자마인드가 차츰 희생하는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한 점인데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게 아니다. 주로 한국통신공사의 대규모 통신설비발주 덕분이었다. 민간기업의 국내 기계수주는 오히려 4.0%가 감소했으며 작년동월과 비교해 9.7% 늘었을 뿐이다. 기계류 수입허가액은 전월보다 6%늘었지만 1년전 수준보다는 5.3% 감소됐다.

한마디로 실물경제는 계속 잠자고 있다. 노사분규의 조속한 수습과 진정등 보다 적극적인 경기회생대책이 요망되는 상황이다.

도시근로자家庭 月소득 142萬9千원



**작년보다 10.5% 증가
85년 이후 最低 기록**

지출 1백 8萬 3千원 조세 부담은 29% 늘어

통계청 「1·4분기 家計수지」 발표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 1·4분기(1~3월)에도 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및 소비증가율이 지난 85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특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던 외식비 증가율도 크게 둔화했다. 소득증가에 비해 조세부담액과 의료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들이 비소비적 지출은 각각 30%대에 가까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23.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7월 1일 발표한 내용의 '93년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을 발표했다. 가계수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백42만9천원으로 작년 동기와 1백29만3천원에 비해 13만6천원(10.5%)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23.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1·4분기부터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4.6%를 고려하면 지난 1·4분기 실질소득은 5.6% 증가했다. 소득증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작년 대비 15.6% 증가했으나 가구월별소득은 불경기로 인한 고용자정액화로 1.7% 줄었고 사업재산 이전소득 등 기타소득도 2.7% 줄었다. 이 기간 중 월평균 지출은 1백08만3천원으로 작년(98만5천원)보다 10만1천원(10.4%) 늘었다. 이중 소비지출은 97만5천원으로 9.9% 증가한 반면 비소비지출은 조세부담액(29%) 증가(사회보장부담액 23.3%), 의료비(14.8%) 증가, 10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지출이 전체 가계의 지출을 나타내는 연세계수

에 비해 크게 둔화한 것으로 지난 85년 1·4분기(6.8%)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작년 1·4분기부터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4.6%를 고려하면 지난 1·4분기 실질소득은 5.6% 증가했다. 소득증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작년 대비 15.6% 증가했으나 가구월별소득은 불경기로 인한 고용자정액화로 1.7% 줄었고 사업재산 이전소득 등 기타소득도 2.7% 줄었다. 이 기간 중 월평균 지출은 1백08만3천원으로 작년(98만5천원)보다 10만1천원(10.4%) 늘었다. 이중 소비지출은 97만5천원으로 9.9% 증가한 반면 비소비지출은 조세부담액(29%) 증가(사회보장부담액 23.3%), 의료비(14.8%) 증가, 10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지출이 전체 가계의 지출을 나타내는 연세계수

최저 둔화

월평균 수출증가율이 10.5%인 지난 6월의 수출이 10.1%인 7월 1주간 둔화했다. 7월 1주간 수출은 10.1%인 반면 수입은 10.1%인 7월 1주간 둔화했다. 7월 1주간 수출은 10.1%인 반면 수입은 10.1%인 7월 1주간 둔화했다.

7월 1주간 수출은 10.1%인 반면 수입은 10.1%인 7월 1주간 둔화했다. 7월 1주간 수출은 10.1%인 반면 수입은 10.1%인 7월 1주간 둔화했다. 7월 1주간 수출은 10.1%인 반면 수입은 10.1%인 7월 1주간 둔화했다.

수출증가율은 10.1%인 반면 수입증가율은 10.1%인 7월 1주간 둔화했다. 7월 1주간 수출은 10.1%인 반면 수입은 10.1%인 7월 1주간 둔화했다. 7월 1주간 수출은 10.1%인 반면 수입은 10.1%인 7월 1주간 둔화했다.

7월 1주간 수출은 10.1%인 반면 수입은 10.1%인 7월 1주간 둔화했다. 7월 1주간 수출은 10.1%인 반면 수입은 10.1%인 7월 1주간 둔화했다. 7월 1주간 수출은 10.1%인 반면 수입은 10.1%인 7월 1주간 둔화했다.

2000년 처녀 백명 - 총각 백 20명

세계 인구의 날 살펴본 「한국 인구」

11월 14일 세계 인구의 날이다. 세계 인구는 2000년에는 62억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5억 2천만 명으로 4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현재 한국(南韓)의 인구는 4천 4백만 명으로 인구는 4천 4백만 명(남한)과 4천 3백만 명(북한)을 합쳐 8천 7백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결혼적령인구의 남녀성비>

단위: 여자100명당 남자수, 2천년은 예상치

구분	1980	1990	1993	2000
결혼적령인구	78.6	104.7	105.4	119.4
출생성비	107.2	114.7	108.7	107.0

<노인인구 증가추세>

단위: 전체인구중 %

구분	1980	1990	1993	2000
14세 이하	34.0	25.8	24.3	21.2
65세 이상	3.8	5.0	5.4	6.8

<남녀별 평균수명>

단위: 세

구분	1970	1978	1985	1989
남자	59.8	62.7	64.9	66.9
여자	66.7	69.1	73.3	75.0
차이	6.9	6.4	8.4	8.1

남녀 평균수명차 8.1세 국민 74% 도시집중도 문제

구조를 살펴보면, 고령층(65세 이상)은 1980년 3.8%에서 1990년 5.0%로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는 1980년 140만 명에서 1990년 250만 명으로 증가했다.

남녀 수명차(수명차)는 1970년 6.9세에서 1989년 8.1세로 증가했다. 이는 고령층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도시집중도 문제는 74%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도시집중도 문제와 관련이 있다.

남녀 수명차(수명차)는 1970년 6.9세에서 1989년 8.1세로 증가했다. 이는 고령층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도시집중도 문제는 74%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도시집중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8.1세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령층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남녀 수명차(수명차)는 1970년 6.9세에서 1989년 8.1세로 증가했다. 이는 고령층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도시집중도 문제는 74%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도시집중도 문제와 관련이 있다.

남녀 수명차(수명차)는 1970년 6.9세에서 1989년 8.1세로 증가했다. 이는 고령층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도시집중도 문제는 74%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도시집중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세계 인구는 2000년에는 62억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5억 2천만 명으로 4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남녀 수명차(수명차)는 1970년 6.9세에서 1989년 8.1세로 증가했다. 이는 고령층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도시집중도 문제는 74%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도시집중도 문제와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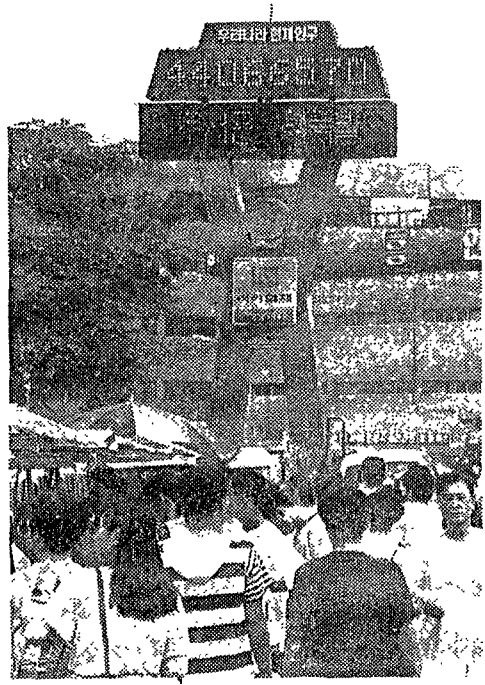
남녀 수명차(수명차)는 1970년 6.9세에서 1989년 8.1세로 증가했다. 이는 고령층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도시집중도 문제는 74%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도시집중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세계人口 55億7,600萬명

78%가開發國에 산다

「人口의날」 맞아본 현황과 문제점



세계인구의 날인 11일 우리나라인구는 4천4백6만7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사진은 서울동대문운동장 앞에 있는 10일오후3시 현재의 인구시계.(金徹翰)

지역	75	93	95년
세계	4,079 (100.0)	5,576 (100.0)	5,770 (100.0)
선진국	1,095 (26.8)	1,224 (22.0)	1,236 (21.4)
개발도	2,984 (73.2)	4,351 (78.0)	4,534 (78.6)
아시아	2,354 (57.7)	3,292 (59.0)	3,413 (59.2)
아프리카	403 (9.9)	703 (12.6)	747 (13.0)
남미	323 (7.9)	475 (8.5)	493 (8.5)
북미	239 (5.9)	282 (5.1)	286 (5.0)
유럽	474 (11.6)	502 (9.0)	504 (8.7)
오세아니아	21 (0.5)	28 (0.5)	28 (0.5)
구소련	254 (6.2)	295 (5.3)	298 (5.2)
한국	35 (0.86)	44 (0.79)	45 (0.78)

세계인구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명, 괄호안은 구성비%)

7월11일은 세계인구의 날. 유엔은 지난 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인구와 개발」이란 연안의 해를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매년 이날을 세계인구의 날로 정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 증가가 주된 인구문제이나 선진국은 교육, 환경, 보건 등 인구의 질적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이 펴낸 「1990 세계인구전망과 우리나라 통계청의 90년 인구센서스 및 장래인구추계등을 통해 세계및한국의 인구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인구규모 93년 7월 11일 현재 55억 7천 6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22%에 해당하는 12억 2천 4백만 명이 선진국에 나머지 78%인 43억 5천 1백만 명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가 주된 인구문제이나 선진국은 교육, 환경, 보건 등 인구의 질적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7월 11일 현재 4천 4백 6만 7천 8백 명으로 세계 24위이며 세계인구의 0.8%를 차지한다.

세계인구는 지난 90년 이후 매년 9천 4백 70만 명 가량씩 증가한다.

선진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증가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으나 90~93년엔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가 연 8천 9백만 명으로 세계인구 증가의 94%를 차지할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구밀도 90년 세계인구밀도는 구미도는 평방킬로당 39명, 개발도상국이 52명으로 선진국(21명)보다 훨씬 밀집돼 있었다.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4백 37명으로 세계 평균보다 1.4배나 높다. 세계인구증가 추세에 맞추어 인구비율인 도시화율은 90년의 경우 45.2%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

선진국의 도시화율은 72.6%로 개발도상국(37.1%)보다 약 두 배 높다.

한국의 도시화율은 74.4%로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도 높고 도시인구 증가율도 매우 빨라 중증도시화(空城市化)와 도시집중의 심각한 현상이다.

90년의 경우 성비(남자수/여자수)는 1백명당 남자가 94.3명, 여자가 101.4명이다.

선진국은 94.3명, 개발도상국(103.6)보다 낮다. 선진국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남자보다 오래 사는 여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추세.

4세이하의 아동 성비는 세계 평균인 104.6명.

한국 4천4百萬명 24位 도시집중 세계평균 앞질러

남아선호경향이 강한 유교문화권의 아시아가 105.6명으로 가장 높다.

한국은 4세이하 성비가 90년 112, 93년엔 112.5명으로 남아인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許承虎)

건설업체

국내 80%의 이익률 惡化

작년 3.6% 줄어 海外부문 3.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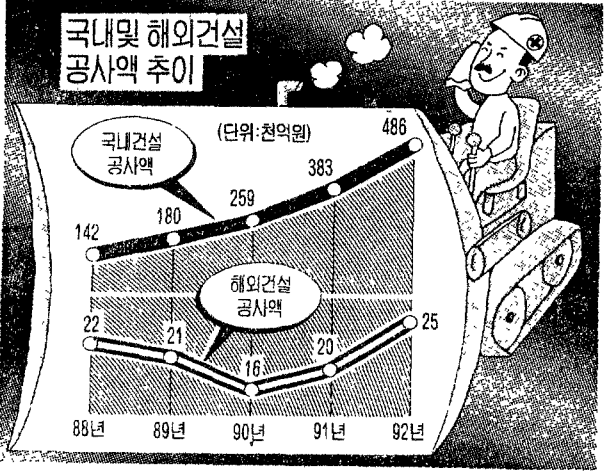
지난 연말 건설업면허를
개발한 데 따라 건설업체
수와 종사자수가 크게 늘
어났으나 건설업체들의 지
난해 국내공사 80%의 이익
률이 낮아졌다.

해외건설은 83년 이후 발주
량의 감소 공사량의 질차
가 낮아지고 있다.
15일 통계청의 발표한
「92년도 건설업통계조사결
과」에 따르면 건설업체들
의 영업이익률은(공사대금에
서 공사비용을 빼고 남은)
영업이익률 공사대금으로
나눈 것)은 지난 91년 10.
4%에서 지난해 7.1%

로 낮아졌다. 국내건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91년
10.9%에서 92년 7.3%
로 낮아진 반면 해외건설
은 91년 0.5%에서 92년
3.9%로 높아졌다.
통계청 朴贊甲통계조사
국장은 「영업이익률이 나
빠진 것은 정부의 건설경
기진전대책과 2백만호 주
택건설이 끝나 건설업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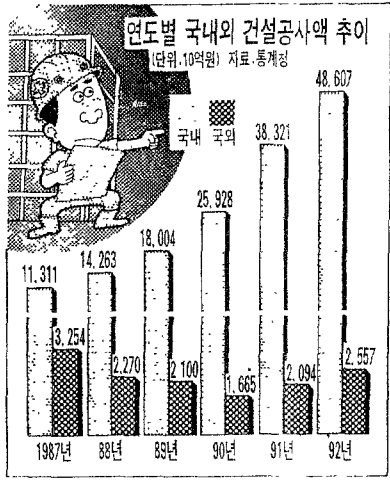
이 인력과 장비의 가동률
을 최하수 이하 유지하기
위해 덜필업할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설업체수는 92년말 현
재 2만4천9백87개로 전
년말의 1만9천4백77개
에 비해 28.3%(5천5백
10개)가 증가하는 월평
균 1백28만2천3백39명
으로 전년도의 1백7만7천

2백91명에 비해 19% 20
만5천48명)가 각각 늘었
다.
지난해 공사대금은 51조
1천6백4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내공사금액은
48조6천73억원(26.8%
증가)이고 해외공사금액은
2조5천5백71억원(22.
1%)이다. 총공사금액에서
해외공사가 차지하는 비중
은 80년대초의 50~60%수
준에서 89년 10.4%, 90년
6%, 91년 5.2%, 92년
5%로 계속 낮아지고 있
다.



國內건설활기 : 海外는부진

統計廳 92년 건설업 통계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국내건설경기외부진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

자본시설및 전문공사의 증가에 힘입어 공사규모가 91년에 비해 26.6% 늘어

원가공사 92.9% : 수익성에 문제

토목부문 가장 호조 74.6% 급증

비중이 92.9%에 달해 91년(89.6%)에 비해 수익성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건설업통계조사결과」(장정)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에 대한 해외건설업체의 진출은 모두 2만4천9백

87개사로 이들이 국내에 건설한 공사실적은 모두 51조1천6백40억원인 반면 91년 32개사에서 31개사로 줄어 최근 해외건설업의 부진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제비 16조7천5백80억원으로 4.8% 증가에 그쳤는데 비해 토목부문(10조5천1백70억원)은 74.6%의 급증세를 보였다. 이밖에 전기공사 15조2천9백20억원(29.4%) ▲전기공사 4조4천8백억원(40.7%) ▲전기통신공사 8천8백90억원(26.5%) 등도 꾸준한 증진을 유지했다.

건설업면허별로는 종합건설업체가 1천1백68개로 업체수로는 전체의 47%에 불과하지만 총공사액의 46.1% ▲공사액의 59.7% ▲공사비용의 61.9% ▲부가가치의 55.2% ▲영업고정자산의 73.3%를 각각 점유하고 있어 여전히 전체건설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문건설업체는 업체수로는 37.9%인데 비해 공사액은 31.6%에 그쳤고, 기타건설업체들은 업체수가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사액은 8.7%에 불과해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종사자수는 월평균 1백28만2천3백명 정도로 지난 91년(1백7만7천3백명)에 비해 19%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외건설공사 종사자는 1만6천9백60명에서 1만4천7백20명으로 13.2%가 감소했다.

(金鍾秀 기자)

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총공사액 가운데 원가에 해당하는 공사비의 87개사로 이들이 국내에 건설한 공사실적은 모두 51조1천6백40억원인 반면 91년 32개사에서 31개사로 줄어 최근 해외건설업의 부진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원가공사 92.9% : 수익성에 문제

토목부문 가장 호조 74.6% 급증

비중이 92.9%에 달해 91년(89.6%)에 비해 수익성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건설업통계조사결과」(장정)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에 대한 해외건설업체의 진출은 모두 2만4천9백

87개사로 이들이 국내에 건설한 공사실적은 모두 51조1천6백40억원인 반면 91년 32개사에서 31개사로 줄어 최근 해외건설업의 부진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제비 16조7천5백80억원으로 4.8% 증가에 그쳤는데 비해 토목부문(10조5천1백70억원)은 74.6%의 급증세를 보였다. 이밖에 전기공사 15조2천9백20억원(29.4%) ▲전기공사 4조4천8백억원(40.7%) ▲전기통신공사 8천8백90억원(26.5%) 등도 꾸준한 증진을 유지했다.

건설업면허별로는 종합건설업체가 1천1백68개로 업체수로는 전체의 47%에 불과하지만 총공사액의 46.1% ▲공사액의 59.7% ▲공사비용의 61.9% ▲부가가치의 55.2% ▲영업고정자산의 73.3%를 각각 점유하고 있어 여전히 전체건설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전문건설업체는 업체수로는 37.9%인데 비해 공사액은 31.6%에 그쳤고, 기타건설업체들은 업체수가 전체의 57.4%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사액은 8.7%에 불과해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종사자수는 월평균 1백28만2천3백명 정도로 지난 91년(1백7만7천3백명)에 비해 19%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외건설공사 종사자는 1만6천9백60명에서 1만4천7백20명으로 13.2%가 감소했다.

(金鍾秀 기자)

건설업, 이익기반추약해졌다

작년工事費用비중 92.9% 4年만에 최고치 기록

총공사액 51兆... 건축규제면허개발등영향수익성악화

건설업계는 지난해 건축규제조치로 인한 건설활동이 부진으로 총공사액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공사액 중 공사비 비중이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2조5천5백71억원(22.1%증가)으로 총공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로 추산됐다.

<건설업 추이>

연도	단위(개)	前年比	年減率
1988	13,940		8.5
1989	16,270		16.7
1990	18,073		11.1
1991	19,477		7.8
1992	24,987		28.3

연도	단위(월평균)	前年比	年減率
1988	821,369		9.7
1989	832,410		2.9
1990	934,312		14.1
1991	1,077,291		15.3
1992	1,282,339		19.0

연도	단위(10억원)	前年比	年減率
1988	16,534		13.5
1989	20,104		21.6
1990	27,592		37.2
1991	40,414		46.5
1992	51,164		26.6

연도	단위(10억원)	工事對	比率
1988	15,440		93.4
1989	18,579		92.4
1990	24,999		90.6
1991	36,218		89.6
1992	47,509		92.9

보다 68.1% 늘어난 9천4백67개에 이르렀다.

◇사업체당 평균공사액은 전년보다 1.1% 감소했으며 종사자 1인당 평균공사액은 6.1% 증가했다. 이에 비해 사업체 및 종사자 1인당 평균공사비용은 각각 2.9% 10.4%씩 증가했다.

또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1.9% 감소한 반면 종사자당 부가가치는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朴永均기자>

15일 통계청이 2만4천9백87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92년도 건설업조사」 결과 건설업계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51조1천643억 원의 공사액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수치다.

이와 같은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2조5천5백71억원(22.1%증가)으로 총공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로 추산됐다.

건축부문은 건축규제조치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한 16조7천5백32억원의 건설업계가 5백32개 업체를 통해 29.4%(전년 대비 34.6% 증가)의 공사액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의 비해 1.6% 증가에 그쳤으나 42.2%(기타부문 대비 1.9%의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이 가운데 11.9%의 비중을 차지한 주택 건설업은 83년 이후 계속 증가한 반면 해외건설은 91년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92년도에 주택 건설업은 17.2% 증가한 17조2천800억 원의 공사액을 기록했으며 해외건설은 17.2% 증가한 17조2천800억 원의 공사액을 기록했다.

◇건설업의 유형별 구조는 종합건설업이 1천1백68개로 전체의 4.7%에 불과하나 종사자수는 46.1%로 공사액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건설업은 29.9%나 늘었다. 산업건설업도 17.2% 증가한 17조2천800억 원의 공사액을 기록했다.

◇건설업의 유형별 구조는 종합건설업이 1천1백68개로 전체의 4.7%에 불과하나 종사자수는 46.1%로 공사액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건설업은 29.9%나 늘었다. 산업건설업도 17.2% 증가한 17조2천800억 원의 공사액을 기록했다.

「구멍가게식」 경영 여진

都小賣業

98%가 개인소유... 영세성 못벗어

事業體 총 1百28만여개

작년 7월 기준 외국流通업체 시장잠식 '불보듯'

통계청 조사 발표

우리나라 도·소매업체 대부분이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유통시장 개화를 맞아 외국업체의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도·소매업 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전체 사업체 수는 작년 7월 1일 현재 1백28만여 개, 종사자 수는 3백20만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3.3%, 3.4%가 늘어났다.

연간 매출액(9월 기준)

통계청 조사 발표

은 1백45천7천여원의로 전년도에 비해 20%가 증가했다. 도·소매업체의 경영 형태를 보면 전체 사업체의 98%가 개인경영인 반면 주식회사 등 법인경영은 2%가 채 안돼 아직도 전근대성을 못벗어난 것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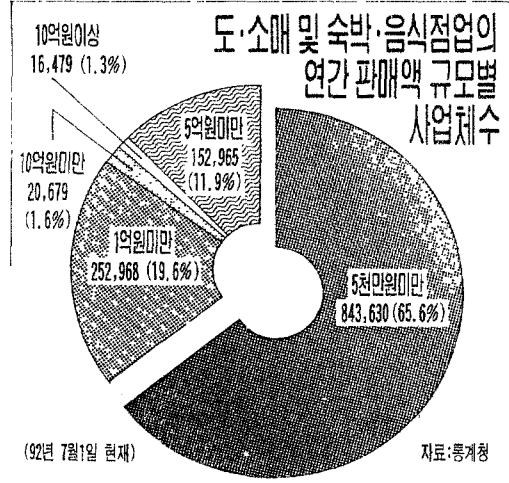
매출액 규모별로는 5천만원 미만의 66%인 반면 5억원 이상의 2%에 불과하며 종사자 수도도 1인업체(38%)를 포함해 4인 이하가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인 업체 수는 전년도에 비해 6%가 줄어든

통계청 조사 발표

대신 1억원 미만인 업체 수가 그 숫자만큼 늘어난 것으로 볼 때 도·소매업종의 영세성은 점차 개선은 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려 유통시장 개방에 의한 외국 대형업체의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도·소매업종 종사자의 성별 구성비는 전체적으로 남자 49.5%, 여자 50.5%로 여자가 더 많았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69%가 숙박업의 경우 5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소매업종 가운데 자동차판매·수리보수업 등 소매업은 자동차 보유율이 추세에 따라 업체 수가 6.6% 증가한 수 10% 매출액 26.2%의 높은 시장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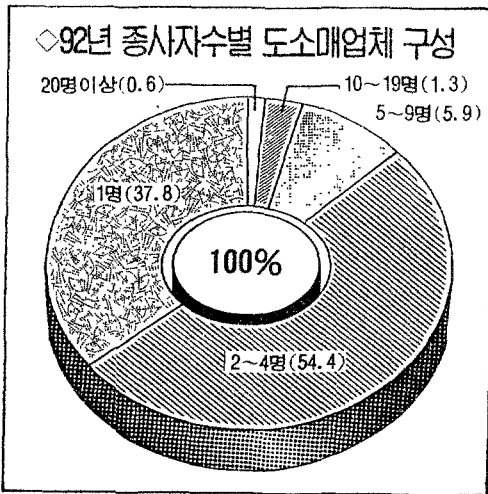
도소매업 大型·法人化

작년 年외형 10億이상 업체數 41% 늘어

株式회사 2만2천개

매출증가율, 자동차판매·숙박·음식業順

事業體 總 1백28만여개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비고급화 추세에 따라 백화점 등 대형도소매업체들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 보급증가에 따라 자동차판매 수리업 등 자동차관련 사업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도 도·소매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도소매, 숙박·음식업체수는 모두 1백28만6천7백21개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그중 도소매업체는 1백22만2천388개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업체는 6천333개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를 보면 20명 이상 대형업체가 8천2백28개로 전년 대비 7.0%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120만4천693개로 전년 대비 0.4% 줄었다. 종사자 1명인 업체는 48만7천76개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종사자 1명 사업체 수는 2만1천9백37개로 전년 대비 5.4%를 차지했다. 종사자 2명 사업체는 4만4천4백49개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종사자 3명 사업체는 3만5천3백21개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종사자 4명 사업체는 2만5천5백49개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종사자 5명 사업체는 1만6천5백49개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종사자 6명 사업체는 1만2천388개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연간 매출액 규모별 업체수를 보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84만3천6백30개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5천만 원 이상 업체는 2만6백79개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1만6천4백79개로 각각 5.4%, 41.1%씩 크게 늘며 국내 도소매업의 규모별 비중은 5.6%, 5.9%, 1.2%, 10.1%, 19.1%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구성비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구성비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구성비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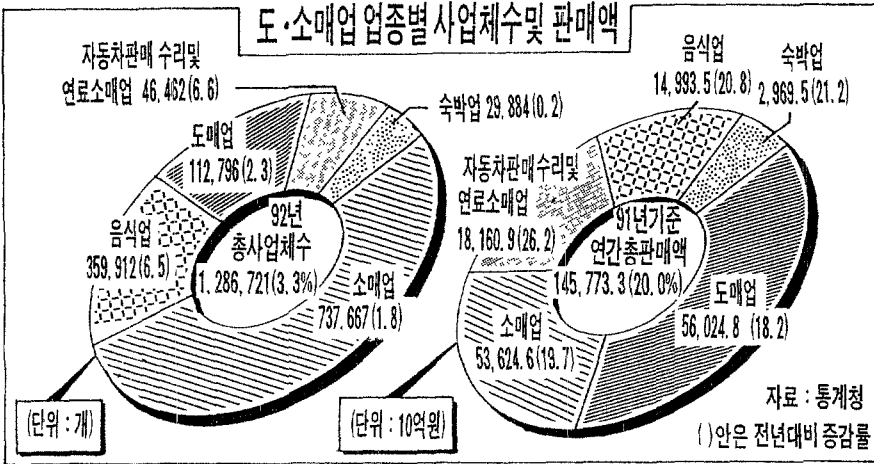
연간 매출액 규모별 업체수를 보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84만3천6백30개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5천만 원 이상 업체는 2만6백79개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1만6천4백79개로 각각 5.4%, 41.1%씩 크게 늘며 국내 도소매업의 규모별 비중은 5.6%, 5.9%, 1.2%, 10.1%, 19.1%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구성비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구성비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 규모별 업체수를 보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84만3천6백30개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5천만 원 이상 업체는 2만6백79개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1만6천4백79개로 각각 5.4%, 41.1%씩 크게 늘며 국내 도소매업의 규모별 비중은 5.6%, 5.9%, 1.2%, 10.1%, 19.1%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구성비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구성비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 규모별 업체수를 보면 5천만 원 미만 업체는 84만3천6백30개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5천만 원 이상 업체는 2만6백79개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1만6천4백79개로 각각 5.4%, 41.1%씩 크게 늘며 국내 도소매업의 규모별 비중은 5.6%, 5.9%, 1.2%, 10.1%, 19.1%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구성비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구성비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都小賣業

外形 커졌지만 영세성 여전



국내 도·소매업체의 영업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대형·중·소기업이 대량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세성이 여전하다. 도·소매업의 영업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대형·중·소기업이 대량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세성이 여전하다.

자본통계 자동차 관련업종 성장勢 뚜렷

총 128萬개 98%가 개인소유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도 도·소매업종별 주사별 판매액」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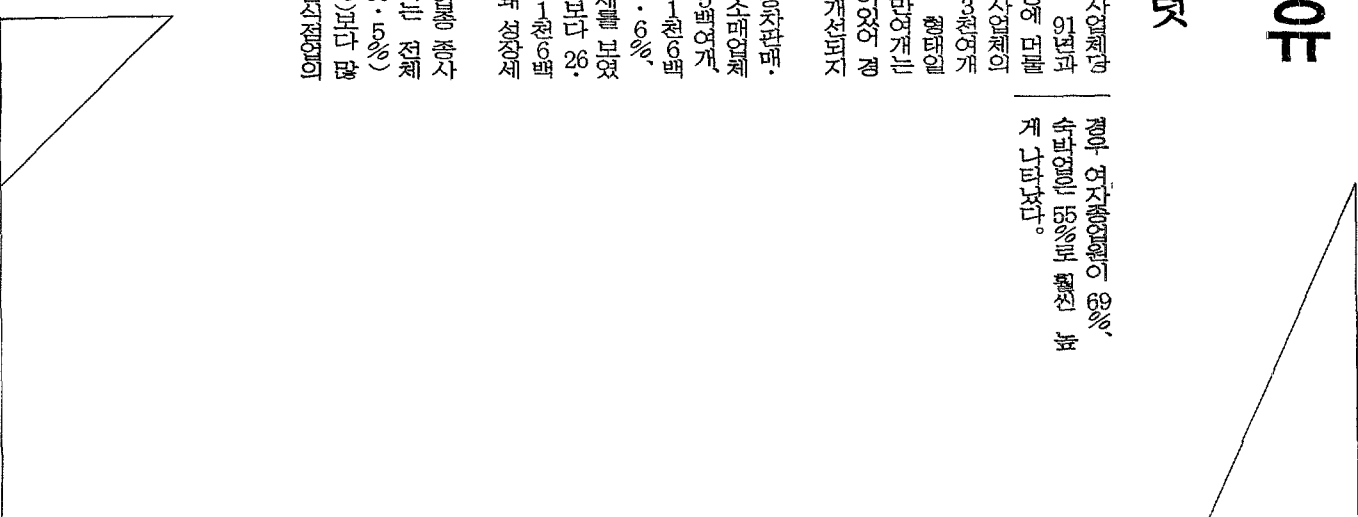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업종의 판매액이 1.8배 증가했다. 도·소매업종의 총 판매액은 1.45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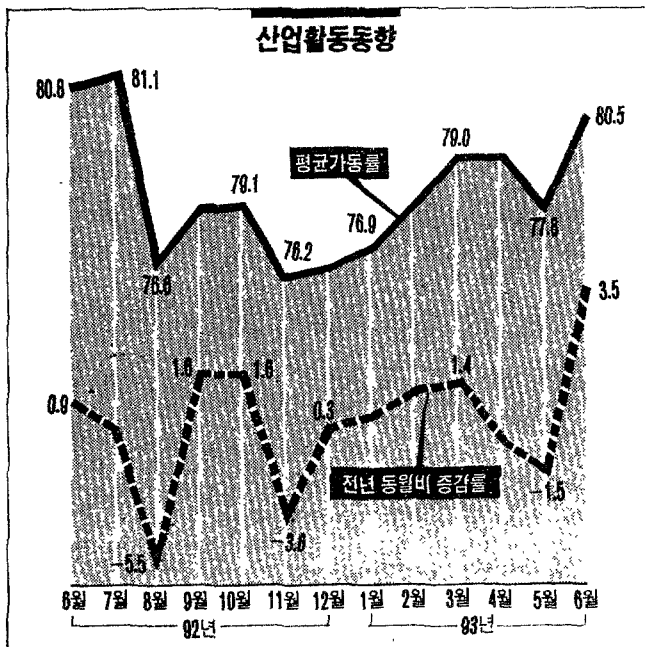
실업률 87년6월이후 최고

6월 산업동향 경공업 계속 부진 중화학 호조

산업생산 소폭 늘어나 완만한 회복세

지난 6월중 산업생산은 5월 및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늘어나고 가동률도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중화학공업부문이 호조를 보인 반면 경공업분야는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문의 경우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가 줄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실업률이 3.2%를 기록해, 8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석유화학·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이 높은 폭의 증가를 보인



데 힘입어 5월에 비해 3.8%, 지난해 6월에 비해서는 3.5%가 각각 늘어나는 회복세를 보였다. 상반기 전체로는 3월 이후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2월의 부진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 증가에 그쳤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업종별로는 화학물 및 화학제품이 13.8%, 석유정제업이 14.9%, 조립금속제품이 6.5%, 자동차가 5.5% 증가해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통계청은 6월중 현대자동차의 부분과업 등으로 자동차부문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으나 기아·대우 등 다른 업체의 생산·판매가 15~30% 증가하는 등 크게 호조를 보여 업종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반면 비금속광물제품(-2.6%), 전기업(3.1%) 등과 의복·모피(-3.8%), 인쇄출판(-2.2%) 등 업종들은 평균치 이하 또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경공업업종 전체로는 5월보다 6.4%가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이처럼 산업생산이 전체적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6월중 제품출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가 늘어났으며, 재고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 가동률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80.5%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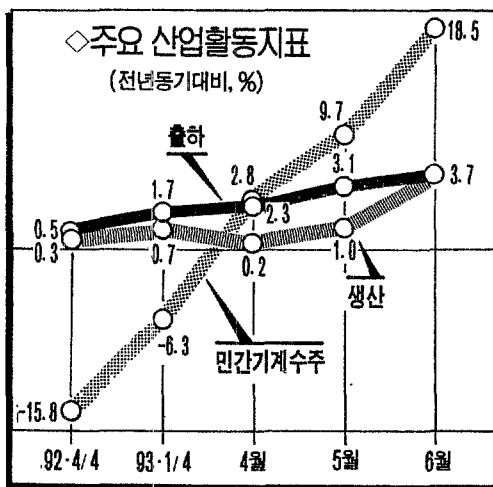
그러나 제조업 설비투자를 예견케 하는 기계류 수주부문(선박 제외)은 국내수주의 경우 지난해보다 32.4%가 늘어났으나, 해외수입허가는 28.6%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내 건설수주액 역시 6월 한달 동안은 11.1%가 늘어났으나 상반기 전체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투자부진 양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액 가운데 주택 등 비제조업부문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쪽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쪽의 투자심리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반영했다.

고용부문은 도산·음식료업의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농업·림업과 광공업 및 제조업부문에서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이 5월에 비해 0.7%포인트 늘어난 2.7%를 기록했다. 특히 6월의 실업률은 계절적 조정을 포함할 때 3.2%에 이르러 8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통계청의 조휘갑 통계조사국장은 "6월중 산업활동은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고용과 소비 측면에서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경기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회복은 있었지만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産業활동 다소 회복세

6월중 重工業호조속 輕公업은 침체 가속



산업활동이 다소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회복세는 아직 미약하다. 특히 6월중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6월말 집계치가 발표될 때까지는 중화공업의 회복세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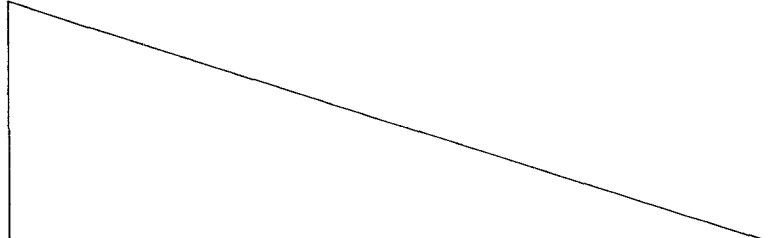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말 삼반기중 산업활동지표」에 따르면 6월중 산업생산은 석유화학업종의 정기보수가 끝난 데다 현대자동차의 조업단축에도 불구하고, 起亞·大宇·雙龍 자동차 등의 생산증가에 힘입어 前年同月과 비교전달

投資지표 기계수주 급증

고용사정은 악화...실업률 3.2%

실업률이 다소 회복해 3.8%로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가동률도 前月에 비해 3.5% 증가한 80.5%로 9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산업생산의 같은 증가는 중화공업의 주도한 것일뿐 신발·섬유·가구 등 경공업은 6월중 산업생산이 전년동월 대비 6.4%나 감소했고 상반기 전체로는 무려 8.2%나 줄어드는 등 극도의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도 설비투자를 예고하는 국내기계수주는 前月 대비 2.5%, 전년동월 대비 32.4%나 각각 증가했다. 특히 민간기계수주는 6월중 18.5% 늘어나는 등 5개월째 증가세가 지속돼 앞으로 설비투자가 회복될 조짐을 보였다. 또한 6월중 국내건설수주는 크게 증가했다. 특히 민간제조업부분의 건설수주는 6월중에도 전년동월 대비 2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경기선행지수는 6월중 前月 대비 0.7% 증가, 5개월째 상승한



경계의 경기상대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또한 前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95.6을 기록, 경기가 아직 침체구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게다가 6월중 실업률의 전년동월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2.7%를 기록하며다. 계절조정된 할 경우 前月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한 3.2%로 나타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糖業申請제 조 사국장인 「경기가 아직 본 격회복구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物價 올들어 첫 내림세

7월중 소비·생산자指數 前月比 0.1% P

농축산물가격 安定 힘입어

물가가 올들어 처음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30일 통계청과 韓銀에 따르면 7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0.1% P 하락, 작년말에 비해 4.1%수준을 유지했고 생산자물가도 전월보다 0.1% P 떨어졌다. 올들어 높은

부분별로 보면 농산물 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산지 출하가 부진한 과(44%) 심추(66.5%) 등 채소류 가 오른 반면 지난달 급 올랐던 수박(△40.6%) 등(△35.6%) 등 과일 류는 본격출하와 이상저 온에 따른 수요감소로 값 이 크게 떨어져 전체로는 1.9% 떨어졌고, 수산물

값도 이회랑이 증가한 오 장이(0.5%)이 하리 되는 데 힘입어 농축수산 물값이 전체로 0.8%나 내려갔다. 또 공산품은 병과류가격 과 급반지가 쳐 상승에 따라 0.2% 상승했고 개인사 비스요급도 올들어 가장 낮은 0.2% 상승에 그쳤 다.



7월物價 내림세

소비자 0.1% P 떨어져

統計廳·韓銀발표 7월중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올들어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30일 통계청과 韓銀에 따르면 7월중 소비자물가는 6월보다 0.1%포인트 P 떨어졌으며 연중 물가 상승률은 4.1%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도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으며 작년말에 비해 1.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의 하락은 주로 농산물가격 안정에 힘입었는데 농산물의 과(44.0%), 심추(66.5%) 등 채소류가 오른 반면 지난달에 크게 올랐던

수박(△40.6%), 참외(△35.6%) 등 과일류 가 출하증가와 장마 및 이상저온으로 인한 수요감소 로 크게 내림세를 기록했다. 1.9%가 하락했다. 공산품은 병과류 및 과일 가격이 상승으로 0.2% 올랐고 개인서비스요급 은 올들어 가장 낮은 0.2% 상승에 그쳤다.

물가통계

① 그리고 상품의 수 출입단계에서 경을 조사하는 수 출입물가조사 등 이 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물가가 얼마냐」고 물어보지는 않는다. 사고 싶은 물건을 가리키며 가격이 얼마냐고 묻는다.

정화관에서는 요즘이 라고 하고 노동력의 활 동대가는 노임 예컨대 도배공임, 미장공임이 라고 말한다. 물가는 이와 같이 상품가격, 서비스요금, 노임에 포함되는

경제교실

〈92〉

個別상품·서비스가격 종합·指數化 유통단계·범위따라 다양하게 분류

로 지정하는 밑이며 이 러한 포괄적인 물가의 수치를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엔 물가조사와 하 고 물가조사의 결과물 지수로 표현한 것이 물 가지수이다.

조사된다. 상품의 생산 단계에서 조사하는 생산자물가조사(도매물가 조사), 소매단계에서 조사되는 소비자물가조사,



朱泰燮
통계청 유통통계과장

- ▲ 35년 경기 장단생
- ▲ 건국대 정외과
- ▲ 통계청 유통통계과 장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는 조사지역범위가 전국의 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도시소비자물가지수이고, 한편 농림어업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는 농림물가 및 임·요 금조사는 농림물가 대상지역이므로 하고 있다.

물가조사결과 내용도 다양하게 발표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예로 들면 우선 식료품, 주거비, 광열, 수도비, 피복신발, 보건의료, 피양양락 등 가격비지출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소위 기본분류 지수가 있다. 그리고 각 분류마다 식료품의 농류·육류·유란·채소·의식용 12가지로, 피복 및 신발은 의의·스웨터·셔츠·내의·직물·신 등 여러로 더욱 세분된다.

상품과 서비스 지수가 있는가 하면 농축수산 물, 광업제품, 잡채, 공업제품이므로 분류한 상품상별물가지수가 있으며 구입방법별로는 1회이상, 분기, 1회의 상, 반기, 1회이상 등으로 분류한 구입빈도별 지수, 가격의 기본생필품만 따로 묶어서 지수를 작성한 기본생필품지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부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물건들 즉 채소, 생선, 과일류 등만 따로 작성하는 신선식품 지수라고 전하고 있다.

물가가동계

②

朱泰燮 통계청 유통물가과장

물가조사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는 더욱 다양하다. 예컨대 언론정보만 하더라도 각자색의 기성복은 물론 맞춤양복 접마다 품질과 가격이 다르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보면 언론정보 관련구분이면 몇백만가지의 상품이 있을테니 쉽



계 예상할 수 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통

만 9천 8백 60개, 학교·화원 등 사회서비스업체가 15만 7천 4백 96개, 영화관·도서관·블링장 등 오락·및 문화예술행사 서비스업체가 8만 4천 8백 97개, 목욕탕·이발소·자동차수리센터 등 개인서비스업체가 18만

입장에서 볼 때 각각가 정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 규모가 다르다. 각 가정의 수입이 다르고 또 가족의 수도 다르다. 30대 가구주의 가정과 50대 가구주의 가정의 지출내용이 같을 수는 없

을 수 없고 또 자녀가 1명인 가정과 자녀가 3명인 가정이 같을 수 없다. 거기다 모든 물건의 가격은 항상 변화한다. 이런것을 감안하여 하나의 물가지수로 작성하는 것이다. 물가는

으므로 생활에 참고할 물가통계를 한번쯤 살펴적이거나 배워들 일이다. 모든 사람들은 수입이 많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무리 수입이 늘어나도 물가가 그만큼 오르면 실질적으로 생활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商品도 업소마다 가격 千差萬別 家計비중 큰 일부품목 선정 指數化

계청이 조사한 총사업체 조사결과를 보면 소매점이 71만 6천 7백 90개, 음식점이 33만 7천 6백 12개, 숙박업이 2

3천 6백 86개나 된다. 각 업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일 경우는 반영한다. 그런가하면 소비자

다. 예컨대 학교 등록금의 인상이 30대 가정에서 느끼는 바와 50대가 정에서 느끼는 바가 같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중에서 한 상 1번이다. 관심이 높을수록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

물가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물가지수 품목은 몇개나 되는가, 지수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가, 지수물가와 피부물가가 왜 다른가 등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다음 회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물가통계

③

朱泰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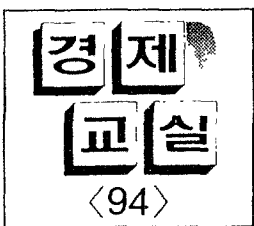
통계청 유통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여러가지

서보면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열심히 저축하는 20대 신혼가정과 취학자녀가 많은 40대 중년가정 그리고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노부부만 다출하사는 60대 가정의 가계비지출 내용이 같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품목 또는 형태의 가정을 대상으로 통계의 중점을 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파트관리비 0.35%, 고무장갑 0.03% 등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요긴하고 자주 구입하는 품목들의 평균지출액과 그 구성비를 살펴하는데 그 품목및요금의 종류는 4백70개이다.

37년부터 32대도시 生必需品값 조사



오르면서 사람들의 열심한 생활의욕을 상심하게 되고 더욱이 수입이 몰가 상승에도 못 미친다면 근로의욕은 커녕 오히려 사회의 비능률만 가질 수 있다.

상품들의 가격 또는 요금들이 모두 같은 날에 오르거나 지도 같으며 또 오르는 비율이 같을 것이 아니라 어떤 품목은 30%, 또 어떤 것은 5% 오르는가 하면 그 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인가. 또 기업은 어떤 가정용 가전구동자를 대상으로 인민의 인건수준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당면하게 된다.

이 4백70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전부 32개 도시에서 현재에 세번씩 물건값의 변동상을 조사한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937년 京城商工會議所에서 작성한「全鮮商議小賣物價指數」가 그 시초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왜 작성하는 것일까. 물가 또는 개별품목의 가격은 매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정부는 소비자 지인 또는 기업인들 가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물가가 오르면 저마음 수입도 늘면 별로 손해보는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물가가

또한 소비자의 측면에

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가구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기법이다.

이 4백70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전부 32개 도시에서 현재에 세번씩 물건값의 변동상을 조사한다.

물가통계

④

朱泰 變 통계청 유물경제과장

정상가격을 원천으로 하며 소위 세일 가격 조사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 류의 경우 계절적요인은

물가지수는 기본적으로 있어서 말한 개별품목의 구성비(가중치)에 그 품목의 가격변동률을 곱해서 산출되지만 물가 조사과정에서 까다롭고 복잡하다.

첫째, 같은 물건이라도 그 품종에 따라서 가격이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과, 수박, 생선류와 같은 것은



크기에 따라 값이 다를 데 조사하기 규정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을 조사기준품목으로 하고 있다. 사과는 8품종, 수박은 10품종, 고추는 30 품종으로 대표된다.

없으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셋째, 동산품의 경우 그 품종규격이 수시로

調査대상품목 대표규격 미리지정 값변동폭에 加重値 곱해 指數산출

바뀐다. 예를 들면 1백 80종 1백종이던 면직물을 100종으로 바꾸고 1백 75%에 5%를 더하면 1백 75%가 된다. 75% 증가하였으므로 가격인정률 14.3%로 기록된다. 넷째, 상품의 가격인

정상가격은도 판매자가 임의기준이 경과하면 정상가격을 불리하게 하지 않고 30% 또는 심하면 8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격의 정상가격으로 보지 않는다. 다섯째, 가격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도시내에서도 한 품목에 대해서 지정된 점포 2~10개소에서 조사하며 이를 평균하여 기록한다. 다만 지정된 점포에 조사대상품목이 없을 경우 인근 점포에서 통계청규격의 불동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섯째, 시장가격의 조사는 통계청 소속과와 원인 전문조사원들이 담당하며 조사한 후 현지 전산기에 입력하면 서울에 있는 통계청의 중앙 전산기에서 자동이력계산되어 공표된다. 소비자를 가지는 이 형태 조사된 상품가격은 도시민이 부담하는 물가가 체비로서 차지하는 구성비(가중치)를 곱해서 산출되며 가격 조사의 금면용이 있는 품목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 평균 물가변동률이 된다.

물가가통계

<6. 끝>

朱泰燮 통계청 유통통계과장

물가지수와 피부물가사
이에 차이를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실례
를 들어보자.

구하고 물가지수로는 7개
월동안 4.1%밖에 오른
지 않았다. 우리의 가계비
를 모두 이런 상품들에 지
출한다면 지수물가도 이와
느끼면 보다 적게 나타난다.

가정과 생활비를 모두 하지
않고 가정의 느낌이 같을
수 없고 취미자녀의 유무
에 따라 수입도 인상에 대
한 느낌이 다르다. 병원의
분담비가 인상되었을 경우
그 느낌이 가장 크다. 다들
것이다.

【실례2】 기술이 발달할 수
루 시장에는 새로운 상품이
들이 많이 나온다. 가전도
오른다. 그러나 물가조사
는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
한 기준을 정해 놓아야

오른 것만 기억하지 그대
신 편리함을 얻는 것에 대
해서는 기억을 못하는 경
우가 많다.

【실례3】 피부물가를 가장
실감나게 느끼는 계층은
주부들일 것이다. 주부들
이 주로 구매하는 농수산
물은 가격변동이 잦은 품
목인데 가격이 오른 품목
은 오래 기억하는데 비하
여 내린 품목은 별다른 의식
하지 못한다. 예컨대 부

관대하다.

【실례4】 또한 아파트 가
격과 땅값의 등락, 주식시
세의 등락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직접 관련이 없으
나 소비자의 물가 인식을
실리에는 큰 영향을 준다.
이와같이 피부물가는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
렵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
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하
다. 신선식품지수, 구입
빈도별지수, 기본생활품
지수 등과 같은 것들이 모
두 보완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다.

경제교실

<97>

「기본생必需品」등 보완지표 활용 통계청數値「피부」차이 줄여야

【실례1】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하철도 요금이 20
%, 시내버스 요금이 20%, 전
무대화 수료료 20%, 공중
전화료는 50% 등 예외 무부
류·품이 모두 올랐음에도 물
가 지수 상승률이 낮아

구체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겠
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들
외에도 전기요금이나 유류
상품들과 같이 가격변동이
전혀 없거나 전기제품과
같이 가격변동이 미미한
품목·또는 삼자·수박같이

같은 기간에 수입외고기
마이너스 16%, 잡차 마이
너스 17%, 고추 마이너스
14% 하락한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덜 민감한 편
이다. 휘발유 가격이 올랐
음. 정유 수급차를 보완한

해서 품가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조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동신이 자동
식으로 바뀌어 가격이 5
% 올랐다면 이것은 물가인
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물인 차액
계산에 대해서도 비교적

배추·사과·배·생선류 등
과같이 자주 구입하는 품
목에 대해서는 점(점) 가격
변동에도 민감하다. TV.
냉장고·세탁기 등과 같이
자주 사지 않는 품목의 가
격변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런나 소비자물론 하여
금 신분이나 TV에 보듯
되는 물가지수를 실용적으
로 분석해 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유도해 가는 여러
운 것이 통계청의 고충
이다.

大都市 집중속 「농촌」 75萬

統計로 본 작년 人口 이동

두 대도시 광역화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를 많이 한다. 농촌은 그만큼 사회생활이나 주택 부흥에도 불응하여 인구가 이어나가지 못하여 75萬이 감소한 것이다. 서울과 부산의 인구가 90만 2천 명으로 증가한 반면 농촌 인구는 75萬 9천 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기록했으나 부가가 합계된 91년은 20.6%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낮아졌다. 전국의 인구가 4천 7백 20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농촌 인구는 28.5%로 감소한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20.6%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낮아졌다. 전국의 인구가 4천 7백 20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농촌 인구는 28.5%로 감소한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20.6%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낮아졌다. 전국의 인구가 4천 7백 20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농촌 인구는 28.5%로 감소한 것이다.

市道간 이사 2百86萬명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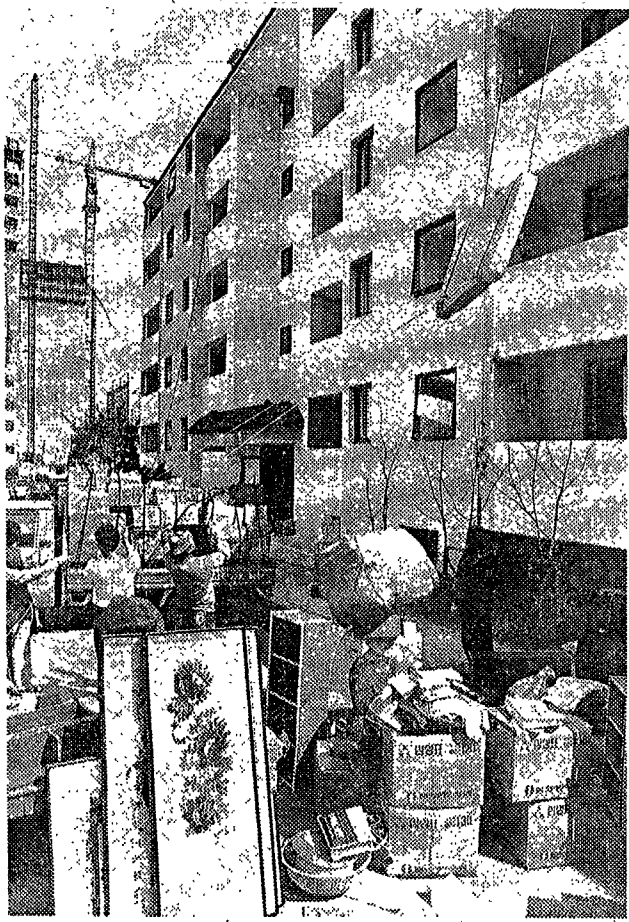
光州이 농촌을 35.8%

그러나 최근 몇년간의 추세를 보면 인구의 차출감소와 고령화현상도 일부 있다.

이 95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2만 86만 명으로 0.3% 증가했다.

서울이었다. 한편 신도시 아파트 입주 가 시작돼 서울이 일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서울이었다. 한편 신도시 아파트 입주 가 시작돼 서울이 일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서울과 부산의 인구 전입은 둔화추세이지만 신도시 및 인근도시 전입 인구는 크게 증가, 대도시의 광역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연간 1.1% 증가했다. 인구증가의 과반수인 5.1%는 시(市)인구증가인 1.1%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시(市)인구증가의 77%인 6만 9,500명이 증가했다.

최고

35.0%에 이르렀다. 이들 지역은 지역내 인구가 13.5~20.4%나 됐다. 이 지역은 통계청 관계자들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서울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의 인구가 13.5%나 증가했다. 서울지역의 인구가 13.5%나 증가했다. 서울지역의 인구가 13.5%나 증가했다.

(단위 : 명, %)

	전 입 인 원				전 출 인 원			
	91년	92년	증감인원	증감률	91년	92년	증감인원	증감률
전	2,957,842	2,859,760	-98,082	-3.3	2,957,842	2,859,760	-98,082	-3.3
수도권	673,187	630,859	-42,328	-6.3	710,066	735,743	25,677	3.6
서울	170,591	158,256	-12,335	-7.2	206,199	210,251	4,112	2.0
경기	136,226	126,451	-9,775	-7.2	133,762	125,775	-7,987	-6.0
충청	214,021	198,946	-15,075	-7.0	133,623	139,565	5,942	4.4
강원	118,443	102,297	-16,146	-13.6	82,406	80,760	-1,646	-2.0
호남	104,827	92,580	-12,247	-11.7	68,212	68,450	238	0.3
제주	663,011	697,998	34,987	5.3	485,949	483,127	-2,822	-0.6
부산	78,874	79,016	142	0.4	116,704	103,861	-12,843	-11.0
대구	85,848	85,287	-561	-0.7	96,979	85,259	-11,720	-12.1
대전	107,913	104,251	-3,662	-3.4	153,357	132,541	-20,816	-13.6
충남	79,909	78,604	-1,305	-1.6	122,207	109,365	-12,842	-10.5
충북	124,053	117,083	-6,970	-5.6	224,623	193,616	-31,007	-13.8
전남	164,861	157,984	-6,877	-4.2	212,169	187,816	-24,353	-11.5
전북	214,904	209,699	-5,205	-2.4	193,048	184,887	-8,161	-4.2
경남	21,374	20,449	-925	-4.3	18,598	18,744	146	0.8

(자료 : 통계청)

93. 8. 4

작년 人口이동이 뜻하는 것

서울사람이 서울과, 서울이 91년에 이어 지속돼 왔사람의 정거는 서울 고 있다. 다른 市道의 전출수의 평균 지역은 전 정거다.

서울의 인구이동은 1988년(83.0%)에 비해 서울로 전출한 인구 증가세가 1989년(84.0%)에 비해 5%포인트 증가한 5만 5천 1백 10명(84.0%)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전출한 인구는 1988년 1만 705명에서 1989년 2만 4,812명으로 45.5%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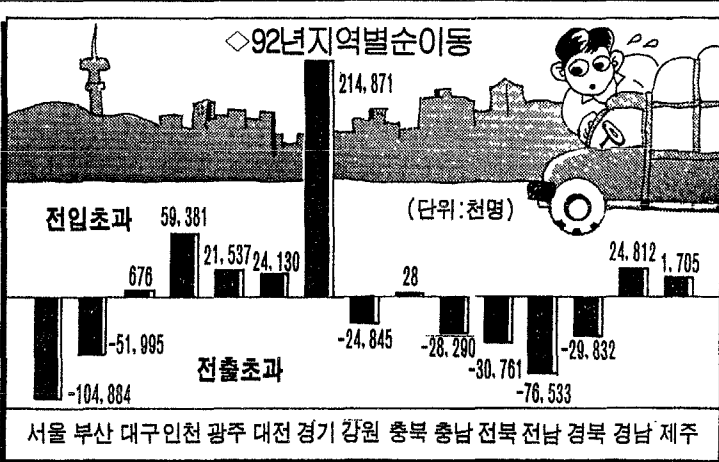
이로써 서울의 인구는 1988년 10만 5천 명에 비해 1989년 11만 5천 명으로 10% 증가했다. 서울로 전출한 인구는 전 인구의 11.1%에 달한다. 서울로 전출한 인구의 30%가량이 수도권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는 1988년 1,100만 명에서 1989년 1,150만 명으로 4.5%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전 인구의 11.1%에 달한다.

전출초과(10만 5천명)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다른 시도에선 서울로 전출한 인구가 서울로 전출한 인구의 75.5%인 18만 명에 불과하다. 서울로 전출한 인구의 10%가량이 수도권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는 1988년 1,100만 명에서 1989년 1,150만 명으로 4.5%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전 인구의 11.1%에 달한다.

佛念空 “政策” 集中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는 1988년 1,100만 명에서 1989년 1,150만 명으로 4.5%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전 인구의 11.1%에 달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는 1988년 1,100만 명에서 1989년 1,150만 명으로 4.5%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전 인구의 11.1%에 달한다.

농촌선 서울로, 서울선 京畿로 전체 인구 5명중 1명꼴 이사

교통증·지역간 불균형 등 副作用 커져

이로써 서울의 인구는 1988년 10만 5천 명에 비해 1989년 11만 5천 명으로 10% 증가했다. 서울로 전출한 인구는 전 인구의 11.1%에 달한다. 서울로 전출한 인구의 30%가량이 수도권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는 1988년 1,100만 명에서 1989년 1,150만 명으로 4.5%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전 인구의 11.1%에 달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는 1988년 1,100만 명에서 1989년 1,150만 명으로 4.5%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전 인구의 11.1%에 달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인구는 1988년 1,100만 명에서 1989년 1,150만 명으로 4.5%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전 인구의 11.1%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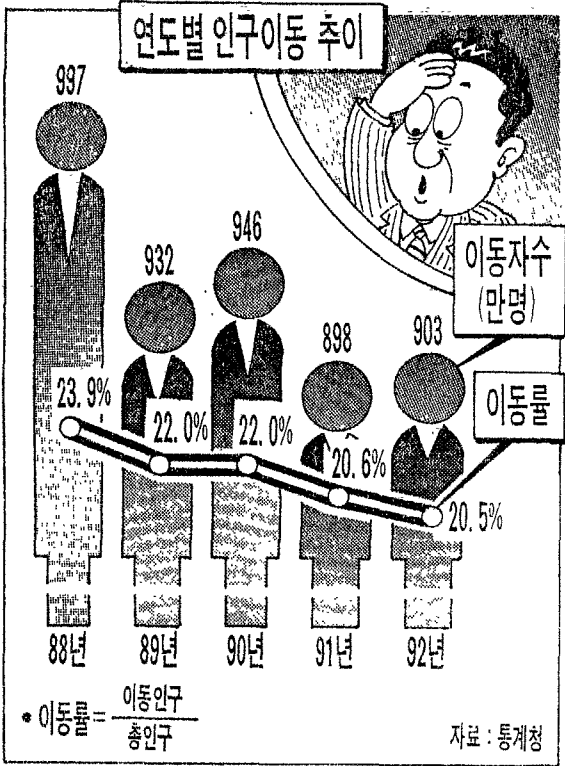
住居불안정이 人口이동 主因

통계청, 작년 한해 집계·분석

우리나라가 日本·臺灣에
주요국의 비해 人口이동의
패턴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의 불안전성이 주요 원인이
지난 해 우리나라 人口이
동 비율 20.5%를 기록한
것은 1970년 20.9%보다 낮
아졌지만 日本과 臺灣의 9.
2%와 7.1%의 평균(1970
년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신
규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
고 있어 전국의 人口이동
패턴을 보면 서울·인천·경
기지역의 人口이동 비중이
전국 人口이동의 68.3%인
6백1만5천명에 달한다. 한
편 수도권 전체를 보면 1970
년 기준 12.8%를 기록한
것은 1988년 26.8%로 14
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 전역의 人口이동
패턴을 보면 서울·인천·경
기지역의 人口이동 비중이
전국 人口이동의 68.3%인
6백1만5천명에 달한다. 한
편 수도권 전체를 보면 1970
년 기준 12.8%를 기록한
것은 1988년 26.8%로 14
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 轉入者의 前거주지 분포

(단위: 명)

	수도권	구성비	서울	구성비
계	613,283	100.0	331,922	100.0
釜山	50,455	8.2	29,619	8.9
大邱	27,502	4.5	16,451	5.0
光州	28,576	4.7	17,489	5.3
大田	26,896	4.4	14,576	4.4
江原	68,548	11.2	31,842	9.6
忠北	49,034	8.0	24,072	7.3
忠南	80,058	13.1	36,934	11.1
全北	73,202	11.9	42,451	12.8
全南	92,595	15.1	53,855	16.2
慶北	55,804	9.1	30,531	9.2
慶南	51,282	8.4	28,314	8.5
濟州	9,341	1.5	5,788	1.7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

수도권 전역의 人口이동
패턴을 보면 서울·인천·경
기지역의 人口이동 비중이
전국 人口이동의 68.3%인
6백1만5천명에 달한다. 한
편 수도권 전체를 보면 1970
년 기준 12.8%를 기록한
것은 1988년 26.8%로 14
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 전역의 人口이동
패턴을 보면 서울·인천·경
기지역의 人口이동 비중이
전국 人口이동의 68.3%인
6백1만5천명에 달한다. 한
편 수도권 전체를 보면 1970
년 기준 12.8%를 기록한
것은 1988년 26.8%로 14
배 이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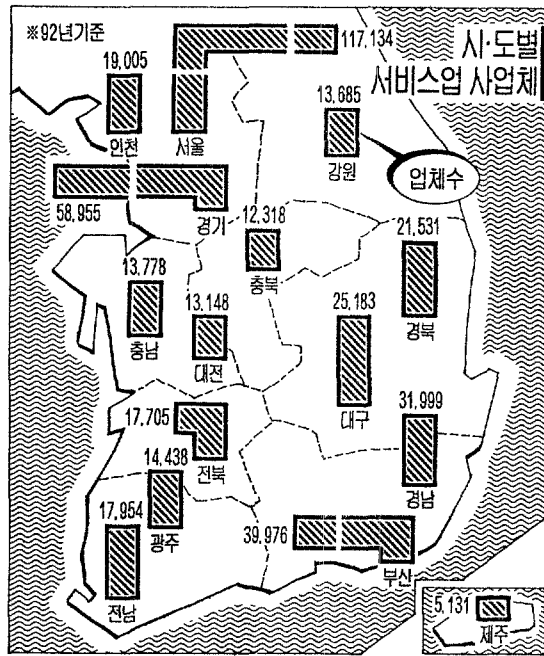
日·臺灣의 人口이동

수도권 전역의 人口이동
패턴을 보면 서울·인천·경
기지역의 人口이동 비중이
전국 人口이동의 68.3%인
6백1만5천명에 달한다. 한
편 수도권 전체를 보면 1970
년 기준 12.8%를 기록한
것은 1988년 26.8%로 14
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 전역의 人口이동
패턴을 보면 서울·인천·경
기지역의 人口이동 비중이
전국 人口이동의 68.3%인
6백1만5천명에 달한다. 한
편 수도권 전체를 보면 1970
년 기준 12.8%를 기록한
것은 1988년 26.8%로 14
배 이상 증가했다.

서비스업체 86% '구멍가게' 수준

통계청 92년 조사 36만곳이 종업원 1~4인



우리나라의 부동산업대
업·보육서비스업·보건업등
서비스업사업체는 규모가
커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종업원이 1~4명인 사업
체가 전체의 86%를 차지
하고 있다. 특히 세탁
소·이발관·예식업·유류업·
구두단 등 기타 공공사
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4
명 이하의 소규모사업체가
대형업체다.

1년간 종사자 9%·업체 2% 늘어

10일 통계청의 발표한
92년 서비스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
월 1일 현재 전국 서비스
사업 통계조사대상업체의
사업체수는 91년과 비해
2.1% 늘어난 42만 2천
개이고 종사자수는 1백 97
만 6천 명으로 9.2%가
증가했다.

이들 업체의 91년 1년
간의 총수입액은 42조 6천
8백 80억원(부동산업업종
별 경우 37조 1천 500억원)으로
90년에 비해 23.6%가 늘
었다.

91년 대비 업종별 사업
체수의 증가율은 컴퓨터
보급의 확대추세를 반영
한 컴퓨터업(90년 1만 7
7%로 가장 높다) 기계장
비 및 소비용품업(91년 2
억 4천 9백 60억 원) 서비스
업(91년 10억 1천 700억 원)을
통계청 趙秉甲 통계조사
국장(91년 서비스업의
수입액을 90년과 비교해 보
면 50%이상 규모가 가장
높은 증가율 35.2%를
보였고, 도매업이 10.49%
(18.6%의 수입도 증
사자 규모가 늘수록 증가율
이 높았다)면서, 그러나
종업원이 1~4명인 사업
체가 전체의 86%인 현상
을 볼 때 전년도와 86.7%로
다들 낮아진 아전노부리
의 서비스업은 업종선택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분석
했다.

(鄭鍾錫 기자)

서비스업

好況속 영세성 여전

통계청 「92년 조사」 발표

그러나 종사자 1인사업체가 전체의 45.4%, 2인사업체는 40.6%에 이르러 서비스업체의 86%가 구멍가게 수준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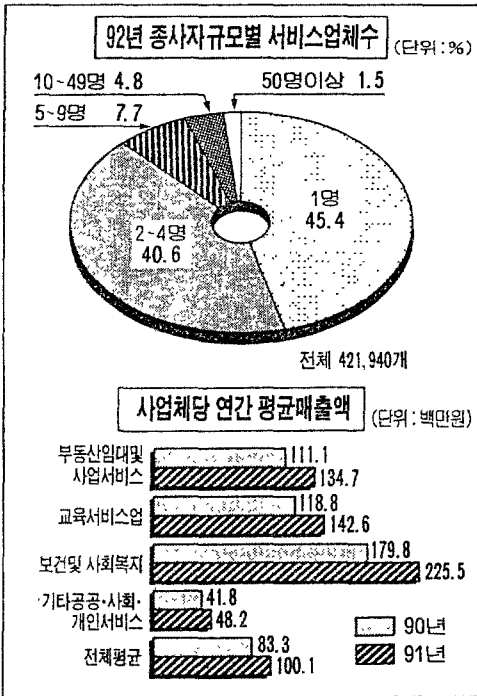
57월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91년 한해 동안의 총수입액(총매출액)은 42조 6천 8백 8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6% 증가했다. 제조업의 종사자수가 매년 늘면서 줄어듦에 따라 92년 3.4% 감소(경기 또한 부진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과 무척 대조적이다.

신장했다. 이밖에 20% 이상인 매출액 비중을 보인 업종은 ▲정기화물 및 집류터운(35.1%) ▲건설 및 개발업(48.5%) ▲연두 및 사업관련 서비스(29.8%) ▲토건 및 사회봉사사업(26.7%) ▲회생 및 유사서비스(38.8%) ▲유통 및 운수업 관련

4천 2백 60만원, 부동산업 대 및 사업서비스가 1억 3천 4백 70만원, 기타운송사업서비스가 4천 8백 20만원 등이다. 사업체수(92년)에 있어서는 부동산업이 5만 1천 1백 33개로 전년대비 2.9% 줄어 들었다. 반면 정 보처리 및 컴퓨터업 관련

제조업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호황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중에서도 부동산경기의 퇴조에 따라 부동산 관련 사업체는 줄어 들고 있는 대신 컴퓨터 보급의 확대추세를 반영하여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매출 42兆 : 1년새 23.6% 늘어



인건비 부담 덜자 " 1인업체 45%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92년 서비스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현재 전국의 서비스업 사업체수는 전년도에 비해 2.1% 증가한 42만 1천 9백 40개, 종사자수는 9.2% 늘어난 1백 97만 5천 8백

서비스업종별 연간 총수입액(91년 기준)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 운송업(35.1%)과 운송서비스업(38.8%)이 2천 5백 5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서비스가 1억

서비스업(29.9%) 등이 1억 1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2% 늘었다. 업종별로는 화물 운송업(35.1%)과 운송서비스업(38.8%)이 2천 5백 5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서비스가 1억

업은 3만 7천 4백 95개로 7.7% 늘었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업(6.9%), 오락 문화 및 유흥 관련 서비스(5.9%), 위생 및 기타 서비스(5.3%) 등의 사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情報·컴퓨터 관련 종사자수 급증... 부동산업은 퇴조

종사자수(92년)의 업종별 증가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이 17.5%로 가장 높았다. 또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15.5%), 교육서비스(12.2%), 오락 문화·유흥·관련 서비스(14.7%) 등도 종사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부동산업은 2.9% 감소했다. 종사자 규모별 현황을 보면 종사자가 1명뿐인 사업체가 19만 1천 4백 73개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다. 주인 혼자서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전년 대비 4.3%)가 늘었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종업원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종사자수가 2~4명인 사업체는 전체의 40.6%인 17만 1천 2백 23개인데 전년에 비해 2.1% 감소했다. 5~9명의 사업체는 7.7%, 반면 50명의 이상의 기업별 서비스업체는 6천 2백 86개로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10~49명 사업체는 4.8%밖에 안 된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및 無給가족종사자의 상승추세가 각각 23.1%, 68.9%이고 기타 종사자가 8.0%이다.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개인기업의 90.4%에 달하고 있고 회사법인인 1.7%(주식회사 1.6%), 기타 7.9%이다.

【李百禧기자】

開放앞둔

서비스業

5人미만 영세업체 전체의 86%

統計廳 92년분 조사 발표

서비스업의 확대는 경제발전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확대는 단순히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을 이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1991년 33.1%에서 1992년 33.8%로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액은 1991년 44.4조 원에서 1992년 45.4조 원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생산액이 증가한 것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을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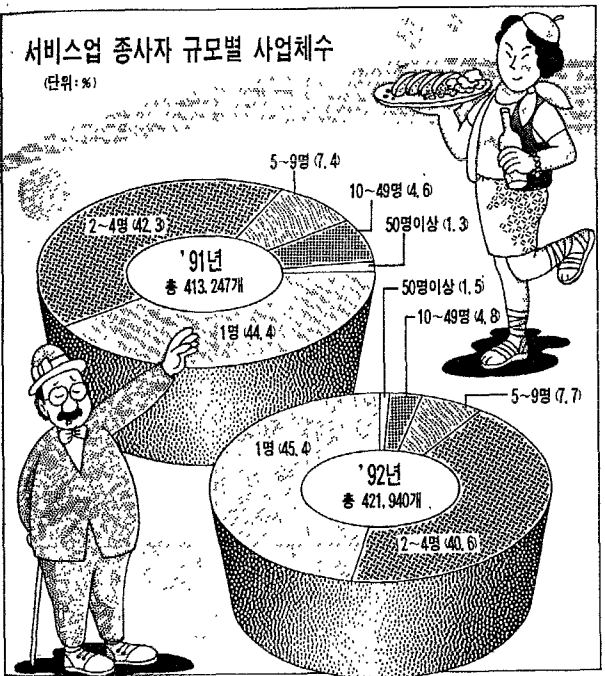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생산액은 1991년 44.4조 원에서 1992년 45.4조 원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생산액이 증가한 것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을 이끈다.

전체종사자 前年比 9.2% 늘어

컴퓨터 운영·情報처리 등 高부가부문 신장

不動産 중개·임대·관리업체는 크게 위축

10년 통계청의 발표한 '92년 서비스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종사자는 92만 2천 1백 42명에서 99만 4천 0백 4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인구의 1.7%에서 1.8%로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확대는 경제발전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확대는 단순히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을 이끈다.

93. 8. 11

같이만 생각했어야 11.0%를
그대로이다. 또 다른 오지않아야
사회의 불행과 불행의 불행은
모든 사람이 1원이라도 수확을
얻지 못하면 같이만 생각되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같이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아서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같이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아서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같이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아서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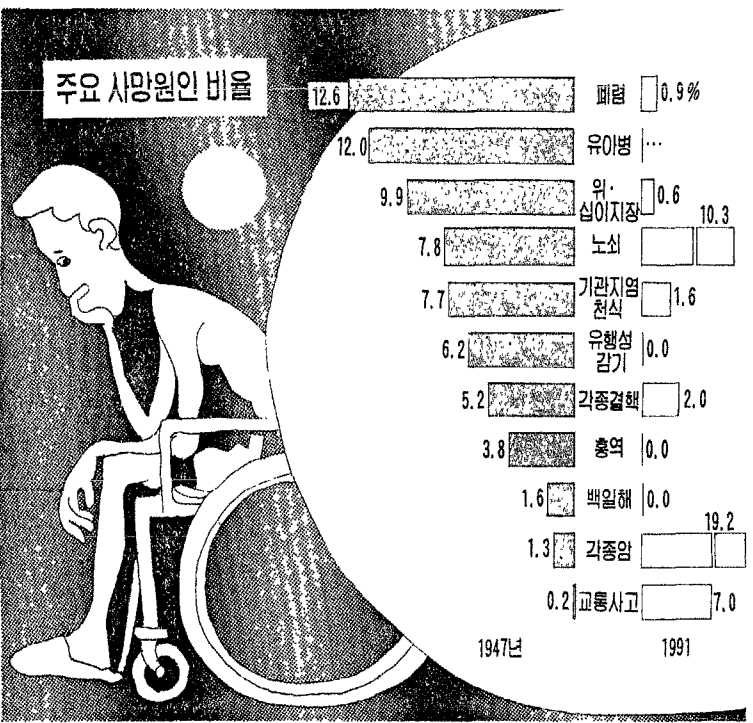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불행의 불행이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불행이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불행이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불행이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불행이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불행이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불행이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불행이다.

8명에 한명씩

4萬·自動車 7千臺

勞組가 임금을 오히려 뒷걸음



< 그림 — 張甲鎭 · 金龍吉 기자 >

수확을 못하면 안된다. 만약 불행하면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된다. 불행
의 불행이다.

중요한 것은 같이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아서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불행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다.

근하임 19% 떨어

자영업자 (비제조업자)의 임금
45만 4천 원에서 37만 8천 원으로
7.6% 떨어졌다. 제조업자(공
업)의 임금은 55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12.7% 떨어졌다.

◇사회평균 = 평균임금 (40
44만 원)은 37만 8천 원으로 0.4%
떨어졌다. 이는 1991년 1.
2%의 하락을 보였다.

가계소득 = 가계소득은 48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8.3% 하락했다. 전
부 4만 8천 8백 원으로 15만
7천 원의 가계소득은 3만 9천
원까지 떨어졌다. 4만 7천
원도 4만 원으로 14.3% 떨어
졌다. 4만 원은 3만 7천 원으로
5.0% 하락했다.

◇주요 직업별 임금 변화
19.
8%였다. 평균임금과 크게 달
라진 직업은 교사, 간호사, 법
률가, 의사, 엔지니어, 연구·사
기, 운전사, 안전관리, 판매 등
이다.

◇주요 직업별 임금 변화
19.
8%였다. 평균임금과 크게 달
라진 직업은 교사, 간호사, 법
률가, 의사, 엔지니어, 연구·사
기, 운전사, 안전관리, 판매 등
이다.

통계로 본 光復전후 경제·사회상

광복 전후인 47년 1월 말 인구는 4,7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40년 만에 400만 명이 증가했다.

40년 1월 말의 인구는 4,2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100만 명이 감소했다. 이는 42년 1월 말의 인구가 4,300만 명이었으나 40년 1월 말에는 4,20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42년 1월 말의 인구가 4,300만 명이었으나 40년 1월 말에는 4,20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47년 1월 말의 인구는 4,7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40년 만에 400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42년 1월 말의 인구가 4,300만 명이었으나 40년 1월 말에는 4,20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47년 1월 말의 인구는 4,7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40년 만에 400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42년 1월 말의 인구가 4,300만 명이었으나 40년 1월 말에는 4,20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서울인구 99萬...현재의 9%

북한의 인구가 47년 1월 말에는 4,7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40년 만에 400만 명이 증가했다.

40년 1월 말의 인구는 4,2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100만 명이 감소했다. 이는 42년 1월 말의 인구가 4,300만 명이었으나 40년 1월 말에는 4,20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47년 1월 말의 인구는 4,7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40년 만에 400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42년 1월 말의 인구가 4,300만 명이었으나 40년 1월 말에는 4,20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47년 1월 말의 인구는 4,7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40년 만에 400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42년 1월 말의 인구가 4,300만 명이었으나 40년 1월 말에는 4,20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1천97만 명의 인구가 9.0%의 인구를 차지했다.

이 중 남자는 1,040만 명, 여자는 930만 명으로 남자가 53.2%, 여자가 46.8%를 차지했다.

44년 1월 말의 인구는 4,2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100만 명이 감소했다.

47년 1월 말의 인구는 4,7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40년 만에 400만 명이 증가했다.

南北인구 2천

女工월급보리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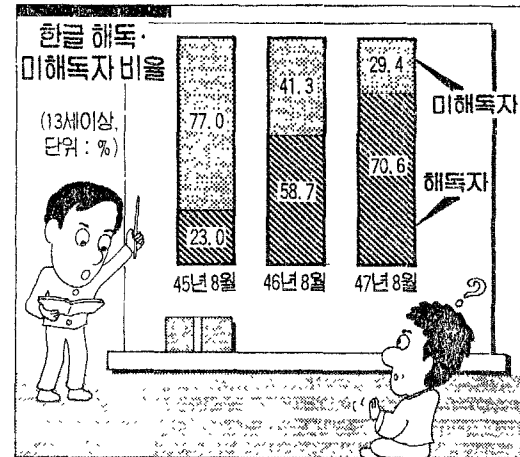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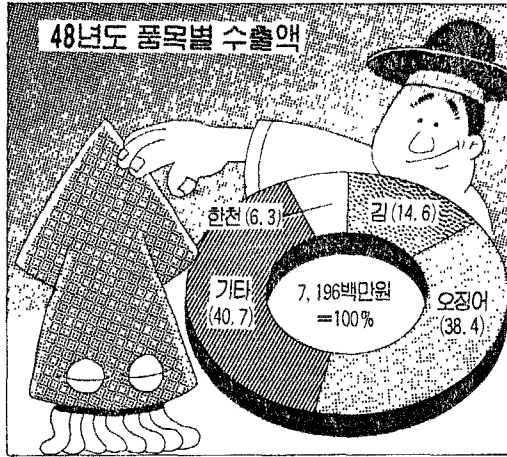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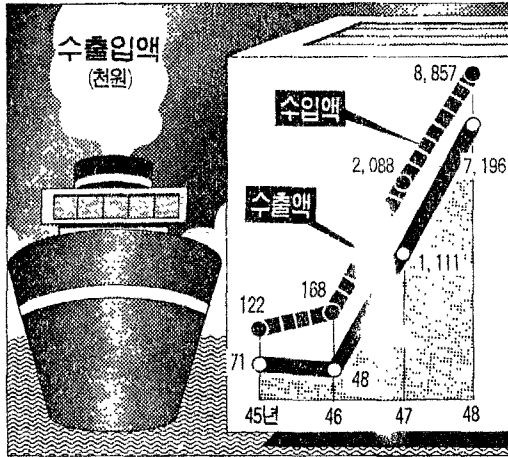
48년 수출 1천萬

48년 1월 말의 인구는 4,7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40년 만에 400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42년 1월 말의 인구가 4,300만 명이었으나 40년 1월 말에는 4,20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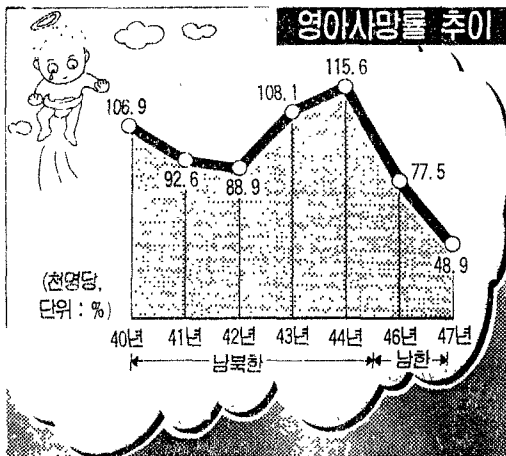
47년 1월 말의 인구는 4,7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40년 만에 400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42년 1월 말의 인구가 4,300만 명이었으나 40년 1월 말에는 4,20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47년 1월 말의 인구는 4,7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40년 만에 400만 명이 증가했다.

47년 1월 말의 인구는 4,700만 명으로 42년 1월 말인 4,300만 명에 비해 40년 만에 400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42년 1월 말의 인구가 4,300만 명이었으나 40년 1월 말에는 4,200만 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광복당시 평균수명 44세 · 문맹률 77%



을 깨우치지 못한 문맹자가 77% 수준이었으며, 취업자중 80%가 농업·임업에 종사한 것으로 집계했다. 한살 미만 맹우사망률은 인구 1천명당 1백24명으로 세계 2위였으며, 실업자는 1백50만명에 이르러 실업률이 20%를 넘었다. 서울(京城府) 인구는 98만9천명으로 시구의 9% 수준이었고, 사망자의 12%가 폐렴으로 사망했다.

48년 당시 서울 최고기온은 3백원, 최저기온은 20원, 한달에 1천8백40원, 최고기온은 6백9원, 최저기온은 2백28원, 여자고무신 한 켤레 2백40원, 금 1돈중 5천7백50원, 달걀 19개 한우라미 2백48원수준이었다. 당시 직업별월급은 회사원이 9천

44년 ~ 48년 서울인구 98

농림업 종사 80%
 을 해는 광복48년이 되는 해. 1945년 광복을 전후한 시기(44~48년) 한 국민의 자화상(自画像)을 통계청이 다양한 숫자로 재현했다.
 통계청은 12일 발표한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상」에서, 45년 광복 당시 한국의 평균수명은 44세에 불과했고, 한글

통계로 본
 「光復 전후」

통계로 본 解放 이후 사회 변화

지난 45년 해방 당시 남한 인구는 1천6백87만 명 이던데 7월 14일 4백50만 명의 38.3%로 줄고 서울 인구는 44년 98만 천 명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남한 인구는 1천6백87만 명 이던데 7월 14일 4백50만 명의 38.3%로 줄고 서울 인구는 44년 98만 천 명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남한 인구는 1천6백87만 명 이던데 7월 14일 4백50만 명의 38.3%로 줄고 서울 인구는 44년 98만 천 명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남한 인구는 1천6백87만 명 이던데 7월 14일 4백50만 명의 38.3%로 줄고 서울 인구는 44년 98만 천 명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남한 인구는 1천6백87만 명 이던데 7월 14일 4백50만 명의 38.3%로 줄고 서울 인구는 44년 98만 천 명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남한 인구는 1천6백87만 명 이던데 7월 14일 4백50만 명의 38.3%로 줄고 서울 인구는 44년 98만 천 명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서울인구 48년간 11배 늘었다

평균수명 27세 연장

48년 직종별 임금 木手が 1위
44년 15세 이상 81%가 無學歷

광복이후 사회 변화

남한인구	45년말 16,873,277명 93년7.1 44,056,087명
서울인구	44년5.1 988,537명 92년말 10,969,862명
평균수명	38~42년 43.8세 90년 71.3세
총수출	48년 14,392천달러 92년 76,631,515천달러
쌀생산량	47년 13,850천섬 92년 37,023천섬
승용차	48년말 3,600대 93년4월 3,713,400대

註: 각 통계수치는 남한통일 (자료: 통계청)

38~42년 43.8세로서 90년 71.3세로 크게 연장되었다. 1927년 5세나 연장되었다. 1945년 해방 당시 남한 인구는 1천6백87만 명 이던데 7월 14일 4백50만 명의 38.3%로 줄고 서울 인구는 44년 98만 천 명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남한 인구는 1천6백87만 명 이던데 7월 14일 4백50만 명의 38.3%로 줄고 서울 인구는 44년 98만 천 명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許承虎)

주취학자 77% 90년의 8.9 배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주취학자(酒癮者)의 증가는 90년 77%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해 8.9배나 됐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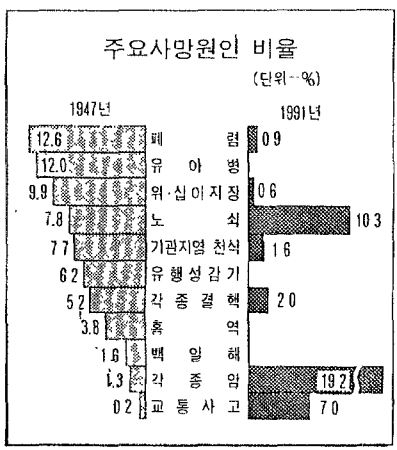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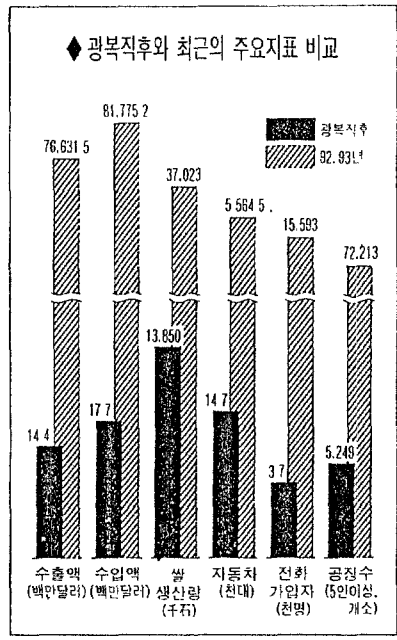
주취학자(酒癮者)의 증가는 90년 77%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주취학자(酒癮者)의 증가는 90년 77%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통계로 본 光復전후 경제·사회상

◇ 광복전후와 최근 경제·사회 현황 비교

구분	광복전후	최근
인구(천명)	16,873	44,056(93년)
경제활동인구(%)	65.6	60.9(92년)
고용률(%)	11.3	2.4()
전국도로(관수·개교)	32	626()
발전량(백만KWH)	479	130,963()
인구자연증가율(%)	1.68	1.09(91년)
인구사망률(%)	10.24	1.28()
인시인당 인구(명)	4,671	951()
인시인당 인구(명)	2,065	1,702()



소비자물가 5년간 278 배 뛰어

평균수명 44세, 영아사망률 세계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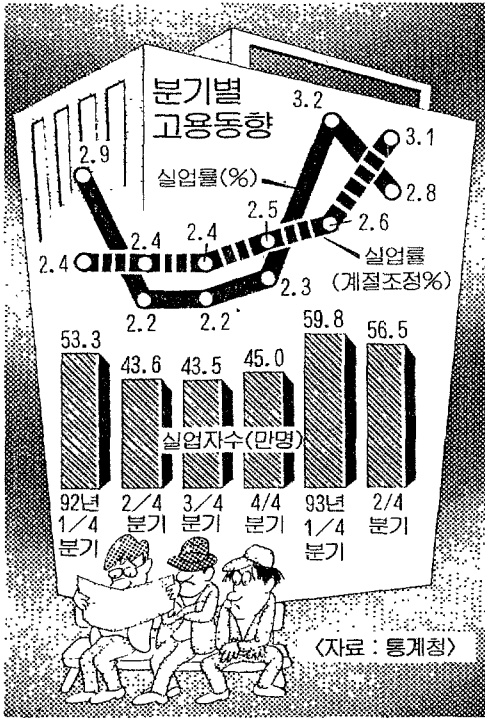
南韓인구 1천 687만명, 서울 1백만명

주취학자(酒癮者)의 증가는 90년 77%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주취학자(酒癮者)의 증가는 90년 77%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이는 90년 1.1배로 증가했다.

56백만명... 하달 목표... 취업자를 끌어

실업률 3.1%... 87년후 최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첫 2千萬명 돌파 서비스업 취업비중 60%로 늘어

통계청 「2분기 고용동향」 발표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가운데 2·4분기(4~6월) 실업률이 3.1%(계절조정치)에 이르러 지난 87년 2·4분기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 기록했다. 화보의 높은 수주, 연방이 북미지역 대도시 및 주류 실

업률이 높았으며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업 등이 큰바 3차산업의 고용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전국의 경제활동인구는 2천4백21만 명, 평균 실업자수는 56만5천 명으로 전

2.8%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해마다 2·4분기에는 취업연건이 좋은 계절적요 인까지 감안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3.1%로 지난 87년 2·4분기의 3.3%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이다.

2천4백2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1~3월)의 경제활동인구는 1천8백81만5천 명으로 경

제활동인구가 2천만 명을 넘은 것도 2·4분기가 처음이다. 화력발전은 전문대졸이

상의 실업률이 4.4%로 고졸(3.6%) 및 중졸이하(1.3%)보다 월등히 높았고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의 실업률이 10.8%를 기록하는 등 나이가 어릴수록 실업률이 높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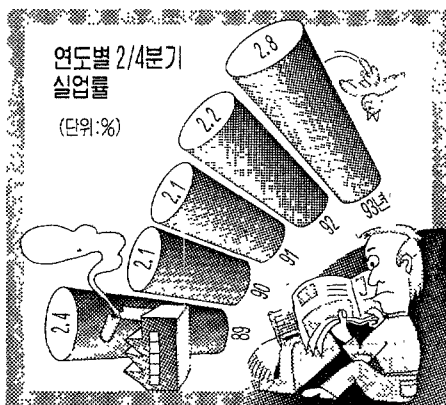
실업자 중 남자는 38만3천명, 여자는 18만2천명으로 남성이 전체 실업자의 67.8%를 차지했다. 작년 2·4분기의 남자 실업자 비율은 63.8%로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광공업의 취업자수가 전체 취업자(1천9백47만7천명) 중에서의 비중은 물론 절대인원도 줄어든다. 추세 인 반면 서비스업 등 이른바 「3차산업」은 취업자수(1천1백68만4천명)나 비중(60%)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실업률은 6대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가 3.8%, 9개도가 2.0%였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6대도시는 60.3%에 그쳤으나 9개도시는 63.8%였다.



6년만에 最惡

통계청 2분기 고용동향 분석



〈그림:任雄植〉

실업이 갈수록 높고 있다. 특히 대졸자 취업이 심각하다. 지난 2·4분기 중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계산한 실업률(계절조정실업률)이 3.1%를 기록, 87년 2·4분기(3.3%)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다.

또 15세 이상 인구가운데 취업률이거나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율(경제활동참가율)은 1년전보다 0.1%포인트 떨어지는 등 경기침체 장기간의 따른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중 15세 이상인구 3천2백29만3천명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2천4만2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년 2·4분기의 62.2%에서 62.1%로 1%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1년 전에 비해 못마치는 현상은 작년 3·4분기부터 4분기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취업기회가 줄어든다. 여성들의 취업률도 포기하고 가사인력이 전향되고 있는 데 기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는 56만5천명으로 전년 2·4분기보다 12만9천명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전지수)은 2.2%에서 2.8%로 0.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2·4분기의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계절조정실업률은 2.4%에서 3.1%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중 학력별로는 전문이하 10만3천명(실업률 1.3%), 고졸 30만6천명(3.6%), 대졸이상 15만6천명(4.4%) 등 고졸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景氣 장기침체 : 취업난 심화 대졸이상 고학력 실업률 4.4% 달해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19세 10.8%, 20~24세 8.9%, 25~29세 4.6% 등 젊은 층의 실업률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4.4%에 달했다.

학력 높을수록 실업률 증가

2/4분기 고용동향 중졸 1.3% 고졸 3.6% 비해 대졸이상 4.4%

광주·대전·부산등 대도시 전국평균 크게 웃돌아

지난 2/4분기 중 전국적으로 실업자가 적지 않게 늘어난 가운데 특히 대졸 실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적으로는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지방 대도시의 실업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경제활동인구는 2천4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만9천명이 늘어났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은 1/4분기 중 0.3%포인트 감소한 것보다는 감소정도가 다소 둔화됐다.

이 기간 중 실업자는 12만9천명이 증가한 56만5천명으로 실업률이 2.8%를 기록해 1/4분기의 3.2%보다는 낮아졌다. 그러나 계절적 조정을 포함할 경우 실업률이 3.1%로 지난 87년 3/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실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대졸 이

상 고학력자 실업률은 2/4분기 중 4.4%를 나타내 1/4분기 중 4.2%,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고졸자들의 실업률은 3.6%, 중졸 이하는 1.3%로 각각 1/4분기의 4.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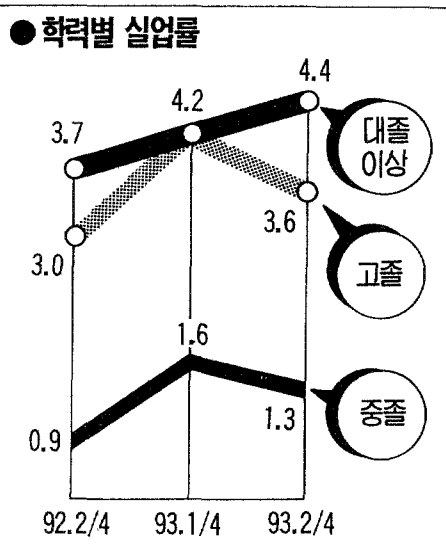
보다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15~19살의 실업률이 10.8%, 20~24살이 8.9%, 25~29살이 4.6%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학교를 바로 졸업한 인력들이 일정기간 일자리를 고르는 현상과 함께 일부 젊은 인력이 3D직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과 광공업에서 취업자가 각각 1.4%, 1.3% 줄었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에서는 2.7%가 늘어나 증가된 실업자가 주로 농림어업 및 광공업에서의 고용이탈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최

근 경기회복의 지연과 설비투자자의 부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는 주로 도 소매, 음식숙박업과 금융 및 운수업 등의 무급가족 종사자와 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자의 구성비도 농림어업의 경우 지난해 2/4분기 17.5%에서 올 2/4분기 16.1%로 줄어들었으며, 광공업도 25.2%에서 23.9%로 감소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문은 57.3%에서 60.0%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의 취업자가 2.1% 늘어난 반면 9개 도는 0.6%가 줄어 고용인구의 대도시 유입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지역의 실업률도 평균 3.8%를 기록해 9개 도지역의 2.0%보다 훨씬 높아졌다. 특히 농어업 종사자 및 광공업 인구의 이탈이 많은 광주는 실업률이 4.6%로 전국 최고를 보였으며, 대전의 실업률이 4.4%, 최근 들어 신발 및 섬유산업이 부진한 부산과 대구가 4.3%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제조업가동률 79% 在庫 5% 증가

景氣 뒷걸음질

선행지수 낮아져 회복 시간 걸릴 듯

통계청 발표 7월 산업동향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에는 기계설비투자, 건축허가 등 투자지표와 산업활동지표가 6월 수준이었던 것보다 6월 수준이 나섰지만 더욱 부진, 전체적으로 산업활동이 전체를 면치 못했다.

제조업가동률은 현대그룹 계열사의 파업 등으로 자동차와 선박부품이 부진해 전체적으로 80% 이하로 떨어졌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자동차 선

했고 기계류 수입허가는 전기통신기계와 수송용기계의 수입감소로 17.5% 감소했다.

건설은 민간제조업의 사무실 공장등과 지하철도지 조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 대비 2.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산업활동지수 전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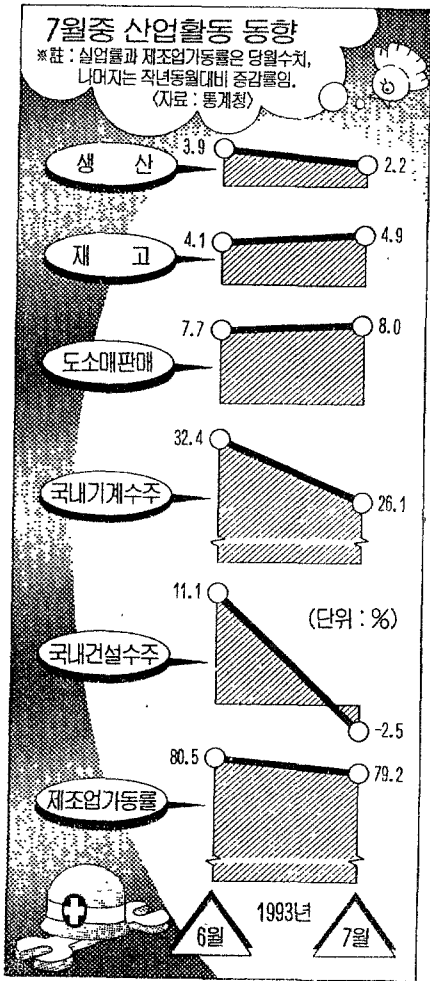
박업종의 노사분규, 컴퓨터의 수출감소 및 이상저온에 따른 전력난발각기의 수요 감소 등으로 6월에 비해 1.2% 감소하고 작년 7월에 비해 2.2% 증가하는데 그쳤다.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2.8% 재고는 4.0%씩 각각 늘어나는 등 내수부진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투자는 국내기계수주가 공업부분의 18.9% 감소(전년동월대비)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39.3%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26.1% 증가

과 같은 2.7%를 기록했으나 계절조정치로는 6월의 3.2%에서 3.0%로 다소 나아진 상태다.

제조업가동률은 경기침체와 노사분규 영향으로 전월대비 1.7%, 전년동월비 2.2%씩 각각 떨어졌던 79.2%를 기록했다.



농산물凶作 물가非常

韓銀조사
음료류가 4.4% 상승

기획원, 냉동영양 내년物價 더주름살

8월 물가가 냉동수산물
의 영향을 받아 0.3% 올
라 소비자 물가도 0.3% 올
4.4%의 상승폭을 기록, 연
간 1.1%의 상승폭을 기록
하고 있다.

작년에는 농산물의 품차
가 올랐기 때문이었다. 거
의 8월 1일 기준의 물가
는 1월 1일 기준의 물가
보다 0.1% 올랐다.

상승세를 보인 것은 작년
대비 4.4% 올랐다. 7월
부터는 냉동수산물
하락세를 보였지만 농산물
의 8월 1일 기준 물가는
반년말의 상승폭을 1
% 상회했다.

8월 농산물(전환)은 전월
대비 0.3% 올랐고, 냉동수산물
은 0.1% 올랐으며, 대도시 인접
지역까지 시내물가는 0.1%
올랐으며, 전체는 0.3%
개인서비스는 0.1%
올랐다.

농산물(총합)의 20.7%, 수박(7.0%)이 물가에 따른 출하 감소로, 양파(27.0%), 파(8.8%) 등의 채소류는 저장물량 감소와 일기불순으로 반입량이 감소한데 따라 상승했다.

주부들의 시집바구니 물가를 대표하는 식료품 가격은 8월 0.7% 작년 대비 5.1% 올랐고 야채, 과일 등 신선식품 가격은 0.2% 올랐다.

鄭在龍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과장 "농가 물가 상승폭은 10% 이하로 억제해 물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표치 이내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병해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내년 물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반기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는 연간 5%이다. 그러나 8월말까지의 상승률은 4.4%로 목표선의 밑에 머물렀다. 물가가 하락할 불안하던 물가의 상승세가 확인되었다.

물가

최근 13개월의 상승률은 13.7%로, 1982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1982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1982년 1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1~8월 4.4% 상승 안팎

적산율으로 물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농축수산물값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랐다. 1년전에 비해 파인트 1백 0.5%압파장은 57.9%가 올랐다. 화학·수박·배추값이 오른 것도 모두 10%이상 올랐다. 과일의 경우엔 배추이다.

적

정부 관계자는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쌀값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며, 다만 계절적 요인과 해가리 현상으로 과일류와 쇠고기 가격이 밋인부 수산물 등이 올랐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쌀값은 현재 쌀값 상승이 한달에 3만 4천원

쇠고기·양파·과일값 큰폭 올라

으로 이달초의 2만 8천원에서 6천원이나 올랐다. 특히 쌀값은 추석순수기를 앞두고 평년수가 끝난으로 적산율으로 이월 우려가 큰 편이다.
물가전망 밝아지게 하려는 또 다른 요인으로 10월경에 10%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밭의 영향이 나타나기 작하면 물가를 견줄 수 없게 된다는 전망이다. 실명제 이후 농수기업의 도산율이 높고 있다. 이직은 퇴직자급 배분의 불확실성 유동속도가 떨어져 통화량 밖의 부작용이 별로 드러

실명제 겹쳐 통화인플레 우려

나지 않지만 시일이 지나면 통화인플레가 기사회환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인 5%안팎에서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이다. 그동안 정부의 고물분담정책으로 묶여온 각종 공공

호

및 서비스업의 고물기 폭이질 경우 물가문제는 경제의 실명제의 운영을 좌우할 부병이 될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과 업별을 주요시별로 수립유동속도로 한 종합적인 물가정책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다. (鄭鍾錫 기자)

GRDP (지역내총생산) 업무 移管싸고

內務部 市·道 승강이

내무부 "올해년부터 推計" 시달
市·道 "인력·노임업무종" 난색

사업추진 사실상 백지화 위기

내무부가 내부적으로 추진해오던 市·郡·區 단위의 지역내총생산(GRDP) 推計인력을 내년부터 市·道에 이관하겠다는 계획이 각 市·道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차질이 예상된다.

市·郡·區 단위의 GRDP 추계는 부본적인 지자체 담당을 맡아 ▲ 각종 지역의 단위 개발계획 수립 때 지역내총생산(총파와), 투자예산 순회 집행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 기초자치단체별 정책성과·지역산업적차별성 등 각종 경제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1989년

市·道 단위의 GRDP 추계와 별도로 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내무부가 중앙차원에서 추진해오던 市·郡·區 단위의 GRDP 추계인력을 내년부터 市·道에 이관할 계획이었던 市·道 공무원이 최저 지자체마다에 1명씩은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있다.

◇내무부 방침 內務부는 市·郡·區별 GRDP 추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89년 10월 전년도인 5천여명 현 중반을 1만 2천

명까지 늘려 1만 2천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1단위로 내년 4월까지 91, 92년도분 추계를 동시에 추진하되 연말까지 중앙에서 교육·지도 등 업무지원을 하고 93년 도청부터는 市·道 자체 계획에 의해 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료로 삼 방침이다.

◇지자체 반발 市·道의 경우 내부적으로 市·郡·區별 GRDP 추계 인력을 인정한 인력부족을 인정을 노임업무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市·道는 이에 따라 4년간 GRDP 추계인력을 추진했던 내부부에서 계속 추계 담당하거나 차선책으로 市·郡·區별 추계도 통계를 담당하고 있다.

에서 추계인력을 아예 포기하거나 추계를 하더라도 시·도노가 크지 않아 활용 가치가 없는 등 GRDP 추계업무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市·道는 이에 따라 4년간 GRDP 추계인력을 추진했던 내부부에서 계속 추계 담당하거나 차선책으로 市·郡·區별 추계도 통계를 담당하고 있다.

노무자家計 비교적 健實

통계청이 발표한「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변화」의 특징은, 노무자가구에 비해 노무자가구의 가계수지 구조가 비교적 건실해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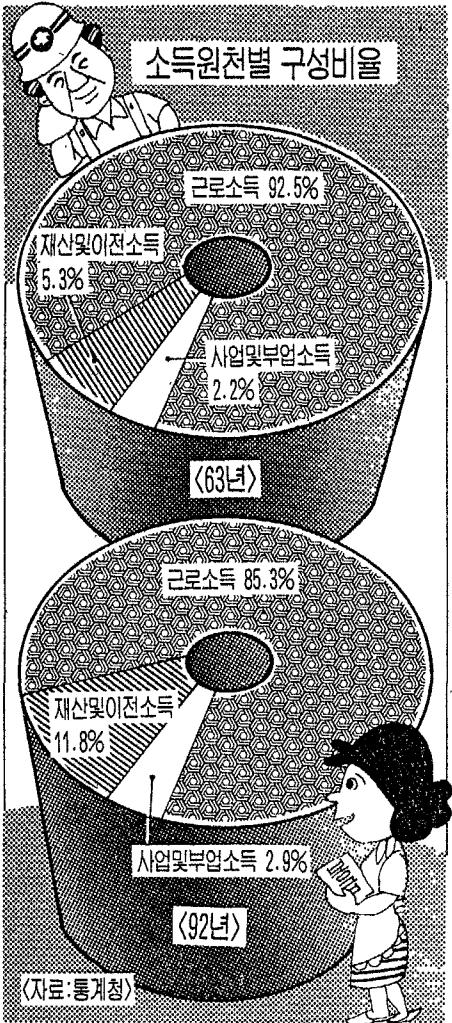
노무자가구의 경우 소득은 30년전인 8천8백원에서 1백46만3천원으로 17배, 불가산소득은 1백67배, 불가산소득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6.7배 증가했다.

반면 노무자가구는 월 4천2백원에서 1백14만9천원으로 34배, 월 2백77백, 실질소득은 11.4배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지출을 뺀 흑자율도 노무자가구가 29.6%로 노무자가구의 2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노무자가구의 가계수지가 빠른 속도로

도시근로자가구 收支 30년 '변화'



개선된 것은 지난 80년대 후반의 급격한 노임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소비생활수준도 노무자가구에서 더 크게 향상돼 노무자가구의 소비성 지출은 지난 30년간 1백28배, 실질적으로는 5.3배 증가했으나 노무자가

구에선 명목임의로 1백70배, 실질임의로 7.0배의 상승이 추자출

에도 불구하고 노무자가구의 소비수준은 개선됐다. 전체 도시근로자가구

의 소득을 원천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1963년 92.5%에서 1992년 85.3%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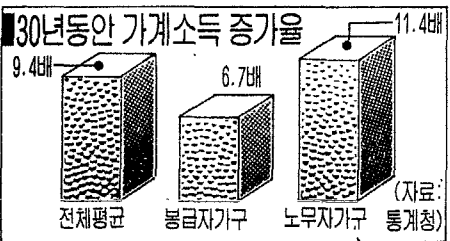
80년대 후반 勞賃금상승 높은교육열 반영 課外費

낮아진 반면 이자소득이 전소득 등 기타소득 비중은 7.5%에서 14.7%로 2배정도 높아져 각 가구에 어느정도 자산이 축적되고 또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소득구조도 과거의 단순형태에서 탈피,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전체소득에서 가구주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0.6%에서 85.3%로 낮아진 반면 가구원 소득 비중은 9.4%에서 14.7%로 높아졌는데 이는 가구원 취업이 늘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통계청

영향 黑字率 개선

1천70배나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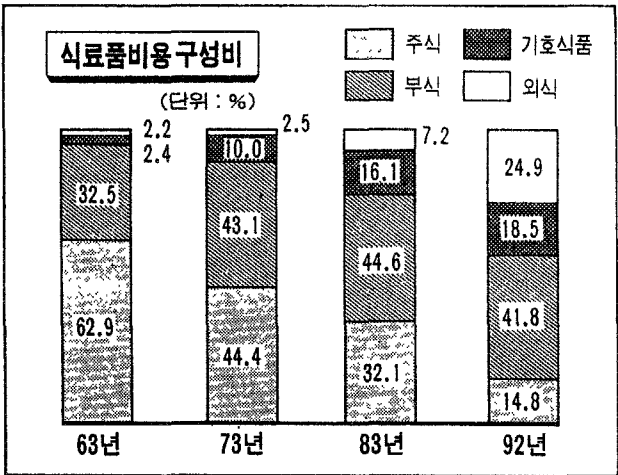
이 밝혔다. 가계소득은 지난 30년 동안 6천3백원에서 1백만8천원으로 1배 59배, 실질산 6.6배 증가했는데 이중 소비 지출은 6천1백원에서 90만3천원으로 1배 49배, 실질산 6.1배 증가한데 비해 조세와 의료보험, 이자지출 등 비 소비지출은 2백60원에서 10만5천원으로 16배 4배 7배, 실질산 16.8배 증가해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비지출의 3배에 육박했다. 가구구분별 소비지출은 농림지가가구 8천6백원에서 1백9만6천원으로 1배 28배, 노무지가구는 4천5백원에서 76만3천원으로 1배 70배, 실질산 7.0배 증가했다. 비무별 소비지출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전체 소비 지출은 6.1배 증가한데 반해 자가용의 보급으로 교통·통신비가 21.6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육·의료·오락비가 8배, 교육·의료·오락비가 15.0배, 가구가사용품비가 14.5배, 기타 소비지출이 13.2배의 수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의료·오락비 중 교육비의 경우 1990년 1천70배, 실질산 44배로 엄청난 계늘어나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을 반영했다. 식료품비는 2.5배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고 광열수도비는 4.1

교통·통신비 급증... 所得격차 다소 줄어

배, 보건·의료비 역시 4.9배 증가에 그쳤다. 식료품비 지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소비지출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율인 영질계수는 61.3%에서 30.4%로 낮아졌다. 식료품비중 주식비중은 62.9%에서 14.8%로 떨어진 반면 외식비는 2.2%에서 24.9%로 경증 편였으며 기호식품비는 2.4%에서 18.5%로 높아졌다. 가계수치는 지난 63년 3천4백원 전자로 흑자율이 마이너스 5.9%였으나 92년에는 34만8천원의 흑자를 나타내 흑자율은 27.9%를 보였고 평균소비성향이 105.9%에서 72.1%로 낮아졌다. 소득분포의 변화를 보면 최하위 20%의 점유율은 이 지난 79년 39.3%에서 92년 37.6%로 낮아진 반면 최하위그룹 20%는 7.9%에서 8.5%로 높아져 소득격차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注: 運: 諸責任기자)

실질소득 30년새 9.4배 과외비지출은 44배 늘어



◇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명목금액기준, 단위:천원)

	63년	83년	92년
▲소득	5.99	359.0	1,356.1
근로소득	5.54	323.9	1,156.6
사업·부업소득	0.06	6.2	39.1
재산·이전소득	0.39	28.9	160.4
▲가계지출	6.33	280.5	1,007.7
식료품	3.72	102.5	274.0
주거	0.09	12.0	37.9
열·수도	0.45	19.3	37.2
가사용품	0.15	12.6	49.2
피복 및 신발	0.41	21.9	71.8
보건·의료	0.19	14.8	49.2
교육·교양·오락	0.33	26.2	119.7
교통·통신	0.16	16.7	82.9
기타	0.83	54.5	285.8

物價는 年평균 11.6

非소비성 지출 급증

농림자(사무직종사자)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6.7배 늘어난 반면 노무자(생산직종사자)가구는 11.4배가 늘었으며 급자와 노무자의 소득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특히 가계수지 흑자율(92년도)에 있어서도 노무자가구(29.6%)가 농림자가구(26.1%)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도시근로자가계수지에 나타난 변화들을 부문별로 살펴본

다. ◇소득 = 30년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천9백90원이었다. 그러나 생활패는 6천3백30원의 달해 매달 3백40원정도 빚을 졌다. 당시에는 家長 혼자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으나 각구당 취업인원이 늘고 연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기

타소득과 가구원소득이 크게 늘었다. 근로소득은 63년 전체 가구소득의 92.5%에서 92년 85.3%로 줄었다. 연평균 소득은 각구가 50대인근로자의 실질소득이 11.1배로 가장 크게 늘어났다. 이는 근로연수가 늘어나고 각구주의 의 가구원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각구가 20대인 가구는 부모로부터 증여 및 생활비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높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배 2배 증가했다. 그러나 불가도 2배 배의 실질가계소득은 9.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63년부터 92년까지 30년 동안의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실질가계소득이 연

평균 8%씩 늘었다. GNP증가율(8.7%)이나 물가상승률(11.6%)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한 8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실질증가율이 물가나 GNP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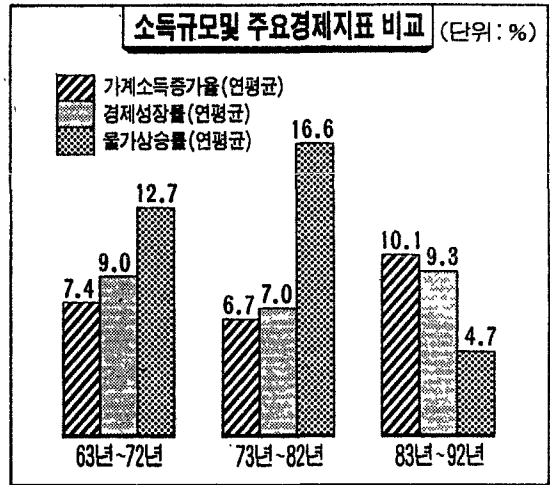
「63~92년 도시근로자 家計수지」 통계청 발표

◇지출=30년전만 해도 전체 소비지출 6천3백 원 가운데 순전히 면직물 3천7백 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의 61.3%(연평균)에 달했으나 92년도에 30.4%로 떨어졌다. 이 수치는 대만과 비슷할 수 있으나 미국(87년 기준) 13.4%, 일본(92년) 2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수치를 보면 92년도에 비해 2.2%의 불과했다. 92년은 소비지출 18만 5천1백 원(소비지출의 3.6%)이며 1천70백 원(소비지출 18만 5천1백 원)의 21.6%를 차지했다. 특히, 주거비가 92년 1.6%에서 93년 2.1%로 늘었다. 92년 1.6%에서 93년 2.1%로 늘었다. 92년 1.6%에서 93년 2.1%로 늘었다. 92년 1.6%에서 93년 2.1%로 늘었다.

사무-생산직 소득격차 급속히 줄어

【서울 44개]가 늘었다. 반면 소기업(연평균 7.7%, 전체 2.5%)은 떨어졌다. 생산직의 소득 격차도 92년 4.4%에서 93년 4.2%로 줄었다. 이 가운데는 중소기업(연평균 4.4%)과 대기업(연평균 4.2%)의 격차가 줄었다. 중소기업은 92년 4.4%에서 93년 4.2%로 줄었다. 대기업은 92년 4.4%에서 93년 4.2%로 줄었다. 중소기업은 92년 4.4%에서 93년 4.2%로 줄었다. 대기업은 92년 4.4%에서 93년 4.2%로 줄었다.

세 율 라



景氣종합지수 2년만에 개편

경기의 흐름을 읽을수 있는 경기종합지수가 금융실명제 실시 등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9월부터 개편된다. 경기종합지수는 지난 91년9월개편이후 2년만에 바뀌는 것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종합지수(CI)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의 흐름을 미리 가늠해 보는 경기선행지수의 구성항목을 바꾼데 있다.

시중실세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회사채유통수익률은 경기에 앞서가기보다는 뒤쫓아 가는 경향이 커 선행지표 구성항목에서 빼고 후행지표에다 넣었다. 또 예금은행대출금을 선행지표구성항목에 새로 추가하고 수출액 대신 신용장(LC)내도액을 선행지표로 쓰기로 했다.

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등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8개 동행지수는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安商旭기자>

産業활동이 여전히 위축

8월중 生産·소비감소... 제조업가동률도 하락

금융실명제가 전월실시된 지난 8월중 국내 산업활동이 생산과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양상을 면치 못했다.

투자능 민감부문에서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기대만큼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중 9월말의 계절성 생산량의 전년 동기와의 비례율은 99.4%였으나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여

를유가와 냉방, 그리고 실

명제 실시가 이같은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말 생산활동이 자동차·화학 등 중화학부문의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분야는 더욱 위축되는 양상이다.

특히 음·식·서비스업과 건설자재는 소폭한 발전향의로, 소·중·정·정(정) 설비보수로 생산전수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6월중 수출이 처음으로 80%대에 올라섰던 제조업 가동률도 다시 낮아져 7월의 79.1%에서 8

명두골 회복 분위기

통계청 발표 「8월 산업동향」 投資는 다소 늘어

製造業가동 76%로 낮아져 化學제품 자동차등은 호조

실업률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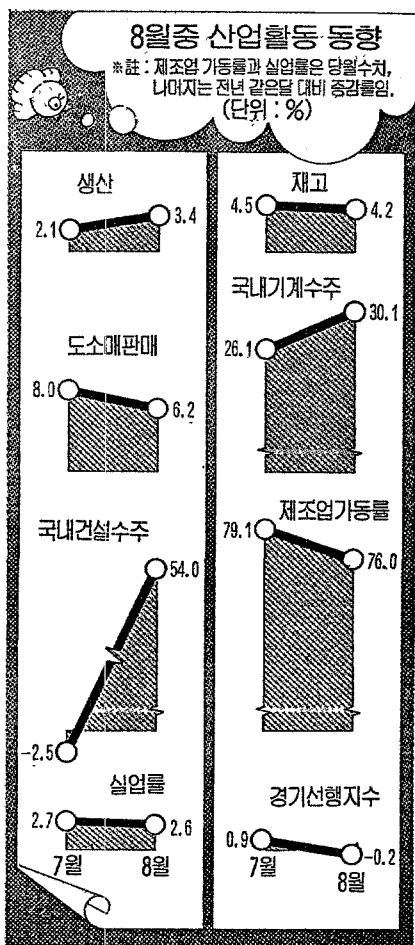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가솔린 및 신발 섬유 등의 소비재, 음식료품 기타음식첨가제 등이 부진했다 반면 화학제품 자동차 1차(근속)업종은 호조를 보였다. 전기업종의 호조를 보였다.

소비용항목을 보면 농기계 구입 정돈보조와 자동차용 철강수요증가에 힘입어도 소매판매가 적체현상 대비 6.2% 증가했으나, 전월

에 비해서는 건축재료와 여타가전제품을 중심으로 2.3% 감소했다.

내수용 소비재 출하가 소행숙유차 휘발유 부산물 출수신기 지프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보다 2.3% 늘었다.

제조업 가동률을 살펴보면 8월은 76%로 7월(79.1%)보다 3.1%포인트 낮아 76%를 기록했다.



투자는 국내기계수주(선박 제외)가 전월보다 2% 감소했으나, 작년동월 대비해서는 민간부분의 발주 증가로 30.1% 증가했다. 자동차제조업(29.5%) 조립기계제조업(20.9%) 조립(75.3%) 등 민간제조업은 투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전월(135.4%) 공제(조립기타) (-73.6%) 등 공공부분은 많이 떨어졌다.

기계류 수입액은 일반 산업용기계 수출용기계의 감소로 작년동월 대비 13.2% 전월보다 25.6%씩 줄었다.

제조업가동률이 하락했지만 8월 중 산업생산과 소비품 전반적인 경기가 여전히 부진했으며 제조업가동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는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등이 늘어나는 등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 8월 통계청이 발표한 「8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중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달보다 3.4% 증가했으나 7월에 비해서는 여타유가와 일기불황, 내수감소 등의 영향으로 3.2% 감소했다.

統計로 나타난 實名制 찬바람

内需부진에 凶作 겹쳐 침체 가속 투자업어붙어 成長잠재력 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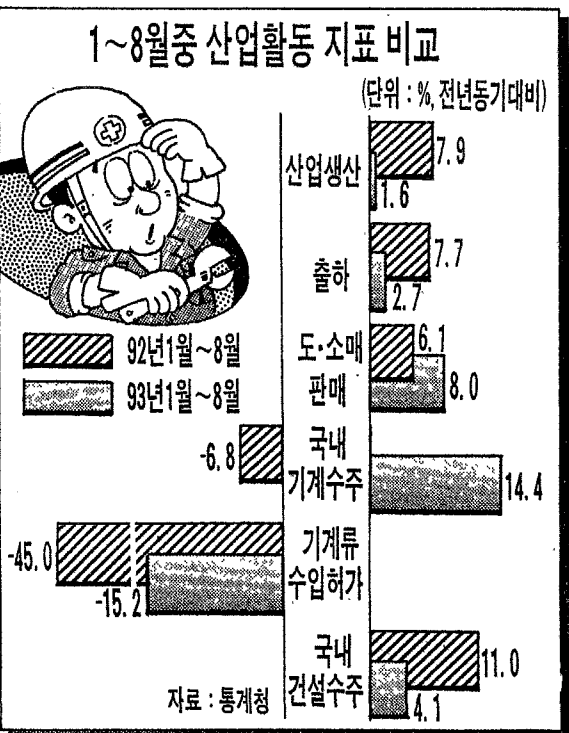
8월 산업동향 내용과 의미

8월의 산업동향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특히 8월의 산업은 7월과 비교하여 1.6%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는 전년의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8월의 산업이 전년의 7.9%에 비해 1.6%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는 전년의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 8월의 제조업생산은 7.9% 증가했다. 이는 전년의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의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의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8월의 제조업생산은 7.9% 증가했다. 이는 전년의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의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의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8월의 제조업생산은 7.9% 증가했다. 이는 전년의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의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년의 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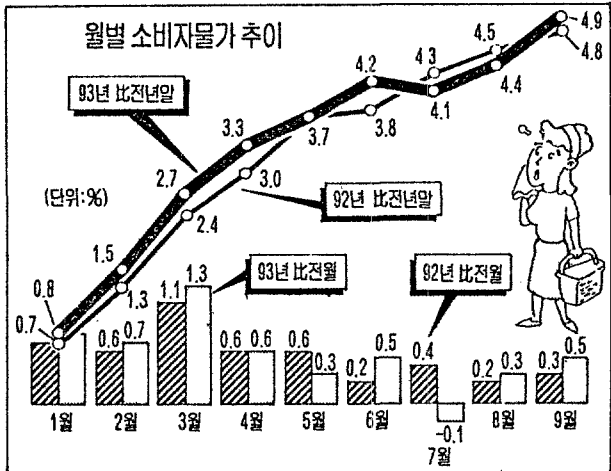


여 백

4/4분기 보도기사

(10월~12월)

여 백



물가 연말 억제 선유박

올들어 4.9% 올라... 5% 목표 추월 우려

농수산물값 급등... 「소비자」 0.5% 9월

이상준에 따른 냉해와 추석이 겹쳐 농수산물 값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올해 9월 4.9% 상승했다. 특히 9월 중 0.2%가 올라 작년 9월 대비 2%가 상승했다. 연간 억제목표인 2%를 초과한 것이다.

13%의 하락선에 이른 셈이다. 부문별로는 농산물의 경우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감소로 고추와 양파 등 채소류 값이 크게 오른 반면 출하 선수를 맞은 포도와 박숭아 등이 떨어져 전월 대비 2.7%가 상승했다. 축산물은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요감소로 가격이 떨어졌다. 수산물로는 갈치와 조기 값이 어획량 감소 및 추석 수요 증가로 올랐다.

로 올라 부문별로는 가장 높은 5.2% 상승했다. 공산품은 떡값과 천일염 등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 전체로 0.3%가 올랐다.

〈鄭鍾錫기자〉

2월 통계청과 韓銀이 발표한 「9월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추석이 전 9월의 소비자물가는 0.5%가 올라 작년 9월 대비 4.9%에 이르렀다. 올 연세

統計자료 접근 쉬워진다

내년초부터 PC통해 일반·기업에 공개

고용·물가·국민소득 등 생활정보

자동응답서비스 제공

통계청은 7일 현재 국가 및 공공기관만이 활용하고 있는 통계청의 각종 통계자료를 내년초부터 PC통신망을 통해 민간기업체 및 일반개인에게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인구·고용·물가·가계국민소득·수출입·국제수지 등 생활통계정보를 내년부터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제공한다. 통계청은 일반이용자에 게 통계자료를 디스켓이나 테이프 등의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방식도 병행할 방침이다.

통계청 「통계작성기관 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통계표 협의제도를 완화해 ▲출입국통계·현황·자동차등록현황·작성기간이 오래되고 결과의 신뢰성이 높은 통계 ▲국민계정국 제수지 통계 등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가공한 통계로

신뢰성이 확보된 통계 ▲건축허가통계·도시주택가점동향조사 등 활용도가 높고 시의성이 요구되는 통계는 시·도청이 개정되는 대로 공표협의를 면제할 방침이다. 통계공표협의제도 는 각 공공기관이 조사한 통계를 전담기관인 통계청 과 협의해서 신뢰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서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 시의성을 높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운수업 「收益 좋은 장사」 부상

통계청 조사...작년 매출 16%증가

운수업의 매출액 증가율과 수익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운수업의 영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기준 운수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의 수입은 21조 7천 899억원으로 전년보다 16.0%가 증가, 91년의 19.0%와 90년의 16.1%에 이어 3년 연속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분야별 수입을 보면 도로공사에서 관장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수입(유류도 포함)은 9조 800억(45.5%)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에 머물렀다. 6천 222억원의 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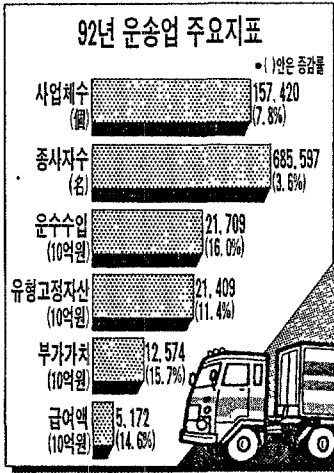
48.2%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입 증가율은 그 다음이 특수화물(36.1%), 항공운수업(22.4%), 시내버스(21.5%), 외화화물(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항공기 이용자수도 90년 1천 1백 6만 명(23.6%)에서 91년 1천 2백 25만 명(10.7%), 92년 1천

고속도로행로 수입 48% 최다
회사택시·철도등은 매출 부진

4백 56만 명(18.8%)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회사택시·교통채 증 및 유전기사의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에 그쳤고 철도는 유류동결, 자가용 승용차 보급에 따른 이용률 부진 등으로 3.0% 증가에 머물렀다.



運輸業 작년 재미봤다

수입 16% 증가, 항공운수 22%나

항공과 선박수송업의 호황이 지난해 전체 운수업체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하는 수의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의 특기도 했지만 운수업이 질서정연하게 발전한 장사를 한 셈이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92년 기준 운수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운수업체의 수입은 21조 7천 8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가 늘었다.

90년(16.1%), 91년(19.0%)에 이어 운수업체의 수입은 최근 3년간 15%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수입에서 비중을 뺀 부가가치는 12조 5천 7백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가 늘어난 수입성도 상당히 호전됐다.

운수수입을 부문별로 보면 항공운수업이 22.4%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유상운수업체인 항공과 철도·고속도로 수송업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반면 철도와 회사택시업의 높은 성장세를 줄여 10% 증가율에 그쳤다.

특히 고속도로의 발달로 수송량의 증가에 따라 사업체의 영업환경도 고가운송을 선호하는 추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運輸業 수입 16% 증가 "高成長"

有料도로업 48%로 최고

회사택시는 0.8% 증가 그쳐

통계청, 지난해

지난해 운수사업은 전반적인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수의 증가와 스텝수 증가에 힘입어 연간 운수수입의 증가폭이 16% 증가한 21조 7천 8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통계청의 발표한 「92년 운수사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운수수입 증가율(16%)은 최근 10년간 91년의 19.8%, 90년의 16.1%에 이어 3번째

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운수사업은 도로유료도로업(48%)의 자동차대수가 급증해 증가한 데다 고속도로의 이용률이 높아져 대안외의 48.2%의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고 의화(화물) 20%(특수화물 36.1%), 항공(항공수입) 22.4%(항공도편의산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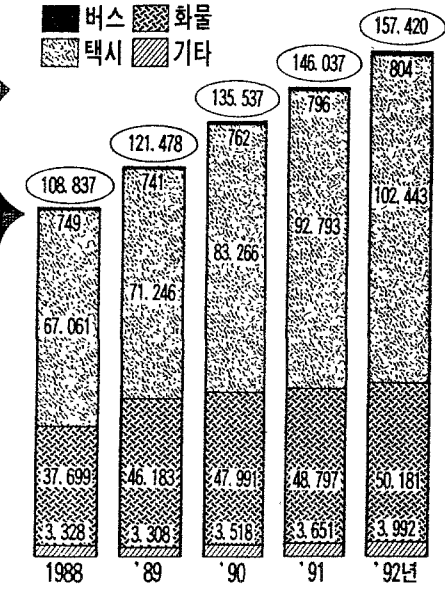
운수사업자수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68만 5천 5백 97명으로 집계됐으며 항공(항공수입) 7.6%, 의화(화물) 2.3%, 택시(택시) 2.3%, 기타(기타) 1.3%로 증가한 반면 운수관련서비스업

은 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운수사업체수는 15만 7천 4백 20개로 전년보다 7.8% 늘었으며 항공(항공수입)의 22.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운수사업자수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68만 5천 5백 97명으로 집계됐으며 항공(항공수입) 7.6%, 의화(화물) 2.3%, 택시(택시) 2.3%, 기타(기타) 1.3%로 증가한 반면 운수관련서비스업

증가에 그치는 저조한 증가를 나타냈다. 운수사업체수는 15만 7천 4백 20개로 전년보다 7.8% 늘었으며 항공(항공수입)의 22.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운수사업자수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68만 5천 5백 97명으로 집계됐으며 항공(항공수입) 7.6%, 의화(화물) 2.3%, 택시(택시) 2.3%, 기타(기타) 1.3%로 증가한 반면 운수관련서비스업

은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운수사업체로는 보면 항공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의 비중은 스텝한상에 따른 여행 레저수요의 증대로 커졌으나 유신행해상운수사업의 비중은 축소됐다.

운수사업체수 추이 (단위:개)



物價통계 국민체감과 큰차이

경고

통계청에 대한 감사에서의 의견들이 통계수치의 신뢰성 문제를 추궁하고 국가통계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집의를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의 선진국의 비해 현실적으로 영양한 인력과 시설과 인파를 가지고 있다가 정예 인정하고는 전방적으로 격전성 발양의 주를 이뤄 다루쳐 국산과 대조를 이뤘다.

許和平 崔鶴자의원(民自)이 간행 통계지도가 통계청에 의해 일괄적으로 관리·감독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현행 통계체계의 문제점을 따지고 들자 韓和俊의원(民自)의 「현실적이며 발전적인 국가통계학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통계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평가했다.

徐鶴의원(無)의 「통계가 국민의 향토향으로 간

가 이 양면으로 책 지킬까 지름기를 비롯해 국민대중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관한 시의성이 통계수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통계청의 중요성을 대안정부의 인식에 표이고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翰의원(民主)의 「통계청 보완안」은 통계청의 「국회청문회」에 대한 대의기관 자료 제출에 따른 보안대책 「통계」 인력기관인 수위를 적대시하고 조항으로 과거 군사정치의 유산이라고 지적,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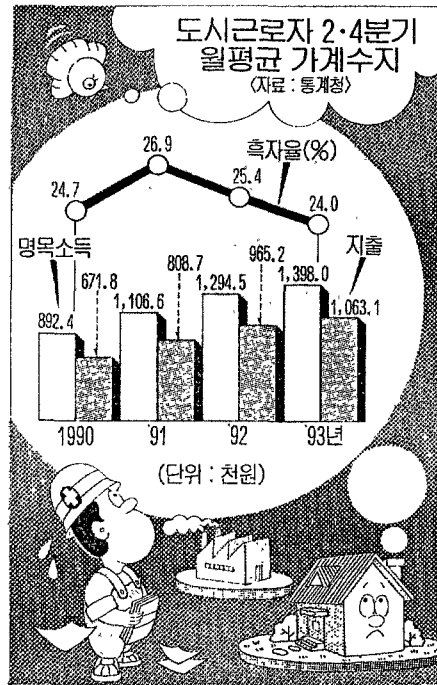
통계청자료 일반개방 내년 PC통신망 통해

현재 국가 및 공공기관만이 활용하고 있는 통계청의 각종 통계자료가 내년 초에는 PC 통신망을 통해 민간기업 및 개인에게까지 개방된다. 또 인구가 국민소득의 생활수준이 높아져 전화의 자동화 서비스(ARS)시스템이 도입에 제정된다.

통계청은 현재 3백34개 정부 및 공공기관들에 제공하고 있는 통계정보시스템을 내년초부터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체를 통해 민간기업체 및 일반개인에게까지 제공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인쇄물도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 배포를 영이르니 디스켓이나 테이프 등의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되는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또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는 인구 고용 물가 가계 국민소득 수출입 국제수지 등 생활통계정보를 전화를 통해 자동응답서비스하는 시스템을 한국통신을 통해 내보내기로 했다.



도시근로자가구 月소득증가를

81년 이후 최저 기록

2·4분기

百39萬8千원... 작년비 8% 늘어

지난 2·4분기(4~6월)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경기침체와 정부의 인위적 조정책 등의 영향으로 12년만에 가장 낮은 실증증가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가계수지 흑자율도 두드러지게 떨어졌다.

7월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중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39만8천원(1인당 2·4분기의 1백29만4천3백5십원에 비해 8% 증가)로 작년 동기(96만5천2백원) 대비 9만7천9백10원(10.1%)의 실증증가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에 이르러 실질소득증가율은 3.1%에 그쳤다. 이같은 실질소득증가율은 지난 81년 연평균 1.3%의 감소율을 보인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득증가세의 둔화에 따라 소비증가도 둔화돼 지난 2·4분기 월평균 지출은 1백10만6천3백10원으로 작년 동기(96만5천2백원) 대비 9만7천9백10원(10.1%)의 실증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계 지출이 19.4%(실증증가율 5.6%)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득증가가 둔화된 반면 소비도 둔화되지만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아 소득증가 둔화 속에서도 월별 전천후 둔화되게 마련이라』

지난 2·4분기 중 가계수지 동향도 이같은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家計 소득증가 둔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소비 지출은 고품·홍신비율 제 외하면 전반적으로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은 7일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을 통해 2분기 중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39만8천원이며, 지난해 동기보다 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증가율인 17%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4.7%)을 감안한 실질소득증가율은 12년만에 최저인 3.1%로 집계됐다.

소비 지출은 고품·홍신비율 제 외한 자가용 구입 등의 증가로 크게 늘었으나, 반면 가구가사 용품과 피복, 신발, 식료품비, 교육·교양· 오락비 등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작년보다 7.6% 증가했으나, 조세·사회보장 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이 많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밑돌았다. <承仁插기자>

근로자所得증가 12年來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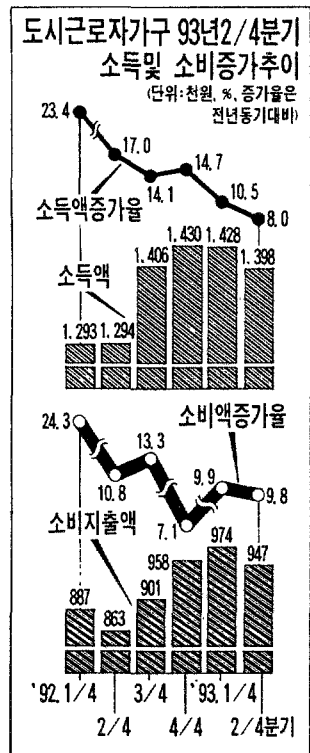
2분기「실질」기준 가구당 百15만원... 3.1%

통계청, 씹씹이든 여전히... 家計흑자 제자리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임금 억제책으로 근로자들의 가구당 실질소득증가가 올해 8월 1분기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낮은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씹씹이든 여전히 소득증가분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어 대부부채를 소비하고 있어 가계수지흑자는 제자리걸음 39만8천원이라고 있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93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실질소득」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1백39만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증가했으며, 실질소득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1백14만9천원으로 0.1% 증가했다. 또 해당기간의 경기를 반영하는 한계소비성향(가처분소득증가분에 대한 소비증가분비율)은 작년에 비해 무려 12.9%포인트나 증가한 93.6%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부진으로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소비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가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1백6만3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을 내용별로 보면, 교통통신비가 27.6% 증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거비(15.3%), 광열수도비(12.7%)도 비교적 높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의 가계수지는 월평균 흑자액이 33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92년) 10.6% 증가(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도 비교적 높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의 가계수지는 월평균 흑자액이 33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92년) 10.6% 증가(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所得증가 뒤로리 消費는 高水準

실질소득증가 82년이후 최저

통계청, 「2분기 도시근로자 家計 분석」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 2·4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침체해 들어간데다 소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자기유급형태에 따라 개인보험이나 외신비가 크게

늘어났으나 이차 배당인 대를 증가시키는 등 금리인하 증시침체 부동자가격 하락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줄어 들었다. 소득은 이차 배당 증가에 따른데도 소비는 가계지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월평균 가계지출은 1백6만3

이같은 소득증가는 작년 동기의 소득증가율 17%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의 소비자를 가시율을 4.7%를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3.1% 밖에 늘지 않았다. 이는 82년 2·4분기(3.2%) 이후 최저치다. 소득원천별로 근로소득은 9.7%

다. 특히 이차지출의 경우 39.1% 증가했다. 소비지출중 자가용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교통통신비는 월10만4천원으로 27.6%나 늘었다. 외신비는 90년대 이후의 최저값을 보이고 있는 18.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가계중점의 소비패턴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2·4분기에 34.8%나 늘었던 과일만은 수확이 일시적인 실수확 탓에 증가율이 9.1%로 크게 둔화했다.

한편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은 1백28만2천원으로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증가율은 7.6%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흑자액(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액)은 33만5천원으로 1.8% 증가에 머물렀다.

社說



삶의 질을 낮출수 없다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
학에까지 밀려 다쳤다. 침체의
에 빠진경기가 성장률을 끌어내리
고 중소기업들 도산시키는가 했다
니 도시근로자 가계에 주름살을 드
린다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한「2.4분기 가
계수지 동향」의 따르면 1인가
의 가구당 실질소득증가율이 3.
1%에 그쳤다. 지난 81년 마이하
스추위를 보았을 때 가장 낮은 수
준이다. 가구당 평균소득이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증가율 17%의 절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에 그쳤
는데 반해 물가는 4.7%가 올라

실질소득을 감소한 것이다.

소득이 별로 늘어나지 않았는데
도 씩씩이든 우려했을 것이다. 같
은 기간동안의 가계지출은 10.1
%가 증가했다. 이중 소비지출이
9.8%나 늘었다. 특히 승용차구
입과 유자전거를 구입자가 45.3%의
심비가 18.6%나 증가했다.
소득이 늘지 않았다고 해서 지출
을 줄이기가 괴로운 부분들이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고물
파르게 마련이다. 더욱이 생활의
중요지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물가를 오래 전디기가 힘저었다. 하
방에 더 위축된경기가 내년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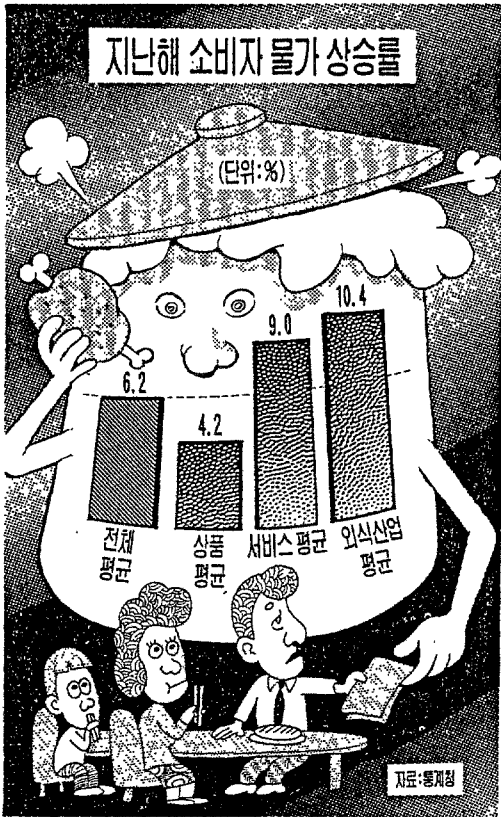
자기 회복력이 없고 물가불안 요
인은 산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현실에서
기업경영사정이 좋아질 리 없다.
기업사정이 나쁜 것 자체가 잘 안되
면 소득이 높아질 수 없다. 소득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물가가 오
르면 실질적으로 가계는 더 궁핍해
질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활규모는 높아
졌다. 생활수준도 바뀌었다. 불어
나 살림살이를 줄이고 집을 얻은 생
활수준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일
과반은 아니다. 복진 삶의 질을 다
시 낮추기는 쉽지 않다. 자가용 승
용차를 타던 사람이 버스를 타기란
전디기 어려운 일이다. 고물문답
은 한계가 있다. 고물문을 전디기 어
려울 때 물건의 소리가 높아진다.
전부를 감안하여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플레이션을 5
%선이하 억제하겠다고 했다. 경
기도 이를 염두에 소득의 증대를 기
대하기 어렵다. 반면 유류비면
통세는 소비지출의 계속 늘어나게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물가안정
등근로자 가계를 지키는 일에 소
홀해서는 안된다. 가계가 불안정
하면 개별도 차질을 빚게 된다. 국
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
부가 할 일이다.



<그림 : 金弘烈기자>

가장 큰 품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조사를 할 때 9개 대분류 항목에 걸쳐 모두 4백70개 품의 가격을 조사한 뒤 여기에 가중치를 매겨 물가상승률을 산출한다. 외식비는 이중 신품품 비중에 들어갔으며 모두 20개의 음식물 대상을 위해 가격을 산출한다. 갈비탕·김치찌개·불고기·등심구이·함박스테이크·햄버거·다방카피·칼국수·짬뽕·우동·돈까스·민장찌개·튀김탕·생선종말·비후까스·자장면·다방국산자장 등이다. 외식비 물가지수는 92년말 현재 132·1(90년을 100으로 했을 경우)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의 기본 38개 품목중 가장 높은 것이다. 20개 음식의 물가지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칼국수가 150·4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고 튀김탕이 110·2로 가장 적게 올랐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東均기자>

外食費

작년 10·4% 상승... 칼국수 가장 많이 올라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가격과 함께 외식하는 기호가 잦아졌다. 특히 집안일을 덜어내면서 때로는 대식물회를 과일과 러직장부근의 음식점에서 한 끼 때우는데 일삼았다. 그런데 음식값이 만만치 않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외식비는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이야기

그리 크지 않지만 물가상승요인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올랐던 물가가 올랐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물가의傳承」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외식비 평균상승률은 10·4%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6·2%는 물론 서비스업종(집세·공공요금·개인서비스요금등)의 평균물가상승률 9%를 크게 웃돌았다. 이중에서도 외식비는 88년부터 92년까지 연속으로

가장 큰 품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조사를 할 때 9개 대분류 항목에 걸쳐 모두 4백70개 품의 가격을 조사한 뒤 여기에 가중치를 매겨 물가상승률을 산출한다. 외식비는 이중 신품품 비중에 들어갔으며 모두 20개의 음식물 대상을 위해 가격을 산출한다.

20개 음식 갈비탕·김치찌개·불고기·등심구이·함박스테이크·햄버거·다방카피·칼국수·짬뽕·우동·돈까스·민장찌개·튀김탕·생선종말·비후까스·자장면·다방국산자장 등이다. 외식비 물가지수는 92년말 현재 132·1(90년을 100으로 했을 경우)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의 기본 38개 품목중 가장 높은 것이다. 20개 음식의 물가지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칼국수가 150·4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고 튀김탕이 110·2로 가장 적게 올랐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東均기자>

9월 산업활동동향 호조

생산 前月比 4.5% 증가

동계철 호황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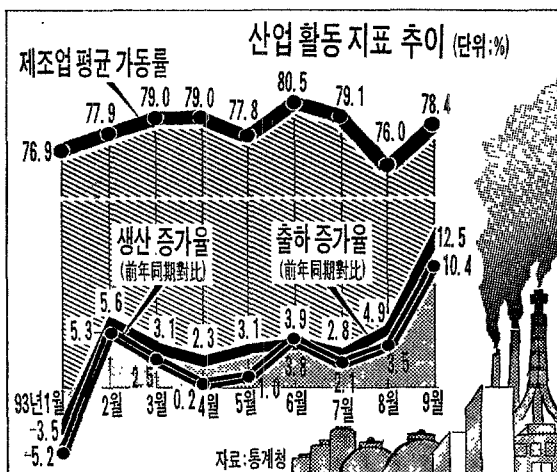
생산과 판매에 있어 호황판세를 나타내며, 특히 9월에는 생산과 판매가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산업활동지표는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8월 대비 0.2%포인트 높았다. 동계철 호황판세를 나타내며, 특히 9월에는 생산과 판매가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제품출하도 전월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8월 대비 1.5%포인트 높았다. 동계철 호황판세를 나타내며, 특히 9월에는 생산과 판매가 전월 대비 4.5% 증가했다.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수치는 지난 84년 1월(10.9%)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도·소매판매업도 추석용품·휴수용품·자동차·건축자재 등이 팔려, 지난 9월 대비 10.5% 증가했다. 생산과 판매가 모두 꺾음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제조업가동률은 78.4%로 전월에 비해 2.4%포인트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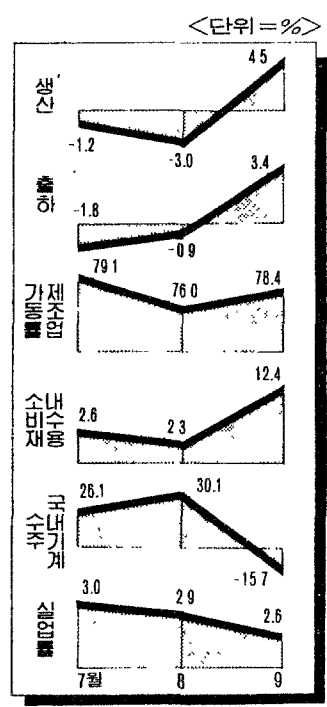
“實名후 씬씬이 헤퍼졌다”

통계청의 9월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1.6% 증가한데 그쳤는데 이는 지난 8년 1월(0.9% 감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재고증가가 크게 둔화된 것은 기업들이

부채정리의 88만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1.6% 증가한데 그쳤는데 이는 지난 8년 1월(0.9% 감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재고증가가 크게 둔화된 것은 기업들이

통계청 발표 「9월 산업활동 동향」

◇9월 산업 동향



내수증가율 12.4% 증가 고용구조 악화·기계수주는 감소

5% 전년 동기비 10.5% 증가한데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같은 호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수출 증진 노력 및 과잉채소 등 제조업종의 판매증가와 철강·에너지 등 귀금속의 호황 등도 주요 인자로 지적된다. 그러나 과잉채소 등 실적 후 악화된 것이란 예상과 달리 소비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문체는 이러한 소비증가를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연결시키는 구상하라는 점이다. 물론 생산의 경우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가 각각 4.5%,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른 추석이 9월을 끼데다 지난해 9월의 지수수준이 워낙 낮았던 점(1.8%) 등 특수요인의 의한 것으로 특히 생산이 부분적으로 호조세를 몰아서 진행지만 이보다는 고용사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월비) 2.6% (전년동월비) 0.3%포인트 감소했다

또 기계류수입액가도 전월에 비해 30.1% 증가했고 국내 건설수주도 전월비와 전년동월비가 각각 22.5%와 41.1%씩 증가했다.

〈徐廷禧기자〉

또 소비의 증가는 도소매 판매와 내수용 소비재 매출 등 소비용량지표를 살펴보면 더욱 확인해진다. 내수용 소비재 매출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 증가해 지난 9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도소매 판매가 전월비 4%

크게 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문체는 이러한 소비증가를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연결시키는 구상하라는 점이다. 물론 생산의 경우 전월비 및 전년동월비가 각각 4.5%,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만 전년동월비보다도 오히려 0.1%포인트 증가했다. 또 취업자증가율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 중심이로 한기타산업에서 6.8%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2.2% 상승했지만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1.9% 감소하고 고용구조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투자증가는 국내기계수주가 전년동월비 15.7% 감소했으나 이는 지난해 9월의 고용률부진의 발상내적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物價 억제 제선 무너졌다

통화팽창·냉해등 겹쳐 올들어 소비자 5·4% 기록

채소·생선등 식품류는 18·8%나 폭등

10월 10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10월 10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4%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세웠던 목표였던 5% 이하로 억제하자는 방침을 벗어났다. 특히 채소와 생선 등 식품류는 18.8%나 폭등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세웠던 목표였던 5% 이하로 억제하자는 방침을 벗어났다. 특히 채소와 생선 등 식품류는 18.8%나 폭등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세웠던 목표였던 5% 이하로 억제하자는 방침을 벗어났다. 특히 채소와 생선 등 식품류는 18.8%나 폭등했다.

또 구입빈도가 월 1회 이하인 57개 품목도 전체 소비자의 7.8%나 폭등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세웠던 목표였던 5% 이하로 억제하자는 방침을 벗어났다. 특히 채소와 생선 등 식품류는 18.8%나 폭등했다.

비자물가 상승률(5.4%)은 10월 10일 기준 10월 10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4%)과 같다. 이는 정부가 당초 세웠던 목표였던 5% 이하로 억제하자는 방침을 벗어났다. 특히 채소와 생선 등 식품류는 18.8%나 폭등했다.

이날 9·0%의 공산품, 3·4%의 공공요금, 6·9%의 석유류, 0·1%의 연탄, 1·6%의 집세, 4·3%의 개인서비스요금, 5·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같은 물가불안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내달 3일 통화정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실명제 이후 통화수위가 한껏 높아진 데다 연말까지 긴장, 난방용 수요증대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많아 물가상승세에 제동을 걸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不安요인 줄지어 대기

物價 비상

물업체목표線 붕괴 파장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
부의 연간 목표표표선인
4~5%(좌년말달파)를
상회하고 10월에는 5.4%

전체물가를 주도해온 사
실 성장속의 高물가(右면)
을 고려했던 물업목표
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보이고 있다.

각종 서비스업과 공공
가격이 동반 상승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
단계를 금리자유화, 여파
출입물가 상승에 따른
13~17%를 훨씬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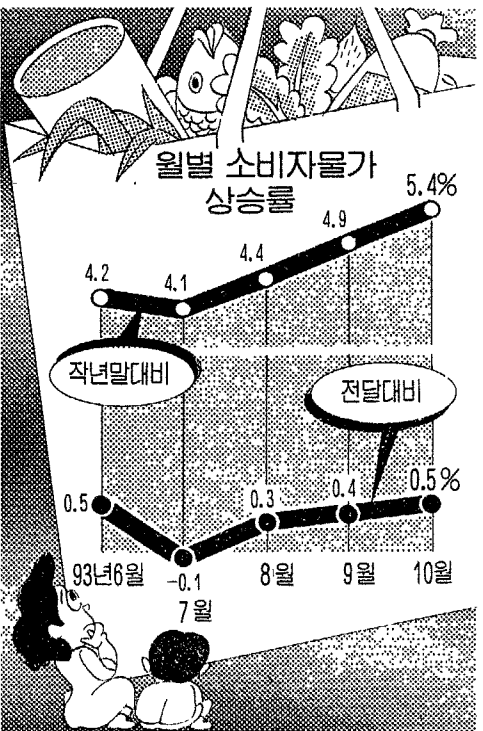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
부의 연간 목표표표선인
4~5%(좌년말달파)를
상회하고 10월에는 5.4%

김장채소값 들먹... 내년 公共料인상

『低성장속의 高물가』

『실명제로 많이 풀린』

9월달 물가 21%를 기록했고
이달은 10%로 수축이 되
지만 전반기로서 조만간
물가안정의 궤도를 벗어



해당 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인 실업률 증가
기울어질 수 있다. 특히
가정 소비에 대한 의존
도가 높을수록 물가상
승률이 높을 수 있다. 물
가안정목표(4~5%)를
상회하고 10월에는 5.4%

물가가 많이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르면

物價 "비상"

올들어 5.4%... 억제선 무너져

농수산물 주도 이달 0.5%

내달 3일 관계장관 대책회의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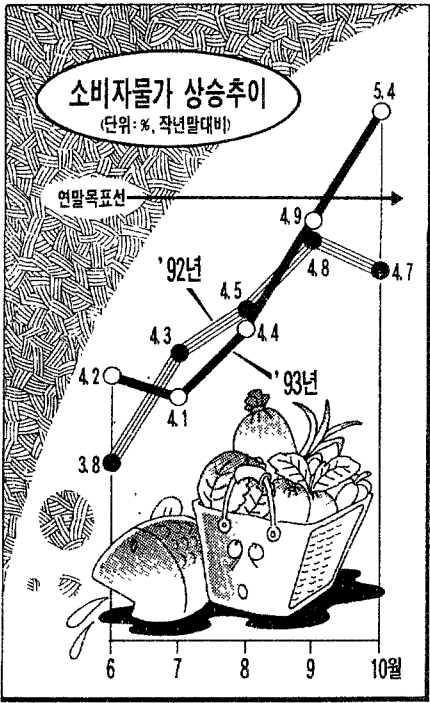
10월 물가가 큰폭으로 오른데다 10월 소비자물가가 5.4% 올랐다는 소식이다.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의 5.2%보다 0.2%포인트 올랐으며, 10월의 4.7%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10월 농수산물(농·목·축·수산물)은 1.7%의 상승세를 보였다.

기후변화와 주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0월 소비자물가가 이처럼 상승한 데는 10월 농수산물(농·목·축·수산물)이 1.7%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10월 농수산물은 9월의 1.5%에서 0.2%포인트 상승한 1.7%를 기록했다.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상승이 10월 소비자물가를 0.9% 상승시켰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10월 소비자물가를 0.9% 상승시켰다. 농산물 가격 상승은 10월 소비자물가를 0.9% 상승시켰다.

가계의 편익이 이처럼 큰폭으로 줄어들었다. 10월의 0.3%포인트 상승을 보였으며, 10월까지 3.4%포인트 상승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0.3%포인트 상승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0.3%포인트 상승했다.

해 0.2% 하락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0.2% 하락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0.2% 하락했다. 10월 소비자물가는 0.2%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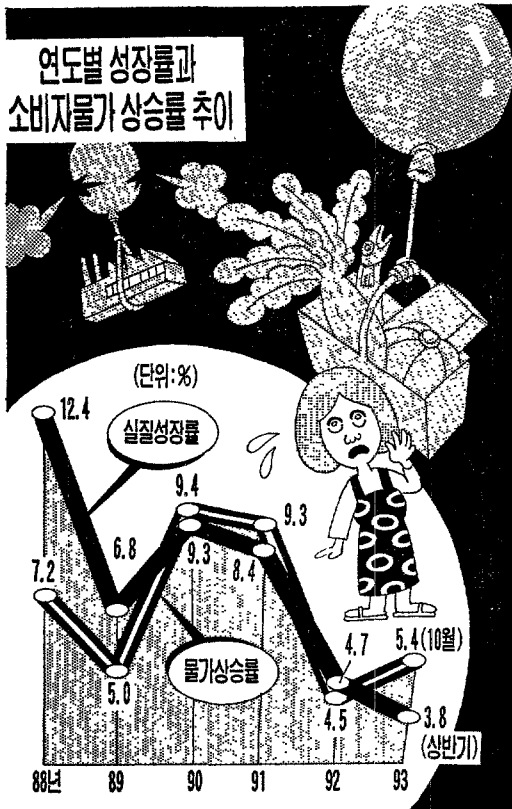


연평균 물가가 이처럼 크게 올랐을 때다. 10월 물가는 5.4%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연말 목표선

연말 목표선

연말 목표선



<그림 : 金弘烈기자>

성장과 물價
低성장 - 高물가로
우리 경제 먹구름

성장과 물가는 상반이다. 경제가 속속 커지나도 물가가 오르고 나면 성장의 혜택은 희박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나 정책담당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低성장 속의 高물가 현상'이다. 스위스패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물가를 떨어뜨리는 현상이다. 이를 특별히 하위 「경제의敵」 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 우리 경제에 이와 유사한 조짐이 보여 매우 걱정스럽다. 그림에서 보듯 성장을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성장

률(과물가상승률)은 대체로 비슷한 선을 그어왔다. 성장률이 잘 되면 물가도 적당히 오른다는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잘 벌다는 얘기가 되고 이 경우 아무래도 돈을 헐뜯게 되는 경향이 있어 물가가 어느 정도 자르받는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가에서는 이런 궤도와 영 다르다. 성장을 낮아지는데도 물가는 오히려 올랐다. 물상반기중 우리 경제는 3.8% 성장하는데 그쳤다. 상반기만 비교할 경우 작년의 6.6%나 91년 9.2%, 90년 10.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작년 연간 성장을 4.7%보다도 낮

그런데 물상반기중 소비자가 물가는 4.2%를 나타냈다. 그 후 물가는 더욱 10월까지 5.4%를 기록했다. 지난해 1~10월중 소비자가 물가는 4.7% 올랐었다. 내년 경제 역시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실행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불투명하다. 올해 설비투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을 봐도 낙관적 요소는 별로 없다. 부진한 성장속의 물가는 꾸준히 올리는 「기부나 배상환」이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되는 것이다.

<沈相福기자>

국내 주요기업들이 1년동안 정부와 민간기관
의 각종 통계조사에 응
해야 하는 건수가 업체
당 평균 64건이나 되는
등 통계조사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10
일로 통계조사기관간 유
사 중복통계를 통합 정
비하고 특히 조사대상업
체들이 정부가 공식승인
하는 통계와 미승인통계
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정
부승인통계마크를 제
정, 우용키로 했다.

또 통계조사기관들이
조사결과를 공표하기 전
에 통계청과 협의의 토록
하고 있는 공표협의제도
도 대폭 완화, 협의대상
통계종류를 현재의 3백
52종에서 1백12종으로
70%가량 감축키로 했
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1백55개

유사-중복 통계조사 통합정비한다

통계청, 民-官기관 조사남발로 기업 부담 커
공표협의제도 대폭 완화... 240종 자율공개

주요통계표본업체를 대
상으로 실시된 각종 통
계조사는 3백26종이나
되며 1개 업체가 1년
동안 응답한 통계조사건
수는 평균 6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大宇조선(1백85
건) 韓國철강(1백82건)
등은 평균 이틀에 한번
꼴로 통계조사에 응하는
등 1백건이상의 업체가
14.2%나 됐고 일부 업
체는 아예 통계응답전문
요원을 두는 사례까지
있었다.

통계청은 이처럼 지나
치게 많은 통계조사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유사 중복통계는 통합정
비하고 정부의 공식승인
을 얻지 못한 미승인통
계(1백79종)는 가급적
조사를 중지토록 유도키
로 했다.

〈林華기자〉

기업들 대상으로 작
성되는 각 기관의 통계
가 대폭 통합되고 통
계청과 협의될 거처야
공표될 수 있는 통계수
가 크게 줄어 각종 통계
의 시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통계청은 10일 발표
한 「통계조정기능 개선
방안」을 통해 기업에 과



정부승인 통계마크

중한 부담을 주는 중복
통계조사를 시정하기
위해 기업대상 통계 3
백26종 가운데 통계청
이 승인하지 않은 1백
79종을 중심으로 중요
성이 낮은 통계들을 정
비 통합키로 했다고 밝
혔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기업統計 신뢰성 높인다

民官통계 百79종 통합 企業부담 완화
'자유공표' 확대로 왜곡방지·時宜性 높여

통계조사에 응하고 있
으며 이같은 통계작성
을 위해 1명이상의 등
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3월부터 5월까지 1
백55개 제조업체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
업들이 연평균 64종의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들이
응하는 조사 가운데는
상공부의 기계공업경기
동향조사, 지방상공회의
소의 산업융합조사, 각
시도의 생산실적보고
등 생산 출하 재고 등의
실태를 중립적으로 문
는 통계가 많아 남비요
인이 큰 것으로 지적됐
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정부부처 등 각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가운데
통계청과의 협의를 거
쳐야 발표할 수 있는 대
상을 현재의 3백52종
에서 1백12종으로 약
70%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자유공표
가 가능해진 통계는 건
수가 통계청 등 활용도가
높고 시의성이 요구되
는 통계, 국제수지 등 작
성기관의 신뢰성이 높
은 통계, 자동차 등 특현
황을 업무과정에서 단
집계되는 통계 등이다.

〈諸貞任기자〉

정부통계 2百40종 통계청과 협의없애

정부가 공공기관의 작성하는 통계 중 신뢰성이 높고 신속을 요하는 통계는 앞으로 통계청과 협의하지 않고 공표할 수 있게 됐다. 또 여러 기관이 따로만 들어온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통계는 통합된다.

10일 통계청이 「통계조정 기금개선편안」을 마련, 정부나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이 작성한 후 통계청과 협의할 것을 거쳐 발표하는 3백52개의 통계 중 2백40개는 통계청과 협의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협의없이 공표할 수 있는 통계는 △진출·입국 통계, 시·도별 가계동향조사, 도시의 성이 요구되는 것 △국민계정 규제수치 등 신뢰성이 높을 것 △자동차 등류현황 등 행정기관 업무처리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집계되는 것 △행정부합계 등의 특정 분야의 통계로서 주로 작성기관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것 등이다.

金權中 통계청 통계 기획국장이 "다마지 1백12개 통

계는 작성업권이 좁거나 조사방법이 미흡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앞으로 개선편안과정을 거쳐 공표협의의 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또 여러 기관의 비슷한 내용을 조사하는 통계가 너무 많아 조사대상 기업들의 업무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통계는 행정회신차원에서 통합 정비하고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미승인 통계 중 중요하지 않거나 신뢰도가 낮은 통계는 조사를 중지시킬 방침이다. 또 미승인 통계가 승인 통계보다 사업체에 부담을 가중시켜 승인 통계 조사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 앞으로 정부의 승인 통계 조사 시에는 승인의 편의와 S자모양의 정부승인 통계마크를 조사표에 표시키로 했다.

통계청, 이달부터 규제완화

건물허가통계, 기계산업조사, 중소기업조사, 영업조사, 도시주택가계조사 등 2백40개 통계가 통계청과의 공표협의의 면제되며 면제된다. 또 공공기관 조사 통계, 기계공업조사, 산업동향조사, 생산지침, 중소기업체실태보고서 등 일련한 항목을 여러 기관이 조사하는 유사·중복 통계



가 통합된다. 통계청이 10일 통계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승인통계를 발표하기 위해 통계위원회를 열어 통계공표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240개統計 公표협의 면제

同一항목 여러機關 자료도 통폐합

해 중점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또 이런 기관이나 저런 단체가 비슷한 통계를 중첩으로 하더라도 민간기업 통계자료 작성과 보고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시킬 것이다.

이런 통계는 조사기관만 통지 내용이나 거의 같다. 예컨대 생산출하 재고통계 조사하는 통계청과 공공기관 통계조사(산업동향조사) 산업동향조사(산업조사) 산업조사(생산지침)의 소생산지침보고서와 신도시(인구체실태보고)와 인구수출산입(인구)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과감히 통합하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대신 통계청이 공표할 통계조사 상향수준 통계 조사는 1백12개 공표협의 대상 통계는 공표협의 절차를 거쳐 정부가 승인한 통계는 KSS가 직접 발표한다. △스프링 등을 주요 신뢰성을 높이고, 이른바 협의가 면제된 통계라도 부실의 여지가 커지면 다시 사전협의의 대상에 넣을 계획이 있다.

통계청의 이번 조치는 통계청의 규제완화라 할 만하다. 사실 그동안 통계청이 승인한 3백52개 통계는 발표청에 반드시 통계청의 허가를

정부가 모든 통계를 조정함으로써 국가 통계를 통제하고 심지어 조작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이번 2백40개 통계를 공표 협의대상에서 면제

△安商旭기자

統計관련 규제 대폭 완화

원인이 많이 발표... 「정부승인」마크제도 도입

기업대상 중점조사 정비

統計廳

통계청이 통계조사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통계청의 실업조사, 경제연대조사, 전국기업조사, 마크를 사용한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이 10월 15일의 내용에 표시된 「통계조사기관의 개선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야만 발표할 수 있었던 3백52개 통계청 시의청의 요구사항인 시면포를 인정받고 있는 2백40개 통계청은 앞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부처에서 작성하는 통계 2백46개 중, 건물연가 통계, 자동차의 운행량, 1백74개의 「지방기업·정부출연연구소·지방단체」의 작성연간 1백6개 통계 중, 시수택기조동향조사, 도수가 통계청의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이와 달리 통계청의 발표가 3~7일 가량 빨라질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이 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사」에 대한 「통계조사」의 대폭 전담해 기업들의 부담의 통계조사에 응하느라 정당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을, 제조업체의 생산·출하·재고액이나 경기에 즉·가계저축·수출입액의 수출입에 관한 통계

통계청을 2~5개 기업이 다른 다른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조사대상기업체」인 1백건의 통계조사에 응해야 하는 불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단체·민간기업이 만든 통계 중, 정부가 승인하는 3백52개 통계에 대해서는 「정부승인통계」라는 마

다.

경공업 쇠퇴 가속화

나감소, 광공업의 고공주파
발효와가장수준을향상시키는
추세를 보였다.

이밖의 지난해 광공업의
유형고정자산투자액(실비
투자)이 지난 91년에 비해
18.8%나 감소했으며 광
공업의 수출입액 수치가
차지하는 비상이었다. 지난 8
9년과 90년과 비교하면 수출
시작 전년도에 25.0%
로 감소했다.

이외에 주요한 통계청의
중사자 50만인 명을 초과
업체 7만 6천여개를 조사
해 92년 발표된 「92년도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에
나타났는데 지난해 경기부
진으로 광공업은 주로한
제조업체들이 전년 대비

지난해 광공업 사업체수
의 증가율이 80년대 초반의
후가장 높은가운데 경영
악화사업체수가 처음으로 중
화한 광공업 사업체수보다 적
어 지난해는 광공업의 쇠퇴한
상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의 여
파로 지난해 88년부터 증가
시작한 광공업 중사자수
경기부진이 겹쳐 지난해 말
에는 전년 대비 4.5%

통계청 '92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

工場자동화·경기부진·주원인의 사업체수도 重化學보다 적어

고전을 면치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50만인 이상 광공업 사업체수
는 92년말 현재 7만 6천
3백 54개로 91년말에 비해
3.2% 증가한 반면 그쳐
80년대 초반 이래 가장 낮
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거 광공업 사업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80년대 마
이너스 3.0%를 기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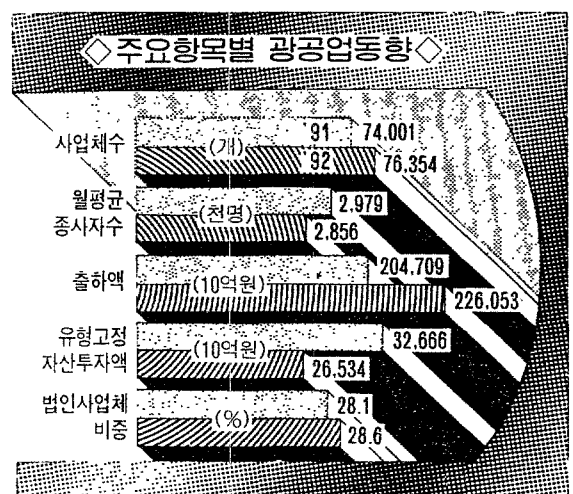
이후 82~88년 평균 8.4%
4%, 90~91년 사이에는
4.7%였다.

통계청이 이처럼 사업체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은
경기부진으로 휴폐업 사업
체가 증가하고 자동화 기계
설비의 증가, 소사장제의
확산, 협회회사나 위탁사
업체를 통한 생산체계의
확산으로 중연년 20인 이
상의 중대규모 사업체의

수가 줄어드는 때문으로
분해했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사업
체수는 5.7%가 늘어난
데 비해 경공업은 1.2%
증가에 그쳐 지난해에는
중화학공업체수가 3만 7
천 3백 75개로 3만 7천 2
백 90개인 경공업체수를 사
상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사업체도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1인당 평균연도 91년의
비해 15.5% 증가한 평균
9백 24만 9천 원으로 90년
의 18.8%, 91년의 20.
8%보다 증가율이 떨어졌
다. 다만 생산성과 사무직
간의 임금수준은 격차가 크
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비중 보면
중화학공업업체의 사업체수
가 경공업업체를 앞지르면서 출
하액 비중도 47.4%에서 48.
0%(1백 54조 7천 2백 20
억원)를 차지, 전년도의
68.3%보다 낮아졌다.



백 84만 9천 원으로 91년말
에 비해 4.5% 증가를
연계해 사무직보다 생산
직이 낮아진다는 여자가
다량에 집중했다.

연도별 광공업 중사자수
는 92년말 기준 50만 7천
83명으로 89년 대비 6.7%
늘어나다가 88년 마이너스
1.8%, 89년 마이너스
2.1%, 90년 마이너스
3.7%였다.

전체 중사자 수가 최근
들어 계속 감소세를 보
이면서 중사자수의 연평균
여연노 지인해 25주 7
전 6백 50만 인으로 전년 보
다 10.5% 증가한 데 그
쳐, 86~88년의 연평균 23
0%나 90~91년의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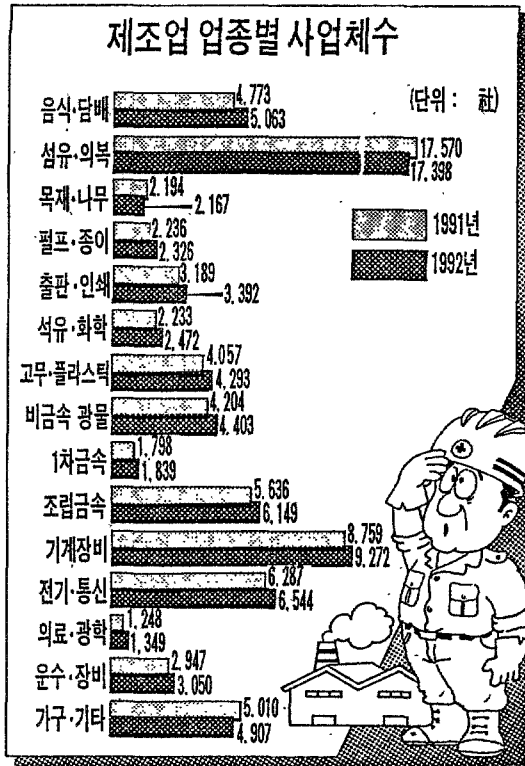
그런데 광공업 전체의
출하액 비중 수치의 차이는
비중이 88년과 90년까지
30% 이상이었다. 80년대
중반부터 중화학 기계기
지인해 25.0%에 그
쳤다.

지방별 출하액 증가율
은 서울 6.6%(부산 0.
7%, 대구 0.7%, 전라 0.
0%, 충청 0.0%, 강원 0.
0%, 경북 17.1%, 광주
14.0%, 전남 13.1%,
충남 10.0%, 전북 9.0%,
제주 8.0%로 증가율을 보
지 않는 지역의 신장률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지방업체의 생산이 늘
어 나섰지만 지방기업 및 향
단지의 조성이 확대되며
기업집적이된 볼 수 있다.

不景氣타개 自動化투자 늘었다

92년 鑛工業 통계 주요내용



生産性 높아져도 수익성 제자리 重化學업체 늘어 産業조정 반영

은 지난해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부가가치가 전년동기기에 비해 10% 상

설비확대에 따른 인력수요의 감소가 걸림 때문이다. 이처럼 제조업이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그 만큼 가운데에서 산업구조조정은 꾸준히 계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높아진 인력

드러지고 있다. 특히 중화학업종의 비중도 지난해보다 1.3%포인트가 높아졌다. 특히 자동차와 트레일러, 전기기계 및 변형장치·조립금속제품 등의 산업에 신규 기업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

승했지만 수익성을 따지는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은 42.9%로 전년 동기보다 나아지지 않았

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자동화설비를 꾸준히 늘렸고, 자본집약적인 중화학업종의 비중이 높아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됐던 셈이다.

이라고 온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기계설비를 나타내는 유형 고정자산의 규모는 전년동기기에 비해 20.9%가 늘어나 지난해 대비달이후 수출액의 증가율을 계속 우회하고 있어 자동화설비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D」기피 확산·業體當 중업업원 3명중 1명 줄어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92년 광공업조사통계를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광공업 업체수가 7만 6천 6백 66개로 전년 동기예 비해 3.4% 늘어나는 데 그친 것은 경기부진에 따라 중공업 사업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위로 19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를 5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를 19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를 6%의 증가를 나타냈고 중대형 사업체는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을 제외한 2백 22주 5백 30억 원으로 전년 동기예 비해 10.4% 증가한 데 비해 20% 가까운 증가율을 나타냈던 지난 90, 91년의 비하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화학업은

린 업체는 5만 2천 700개로 수를 많았던 출판·인쇄, 수출과 내수가 높은 신장세를 보였던 자동차·기계, 레이저·의료기기 등의 업종을 골라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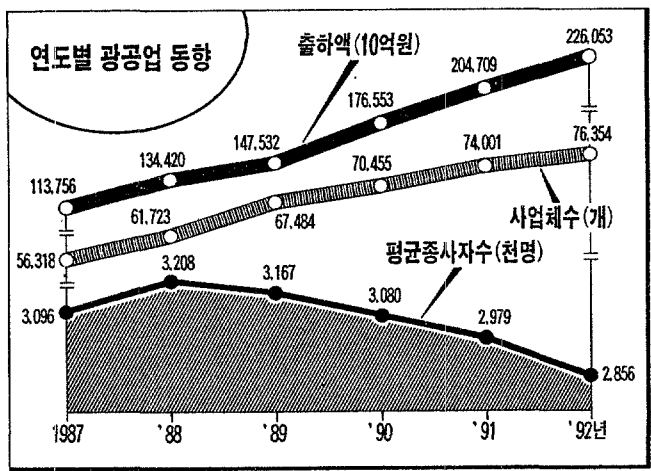
그런데 1인당 출하액이 15.9%로 전체 출하액 증가율을 앞섰고, 그 동안 자동화설비를 확대한 생산설비의 증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광공업의 수익성

지난해 중화학업종의 한 개사업체당 종사자수는 37명(이전 91년예 비해 3명 줄어든)이었다. 지난해 이후 4년째 제조업체의 종사자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근로자들의 제조업 기피현상과 경기부진과 기업들의 자동화

<李路복기자>

鑛工業 종사자 4년 연속 감소

광업 제조업 등 鑛工業 부문의 종사자가 4년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 「92년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현재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사 업체수는 7만 6천 3백 54



統計廳, 92년 조사결과 발표

自動化설비增加·減量경영이 원인 1인당전비前年보다 15% 늘어

비로 대체하고 있다. 92년의 전기설비 투자액과 91년 대비 26.5% 증가한 10,900억 원에 이르렀다. 92년 26주 5백 30억 원에 전년대비 10.4% 증가한 20,900억 원에 이르렀다. 92년 26주 5백 30억 원에 전년대비 10.4% 증가한 20,900억 원에 이르렀다.

7천 9백 16만 원으로 증가율이 15.2%를 기록, 전체 수출의 증가율을 앞섰다. 이는 자동화설비투자가 늘고 종업원수가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액도 96조 3천 8백 42억 원으로 전년대비 10% 상승에 그쳐 예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92년 중 지출된 연간 인건비는 25조 7천 6백 5억 원으로 종사자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전년대비 10.5% 늘었다.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한 9,924만 원으로 나타났다. 92년 26주 5백 30억 원에 전년대비 10.4% 증가한 20,900억 원에 이르렀다.

3천 원, 사무직은 1천 83만 7천 원으로 나타났다. 설비 투자액이 10.4% 늘었다. 92년 26주 5백 30억 원에 전년대비 10.4% 증가한 20,900억 원에 이르렀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을 6개 도시의 사업체 수 비중이 91년 48.9%에서 48.6%로 줄고 91년 당시 40.6%이던 종사자 수 비중은 39.5%로 축소됐다. 수출의 비중도 30.9%에서 29.7%로 감소했다.

<安商旭기자>

개로 전년에 비해 3.2% 증가에 그쳐 8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종사자수는 2백 85만 6천 명으로 전년대비 4.1% 줄어든 89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광공업의 종사자가 계속 감소하는 것은 생산직 인력을 기계자동화설비로 대체하고 있다. 96조 3천 8백 42억 원으로 전년대비 10% 상승에 그쳐 예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 1인당 급여액>

업종	1인당연간급여액(천원)		
	91	92	증가율(%)
공공	8,001	9,243	15.5
제조업	8,005	9,839	22.9
서비스업	8,169	10,270	25.8
건설업	9,457	9,736	2.9
타업종	7,547	9,166	21.5
제조업	8,001	9,233	15.4
식품	6,874	7,714	12.2
화학	13,188	14,955	13.4
유지	6,572	7,781	18.4
복합	5,564	6,410	15.2
제조업	6,329	6,990	10.4
서비스업	7,673	8,669	13.0
제조업	8,890	9,460	16.0
서비스업	8,890	10,367	16.6
제조업	13,324	14,553	9.2
서비스업	9,852	11,108	12.7
제조업	7,673	8,713	13.6
서비스업	8,606	10,076	17.1
제조업	10,832	12,053	11.3
서비스업	8,169	9,243	13.2
제조업	8,666	10,013	15.5
서비스업	7,044	8,798	24.9
제조업	7,701	8,599	11.7
서비스업	8,116	9,047	11.5
제조업	7,169	8,234	14.9
서비스업	10,395	11,947	14.9
제조업	11,899	15,446	29.8
서비스업	6,939	7,985	15.1
제조업	6,003	7,735	28.9



「물가 상승률」 계산 어떻게 하나

물가는 생각보다 더 빠르나 추
상치이며 전통적인 말이다. 물
가지수 작성방법을 보면 면서
물가상승률을 보면 자칫 오해
를 받을 수 있다. 물가는 천차
만별인 상품의 가격 서비스와
공급량의 대가인 노임 등을 포
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며, 이
러한 포괄적인 물가의 수치를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을 물가
조사라 하고 물가조사의 결과
를 지수로 표현한 것이 물가지
수이다.

물가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에 대한 개념을 조사한다. 예
컨대 생산자지수 물가조사 수
출물가조사 수입물가조사 소
자물가조사 등 여러가지 및 일
급조사가 있다.

여기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
는 도시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예로 들어 지
수작성 방법을 설명하기로 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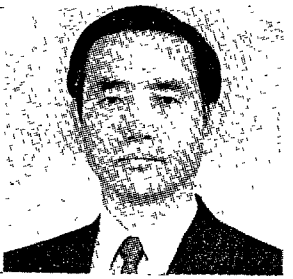
조사대상인 도시 물가인 도
시지수의 약 1천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가계부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출발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선정한다.
현재의 조사대상품목은 8천여
의 품목으로 물가인 소비자출발
8천 4천 7백 70종의 1만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8천여종의
출발 품목을 기준으로 4백 70
개가 선정되었으며 여기에
도시 주택에 대한 조사이다. 저
속 수급제에 비 소비지출은
조사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선정된 조사대상 품목은 가
계의 조사된 각각의 지출액
에 따라 비중이 정해진다. 가
중치만 1인 한 가구의 가계부
록이 전체 소비자물가에 연

정도 영향을 줄 것이 지를 미
한 수치이다.
쌀값이 10% 오른 것과 고추
값이 10% 오른 경우와 도시가
정의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
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사되고 있는 소비자

기준품목 가격의 평균상승률

470개 품목·32개 도시 3회조사 산출
「피부물가」지역·상품 따른 느낌 차이

물가조사 발표 중 일반민의 가
중치만 전체를 1천으로 배
45.3%이다. 쌀값이 10% 오른
전체 소비자물가는 0.453
% 올랐다고 보면 고추값이
10% 오른 것만 고추의 비중은
3.7%이므로 0.037%
올라게 된다.



趙秉甲
▲통계청 조사국장▲

가격이 상승률보다 높다고
잘못된 고추보다 10배 이상
전체 물가의 영향을 받게 된다.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과 선
정된 품목에 가중치를 부여하
는 작업이 물가지수를 만들거
위한 기본절차를 정해준다. 작
년에도 5천여 품목으로 이루어
진다.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도 5
년 또는 10년째 유지되고 있
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는 소비패턴 즉 도시 가정의
생활패턴이 모습이 얼마나 빠
게 변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4백 70개 조사품목의 가격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32개 도시
에서 한 달에 3번씩 조사한다.
계산과정의 다양성 절충부
말하면 4백 70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이 계산되어 발표된다.
것이다.
평균상승률에는 어떤 시장
에서 조사된 가격으로서 1개
도시의 평균상승률을 계산하
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32개
도시의 상승률을 평균한다.
것과 포함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4백 70개 품목의 변동률
을 여기서 어떤 품목별 가중
치의 영향을 평균하고 과정



93.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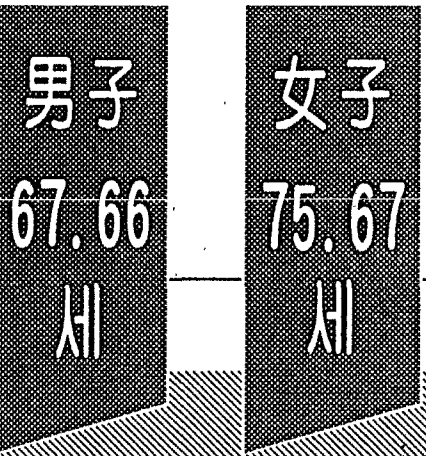
통계청 발표 「91년 生命表」 분석

중수기 중에는 다다그 40세의 金夫壇씨(가명)가 80세까지 양생토 40년간 더 살았다는 기사가 실렸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25세의 가정주부 朴明子씨(가명)가 70세까지 살았다는 기사가 실렸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25년 통계청의 발표한 「91년 生命表」에 따르면 金氏가 8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25.1%로, 박씨가 7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78.1%로 각각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71.57세로 50년대에 52.86세



평균수명 더 늘었다

◇평균수명 국제비교

구	가	日本 (91)	스웨덴 (90)	프랑스 (90)	美國 (89)	臺灣 (90)	헝가리 (90)	에스토니아 (90)	필리핀 (89)
남자	67.66	76.11	74.81	72.75	71.80	71.33	65.13	64.72	62.50
여자	75.67	82.11	80.41	80.94	78.60	76.75	73.71	74.94	66.10
차이(여-남)	8.01	6.00	5.60	8.19	6.80	5.42	8.58	10.22	3.60

※일본은 가이생명표(1991), 대만은 대만통계연감(1992), 기타는 유엔인구통계연감(1991).

(0~4세) 양생토를 제외한 40세는 대체로 우연의 생명표와 차이가 없다. 다만, 나이의 영향은 사망률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박씨의 경우 15세 미만의 고위험층에 속하기 때문인 생명표보다 낮지만 그 이후의 고위험층의 위험도가 수백 배가 넘는다는 점을 40대에서 큰 차이를 보이다가 50대부터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40대 박씨의 사망률이 45~49세 연령층의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8.53

◇연령별 기대 餘命 (단위: 年)

연령	남자		여자	
	1983	1991	1983	1991
0歲	63.84	67.66	72.24	75.67
1	63.86	67.33	72.36	75.38
5	60.37	63.60	68.92	71.64
10	55.71	58.80	64.24	66.80
15	50.92	53.94	59.44	61.91
20	46.28	49.21	54.73	57.06
25	41.72	44.54	50.06	52.25
30	37.18	39.93	45.36	47.45
35	32.70	35.40	40.70	42.67
40	28.36	30.94	36.09	37.93
45	24.34	26.71	31.61	33.27
50	20.54	22.76	27.25	28.77
55	16.97	19.04	23.06	24.38
60	13.72	15.48	19.02	20.12
65	10.86	12.99	15.23	16.12
70	8.40	9.48	11.82	12.46
75	6.38	7.11	8.87	9.29
80	4.71	5.19	6.29	6.70

만 7% 이상은 88.66%이며 80세까지는 남자가 23.49% 여자가 6.00%에 불과했다.

8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5.87명에 불과하다.

평균수명의 높아짐에 따라 기대연령이 6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남자의 경우 75.2

◇연도별 평균수명 추이 (단위: 세)

연도	1955-60	1966	1970	1978-79	1983	1985	1987	1989	1991
계	52.39	61.85	63.15	65.81	67.94	69.00	69.99	70.71	71.57
남자	51.12	59.74	59.77	62.70	63.84	64.92	65.95	66.73	67.66
여자	53.73	64.07	66.70	69.07	72.24	73.33	74.14	74.88	75.67
차이(여-남)	2.61	4.33	6.93	6.37	8.40	8.41	8.19	8.15	8.01

때 8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남자가 2천3백 49명, 여자가 4천7백 63명인 셈이다. 또 정년퇴직(60세 기준) 후 남자가 더 살 수 있는 확률은 15.48년, 여자가 20.12년 이므로 정년퇴직 후 평균기대 수명이 「차이」로 정년퇴직 후 「차이」로 이 시점의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30세의 남자와 25세의 여자가 결혼했을 경우 남자가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은 39.60년, 여자는 52.25년인데 두 사람이 결혼 후 여자가 혼자 사는 기간은 12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산출됐다.

〈韓鐘范 기자〉



93.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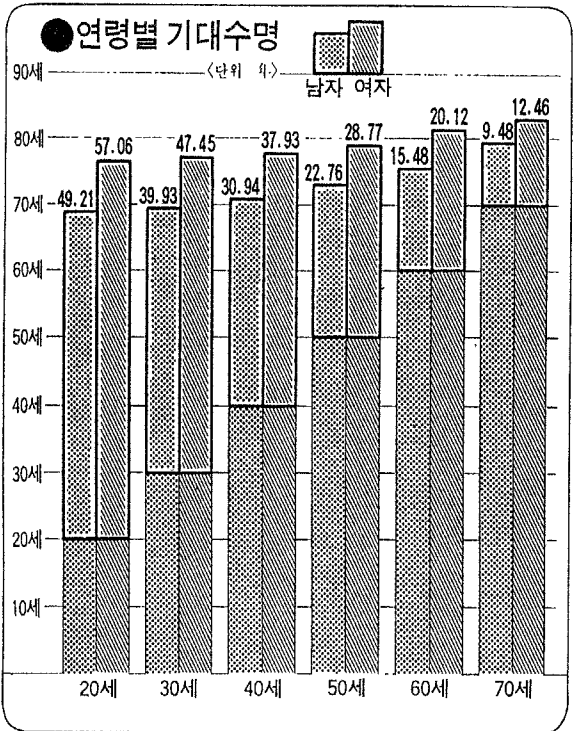
30세男 25세女결혼 여자가 12년 더 산다

통계청 「91년도 生命表」 발표

30세남자와 25세여자가 결혼할 경우 여자가 평균 12년 더 산다.
 80초과자 39.01명, 70초과자 28.77명, 60초과자 20.12명, 50초과자 12.46명이다.
 그러나 60세의 경우 현재 한 남자가 퇴직후 15개월도 살지 못하며 사망하는 비율이 20%에 달한다.
 여자에게 60세에 퇴직하면 15개월도 살지 못하며 사망하는 비율이 20%에 달한다.
 그러나 60세의 경우 현재 한 남자가 퇴직후 15개월도 살지 못하며 사망하는 비율이 20%에 달한다.
 여자에게 60세에 퇴직하면 15개월도 살지 못하며 사망하는 비율이 20%에 달한다.

평균퇴직수명 71세 60세退職남자

연령별 기대수명 표
 90세 26명 남 24명 여
 80세 49.21명 남 47.45명 여
 70세 39.93명 남 37.93명 여
 60세 28.77명 남 20.12명 여
 50세 15.48명 남 12.46명 여
 40세 9.48명 남 7.15명 여
 30세 5.52명 남 4.00명 여
 20세 3.67명 남 2.44명 여
 10세 1.98명 남 1.42명 여



30년새 19년 늘어 평균편 15년간 장수

우리나라는 1963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30년간의 인구를 조사한 결과, 평균수명이 15년간 늘어났다고 나타났다. 1963년 당시 평균수명이 47.77세였던 반면, 1992년에는 62.72세로 늘었다. 이는 1963년 당시 100명 중 47명만 47세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추산되던 것과 비교하면, 1992년에는 100명 중 62명 이상이 62세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63년 1.4%에 불과했던 반면, 1992년에는 10.2%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1963년 당시 100명 중 10명만 100세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던 것과 비교하면, 1992년에는 100명 중 1.2명만 100세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1963년 당시 100명 중 10명만 100세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던 것과 비교하면, 1992년에는 100명 중 1.2명만 100세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30년간의 인구를 조사한 결과, 평균수명이 15년간 늘어났다고 나타났다. 1963년 당시 평균수명이 47.77세였던 반면, 1992년에는 62.72세로 늘었다. 이는 1963년 당시 100명 중 47명만 47세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추산되던 것과 비교하면, 1992년에는 100명 중 62명 이상이 62세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63년 1.4%에 불과했던 반면, 1992년에는 10.2%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1963년 당시 100명 중 10명만 100세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던 것과 비교하면, 1992년에는 100명 중 1.2명만 100세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생존율 여자가 높음

우리나라는 1963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30년간의 인구를 조사한 결과, 평균수명이 15년간 늘어났다고 나타났다. 1963년 당시 평균수명이 47.77세였던 반면, 1992년에는 62.72세로 늘었다. 이는 1963년 당시 100명 중 47명만 47세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추산되던 것과 비교하면, 1992년에는 100명 중 62명 이상이 62세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63년 1.4%에 불과했던 반면, 1992년에는 10.2%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1963년 당시 100명 중 10명만 100세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던 것과 비교하면, 1992년에는 100명 중 1.2명만 100세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연령별 생존율 (특정 연령까지 살아남을 확률: 단위 %)

연령	남자					여자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0	93.25	86.99	75.27	54.02	23.49	96.25	93.81	88.66	76.40	47.63
1	94.18	87.85	76.02	54.55	23.72	97.15	94.69	89.49	77.42	48.07
5	94.56	88.21	76.33	54.77	23.82	97.49	95.03	89.81	77.39	48.24
10	94.87	88.50	76.33	54.95	23.89	97.72	95.25	90.02	77.57	48.36
15	95.10	88.72	76.76	55.09	23.95	97.89	95.41	90.17	77.70	48.44
20	95.61	89.19	77.17	55.38	24.08	98.14	95.66	90.40	77.90	48.56
25	96.29	89.82	77.72	55.77	24.25	98.48	95.98	90.71	78.17	48.73
30	97.19	90.66	78.45	56.30	24.48	98.87	96.37	91.07	78.48	48.92
35	98.40	91.79	79.42	57.00	24.78	99.35	96.84	91.52	78.86	49.16
40	100.00	93.29	80.72	57.92	25.19	100.00	97.47	92.12	79.38	49.43
45		95.83	82.91	59.50	25.87		98.40	93.00	80.13	49.96
50		100.00	86.53	62.09	27.00		100.00	94.51	81.44	50.77
55			91.99	66.01	28.70			97.71	83.33	51.95
60			100.00	71.76	31.20			100.00	86.17	53.72
65				81.73	35.35				91.05	56.76
70				100.00	43.48				100.00	62.34
75					59.87					73.80
80					100.00					100.00

※ 표본 방법: 30세 남자가 6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고딕글씨체의 78.45%.

우리나라는 1963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30년간의 인구를 조사한 결과, 평균수명이 15년간 늘어났다고 나타났다. 1963년 당시 평균수명이 47.77세였던 반면, 1992년에는 62.72세로 늘었다. 이는 1963년 당시 100명 중 47명만 47세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추산되던 것과 비교하면, 1992년에는 100명 중 62명 이상이 62세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963년 1.4%에 불과했던 반면, 1992년에는 10.2%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또한, 1963년 당시 100명 중 10명만 100세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던 것과 비교하면, 1992년에는 100명 중 1.2명만 100세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林養振기자〉

평균수명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91생명표 **男67·女75세... 8년差**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1.5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남자의 평균 수명은 67.6세, 여자는 75.67세로 여자가 8년 정도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91년 발표된 「91년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지난 50년대말 52.39세에서 70년 63.15세, 83년 67.94세, 89년 70.71세, 91년 71.57세로 꾸준히 높아져 온 추세다. 이 가운데 수평향상과 의료기술 발달 때문으로 보건계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40세의 남자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이 25.19%

생활향상·의료기술 발달 영향

40세男 80세生存확률 29%·女50%

동갑結婚 과부기간 8년

40살의 남자가 80살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비율은 29%에 불과하다. 반면 여자는 50살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비율이 50%에 달한다. 68세의 남자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이들과 기대여명의 기간은 83년엔 13.72년, 91년엔 15.48년으로 늘어났다. 여자는 각각 20.12년, 21.02년에서 20.12년, 21.02년으로 각각 늘었다. 보건계는 이같은 추이를 보면 앞으로 선진국에 준하는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평균수명도 70.66세, 여자는 75.67세에서 70.11년, 여자는 80.11년으로 나타

남자의 수명이 지난 85년 기준엔 8.41년까지 늘어났다. 다소 그 폭이 좁아진 것이다. 보건계는 앞으로 동갑내 과부기간이 8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세의 남자와 2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각각 39.63년과 52.51년으로 이들과 과부기간이 12년 정도 된다. 보건계는 앞으로 UIC의 연평균 생명표와 비교하면 40세 남자의 기대여명이 11.9년, 91년 9.7년(남)·9.81년(여)로 3.1명(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文聖雄기자

연령별 기대여명

연령	남 자			여 자		
	89	91	91	89	91	91
0세	63.84	66.73	67.66	72.24	74.88	75.67
1	63.86	66.53	67.33	72.36	74.75	75.38
5	60.37	62.85	63.60	68.92	71.07	71.64
10	55.71	58.09	58.80	64.24	66.26	66.80
15	50.92	53.25	53.94	59.44	61.40	61.91
20	46.28	48.52	49.21	54.73	56.57	57.06
25	41.72	43.89	44.54	50.06	51.79	52.25
30	37.18	39.32	39.93	45.36	47.01	47.45
35	32.70	34.81	35.40	40.70	42.24	42.67
40	28.36	30.35	30.94	36.09	37.56	37.93
45	24.34	26.16	26.71	34.61	32.94	33.27
50	20.54	22.26	22.76	27.25	28.47	28.77
55	16.97	18.57	19.04	23.06	24.12	24.38
60	13.72	15.07	15.48	19.02	19.93	20.12
65	10.86	11.94	12.99	15.23	15.96	16.12
70	8.40	9.16	9.48	11.82	12.33	12.46
75	6.38	6.85	7.11	8.87	9.20	9.29
80+	4.71	5.06	5.19	6.29	6.61	6.70

연·사·단·1·초·명·출·생·을·기·중·8·1·년·1·7·3·명·에서·8·6·년·1·2·5·명·8·9·년·1·1·9·명·9·1·년·9·7·명·(남)·9·8·1·명·(여)·9·3·1·명·(수·준)·로·크·게·낮·아·졌·다·▲·文·聖·雄·기·자·

중화학부문 생산 높은 증가율



자동차 油化 컴퓨터 등 호조

공장가동률 평균 81% 18개월만에 최고

10월중 산업활동은 건설경기가 부진했으나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활발, 전체적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동차 선박 기계장비업종의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데 힘입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1.2%로

통계청 발표 지난달 동향

전달보다 2.9%포인트 증가했으며 작년 4월(82.5%) 이후 18개월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업률은 2.6%, 계절조정치로는 2.9%를 기록해 고용사정은 여전히 좋지않았다.

10월중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93. 9	93. 10
총생산(계)	10.4	11.1
제조업	12.4	13.8
건설업	4.7	5.5
서비스업	10.1	10.9
소내제조업	15.7	16.2
매개설(계)	7.1	7.6
기계장비	10.1	11.3
선박	14.8	15.6
자동차	41.2	42.0
기계장비업종	78.2	81.2
제조업	78.0	80.9
건설업	41.0	41.1
서비스업	41.0	41.1

註: 제조업가동률, 실업률, 경기선행지수는 당월수치, 나머지는 작년 같은달 대비수치임.
(자료: 통계청)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제조업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석유화학, 컴퓨터 등 중화학업종의 호조를 견디며 2.9% 증가세를 보인 데 힘입어 전달대비 5.1% 증가했다. 10월의 비해 호조를 보인 인건비는 자동차(12.4%), 기계장비(21.2%), 석유화학(6.8%), 기계장비(4.6%) 등이었으며 부진한 업종은 비금속광물제품(-4.8%), 전기기계(-0.6%) 등이었다. 재고도 전달보다 0.5% 감소했으나, 작년 같은 달 대비로는 2.2%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전기주요업종인 자동차, 석유화학, 컴퓨터 등의 중화학업종은 생산이 호전된 상태에 서 재고수준도 크게 떨어졌고, 컴퓨터도 생산조절을 통해 재고증가세가 둔화돼

다만 전기, 재고수준이 인건비 상승과 맞물려 인건비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1.5% 증가했다. 해서는 1.5% 감소했다. 투자부문의 호조는 국내가계수주가 공영민간의 발주 증가에 힘입어, 전달비 10.2% 증가 대비 40.5%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기계류수입은 작년보다 43.9% 증가를 기록했다. 경기선행지수는 선형지수가 1%, 동행지수는 0.8%씩 각각 증가해 향후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1월 소비자物價 내림세

前月보다 0.2% 농축산물값 안정으로

지난 10월 5.4%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가 11월들어 농축산물의 안정에 힘입어 다소 수그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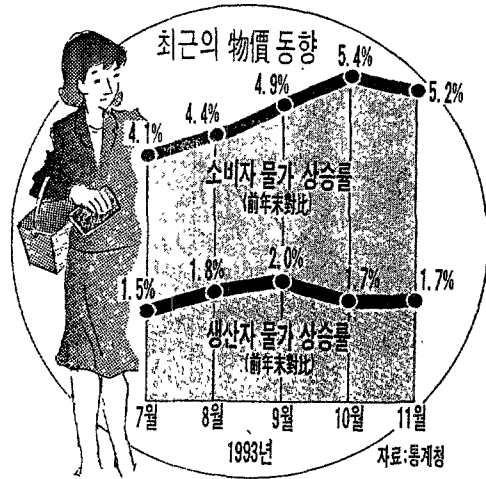
통계청은 1일 11월말까지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2% 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올들어 월간 물가가 내려간 것은 지난 7월의 0.1%포인트 하락에 이어 두번째이다. 11월 물가가 이처럼 내려간 것은 과일생산을 보인 배추가 물가하락을 주도하는데다 밀감·무 등 과채류의 출하가 증가돼 가격

이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산물은 일반미, 콩, 팥, 쌀, 산지반입부진과 수육종가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배추, 밀감 등 과채류의 가격 하락으로 전 체로는 1.7% 하락했다. 축산물은 닭고기가 상승을 보였으나 돼지고기의 하락으로 전체적으로 0.6% 떨어졌고 수산물도 수육부진으로 전체로 0.7% 내렸다.

공산품은 지난달 가격을 올렸던 저가품의 반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하해 전체적으로 0.1%의 소폭 상승에 그쳤다.

개인서비스요금은 목욕료, 釜山·大邱지역에서 청정염료 대체에 따라 전 달에 비해 0.2% 상승했고 전월세도 전월에 비해 0.2% 올라 예년에 비해 안정된 모습이었다. 생산자물가는 전달과 보

합세를 유지해 지난 연말에 비해 1.7% 상승했다.



物價 0.2% P 하락

통계청·韓銀 발표을 두 계로 5.2% 올라

11월중

치수업 물가가 농조산물 가격의 안정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 통계청과 韓銀이 1일 발표한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11월과 10월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졌다. 5.2% 상승했다. 11월말까지 소비자물가는 11월중 전 달과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11월말까지 1.7% 올랐다. 소비자물가를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은 일 반미·콩 등 곡물가가 산지에서의 반입부진에다 수요가 늘어서 폭을 올렸으나 배추·밀 등 과채류의 가격 하락으로 전체적으로 1.7% 떨어졌다. 또 공산품의 경우를 보면 일부 품목의 가격인하로 0.1% 상승에 그쳤고 개인서비스요금과 전월세값도 각각 전월에 비해 0.2% 올라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고학력失業」 갈수록 심화

대추이상 4% 작년보다 4만명 늘어

대졸이상 고학력실업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3.4분기 중 대졸이상 실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만명(40%)이 증가하여 대졸이상 실업률은 4.0%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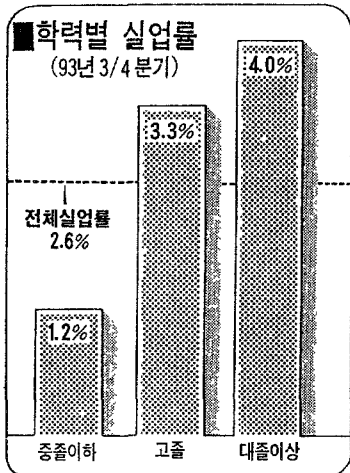
그러나 같은 기간 중 전체 실업률은 2.6%로 2.4분기에 비해 0.2%포인트 줄어드는 등 다소 개선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중 경제활동인구는 2천15만2천명(11월)로 전년 동기 대비 43만8천명(11월)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자수는 1천9백63만3천명(11월)로 전년 동기 대비 35만4천명(1%) 증가하여 지난해 4.8% 증가한 199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일 통계청의 발표한 「93년도 3.4분기 전국의 실업률」에 따르면, 다른 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률이 증가하는데 고용사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률의 경우 지난해 3.4분기에 61.8%에서 올해 2.4분기 62.1%, 3.4분기 62.2%로 늘어났다.

실업자는 남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만4천명이 늘어나 모두 51만9천명이었다. 실업자는 특히 고졸이상인 고학력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자 중 고졸이상 실업자는 42만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2일 통계청의 발표한 「93년도 3.4분기 전국의 실업률」에 따르면, 다른 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률이 증가하는데 고용사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률의 경우 지난해 3.4분기에 61.8%에서 올해 2.4분기 62.1%, 3.4분기 62.2%로 늘어났다.

실업자는 남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만4천명이 늘어나 모두 51만9천명이었다. 실업자는 특히 고졸이상인 고학력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자 중 고졸이상 실업자는 42만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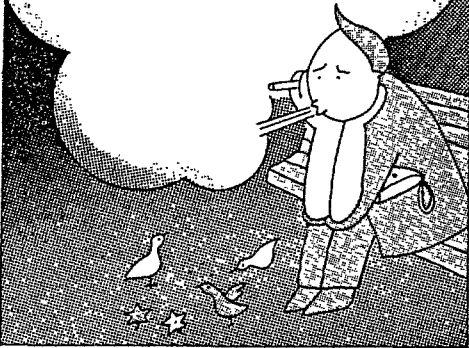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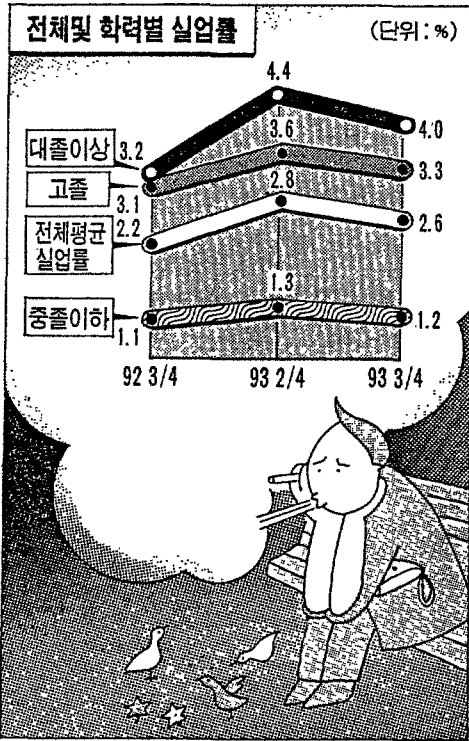
실업자는 남자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8만4천명이 늘어나 모두 51만9천명이었다. 실업자는 특히 고졸이상인 고학력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자 중 고졸이상 실업자는 42만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高學歷실업자 "눈덩이"

전문대졸 이상 40%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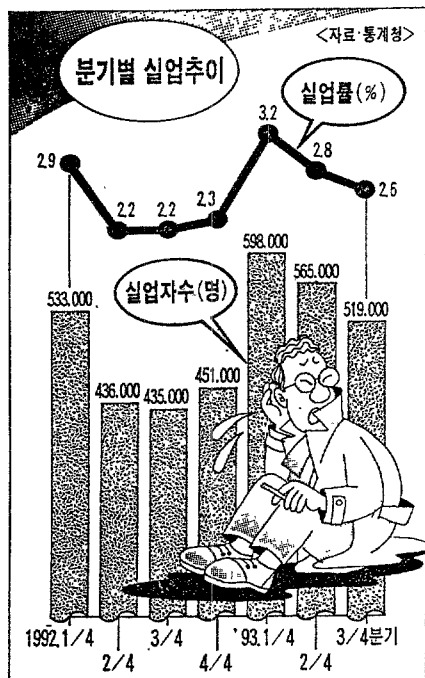
전문대졸 이상 40% 늘어
전체 실업자의 27% 달해

3분기 고용률 향상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
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특
3분기 고용률 향상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
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특



이러한 눈덩이 현상은 고학력 실업자가 2년 발표한 통계에 3.4분기 전국 고용률 향상의 파급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92년 4분기 2.6%에서 93년 3분기 2.6%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졸 실업률은 3.1%에서 3.3%로 0.2%포인트 상승했다. 대졸 이상 실업률은 3.2%에서 4.4%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은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중졸 이하 실업률은 1.1%에서 1.2%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고졸 이상 실업자가 40% 증가했다. 고졸 실업자는 24만 1천명에서 28만 1천명으로 4만 1천명(17.0%) 증가했다. 대졸 이상 실업자는 15만 1천명에서 19만 2천명으로 4만 1천명(27.2%)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는 22만 2천명에서 27만 3천명으로 5만 1천명(22.9%) 증가했다. 고졸 이하 실업자는 11만 1천명에서 11만 2천명으로 1천명(0.9%) 증가했다. 고졸 실업자는 11만 1천명에서 11만 2천명으로 1천명(0.9%) 증가했다. 대졸 이상 실업자는 15만 1천명에서 19만 2천명으로 4만 1천명(27.2%)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는 22만 2천명에서 27만 3천명으로 5만 1천명(22.9%) 증가했다. 고졸 이하 실업자는 11만 1천명에서 11만 2천명으로 1천명(0.9%) 증가했다.



대졸失業者 1년새 4만명 늘어

작년 3·4분기이후 1년새에 실업자가 8만4,000명이 늘어났고 특히 대졸이상 실업자가 4만명이나 증가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93년 3·4분기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51만9,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9.3%증가하였고 실업률은 0.4%포인트 늘어난 2.6%를 나타냈다.

실업자중 특히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못구한 대졸(전문대포함)실업자는 92년 3·4분기의 10만명에서 40%(4만명)나 팽창된 14만명에 달하고 실업률도 0.8%포인트 증가한 4.0%를 기록, 고학력실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 연령별로도 연령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았다. 15~19세의 실업률은 9.2%이고 20~24세의 실업률이 8.1%를 차지한 반면 30~54세는 1.4%, 55세이상은 0.5%의 낮은 실업률을 각각 보였다.

이밖에 업종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청, 「올3분기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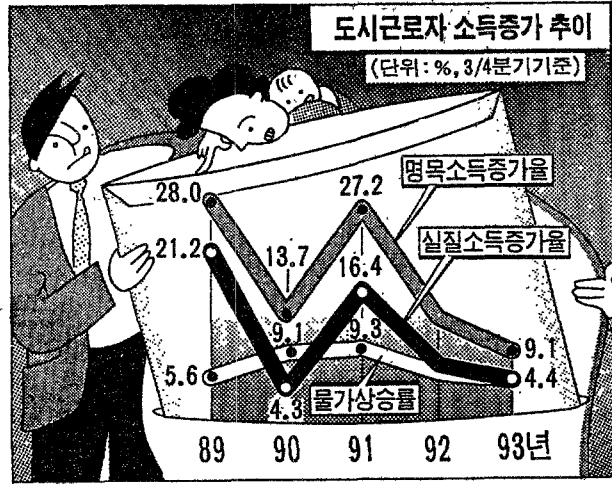
전직실업자는 30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4.3%(3만8,000명)증가한데 비해 새로 일자리를 찾는 신규실업자는 21만7,000명으로 27.6%(4만7,000명)나 늘어나 신규실업의 증가가 전직실업자의 증가를 앞질렀다. 전직실업자중에는 섬유 의복및 모피제품등의 경공업관련산업을 떠나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다.

실업자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경기회복기대에 따라 그동안 아예 취업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사람들이 구직활동에 적극 나선데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풀이했다.

한편 3·4분기 현재 취업자는 1,963만3,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35만4,000명(1.8%)증가해 작년 3·4분기(1.1%증가)이후 분기별로는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한편 지역별 실업률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가 평균3.5%로 9개도 지역의 평균실업률 1.7%를 훨씬 웃돌았다.

총 8만 4천명 증가... 절반 차지
실업률 2.6%... 6대도시 더 높아



도시근로자 3분기 소득 1백53만원

3분기 집계

지난 3·4분기(7·9월)중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전년 동기대비 4.4%(실질기준)증가에 그쳐 90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15일 조사됐다. 가계지출증가율도 전년동기 대비 5.6%로 90년 이후 가장 낮았으나 소비지출 증가가용 신용이자 유지를 비롯한 개인교류비

와 외식비 증가율도 여전히 높았다. 통계청의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조사」에 따르면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1백53만4천원(명목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3·4분기에 소득증가율은 90년 3·4분기의 4.3%, 91년 3·4분기의 1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가계지출은 1백11만4천원(명목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3·4분기에 지출증가율은 90년 3·4분기의 4.3%, 91년 3·4분기의 1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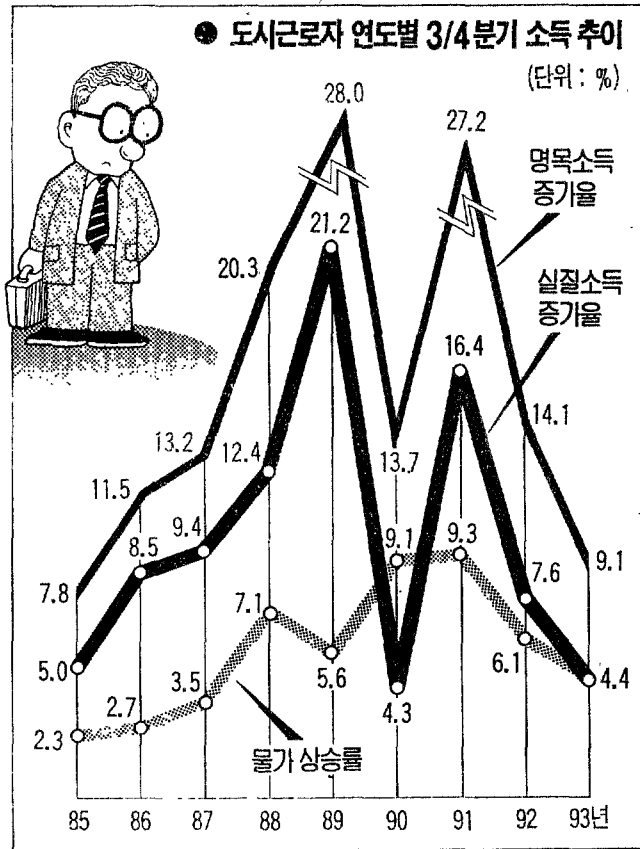
증가율 4.4%... 90년후 최저

지출도 제자리... 교통·외식비는 상승

향에 의하면 3·4분기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1백53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3·4분기에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1백53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 3·4분기에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은 1백11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3·4분기에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증가율은 90년 3·4분기의 4.3%, 91년 3·4분기의 1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가계지출은 1백11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 3·4분기에 지출증가율은 90년 3·4분기의 4.3%, 91년 3·4분기의 16.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소비지출 내역은 교통통신비(22.5%)·주거비(11.6%)·피복신발비(10.9%)가 비교적 높게 증가했으며 이중 개인교통비는 자가용 승용차의 높은 증가율(25.1%)을 반영해 31.5%·외식비는 20.7%가 각각 증가했다. 소득에서 지출을 제외한 여유자원은 월평균 42만2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으며 가처분 소득분의 후자연 후자율은 29.9%로 작년의 30.6%에서 0.7% 포인트 낮아졌다.

【金俊기 기자】



3분기 근로자소득 4.4% 증가 그쳐

지난 3/4분기(7~9월)중 도시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과 견주어 4.4%(실질기준)에 그쳐 지난 90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5.6%로 90년 이후 가장 낮았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3/4분기중 월평균 소득은 1백53만4천원으로 지난해 3/4분기보다 4.4%(명목기준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중의 소득증가율은 지난 90년 3/4분기의 4.3%, 91년 16.4%, 92년 7.6%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크게 낮아져 경기침체를 반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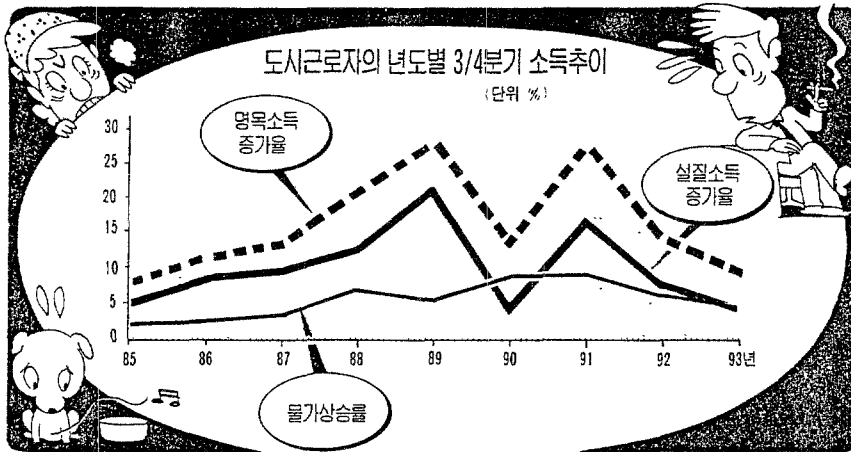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은 전체의 87.0%로 '91, '92년의 86.1%에 비

해 다소 높아졌고 전체소득 중 가구의 근로소득은 14.9%로 지난해의 12.4%에 비해 높아졌다.

가계지출은 1백11만2천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6%(명목기준 10.3%) 증가에 그쳐 역시 90년 이후 3년 만에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지출 내역을 보면 교통통신비(22.5%), 주거비(11.6%), 피복신발비(10.9%)가 비교적 높게 늘었으며 이 가운데 개인교통비는 승용차 보유의 높은 증가율(25.1%)을 반영해 31.5%, 외식비는 20.7%가 각각 늘었다. 소득에서 지출을 뺀 흑자액은 월평균 42만2천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0% 증가했으며 가처분 소득분의 흑자액인 흑자율은 29.9%로 지난해의 30.6%에서 0.7%포인트 낮아졌다.

도시근로자 家口소득 거북이걸음



통계청, 3.4분기 가계수지동향 분석

썩썩이난 토끼걸음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은 거북이걸음인데, 물가상승률은 토끼걸음처럼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소득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나, 의식비의 개인포용비 지출이 더욱

9%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질렀음을 의미한다.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소비는 그만큼 늘릴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결기가 나빠 소득증가속

4.4% 증가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5%로 떨어졌다.

가운데 특히 25~38세 연령층에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주요 부문별 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사실을 반영해준다.

가다소득은 월평균 19만 8천 8백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지만, 실질소득은 2.5% 감소했다.

1월 1백53만3천원 벌어 1백11만2천여원 지출

늘어나는 걸까?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1백53만 3천 6백 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1백11만 2천 원의 지출을 했다.

이 소득과 소비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전례적으로 9.1%와 10.3%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물가상승률도 10.3%로 증가하면서 실질소득은 4.4% 증가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9%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질렀음을 의미한다.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소비는 그만큼 늘릴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결기가 나빠 소득증가속

가다소득은 월평균 19만 8천 8백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지만, 실질소득은 2.5%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백53만 3천 6백 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1백11만 2천 원의 지출을 했다.

이 소득과 소비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전례적으로 9.1%와 10.3%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물가상승률도 10.3%로 증가하면서 실질소득은 4.4% 증가했다.

소비증가율 10.3% 소득증가 9.1% 앞질러

전체 소비지출증가율은 1백이던 100만 원의 소비비가 16.9% 개인포용비(개인차 구입비)가 16.8% 증가한 19.1%로 각각 11.4%와 7.1% 늘어났다.

이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의식비(10.1:11.9)와 개인포용비(10.1:16.9)의 개인포용비(10.1:16.9)의 더욱 증가했고, 교육비(20.6:7.1)와 잡비(22.2:11.4)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가중단위의 의식부와 자민잔이라고 있고 자가용이 그 비율을 면해서 썩썩이도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소득에서 소비지출세금과 이진을 빼 이윤마가 잔부소득인 월평균 1백40만 6천 4백 원이므로, 이 같은 소비지출을 제외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1백 42만 4천 6백 원이다.

총자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4천 원(6.0%) 증가했지만, 그 중 1%의 물가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저축요인이 줄어든다. 이렇지 못했다.

총자원은 늘어나는 속도를 유지하는가? 가계소득(29.9%)은 전년 동기 대비 30.6%에 비해 0.7%포인트 떨어졌다.

△ 文 聖 雄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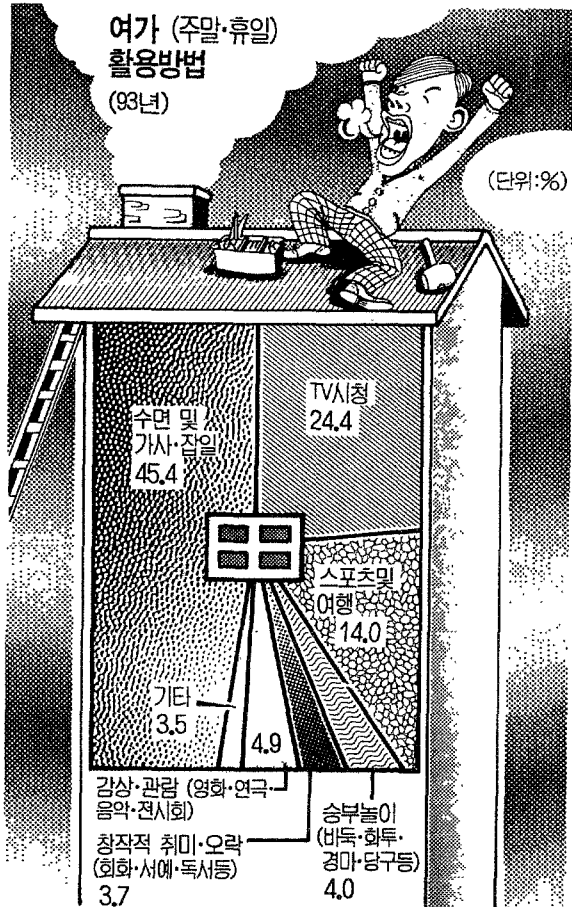
韓國人 여가 어떻게 보내나

통계청, 을 사회통계조사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말이나 휴일등의 여가를 낮잠이나 가사일 내지는 TV시청등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보내고 있다. 수면및 가사·잡일로 여가를 보낸다가 4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TV시청(24.4%)으로 나타났다.

TV 시청·운동·여행 순

"쉬는 날엔
45.4%
낮잠·잡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 시간은 평균적으로 하루 13.8시간으로 가장 낮았고, 화요일은 평균 16.2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주요시청프로그램으로 남자는 뉴스와 스포츠를, 여자는 연속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의 신년편년독률은 70.5%로 90년의 66.6%, 85년의 62.2%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주당 TV 평균 시청시간은 17.5시간으로 남자는 주당평균 16시간, 여자는 주당평균 18.9시간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시청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주당 TV 평균 시청시간은 17.5시간으로 남자는 주당평균 16시간, 여자는 주당평균 18.9시간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시청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지에서 불편한 점으로 교통불편(32.9%)을 첫째로 꼽아 89년 조사때 1위를 차지했던 바가지요금(25.4%)과 자리바꿈을 했다.

신문 평균 구독률 70.5%
해외여행 6.1%로 증가세
지난해 1인독서량 14.3권

광고가 너무 많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았고, 몇몇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여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로 '절제 부족' (41.3%)이 가장 많았고 '시간부족'이 37.0%로 뒤를 이었다.

이런 조사에서도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문독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18.2%, 불만 20.3%, 보통 55.8%,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불만의 이유로 편파적 보도가 28.0%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독서량이 늘어난 것과 달리 잡지의 정기구독률은 85년 37.2%, 90년 27.5%, 93년 24.1%로 감소추세로 대조적이었다.

지난해에 조사자의 64.1%가 1권이상의 책을 읽었으며, 1인당 독서권수는 14.3권으로 89년의 9.5권에 비해 4.8권이 증가했다. 책을 1권이상 구입한 사람의 비율은 47.8%로 90년 41.1%에서 6.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백권 정도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9%나 차지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질서문란, 화장실·숙박·휴식시설에 대한 불편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93년도의 해외여행 경험률은 6.1%로 90년의 3.3%에 비해 2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書病誌기자〉

新聞구독률 70.5%

통계청 전국 3萬여가구 조사

▶ 지난 11 TV에서 뉴스를 많이 보던 70대가 90년엔 80%를 차지했다. 90년대에는 70.4%로 계속 높

▶ 70.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80%가 신문의 구독률은 70.5%로 나타났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 70.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80%가 신문의 구독률은 70.5%로 나타났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 70.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80%가 신문의 구독률은 70.5%로 나타났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 70.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80%가 신문의 구독률은 70.5%로 나타났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 70.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80%가 신문의 구독률은 70.5%로 나타났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 70.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80%가 신문의 구독률은 70.5%로 나타났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 70.4%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80%가 신문의 구독률은 70.5%로 나타났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90년대에는 66.6%보다 많이 늘었다.

年독서량 평균 14.3권... 30대 이상은 저조

해의여행 경험 6.1%... 3년새 2배늘어

▶ 1년간 독서권수는 1인

▶ 1년간 독서권수는 1인

▶ 1년간 독서권수는 1인

▶ 1년간 독서권수는 1인

▶ 1년간 독서권수는 1인

(許承虎)

韓國人「92년死亡원인」분석 통계청

총인구 10만명당 22명 사망원인 분석 결과 사망원인 1위는 심장병,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폐암, 4위는 암, 5위는 고혈압 순이었다.

특히 우리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심장병은 10만명당 23.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2위 30.9명)을 보인 반면, 폐암(17.0명)은 39위(4.6명)로 22년째 최하위 사망원인(22년째 최하위 사망원인)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5대사망원인 (92년)
(인구10만명당: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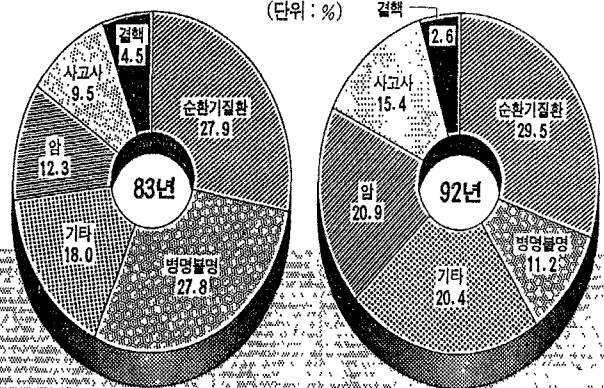
순위	1	2	3	4	5
전체	암 110.9	뇌혈관질환 80.4	불의의사고 69.1	심장병 43.5	만성간질환 28.6
남자	암 136.9	불의의사고 100.3	뇌혈관질환 75.4	만성간질환 45.7	심장병 42.8
여자	뇌혈관질환 86.7	암 83.6	심장병 44.7	불의의사고 35.9	고혈압 29.2

「92년 사망원인」분석 결과, 10만명당 사망원인 1위는 심장병(43.5명)으로, 2위는 뇌혈관질환(80.4명)이었고, 3위는 불의의사고(69.1명)였다. 4위는 심장병(43.5명)이었고, 5위는 만성간질환(28.6명)이었다. 특히, 폐암(17.0명)은 39위(4.6명)로 22년째 최하위 사망원인(22년째 최하위 사망원인)을 기록하고 있다.

폐암死亡 9년간 3배증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암사망자가 1백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사망자는 18.0명(16.3%)으로, 9년간 3배증가했다. 특히, 폐암사망률은 1983년 5.4%에서 1992년 17.0%로 3배가량 증가했다.

사망원인 비교 (단위: %)



주요사망원인 국제비교 (92년) (단위:명 10만명당)

순위	위 계 양	만성간질환	교통사고	중 독 사	의 사	자 살
1	노르웨이 (30.6)	헝가리 (56.9)	韓 (34.6)	러시아 (15.0)	러시아 (7.5)	헝가리 (38.6)
2	덴마크 (10.6)	루마니아 (34.7)	포르투갈 (31.0)	핀란드 (10.7)	루마니아 (6.7)	핀란드 (29.8)
3	영가리 (8.6)	오스트리아 (28.8)	뉴질랜드 (27.2)	폴란드 (8.0)	韓 (5.2)	스위스 (22.7)

癌 21.9 뇌졸중 15 심장병 8.2%
간 위암死亡率 세계
食生活서구화 大腸 유방암 多發 추

인한 사망의 1백36.9명(이하)인 10만명당 사망수인 10만명당 사망수의 10배(1백36.9명)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17.0명)은 39위(4.6명)로 22년째 최하위 사망원인(22년째 최하위 사망원인)을 기록하고 있다.

의 사고로 추는 사망원인이 높았다. 40, 50, 60대 연령층은 암발병의 첫 번째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70대 이후 고령층은 중풍(뇌졸중)을 뇌혈관질환(10만명당 26.1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히, 폐암(17.0명)은 39위(4.6명)로 22년째 최하위 사망원인(22년째 최하위 사망원인)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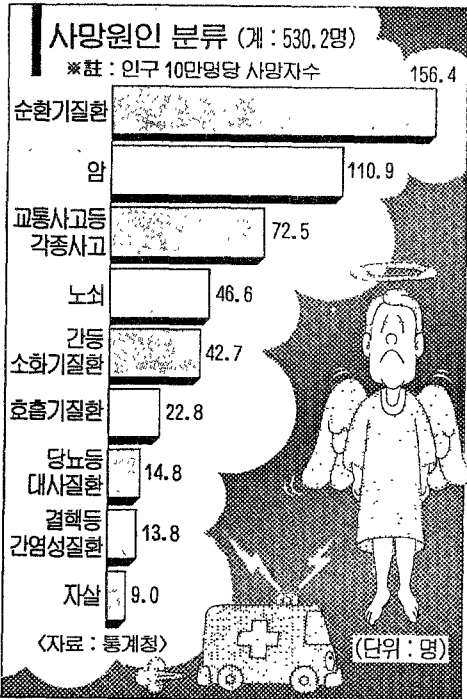
의 의 사고(35.9명) 고혈압(29.2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17.0명)은 39위(4.6명)로 22년째 최하위 사망원인(22년째 최하위 사망원인)을 기록하고 있다.

輪禍사망 세계 1위 여전

통계청 발표 92년 사망원인

지난해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간암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세계 1위도 나타났다.

이 29.5%, 암 20.9% 각종 사고사 15.4%로 3대 사망원이 전체 사망의 65.8%를 차지했다. 이 중 지난해에 비해 비수환기질환 27.9%, 암 12.3%, 각종 사고사 9.5%



순환기질환 29.5% 암 20.9%로 젊은층 자살 많아... 간암 급속증가

한국 5세이하 사망 12번째로 낮아 유엔아동기금 발표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1일 발표한 '94년 전염병 9명중 1명 세계 1백45개국 가운데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12개국만이 5세 이하 사망률이 12번째로 낮아

스페인과 함께 1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1일 발표한 '94년 전염병 9명중 1명 세계 1백45개국 가운데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 12개국만이 5세 이하 사망률이 12번째로 낮아

(WHO)의 조사대상에 고 뇌졸중(뇌혈관질환) 15.2%, 각종 사고사 13.0%, 심장병 8.2%, 간질환(만성간질환) 5.4% 순으로 나타났다.

심혈관계 사망원이 전체 후진국 사망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사망원의 10%에 불과하다. (10만명당 133.6명) 사고사(100.3명) 뇌졸중(76.4명) 간질환(45.7명) 심장병(42.8명) 순이고 여자는 뇌졸중(86.7명) 암(83.6명) 심장병(44.7명) 사고사(35.9명) 고혈압(29.2명) 순이었다.

에 비해서는 3대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91년 이후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

일본어로 1천명당 6명꼴이며 미국은 10명이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프리카의 나제르 3백20명이었다.

북한의 5세이하 아동사망률은 1천명당 33명으로 멕시코 타이와 함께 1백45개국 중 82번째로 높은 것이로 나타났다.

은 종의 경우 교통사고의 사망률의 사고사가 가장 높고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 연령 10, 20, 30대에 자살에 의한 사망이 각각 3, 2, 5위를 차지해 젊은 연령층의 자살이 많았다. 40대에서 60대에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절대적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암 사망률은 꾸준한 증가 추세이나 암 종류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위암 폐암 자궁암은 최근들어 전체 내지 감소 추세이나 위암의 비중은 아직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암은 매우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뇌졸중이나 고혈압 등 순환기질환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신장질환은 혈관질환 등의 의한 사망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순환기질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당뇨병은 계속 증가, 지난해에는 83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許承虎)

한국인 사망암·중풍·輪禍순

통계청、「92년 死因」 발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혈관 질환인 것으로 집계 무서운 병은 암이며, 다음 됐다. 다음 교통사고 등으로 중풍 등을 일컫는 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주요 死因순서 국제비교 <자료=통계청>

위	암	간	암	자	살	교통	사고
1	일본	한국	헝가리	한국	헝가리	한국	한국
2	한국	일본	핀란드	포르투갈	핀란드	포르투갈	포르투갈
3	소련	헝가리	스위스	뉴질랜드	헝가리	뉴질랜드	뉴질랜드
4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소련	포르투갈	소련	소련
5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폴란드	폴란드
6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	프랑스
7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소련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8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핀란드
9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10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스웨덴	스페인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세계보건기구(WHO)발간 세계보건통계연감에 수록된 44개국 기준

사람들이 3번째로 많고 심장병, 만성간질환 등의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통계청은 22일 지난해 사망원인 통계를 발표, 총 사망자가 23만 1천명으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5백 30·2명이며, 이중 남자가 5백 99·4명, 여자가 4백 60·1명으로 남자사

망률이 여자보다 훨씬 높았다. 사망자를 사망원인별로 보면, 암이 인구 10만명당 1백 10·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뇌혈관 질환(80·4명), 각종 불의의 사고(69·1명), 심장병(43·5명), 만성 간질환(38·6명) 순이었다. 암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어 위암·간암·장암은 최근 정체 내지 감소 추세인 반면, 폐암·대장암·유방암·신도암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수혈기초 질환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이 구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고혈압성 질환이 다소 많은 반면, 뇌혈관 질환은 적은 편이다. 관상동맥이나 심근실종은 생중을 일컫는 허혈성 심장 질환은 구미 선진국의 경

작년 23만명... 남자 훨씬 많아 간질환 90년 이후 감소 추세

말들이 여자보다 훨씬 높았다. 사망자를 사망원인별로 보면, 암이 인구 10만명당 1백 10·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뇌혈관 질환(80·4명), 각종 불의의 사고(69·1명), 심장병(43·5명), 만성 간질환(38·6명) 순이었다.

암 사망률은 구미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여 심혈관 질환의 차이가 암 발생을 좌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위암의 경우 한국과 일본·소련의 차이가 주로 많 이 절반에, 간암도 한국이 일본을 크게 앞섰던데서 비롯하고 있다.

우선 10만명당 3백 명으로 우리나라의 10만명당 13명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심증 대부분 심상마비로 질환을 앓고 있어 실제 협심증으로 인한 사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도

매년 늘어 10년전보다 사망자가 3배정도 늘어났다. 만성 간질환과 간질병 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90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事故死는 연료과 피사자가 많은 편인데,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의사와 불의의 중풍도 많아 각각 세계 3위·5위를 차지했다. 연령별 사망원인을 보면, 30대까지는 교통사고, 의사, 추락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고, 4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암이 사망원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70대 이후에는 중풍, 뇌졸중 등 노년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 10·20·30대의 젊은 층에서는 자살률이 높아 사망 원인 순위 3위·3위·5위

를 각각 차지했다. 자살률 을 구미보다 비교하면, 헝가리가 가장 높아 인구 10만명당 38·6명이며, 다음으로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소련,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순으로 집계 됐다. <承仁 培기자>

40~60代 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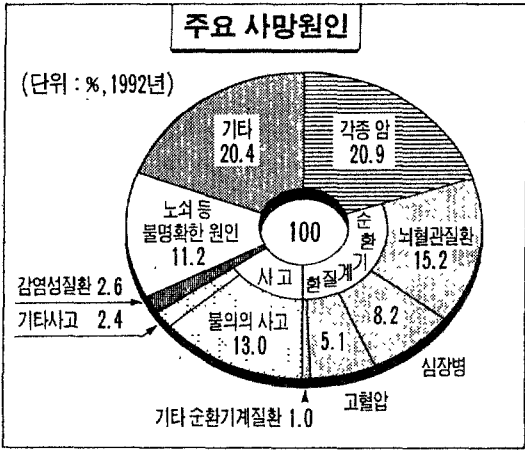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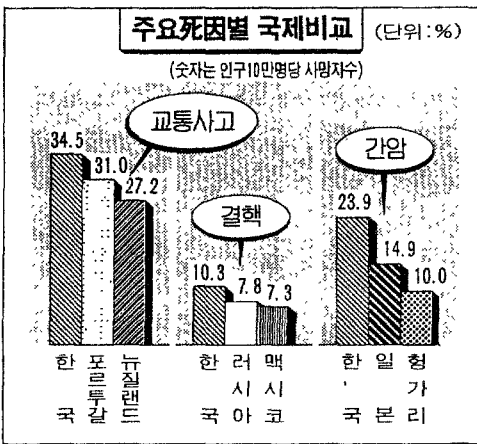
70세이상 뇌졸중

40세 미만 事故

사망원인 '으뜸'

통계청 92년자료 발표

우리나라 사람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및 불의의 사고이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또 교통사고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91년에 이어 세계1위를 기록했고 「후진국病」으로 불리는 결핵에 의한 사망률도 여전히 높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로 나타났다. 다름이로 노혈관질환(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15.2%, 교통사고 이차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3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 불의의 사고 뇌혈관질환 만성질환 심장질환 순환기계질환 여성

간암·교통사고는 세계 최고 수준
男性 식도암 여성은 6배 이상

통계청이 지난해 사망 신고된 23만 4천 5백 19명 을 대상으로 사망원인을 분석·발표한 92년 사망 원인에 따르면 교통사고와 암에 따라 사망원인을 분류할 때 지난해 사망자 다섯명 가운데 한명(20.9%)이 암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암은 91년보다 1.1배 증가한 23만 4천 5백 19명 중 20.9%인 4만 8천 9백 37명 이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암은 91년보다 1.1배 증가한 23만 4천 5백 19명 중 20.9%인 4만 8천 9백 37명 이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발생이었는데 발해 여성 은 노혈관질환 암 심장병 불의의 사고 고혈압 심장 질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사인별로는 불행 심근마비와 질식사 사망률도 각각 1.1배 이상, 6 배 이상, 4 배 이상, 각각 3 배 이상 증가했다.

44개국중 결핵 1위·위암 2위등 후진성 뚜렷

92년판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44개국의 자료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간암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지난 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또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도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결핵은 우리나라에서 100명당 4명, 각종 암은 100명당 2.6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민건강연에서 여전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발생보다 다소 높은 사망률을 나타냈다. 남녀 전체의 연령별 사망원인은 40세 미만은 불의의 사고가 40세부터 70세에 비해 40~60대 사망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金俊亨기자】

10萬명당 111명 癌으로 숨져

統計廳, 작년 사망원인 分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숨지는 이유는 암·뇌혈관질환(뇌졸중 등), 각종 사고(교통사고 등)로 인한 경우가 가장 높으며 교통사고와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 최고다.

이같은 결과는 통계청이 지난해 사망자 23만 1천 5백 19명 중 사망원인의 분류가 가능한 20만 8천 3백 22명을 대상으로 서류와 방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사망원인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아 지난해만 4만 3천 5백 70명이 사망, 전체 사망자의 20.9%를 차지했다. 암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1백 10.9명으로 그중 ▲위암사망률(3

0.6명)이 가장 높고 ▲간암(23.9명) ▲폐암(17.0명) ▲대장암(4.6%) 등의 순이었다.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뇌혈관 질환으로 10만 명당 80.4명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이 교통사고율(34.5명)을 포함한 각종 사고 사망률로 69.1명이었다. 이밖에 심장병(43.5명), 만성간질환(28.6명) 등

명보다 높아지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암의 종류별로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위암, 간암, 자궁암 등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반면 폐암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장암, 유방암, 식도암 등도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등 순환기질환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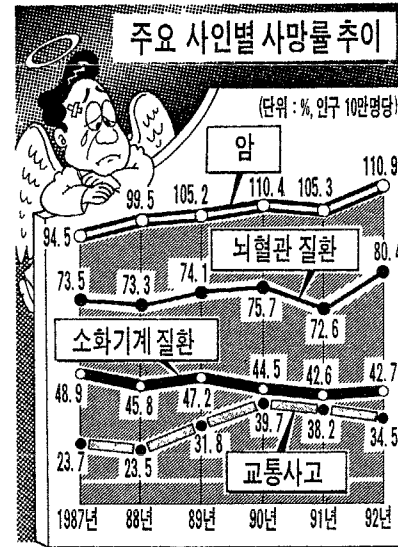
성·연령별 차이 남녀별 주요사인

폐·대장암 늘고 뇌졸중은 감소추세 30代 교통사고·40~60代는 癌이 제일 많아

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같은 사망률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암은 91년의 1백 5.3

이 차이를 보여 남자의 경우에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1백 36.9명)이 가장 높고 각종 사고(1백 3명), 뇌혈관질환(75.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는 뇌혈관질환(86.7명), 암(83.6명), 심장병(44.7명), 각종사고(35.9명)의 순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는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40~60대는 암이, 70대 이상에서는 뇌



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와 간암, 결핵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에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4.5명으로 포르투갈(31.0명), 뉴질랜드(27.2명), 러시아(27.0명), 폴란드(25.8명)를 크게 앞질렀다. 우리나라는 지난 85년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최고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

다.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우리나라가 일본(14.9명), 헝가리(10.0명), 이탈리아(8.4명), 폴란드(7.8명)를 앞지르고 23.9명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으며 위암의 경우에도 일본(38.9명)에 이어 30.6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도 10.3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불명예를 안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폐암(44위), 유방암(44위), 동맥경화(44위), 위, 십이지장궤양(35위), 기관지염(34위), 폐암(35위) 등으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다.

<李銘宅기자>

◇우리나라의 주요死因별 국제비교

* ()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순위	사망원인	한국	일본	미국	서독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1위	암	110.9	105.3	110.4	105.2	99.5	94.5	73.5	73.3
2위	교통사고	34.5	31.0	27.2	25.8	23.7	23.5	23.7	23.5
3위	결핵	10.3	7.8	7.3	7.3	7.3	7.3	7.3	7.3
4위	위암	30.6	30.6	30.6	30.6	30.6	30.6	30.6	30.6
5위	간암	23.9	14.9	14.9	14.9	14.9	14.9	14.9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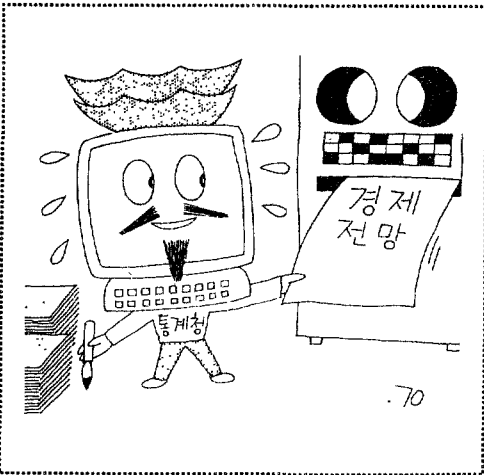
졸중 등 뇌혈관질환이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시지역의 경우 위암을 제외한 각종 암과 당뇨병, 심장병,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데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위암, 만성간질환, 노쇠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외국과의 비교 사망원인을 비교가 가능한 43개 다른 나라들과 비

통계청도 경제전망 내린다

「경제전망은 틀리기 위해 만들어진 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각종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제현실에서 미래의 성장을 물가 국제수지 따위의 수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확도와 신뢰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통계청이 경제전망작업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91년 연세대 徐秉煥 교수팀과 공동으로「가칭 통계청계량경제모형」을 완성한 통계청이 박사 학위수지를 취득하는 등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기관의 전문가를

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통계청이 작성하는 모든 자료는 발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초에는 95년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행자수를 계산, 경기예측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흐름의 추세를만 가늠해보고 사후적으로 경기의 순환을 정량해 보는 데 그쳐 구체적인 미래의 경제모형을 예측해 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많았던 경제전망 작업에 정부가 직접 나선 데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채널유기관 간부는 「기초통계자료를 다루는 기관이 경제전망치를 내놓게 되면 전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 전망에 틀어막도록 결과치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예측치가 벗어나자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선진국들의 경우라도 이러한 점을 의식, 주관 정부가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출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맡겨 발표하고 있듯이 사실이

각종자료 활용... 빠르면 내년부터 말 많은 作業 정부 직접 나서 주목

과의 과목을 통해 경제학자 중에는 통계청의 발표가 너무 단편적 경제현실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통계청이 내놓는 각종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경제전망지를 작성해보는데 이 의미 내년도 경제전망자료 작성이 임박한 상태라고

통계청의 경제전망자료는 산정방법이 다른 기관의 발표와 달리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통계조사 의 기초자료를 계량경제모형의 대안으로 대안자료인 통계청 주전산기, IBS, M3000 등을 통해 반복 검증을 거쳐 산출된다. 통계청이 특별 정기출판지수부서에 통계청의 경제전망 자료를 게재할 예정이다. 「전망

구기관인 KDI도 국정감사 때마다 예측치가 빗나간 데 대해 추궁을 당해야 했고 이러한 「비난」을 견디다 못한 宋熙泰 전 KDI 원장은 올해 초 공식적인 경제전망을 공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기까지 한 점도 있다.

이처럼 많았던 경제전망 작업에 정부가 직접 나선 데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채널유기관 간부는 「기초통계자료를 다루는 기관이 경제전망치를 내놓게 되면 전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 전망에 틀어막도록 결과치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예측치가 벗어나자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선진국들의 경우라도 이러한 점을 의식, 주관 정부가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고 출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맡겨 발표하고 있듯이 사실이

【金俊영 기자】

올 소비자物價 5.8% 올라

작년보다 1.3% 더 농축산물값 9.8%나 뛰어

새해엔 물가 불안 더 심각할 듯

12월말의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말보다 5.8% 올랐다. 지난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4.5%에 비해해서는 1.3%포인트 상승했다.

20개 기본생활품가격의 특별관리, 공무원임금 동결,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 의 은근 노력이도 불구하고 신경제계획상의 물가연계 목표치인 5%를 넘어선 것이다.

내년에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공산품가격의 현상유지, 경기회복에 따른 통화발행량의 유인

이 겹쳐 올해보다 더 심각한 물가불안이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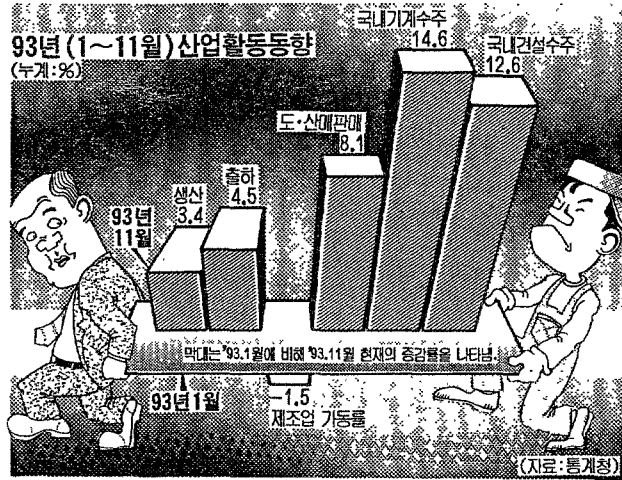
통계청과 韓銀이 29일 발표한 12월도 물가동향에 따르면 공산품가격의 안정에 도 불구하고 올해 소비자물가는 9.8%나 올랐다. 전년 대비로는 5.8% 상승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로 일컬어지는 신선식품의 물가는 무려 20.7%나 올라 피부르느끼는 물가 상승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를 기록했다.

농축산물을 제외한 소비자

자물가 상승률은 4.9%로 지난해의 5.7%(농축산물 제외)보다 0.8%포인트 낮았다. 소비자물가의 주요 변동요인을 보면 농산물은 이상저과 해거리 현상으로 13.3%, 수산물도 어획량 감소로 12.6%

%가 상승해 이들 품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공공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이 19.0%, 지하철 요금이 20.3%, 사립대 입학금이 16.4%의 인상 및 의료보험 수가의 조정 등으로 평균 6.9% 올랐다.



11월 생산 10.5% 증가

통계청 발표 자동차 등 重化學제품 호조로

가죽·신발·의류 등이 감소

지난 11월중 산업생산은 건설부문과 기계류부문의 증가세에 힘입어 활발한 모습을 나타냈다. 또 앞으로의 경기를 예

측해 주는 경기총합지수 도 선행 1.4%, 동행 1.6%로 크게 증가해 경기 회복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회복

세는 중화학공업의 급속한 생산증가에 의한 것으로 11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

른면 생산은 중화학공업의 증가(15.4%)로 전체적으로 10.5% 증가했다. 그러나 상반기의 경기부진 영향으로 1월부터 11월까지의 생산 누계비는 3.4%의 낮은 증가에 그

쳤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중화학업차와 지프형(중화학차의 판매혼조)로 생산이 32.5%나 늘었고 공작기

수치제어장비(기)를 보일라 등 기계 및 장비도 20.8%의 생산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죽 및 신발, 트

신발 섬유 의복 등 경공업 부문은 감소세가 지속됨으로 써 경기회복이 피부에

의착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

른면 생산은 중화학공업의 증가(15.4%)로 전체적으로 10.5% 증가했다. 그러나 상반기의 경기부진 영향으로 1월부터 11월까지의 생산 누계비는 3.4%의 낮은 증가에 그

쳤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중화학업차와 지프형(중화학차의 판매혼조)로 생산이 32.5%나 늘었고 공작기

수치제어장비(기)를 보일라 등 기계 및 장비도 20.8%의 생산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죽 및 신발, 트

23.1%, 의복 및 모피는 10.2%, 섬유류는 7.2%의 생산감소를 각각 나타냈다. 투자는 韓電의 전력공사 발전과 자동차, 조선업의 발주 증가로 국내 기계 발주가 전년 같은달에 비해 42.5% 증가했다. 건설수주도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서해대교 등 공공

부문의 대규모 공사 발주와 민간부문에서의 일산 신도시 등 주택 발주 등으로 지난 해 동월에 비해 49.1%가 증가했고 건축허가면적도 29.2%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2.6%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했다. 계절 조정치로는 2.7%포인트 상승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졌다.

23.1%, 의복 및 모피는 10.2%, 섬유류는 7.2%의 생산감소를 각각 나타냈다. 투자는 韓電의 전력공사 발전과 자동차, 조선업의 발주 증가로 국내 기계 발주가 전년 같은달에 비해 42.5% 증가했다. 건설수주도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서해대교 등 공공

景氣 완만한 회복세

11월 산업동향 생산-소비-투자등 전반적 호조

자동차 기계 전기 가스 호황 실업률 전월比 0.2% 줄어

지난 11월의 산업동향은 생산 소비 투자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며,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겠다고 나타났다.

그런데 이같은 경기회복세는 중화학공업분야의 꾸준한 생산증가에 의한 것이고 구조조정을 겪고있는 경공업부문은 생산감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 부문에서 중화학공업차 판매호조로 자동차가 32.5% 증가하는 호황을 누렸고 기계 및 장비 화학제품 1차 금속 전기 가스 등도 호조를 보였으나 가죽 및 신발 기타우송잡비 의복 및 모피 섬유 등은 부진, 전체적으로 작년같은 달 대비 10.5% 증가했다.

재고는 작년동월대비 3.0%의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제조업가동률은 작년동월대비 4.9% 증가한 80.0%를 나타냈으나 10월(81.4%)에 비해서는 투자부문에서 기계수주는 작년동월보다 42.5% 올랐으며 11월까지 누계로는 14.6% 증가해 투자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냈고 기계류 수입액은 11월동 22.0% 누계로 11.0% 증가했다.

고용은 실업률(계절조정)이 2.7%로 전월의 2.9%보다 다소 낮아졌다. 11월중 경기선행종합지수는 9개 지표중 7개가 증가, 전월대비 1.4% 동행지수는 8개 모든 지표가 나아져 1.6%씩 각각 증가했다.

여 백

1994 년 보 도 기 사

여 백

1/4분기 보도기사

(1월~3월)

여 백

한국 질병백과사전 나왔다

통계청 萬二千여 病名 총정리
내년부터 醫保酬價 기준 역할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망라해 1만2천1백21개의 병명으로도 정리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완성됐다.

통계청은 13일 2년여의 작업 끝에 우리나라의 질병을 상세히 분류한 책자를 펴내고 의과대학에서도 이 분류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통계청은 지금까지는 갑은 병이라도 병이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으나 앞으로는 통일일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病의원이 진단서에 기재하는 病名이 통일되고 질병분류도 현행 6천6백78개에서 1만2천1백21개로 세분된다.

통계청 내년 시행

통계청은 1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개정과 그 도입의 의과발전의 맞추어 지난 7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

통일 病名 기재 診斷書
疾病 분류 2배로 늘려

D)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질병분류법은 내년부터 모든 진료기관의 진단서 작성과 의료수가 계산의 적용되며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韓國經濟新聞

의료보험 지급기준
질병분류 세분화

통계청은 내년부터 의료보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질병분류 기준의 6천6백78개에서 1만2천1백21개로 세분해 고시했다.

이 국내실정에 맞지 않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세부화한 표준 질병사인분류를 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바구니물가 보도 잇따르자 閱통계청장,이례적 직접 시장조사



○...최근 연이은 물가상승과 때맞춰 정부 발표 물가지수와 피부물가와의 괴리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閱泰 후통계청장이 남대문 동대문 시장일대에서 직접 旬期

(10일간격) 물가조사에 나서 눈길.
○ 閱통계청장인 14일 물가조사지원 2명과 함께 동대문시장내 상점 약 20곳을 돌며 공산품가격 및 야간을 조사한데 이어 15일에도 직접 물가 조사를 벌이고 남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채소류 어류 등 신선식품과 실험탕 자장면 등의 음식가격을 조사.
○ 閱통계청의 이례적인 현장 물가 조사에 대해 통계청 "물가조사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를 두 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한편이런 물가가 오를 때마다 통계청 발표 소비 자물가지수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는 데 대해 통계청의 "절박"을 유감으로 보고 보일수록 위한 뜻도 담겨있지 않 겠"이라고 전했다. 【金俊亨기자】



피부物價 현장답사 閱泰亨 통계청장(사진①)
이 17일 소비자물가지수요원들과 함께 남대문시장을 둘러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차이를 점검하는 등 최근 큰폭으로 값이 오른 물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申寅燮기자>

통계청, 타이컴 도입결정

국산 중형컴퓨터 국가기관공인의미

통계청이 통계청민영업무에 집권부담을 노안하자 27년과 28년 예산안에서 국산 컴퓨터 도입을 노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국산 중형컴퓨터의 도입이 국가기관의 업무공신임을 밝게 했다.

17일 통계청의 따르면 통계청이 8년째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신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국산 4개사가 공동개발한 중형컴퓨터 '타이컴 1대'와 소형 1대를 각각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통계청은 오는 4월경 도입하게 될 '타이컴 컴퓨터'는 중형인 보청에서 데이터베이스용, 항공기관에 대한 온라인용 및 자체업무용 등으로 사용하고 소형은 서울사무소에 설치, 통계조사업무를 위한 관내 17개 로컬 업무가 북주현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사무소에 설치한 소형 컴퓨터로 대체해서 수진한 자료를 기공시켜 이상이 없을 경우 연차적으로 소형 타이컴 10대를 추가로 도입, 지방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통계청장인 『이태우』는 통계청에 『타이컴』을 도입할 경우 국산 컴퓨터가 공공개발한 중형 컴퓨터로 이미 국내에 2백여대가 보급돼 있고, 국내도 일부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 「사회지표」 92년 기준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경제활동인구가 지난 80년의 42·8%에서 92년에는 47·3%로 높아졌다.

또 노동영양제가 높아짐에 따라 전체 취업자가 55세 이상의 차지하는 비중이 92년 14·9%로 높아졌다. 이는 91년(21%)보다 6%포인트 낮아졌으며, 이는 91년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선정지표 20명 이하인 선진국 수준과 큰 차가 있고 지역별로는 인천이 39·4명, 서울은 37·4명인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도시는 20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취업 및 고용안정 = 경제활동인구수가 90년 5백60만에서 92년에는 4백90만으로 5백만 선 이하로 떨어졌다.

▶ 고용 = 80년 11만5천2백20명(12만5천)보다 20%포인트 줄었다. 이는 실업·장기·장년·여성·약탈의 증가로 나타났다.

▶ 자용차사고는 90년부터 2만2천건 늘었으나 사망자는 약 7백명 감소한 1만1천6백40명을 기록했다.

▶ 이통사업 10만명당 사망자수(경찰청조사·사후 72시간내)는 90년 28·7명에서 92년 26·7명으로 줄었다.

▶ 고용 = 8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전 부 평균 경제활동인구의 7%였다.

▶ 주택·환경 = 8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전 부 평균 경제활동인구의 32·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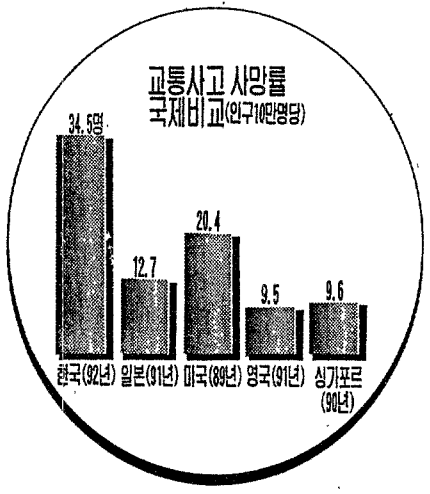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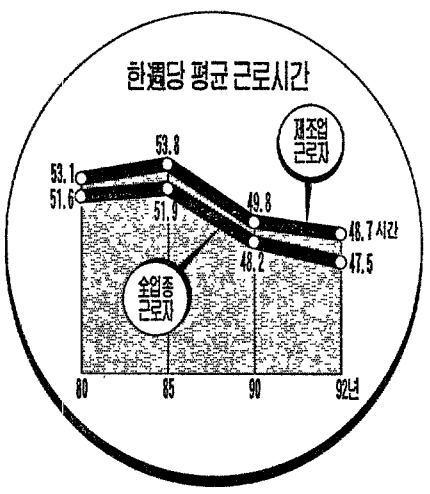
▶ 사회 = 80년 1백34·4cm에서 1백39·5cm로 커지고 물가는 29·3%에서 34·4%로 올랐다. 의사 1인당 인구는 80년 1천6백90명에서 1천9백20명으로 늘었다.

▶ 보건 = 10세 이하의 경우 키가 80년 1백34·4cm에서 1백39·5cm로 커지고 물가는 29·3%에서 34·4%로 올랐다. 의사 1인당 인구는 80년 1천6백90명에서 1천9백20명으로 늘었다.

▶ 문화 = 여가 가정의 소비지출증가율은 비도시가 2·2%에서 92년 4·7%로 증가한 1·7%에서 0·7%로 낮아졌다.

▶ 도시 = 80년 2·2%에서 92년 4·7%로 증가한 1·7%에서 0·7%로 낮아졌다.

여성 47% 경제활동 참여



자용차사고는 90년부터 2만2천건 늘었으나 사망자는 약 7백명 감소한 1만1천6백40명을 기록했다.

▶ 교통사업 10만명당 사망자수(경찰청조사·사후 72시간내)는 90년 28·7명에서 92년 26·7명으로 줄었다.

▶ 주택·환경 = 8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전 부 평균 경제활동인구의 32·1%였다.

▶ 사회 = 80년 1백34·4cm에서 1백39·5cm로 커지고 물가는 29·3%에서 34·4%로 올랐다. 의사 1인당 인구는 80년 1천6백90명에서 1천9백20명으로 늘었다.

▶ 보건 = 10세 이하의 경우 키가 80년 1백34·4cm에서 1백39·5cm로 커지고 물가는 29·3%에서 34·4%로 올랐다.

▶ 문화 = 여가 가정의 소비지출증가율은 비도시가 2·2%에서 92년 4·7%로 증가한 1·7%에서 0·7%로 낮아졌다.

▶ 도시 = 80년 2·2%에서 92년 4·7%로 증가한 1·7%에서 0·7%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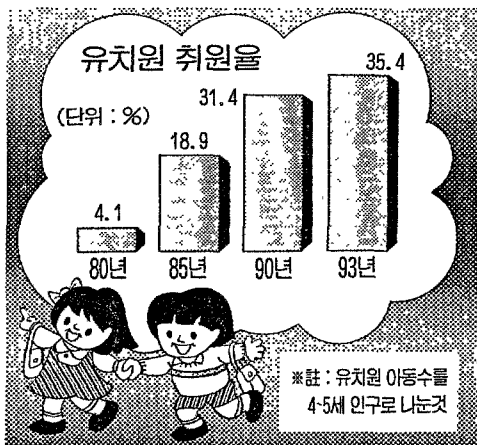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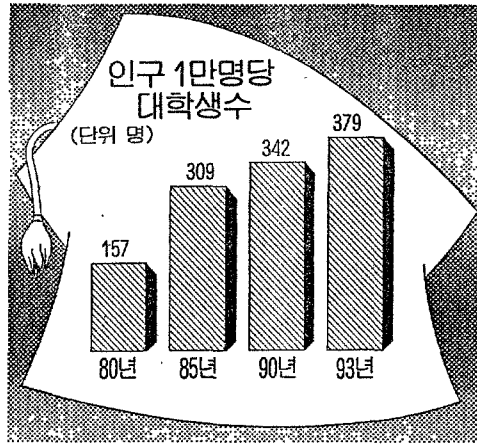
〈沈相福기자〉

55세 이상 취업률 14.9%로 상승
범죄발생 件數 줄었지만 흉악범은 늘어
도시근로자 月평균 소득 135만원

수돗물 그대로

인구 4천4百萬명... 학생이 1千萬명
大추 취업 줄고 전문대·高추은 늘어

都市근로자 月소득
100명당 승용차 7.9



4.1%에 비해 많이 늘었다. 1993년엔 35.4%로, 고졸취업률(99.9%)과 대학취업률(98.2%)에 비해 취업률(98.4%)이 낮아졌다.

그러나 취업률(92.4%)은 대학졸업자가 80년 65%에서 92년 51.8%로 떨어졌는데 비해 전문대학(40.8%)에서 63.5%로, 단종 학교는 37.7%에서 57.5%로 늘었다. 대졸직업이 5%로 늘었다.

都市근로자 1인당 인구 6천3백84명, 약사 1인당 인구는 1천1백4명으로 모두 감소 추세.

수돗물 품질은 92년 상수도를 공급한다. 69%가 품질이 9.6점이다. 1980년 10.8, 85년 11.3, 90년 13.7, 92년 14.9

인구 4천4百萬명... 1인당 국민소득 6,749

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92년 조세부담률은 19.4%, 국민저축률은 34.9%였다. 92년도 시·군·자치구 계수들은 월평균 1백35만 6천원, 농가수입은 1백20만 9천원, 인구는 4천4百萬명, 1인당 국민소득은 6,749원이다.

(영월계수)은 도시가 90%, 농촌은 23.3%로 높아지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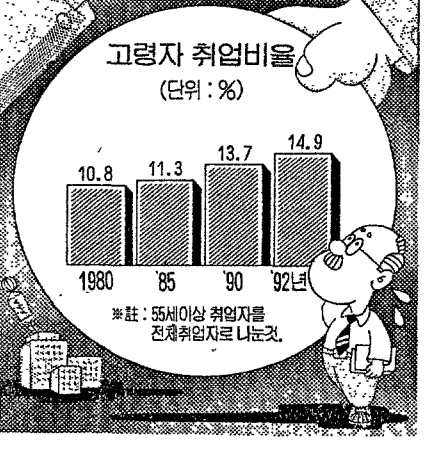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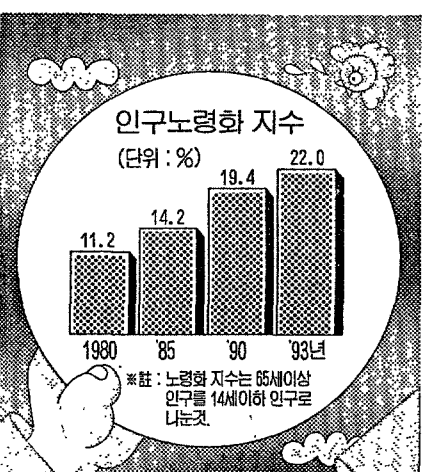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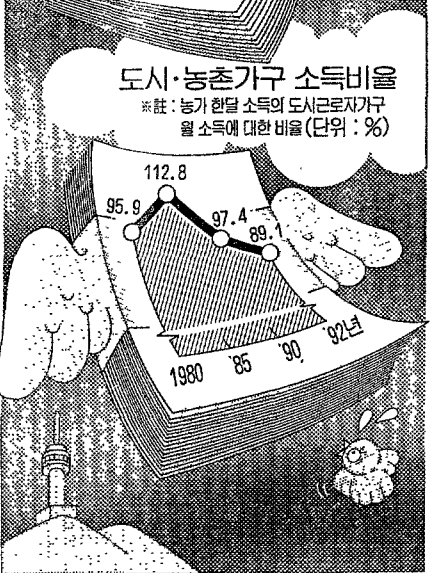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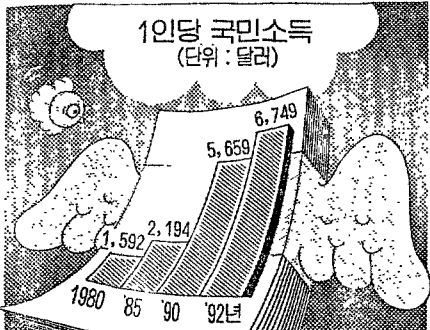
실업률 2.4%로 줄어든다. 고용·노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기타에 증가하고 관광업 25.5%, 농업·어업에 16%가 취업해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67.7세, 여자 75.7세(91년 통계)로 80년에 비해 8.9% 정도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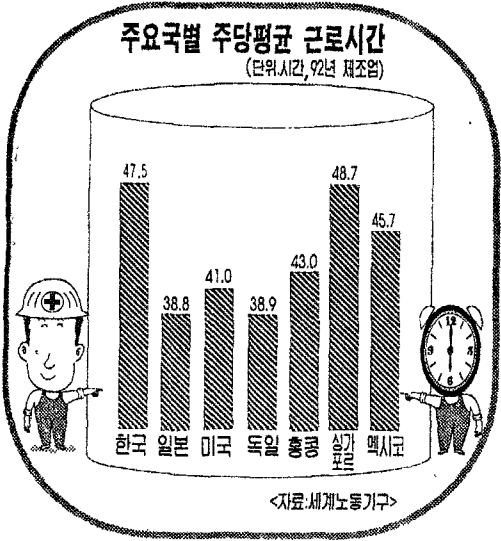
수돗물 품질은 92년 상수도를 공급한다. 69%가 품질이 9.6점이다. 1980년 10.8, 85년 11.3, 90년 13.7, 92년 14.9

수돗물 품질은 92년 상수도를 공급한다. 69%가 품질이 9.6점이다. 1980년 10.8, 85년 11.3, 90년 13.7, 92년 14.9



약수이용 16.5%...4%만 수돗물 그냥 마셔

93한국 사회지표



▲인구
 평균 7년(85~91년)사이 인구증가율은 평균 1%를 기록, 싱가포르 1.3%, 핀란드 2.3%보다 높았다. 일본은 0.4%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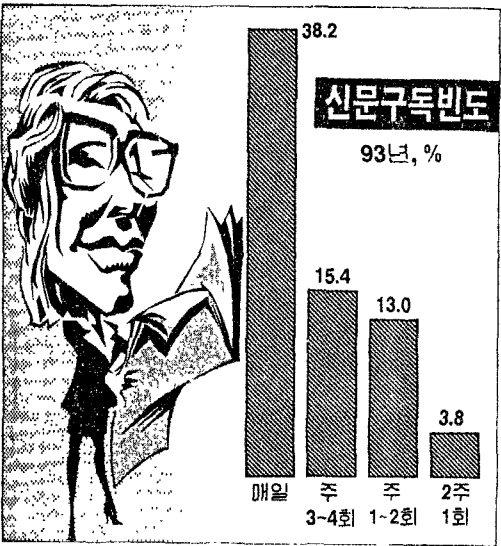
지만 91년 현재 한국인의 의뢰관수면(90년)보다 67.7세, 여자 75.7세로 80년보다 8.9세 높았다. 인구는 1만명당 대도시수는 80년 1백57명에서 지난해 3백79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유치원 취원율이 80년 4.1%에서 35.4%로 크게 높아졌다. 제조업 1인당 생산액도 동시간에 92년 47.5시간으로, 80년 51.6시간보다 줄었다. 일본은 38.8시간, 미국 41시간, 멕시코 45.7시간보다 각각 1시간 수준이다. 92년 발표된 생산수지에는 80년보다 줄었다. 살인·강도와 자살, 범죄는 92년 1.1%로, 80년 1.5%로 줄었다. 특히 자살률은 92년 1.1%로, 80년 1.5%로 줄었다. 특히 자살률은 92년 1.1%로, 80년 1.5%로 줄었다. 특히 자살률은 92년 1.1%로, 80년 1.5%로 줄었다.

▲고령노자
 92년 전체 인구의 13.1%인 1,368만 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년 10.3%에서 23.3%로 늘었다.

▲소득수비
 92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월평균 1백35만 원으로, 80년 23만4천 원보다 6배가량 늘었으며, 소득불균기에 따라 소비지출도 증가해 80년보다 도시가구는 5.2배, 농가는 4.7배 늘었다. 소비지출액의 30%가 가처분소득인 영끌계수(부양)도 도시가구는 80년 42.9%의

▲고령노자
 92년 전체 인구의 13.1%인 1,368만 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년 10.3%에서 23.3%로 늘었다.

▲고령노자
 92년 전체 인구의 13.1%인 1,368만 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년 10.3%에서 23.3%로 늘었다.



▲신문시간
 92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월평균 1백35만 원으로, 80년 23만4천 원보다 6배가량 늘었으며, 소득불균기에 따라 소비지출도 증가해 80년보다 도시가구는 5.2배, 농가는 4.7배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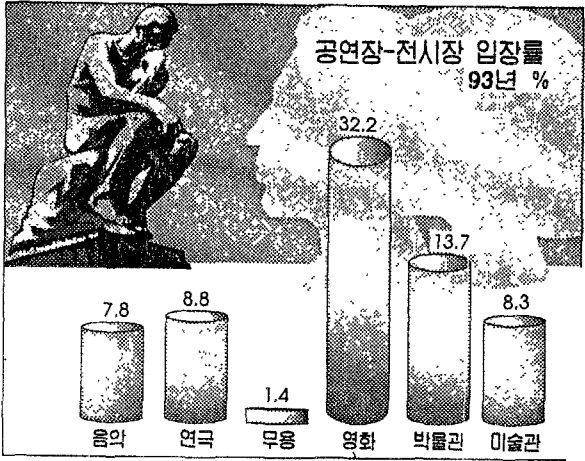
▲신문시간
 92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월평균 1백35만 원으로, 80년 23만4천 원보다 6배가량 늘었으며, 소득불균기에 따라 소비지출도 증가해 80년보다 도시가구는 5.2배, 농가는 4.7배 늘었다.

고령화추세... 거택·시설보호 輪禍 만 2천명 사망... 강력 여성취업률 40% 안팎... 유치

▲소득수비
 92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월평균 1백35만 원으로, 80년 23만4천 원보다 6배가량 늘었으며, 소득불균기에 따라 소비지출도 증가해 80년보다 도시가구는 5.2배, 농가는 4.7배 늘었다.

▲소득수비
 92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월평균 1백35만 원으로, 80년 23만4천 원보다 6배가량 늘었으며, 소득불균기에 따라 소비지출도 증가해 80년보다 도시가구는 5.2배, 농가는 4.7배 늘었다.

▲소득수비
 92년 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월평균 1백35만 원으로, 80년 23만4천 원보다 6배가량 늘었으며, 소득불균기에 따라 소비지출도 증가해 80년보다 도시가구는 5.2배, 농가는 4.7배 늘었다.



사립대학생들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88년 54.6%에서 92년 81.6%로 27%포인트 상승한 반면, 전문대학생은 88년 80.8%에서 92년 85.7%로 4.9%포인트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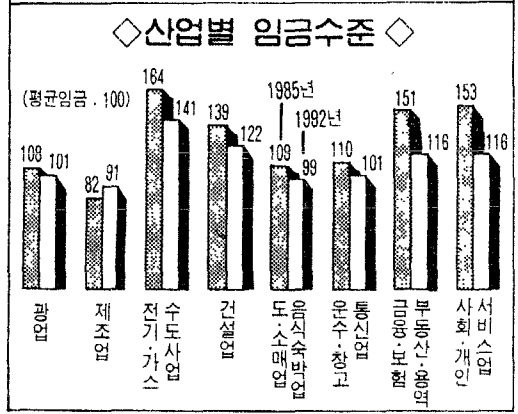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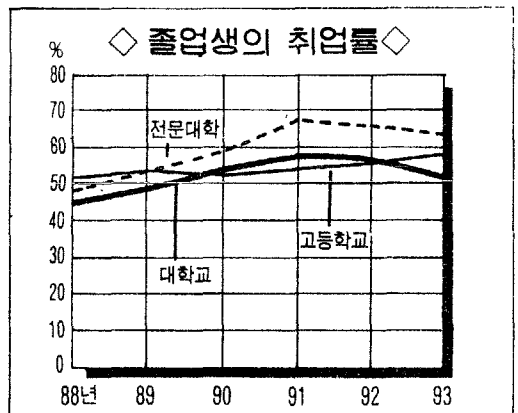
자율취업은 80년 24만 9천대에서 92년 3만 46만 1천대로 크게 늘었다. 1만 1천명의 자취업대수는 88년 0.7%에서 92년 7.6%로 증가했다.

『가계소득 및 소비』 92년 1분기 가계소득은 월평균 1백 55만 6천원으로 88년 23만 4천원 대비 6배 증가했다. 이 중 증가소득(1백 20만 9천원)보다 많은 증가액(1백 12.2%)은 크게 늘었다. 소비지출은 크게 늘었다. 도시근로자 88년 1백 21만 1천원에서 92년 218만 1천원으로 80% 증가했다.

17만 1천명의 학생은 88년 7천 5백 4.7%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상품지출(월평균 30만 원)과 도시근로자 30.0% 증가가 23.3%로 나타났다.

『대학』 중등교육의 확립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80년 27.7%에서 93년 24.0%로 감소하고 있다.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80년 27.7%에서 93년 24.0%로 감소하고 있다.

8대...高校진학률 98%



就業者비중 SOC·서비스업 58%

『3월 1일』 93년 1월 1일 기준 전국 취업자 1,000만 명 중 SOC·서비스업 비중이 58.0%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54.6%에서 4.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고용』 93년 1월 1일 기준 전국 취업자 1,000만 명 중 SOC·서비스업 비중이 58.0%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54.6%에서 4.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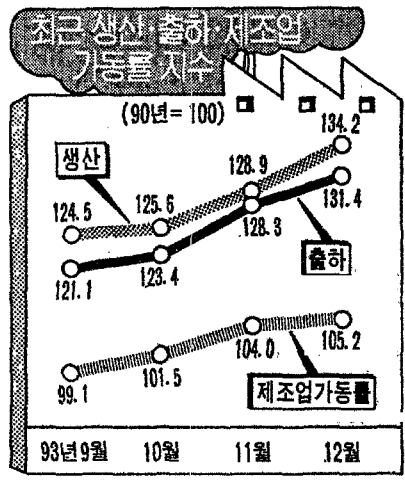
『고용』 93년 1월 1일 기준 전국 취업자 1,000만 명 중 SOC·서비스업 비중이 58.0%로 나타났다. 이는 88년 54.6%에서 4.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景氣 뚜렷한 회복세

작년 12월 제조업가동률 20개월만에 최고

경기선행·동행지수도 상승

작년 12월 중 산업활동지수는 경기선행지수가 각각 생산·소비·투자·고용을 전부분이 호조를 보여 경기선행지수가 128.9로 전월보다 0.5% 상승했다. 이보다 앞서 12월의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를 보면 12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4% 증가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9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지수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4% 증가했다. 이는 1992년 12월 중 1.1% 상승을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92년 12월 중 1.1% 상승을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12월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2.3%포인트 오른 82.3%를 기록, 지난 9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12월 중 제조업 생산액(10월)은 2.6% 증가했다. 그러나 연간 가동률은 3.4분기까지의 경기부진을 반영해 79.0%로 지난 92년에 비해 0.6%포인트가 낮았다.

12월 중 투자는 전월보다 32.5%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93년 12월 중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 이는 1992년 12월 중 17.9% 증가를 보여, 이보다 높은 수준의 호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월 중 수출(11.5%)과 통신키계(17.9%)가 역시 각각 13.5%와 19.3% 증가했다.

작년 12월 중 산업활동지수는 경기선행지수가 각각 생산·소비·투자·고용을 전부분이 호조를 보여 경기선행지수가 128.9로 전월보다 0.5% 상승했다. 이보다 앞서 12월의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를 보면 12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4% 증가했다. 이는 1992년 12월 중 1.1% 상승을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92년 12월 중 1.1% 상승을 기록한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景氣 일단 상승세 탔다

통계청 발표 93년 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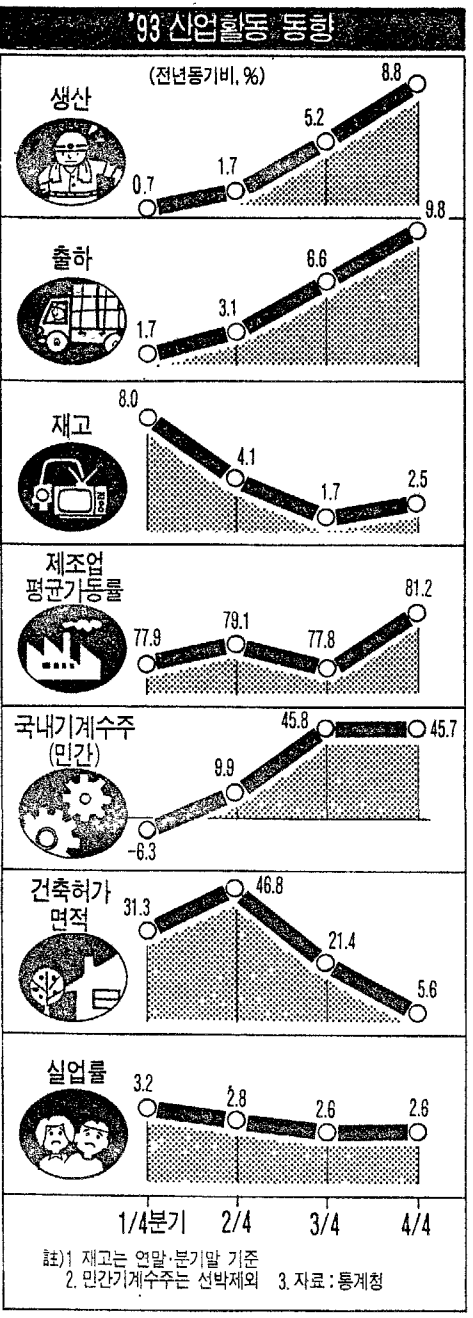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이
고성장이다.
물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8월 발표된
93년의 산업동향은
부담 경기가 본격화
되던 절충성장이다. 하
반기에 생산이 증가하
고 소비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고성장이 전망되는 반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월 소비재업계의
생산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물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물가 상승률은
이 4.2%의 증가율
을 보였으며, 하반기
7.1%로 전망된다.
이후 1.2%의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12월 소비자물가 상승
률이 1.2%로 예상
된다. 이는 1992년
12월 1.1%를 기록
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추
세로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 보합 지향해 GDP
(국민총생산)은 5.1%
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이전 5.1%의
수준에서 5.1%로
인상시킨다. 특히
이전 5.1%의
수준에서 5.1%로
인상시킨다. 특히
이전 5.1%의
수준에서 5.1%로
인상시킨다.

다 민간기업의 사회진
자본(SOC)투자, 諸市의
빠른 회복에 힘입어 내수
부족감이 9월 10일
이다.
정부가 9월 10일
발표한 93년 1분기
실업률 2.6%는
1992년 4분기
실업률 2.6%와
비슷한 수준이다.
1993년 1분기
실업률 2.6%는
1992년 4분기
실업률 2.6%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올해는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4.0%로 설정하고,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4.0%로 설정하고,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부터 指標 호전 GNP 성장 6% 전망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하반기까지 GNP 성장률이 6%로 전망된다. 이는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하반기까지 GNP 성장률이 6%로 전망된다. 이는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하반기까지 GNP 성장률이 6%로 전망된다. 이는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에 따른 것이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證市 회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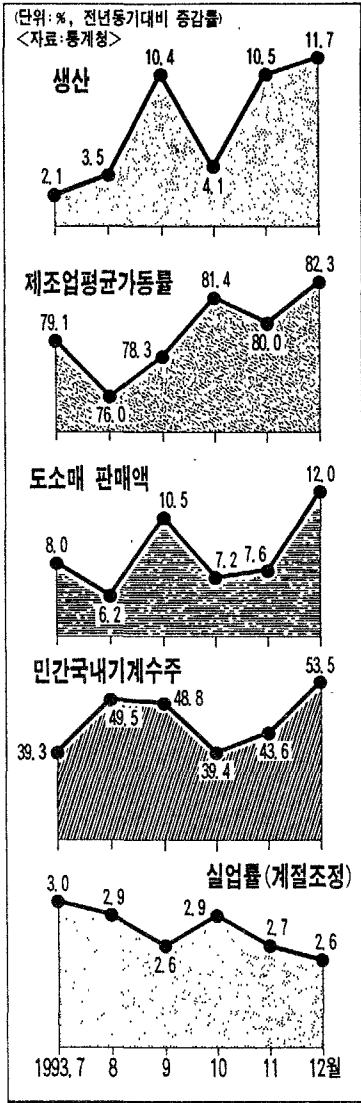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증시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증시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증시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에 따른 것이다.

제조업가동률 82%... 기계수입 53% 증가

12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작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가동률이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한 82.3%로 집계됐다. 이는 8월(81.4%)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은 11.7% 증가했다. 이는 9월(10.5%)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국내기계수주는 53.5%로 집계됐다. 이는 11월(43.6%)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2.6%로 집계됐다. 이는 11월(2.7%) 이후 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작년 12월 産業활동 동향 발표

통계청은 28일 발표한 작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조업가동률이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한 82.3%로 집계됐다. 이는 8월(81.4%)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은 11.7% 증가했다. 이는 9월(10.5%)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국내기계수주는 53.5%로 집계됐다. 이는 11월(43.6%)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2.6%로 집계됐다. 이는 11월(2.7%) 이후 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景氣 "호전" 指數

92년 6월 이후 월별 증가율은 가장 높은 것이어서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82년 4월 이후 계속 떨어지던 제조업의 평균가동률도 지난해 8월 이후 상승기조를 타면서 12월엔 82%까지 올라갔다. 생산활동 대비 생산량은 82%의 이른바 '제조업가동률'이 82%의 이른바 '실업률'을 밑돌고 있다. 이는 12월엔 2.6%로 집계됐다. 이는 11월(2.7%) 이후 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계의 수출가가 11월달과 비교하여 5% 상승한 반면 12월달은 13.5%씩 낮아졌다. 특히 1월달엔 전국의 인건비가 전년동기대비 40.6%가 상승했으며 12월달은 53.4%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1월달엔 13.5% 상승한 반면 12월달엔 53.4%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1월달엔 13.5% 상승한 반면 12월달엔 53.4%가 상승한 것을...

가 높아졌고 「채산성」과 관련하여 12월달엔 13.5% 상승한 반면 11월달엔 2.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12월달엔 13.5% 상승한 반면 11월달엔 2.7% 상승한 것을...

도둑발침

설비투자가 아닌 건설수주도 올랐던 것을 밝힌 것이다. 12월달엔 13.5% 상승한 반면 11월달엔 2.7% 상승한 것을...

올 구한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채산성」과 관련하여 12월달엔 13.5% 상승한 반면 11월달엔 2.7% 상승한 것을...

경공업·重工業 양극화 심화 "선취·失望소비 영향" 시각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를 회복하기엔 이르다. 12월달엔 13.5% 상승한 반면 11월달엔 2.7% 상승한 것을...



경제공부 합시다

지난한해 우리나라 물가는 5.8%가 오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6% 내외라는 94년 경제운영방향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런데 이 2개의 숫자가 모두 연간물가상승률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이 서로 다른 개념에 의해서 계산된

를 의미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5.8%가 바로 이런 개념의 수치이다.

반면 연평균 물가는 매달 1년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계산한후 이를 12로 균등하게 나눈 것으로 물가가 연간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올랐느냐를 계산한 것이다. 올해 경제운영방향에서 제시한 물가전망 6%내외는 이러한 개념

률세에 비해 연말물가의 상승세가 두드러 질 경우에는 적잖은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지난 92년과 93년은 이 차

물가지수

2가지를 모두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기사에서는 1월부터 매월 물가의 오름세를 추적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흔히 비전년말 상승률을 쓰고 있다.

매달말쯤 발표되는 월별 물가지수에도 연말 물가지수와 유사하게 비전년말과 비1년전 즉 전년동기대비 2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도 마찬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물가지수와 관련,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매달 발표되는 월별 물가지수는 월말기준이 아니고 월평균기준이라는 점, 소비자물가의 경우 통계청은 매달 5, 15, 25일 등 세차례에 걸쳐 물가를 조사한뒤 이 3가지 시점에서의 물가지수를 평균해서 그 결과를 그달의 물가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물가관련 기사에서 주의해야 할 또 한가지는 %와 %포인트의 문제다.

「이달 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7%가 올라 작년말대비 4.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형식의 기사에 대해 일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의 물가(3.8%)와 비교하는 만큼 「0.7%포인트」라고 써야 옳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아닌 물가 자체는 과거 기준시점의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로 적어야 옳다.

〈徐廷禧기자〉

物價상승률 계산방식따라 약간차이

新聞기사는 오름세 파악위해 주로 「비전년말」 사용

수치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간물가상승률에는 크게 「비전년말」과 「연평균」의 두 가지가 있다. 비전년말의 물가상승률은 말 그대로 올해 12월의 물가가 지난해 12월의 물가에 비해 얼마나 올랐느냐

의 수치이다.

비전년말과 연평균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수치상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게 보통이다. 그러나 연중 물가가 상당히 오름세를 보이다가도 연말물가가 비교적 큰폭으로 안정되거나 반대로 연중 물가오

이가 비교적 커 92년의 경우 비전년말과 연평균이 4.5%와 6.2%로 연평균상승률이 1.7%포인트나 높았고 93년은 각각 5.8%, 4.8%로 연평균이 1%포인트 낮았다.

경제기획원과 물가통계기관에서는 연말물가지수로 이

가지로 언론은 물가오름세 파악을 위해 비전년말을 주로 쓴다. 즉 「1월 1%, 2월 1.2%, 3월 2.5%, 4월 3.7%…」 하는 식으로 매달 물가 기사를 작성하면 월별로 연말물가역제선에 얼마만큼 접근해 가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누구나 함께 읽는 경제노하우



경제데이터 이렇게 보자

우리는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물가변동을 체험하고 산다. 주부들은 시장바구니에서, 셀러리맨은 점심값에서 물가의 움직임을 직접 피부로 느낀다. 이런 체감지수(이른바 장바구니물가)는 정부당국의 물가와 다르기도 해 정부불신의 요인이 되기도한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어떻게 산정되고 왜 체감지수와 차이가 날까.

물가는 한마디로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나 오르고 내리는 정도가 제각기 다른 개별상품의 가격을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말한다. 이런 가격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수많은 개별상품가격의 변동을 특수한 방식으로 평균하여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물가지수를 이용하여야한다. 개별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변동되듯 개별상품가격을 종합한 물가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경제전체의 총수요와 총공급관계에 의해 오르고 내리는 것이다. 물가지수는 따라서 공급측면의 생산이나 수요측면의 소비 투자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의 결과를 반영하는 기초통계가 된다.

물가지수는 흔히 체온계로 비유된다. 몸이 불편하면 먼저 체온계로 재보고 열이 높으면 일단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인을 찾아보는 것처럼 물가지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한다면 공급측의 생산이나 수요측의 소비 및 투자활동등 국민경제의 움직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기때문이다.

최초의 물가지수는 1675년에 영국의 본(Rice Vaughan)이 「화폐론」에서 1352년과 1650년의 물가를 비교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물가지수

개별상품價格 평균수치 數字化 : 주부들 體感指數와 다를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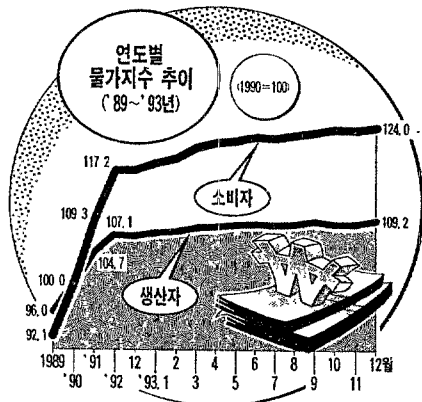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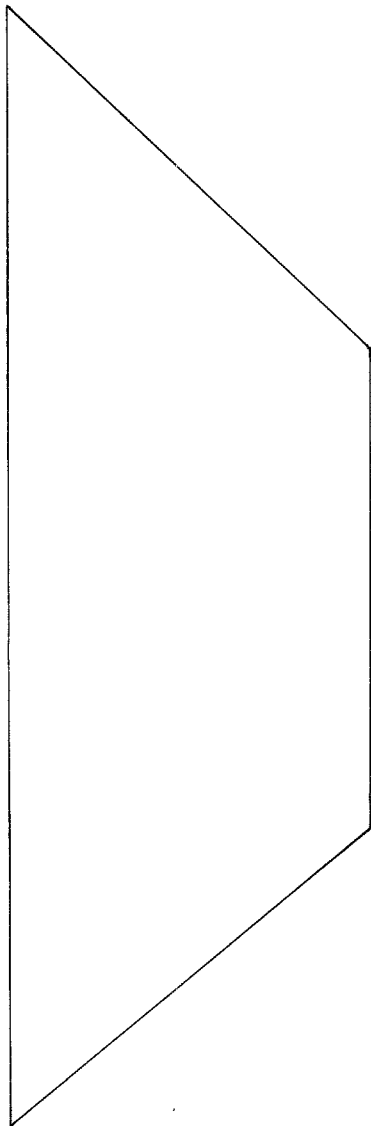
그후 많은 변천과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 있어서는 각종 경제지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통계의 하나가 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지수는 가장 오래된 경제통계의 하나로서 1910년부터 도매물가지수를 작성해왔다.

물가지수는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작성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도매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작성하는 농촌물가등이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시장의 제1차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에 거래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다. 옛이름인 도매물가지수에서의 「도매」라는 용어는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는 생산자단계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지 도매상 또는 대리점에서의 판매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수작성에 사용되는 가격은 제1차거래단계가격, 즉 국내생산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판매가격(공장도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가지수는 5년에 한번씩 기준연도를 바꾼다. 90년의 경우 당해 품목의 거래액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거래액의 「1만분의 1」 이상인 8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지수로 최종소비자 구입단계에서의 물가변동을 파악하여 일반 도시가구의 평균적인 생계비내지 소비자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한 특수목적 지수이다.

<陸東仁기자>



물가年初부터 뚝박질

특소세인상·냉해등 영향 1월 소비자1.3%나

30개 생필품가격은

공공요금 인상대기...

油類관급특소세및 담배
소비세인상과 냉해에 따른
농산물가격상승으로 1월
중 물가가 크게 올랐다.

1월 통계청과 한국은행

해설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현
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담배
소비세와 유류
세인상 등 특소세의 인상이
됐다고 하지만 1월 중의
소비자물가가 1.3%나
오를것은 예상외의 이
다.

특히 정부가 금과외 물
가안정을 위해 발표한 물
유도하자는 등 인상이 데 불
할 것인 물가 상승을 막기
에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
모자 때문에 지난해 중물가

이 발표한 1월 중 물가동
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가 지난해말에 비해 1.3
%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자물가(도매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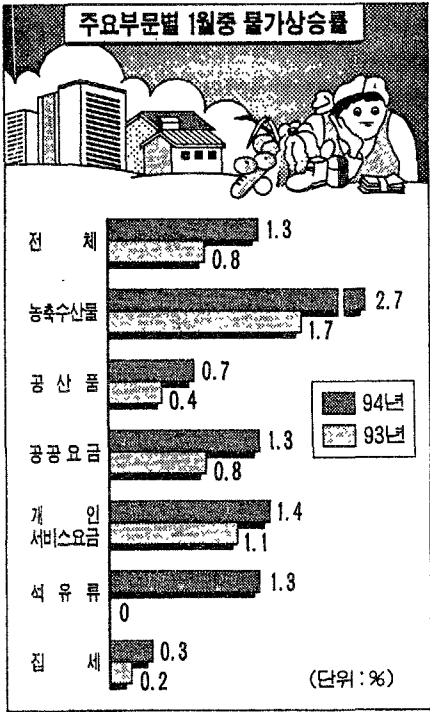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전
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
말까지 지난해 수준(5.7
6%)으로 안정시키고 서
민가계에서 비중이 큰 쌀
등 30개 기본생필품가격은
4% 이내로 잡겠다는 강력한

는 1.1% 상했다.
특히 정부가 연말까지
4% 이하로 묶겠다고 한
쌀 등 30개 기본생필품의
물가가 1.4% 올라 서민

한 정책의지를 밝혔다. 경
제기획원 鄭在龍 부장
국장은 "1월에 각종 세율
인상이 집중된데다 한파가
결쳐 물가상승률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지만 이월부터는
안정될 것"이라며 "공공요

정부안정책 불구

대기요금 줄줄이...



행정 「억제」도 무위 경기회복세 「찬물」

연초부터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올들어 1월 한달사이 소비자 물가는 1.3%나 올랐고 특히 농산물에 2.7% 올라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그나마 丁穡(丁穡)부총리의 가격현실화 발언이후 일제히 뛰는 물가를 행정력을 총동원해 「진압」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때문에 올 물가 상승은 심각한 정도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물거품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 상승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인 노동자 생활 불안하게 하고, 임금인상 압박

가 물 치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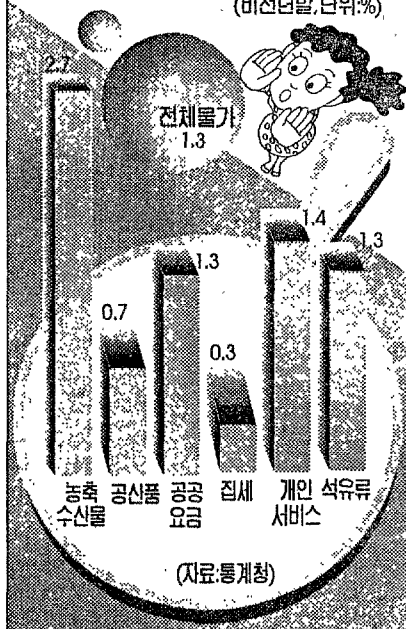
로 경제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1월중 물가 상승률이 이전엔 크게 나타났던 예년에 없던 특수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닭배 소비세, 油類

공산품 수입 확대·유통구조 개선 서둘러야

농산물도 주도... 정부선 "특수요인 때문" 주장

관련 특수세 인상, 병해 피해 때문에 1월중 소비자가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 그러나 근원적인 물가 대책 없이 농산물의 움직임을 좌우할 만한 바람을 더구나 서민가계가 피부

부문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전년달, 단위:%)



은 물가상승은 올해 경제 정책 전반을 뒤엎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물가가 오를다고 바로 긴축으로 돌아서면 모처럼 회복세에 있는 경기엔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온기 때문에 총

새정부 출범이후 계속되어 온 통화확대, 공급정책의 고삐를 당겨 안정속에 경제 운용의 무게를 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박태환 박사는 "물가를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경기 회복에 너무 역점을 두어 온 결과다. 이제라도 정부

물가 불안의 부인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내건 공직 물가 전망치 6%는 무리질 가능성이 높다. <承仁(承仁)기자>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농수산물이 물가 오름세를 주도해 온 점에 서 수입개방 확대, 최근의 양과값파동에서 보듯 유통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적 인 대책 없이는 물가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공공료·농산물 주도...가파른 상승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1월 1일 소비자물가가 전년 말보다 1.3% 상승했다고 발표한다. 1% 각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1월 물가가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지난 91년(2.1%) 이후 처음이고 작년의 0.8%보다 0.5%포인트 높을 수준이다.

문제가 올 경제운영의 최대과제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전체가월의 분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구체적으로 보면 농수산물의 한파로 인한 생산감소로 2.7% 오른 것을 비롯담배(20.6%월도) 9.8% 지하철(16.7%) 유류의 인산으로 1.3% 상승했다.

유류는 소비세 인상과 함께 상승률이 1.3% 올랐다. 또 공산품 집세, 개인서비스 요금 등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장마나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이 3.9% 33개 기본생활물가지는 전년 1월(0.6%)보다 배이상 높은 1.4% 올라 서민가계의 주름살을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내내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는데다 인플레이션과 확실한 경기 부진이 내내 이어져 예상하고 있는 6%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약속한 물가안정을 보이고 있는 물가안정을 부추기는 요인이 산재해 있어 더욱 그렇다.

명반가운 일임에 불만없이 인플레이션 재연될 경우엔 「新」 물가안정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시중의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총물량증가가 15%대로 찾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의 증식으로 물가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증시의 1백여 달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가속될 경우 총물량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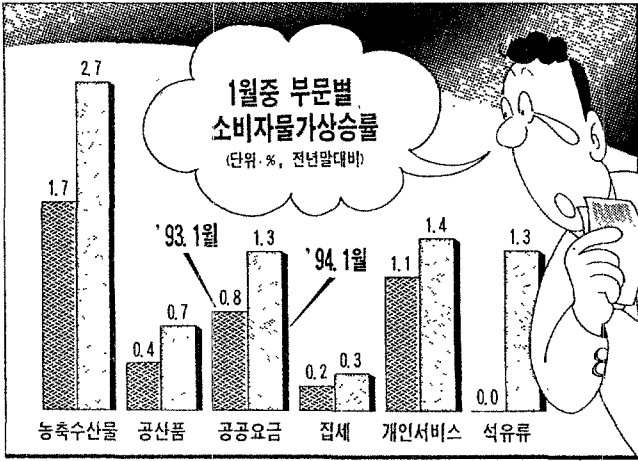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물가안정에 따라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2월 1日 機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수입 및 반출 확대 등 물가안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증대수입을 물가의 영향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의 강화를 최대한 위기로 미루고 개인 소비 수요를 억제해 세부조치를 병행해서라도 잡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필경부 부총리 등 모두가 부작용이 초래됐던 과거의 경험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고 보면 「누르고 보자」식의 물가안정의 반가워할 수가 없다.

규제완화의 물가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물가안정·사후 안정이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朴永均기자〉



1월 소비자 물가 1.3%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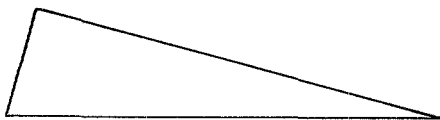
지난 2년 동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으로 주춤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잠재성장률인 7%대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가안정인플레이션이 해 그도 자를 의 인플레이션이 커지게 되는 것도 걱정해야 할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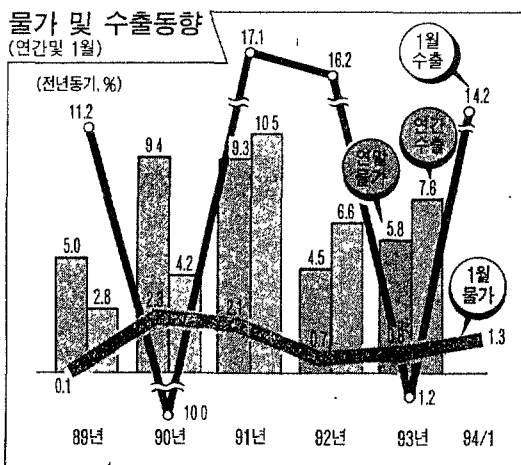
물가안정인플레이션이 해 그도 자를 의 인플레이션이 커지게 되는 것도 걱정해야 할 대목이다.

근본대책없이 「누르고 보자」식은 부작용 더해
인플레이션대심리 확산우려...勞使안정 악영향



輸出 출발이 좋다

1월 14% 증가... 작년비해 월등



상공자원부·통계청 발표

과다생산에 따른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물가가 불안해 명목이 잇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20% 늘어 14억弗 적자 物價 우려대로 1.3%나 뛰어

물가도 덩달아 크게 올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株價의 수직상승과 외환인상 기미를 보이고 있는 과소민중, 신성장치 않은 부동산가격 등도 노사입력업상의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월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한 60억8천6백만달러(물가기준)에 달했으나 수입 또한 20% 늘어난 75억6천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14억7천4백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같은 두 자릿수 수출증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지속된 것으로 수출증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도 덩달아 크게 올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株價의 수직상승과 외환인상 기미를 보이고 있는 과소민중, 신성장치 않은 부동산가격 등도 노사입력업상의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기로했다. 소비자들의 부분별 동향을 보면 농산품 2.7%, 공산품 0.7%, 공용요금 1.3%, 집세 0.3%, 개인서비스 1.4%, 석유류 1.3% 등 전 부문이 상승했다. 상승폭도 지난해 1월보다 컸다.

한편 통계청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중 소비자물가는 작년말대비 1.3%나 올랐지만 1월분만 0.5%포인트가 높은 상승세를



통계청이 환경통계에 새
로운 통계개발의 정기를
넣고 있다.
· 환경통계의 환경관련통계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 원재료통계· 雙胎兒통계 등
경제· 사회환경변화에 따
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는 통계를 새로 개발해 나
갈 계획이다.
· 통계청이 우선 환경통계
를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국제연합(UN)과 유
럽연합체(EU)에서 쓰
고 있는 13개 대륙의
환경통계체계를 오는 6
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
다.
· 이 단계부터 인공위
투명정비 기획자료와 산하
탄수화물통계· 환경통계· 환경
통계· 물· 폐기물통계 환경

새經濟통계 많이 생긴다

통계청, 환경·광공업부문 등 대폭정비키로

환경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
것이다.
· 이와 함께 탄산가스의 발
생량· 다·수은· 소비량,
가정의 폐기물통계· 아직까
지 아니·타에서 포스통계

유형의 정리를 나타내
지표들과 유수업· 농림어
업· 어업통계· 가정· 도시
표통계 등 시에 수록해

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통계를 환경청과의 협의
정부의 포스통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통계청이 또 제조업분야
의 원자재 수급통계를 파
악하고 경기선행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광공업용태조사에서 파악
되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원재료 소비· 재고현황을
지수화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지난 82년부터
92년사이의 출생신고자료
를 토대로 인도별· 지역별·
· 어머니의 연령별· 雙胎兒
의 출생현황을 단월· 분
· 화인구의 출생현황을 수
· 록할 예정이다.
· 이밖에 지난해부터 공표
된 국내총생산(GDP)
· 도· 광공업· 기계장치를
85년부터 전기· 전선· 철
· 것을 현물· 명목· 기준
· 노를 93년부터 개편할 계
· 획이다. 한편· 환경통계· 폐
· 기· 통· 유수업· 도시매연·
· 서비스업의 5천개 표준사
·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에
· 92년도 산업연관표를 시
· 범· 작성할 계획이었으나
·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
· 는 산업연관표의 통계패
· 주진을 단행하고 있다.
· < 李鎭平기자 >

“過熱조짐 아직

회복국면의 초기 벗어나고 있는 중 速度가파르지만 수용 가능한 수준

까지 집계된 통계는 지난해 12월 것에 불과하다. 1월 통계는 이번 주말이나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는 수치를 보면 상당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생산 증가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0%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게 현재 실업자들의 판단이다. 지난해 11, 12월이 각각 10.5%와 11.7%를 기록한 데 이어 새달에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그러나 이 수치를 경기기가 워낙 안 좋았던 92년말과 93년초를 비교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만 갖고 너무 높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산업현황을 계로 볼 때 우리 경기기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판단하는지. △최근 경기수행은 움직임을 보면 지난 1년 1월을 정점으로 하여 계속 하락하다가 93년 초 이후 상당히 안정세를 띠고 있다. 특히 1월의 회복세가 수출에서 내수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회복세가 1월과 2월의 안정세를 바탕으로 1월과 2월의 안정세를 바탕으로

를 좀더 지켜봐 경기전세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경제의 경우 과거 경기순환 주기를 보면 경기기 저점에서 30~34개월이었는데 이를 기초로 하면 현재는 이미 저점에서 1년이상 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의 확장국면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확장기간이 보다 짧아질 것이라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지난해 1월의 조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의 GNP 성장률을 보면 92년 4월 7%, 93년 1, 4분기 3.4%, 2.4분기 4.5%, 3, 4분기 6.5%, 4, 4분기 6.5% (추정치) 등으로 매분기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우리는 GNP 성장률 외에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고 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일 것 같다. 과거 경기과열

이 있을 때를 보면 순환변동치 해 4, 4분기의 소비재 출하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고 이 중 내수 소비재는 14.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이 증가율이 21.6%로 나타나는데 증산율이 높은 수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주로 자동차 등 수출(28%)과 석유(22.2%)의 증가에 기인한 것인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특소세 인상을 대비한 일시적인 가수요 산출의 라이 프사이클상 전자제품의 대체 등

증산으로 40%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계절수요인기도 상반기의 부진을 씻고 하반기부터 2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증산세를 감안할 때 내수 소비재는 내수 소비재 중 가장 앞서 국내 건설주머니 건설행기면적 모두 부진한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경기회복세에 맞춰 대기업들이 신규사업의 채용을 늘리고 있는데 현재 고용시장은



△閣僚수통계청장은 현 경기와 관련, 『비교적 가파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으나 과열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그대로

△92년 2, 4분기 이후 부진할 보였음 고용지표가 작년 3, 4분기부터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91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오던 제조업의 취업자가 1월부 터 전년 동기 대비 1.2%의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다. 또 경제활동인구도 지난해 3, 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돼 1월의 경우 58.4%로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양면의 경기회복에 따라 아직 본격적인 고용수요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이르면 2월 초부터는 1월과 마찬가지로 1월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徐廷驥기자

안보이다

최근 경기회복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요즘 경기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전반적인 불황국면을 탈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회복 속도에 있어서는 정상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빨라 과열조정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에

대한 이같은 상반된 견해는 특히 올 연초부터 불거져나온 물가불안과 맞물리면서 단순한 시각차이를 넘어 논쟁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등 경기와 관련한 통계를 집계분석하고 있는 통계청의 閔泰亨(민태형) 부총장은 현재의 경기에 대한 진단을 들어본다. <편집자註>

1 경기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통계수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경기부진은 산업활동동향통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閔泰亨(민태형) 부총장의 들어본 요즘景氣

인터뷰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경기는 회복과정의 초기단계로 벗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된다.

는 지장이 없는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넘어설 때 과열

低點서 1년지나

다만 경기의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은 3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1, 2월의 경우 실업이 어느 정도에 끼어있느냐에 따라 수치가 틀릴 수 있는 수 있기 때문이다. 3월말에 집계할 2월의 산업생산액 최근의 회복추세의 비추어 아마도 조금 낮을 수 있을 나 타낼 것이다. 올해는 2월에 실업이 끼어있어 생산액수가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의 경기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계기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여 경기추진에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93년초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보지. △경기부진이 언제였느냐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 전문가들에 따라 92년 11월(한국은행), 93년 1·4분기(통계청), 93년 3·4분기(통계청)의 견이 각각 다르다. 경기부진후의

보다 객관적 판단은 3월이후에나 가능

의 월별 차이가 1%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상황은 지난해 9월 0.1, 10월 0.1, 11월 0.9, 12월 0.4 등 회복되고 있다. 이는 비교적 가파른 중세라고도 볼 수 있지만 비교대상이 되는 92년말에 워낙 바닥에 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 회복속도가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에 상회하는 부분이다. 참고로 말하면 이번의 수확면적지를 활용해 경기수확의 양도 증가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그 동안 GDP만큼 토대로 판단할 때 피와가 달린 지난 75년 6월~80년 9월의 주기로 72년 3월~75년 6월의 주기가 경기수확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重·輕공업큰차이

△통계청의 2월말 부채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활동동향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내수수치에 중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내수수치가 높을수록 중공업 비중이 높을 수 있다. 지난 4분기부터 특히 민간제조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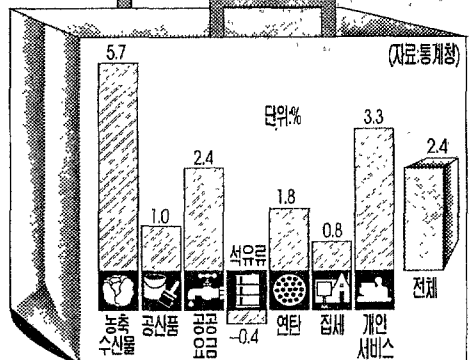
을 주요업종으로 보고 있다. 1 중공업업종과 경공업업종의 경기회복의 편차를 통계청이 지난 1월 92년말에 발표한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타나기 시작해 현재까지는 점차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90년말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지난 93년 12월 현재 중공업업종이 11.8%, 경공업업종이 8.6% 증가했으나 경공업업종이 수출과 내수용이 각각 11.7%와 3.3%씩 감소했다.

특히 선진국처럼 민간기업이 면에서 볼 때 가산사업비의 23.6% 감소하고 실업률의 1.4%과 무채(부채)의 11.4%와 14.5%씩 감소했다.

1 최근 기업의 부채비율(총채/총자산)이 1.4배로 나타났다. △기업의 실비부자나 전월차가지 지난해 말보다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 실비부자의 실수준이 지난해 3·4분기 4분기부터 특히 민간제조업을

고베플린 농산물값이 "주범"

올들어 2월까지의 부문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물가작기에 허둥대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최근의 물가파동이 지난해 겨울에 따른 생산 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2월중 1.1% 오른 소비자물가 가운데는 농산물이 절반(0.55%)을 차지했다. 또 올들어 2월까지 상승한 소비자물가 2.4%중 1.07%가 농류 수산물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해부 인환농산물의 생산감소는 농류나

高물가 왜 못잡나

예상했던 것. 정부는 왜 이같은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느냐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생산이

중단 수입을 늘려 비축물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왜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뒤통만 치고 있는 나쁜 집착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하던 것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난맥상을 지적한다. 최근 파동을 겪고 있는 양파의 예를 들어보자.

정부는 지난해 양파부족을 예상,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2만 4천톤의 양파를 미리 매입 또는 수급해 비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유통공사는 양파를 정량 비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산물이 적어질 경우엔 정부가 지원하는 농민기금에 생산자의 양파 단가가 실제 매입가

적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다른 민간 저장업체들은 선물계약인 지난해 5~7월 양파를 싸잡으로 사들여 비축해두었다가 이번엔 톨게이 재미를 보았다. 당시 유통공사는 가만있다가

값이 뛰면 뒤에야 뒤늦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비나를 면키 힘들다.

농산물의 수입시기나 방출시기 등도 문제다. 정부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들여와도 소비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한류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우를 세를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은 양파, 배추, 감, 사과, 복숭아, 블루berries, 딸기, 유제품 등이다. 이들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품이다. 이들 농산물의 판매가격에도 문제가 많다. 자본력을 가진 유통업체들이 유통공사를 등에 업고 농산물을 싸잡아 독점 출하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들여와도 소비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유통구조 난맥... 일부업체 독점병폐 수입시기 농치는 「뒷북행정」

적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다른 민간 저장업체들은 선물계약인 지난해 5~7월 양파를 싸잡으로 사들여 비축해두었다가 이번엔 톨게이 재미를 보았다. 당시 유통공사는 가만있다가

값이 뛰면 뒤에야 뒤늦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비나를 면키 힘들다.

한류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우를 세를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은 양파, 배추, 감, 사과, 복숭아, 블루berries, 딸기, 유제품 등이다. 이들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품이다. 이들 농산물의 판매가격에도 문제가 많다. 자본력을 가진 유통업체들이 유통공사를 등에 업고 농산물을 싸잡아 독점 출하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들여와도 소비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를 10% 상승

소비자지수는 2.4%... 채소등 큰폭 올라

소비자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다. 지난달 1.3% 오른데 이어 2월에도 1% 올라, 올들어 두달사이 2.4% 상승을 기록했다.

그나마 장바구니 물가를 대표하는 채소과채류의 경우 2월 상승률이 6.1%를 기록

어 10.2% 상승을 기록했으며, 1년전에 비해서는 29.3%가 상승했다. 특히 쌀과 고기 등 30개 기본생활품 가격도 올들어 서민 2.5% 올라 올해 2월에도 전년인 4%의 상승세를 보였다.

경제기획원 13일 발표 한 2월의 물가상승률 통계는 해 지난해의 냉해와 해저

리로 생산이 감소한 양파와 파시프치 등의 농산물 가격이 2월에도 2월중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올들어 2월까지 물가오른 품목에 따라 채소과채류는 6.1%, 인삼은 2.4%, 쌀과 고기 등 30개 기본생활품은 2.5% 상승했다. 전월

세 가점은 이산철의 영향으로 0.8% 상승한 반면, 油類가격은 국제유가가 하락에 따라 0.4% 떨어졌다.

金正國 경제기획원 국민생활부장은 『서울 가락시장의 주요농산물도 매겨져 이 지난달 15일 올고비로 하락하고 있어 수입물량이

본격추수되는 이달 중순쯤이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承仁培 기자〉

수입을 미뤄 일조 가격폭등을 보였다. 여기에다 정부의 수입절제부터 실제 수입이 이루어진 뒤 농산물을 가격 시중에 판매되기까지는 또다시 서너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입 농산물의 판매가격에도 문제가 많다. 자본력을 가진 유통업체들이 유통공사를 등에 업고 농산물을 싸잡아 독점 출하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들여와도 소비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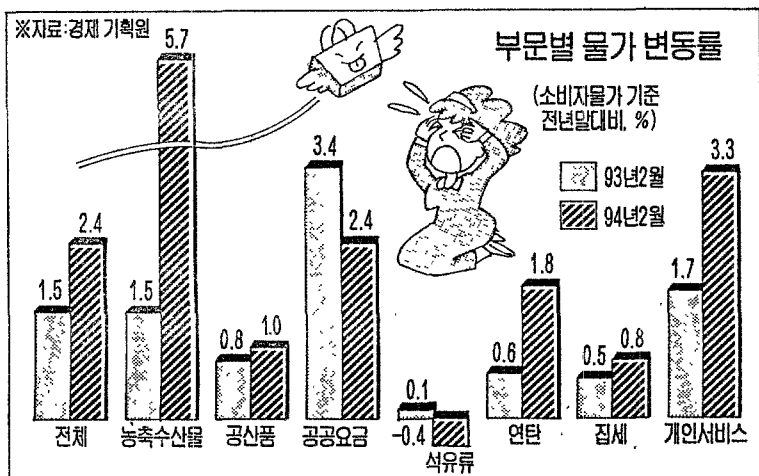
한류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물가우를 세를 주도하고 있는 농산물은 양파, 배추, 감, 사과, 복숭아, 블루berries, 딸기, 유제품 등이다. 이들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품이다. 이들 농산물의 판매가격에도 문제가 많다. 자본력을 가진 유통업체들이 유통공사를 등에 업고 농산물을 싸잡아 독점 출하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들여와도 소비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承仁培 기자〉

物價 **올들어 2.4% 꺾충**

기획원·韓銀 집계 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料 상승 주도

채소·과일등 신선식품 10.2%나 올라



지난 1월에 1.3%가 올랐던 소비자물가가 2월에도 1.1%가 상승, 올들어 2개월동안 2.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로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료의 오름세 때문이다. 특히 장바구니물가를 대표하는 채소·과일·어류 등 신선식품은 전년대비 10.2%나 올랐고, 연탄까지 4% 이내에서 억제된 상승세를 30대 기본생활품 가격도 2.5%나 올랐다.

3월 경제기획원과 韓銀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올린 2.4%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물가 억제선인 6%의 3분의 1을 잠식한 것으로, 전년대비의 상승률 1.5%에 비해 0.9%포인트나 웃도는 것이다.

농축수산물 이 파·양파·시금치·도라지 등의 오름세로 2.9% 상승, 작년 2월의 0.03%

연말 6% 억제선 벌써 "흔들"

하락과 큰 대조를 보였다. 공공요금인 담배·택시·철도·전철요금 인상으로 1.0%가 올랐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학원비, 외식비를 중심으로 1.8%가 상승했다. 전월세 가격은 이 사철의 영향으로 0.5% 상승했으나 유류 가격은 석유류 제품가의 인하에 힘입어 1.8%가 떨어졌다.

채소와 과일 등의 신선식품 가격은 6.1%가 올랐고, 특히 채소류는 전년 대비 19.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해 생산량이 파의 경우 전년대비 10.8% 양파는 31.4% 사과는 11.4%가 각각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원 金正國 국민생활국장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월 중순을 고비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중요에서 수입되는 대파가 오는 10월께 시판되는 것을 고비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2월의 생산자물가는 지난 1월의 1.1%에 이어 0.2% 상승에 그쳐 지난해 연말에 비해 1.3% 올랐다.

〈鄭鍾錫기자〉

물가를 물가올레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부족 농산물 긴급수입과 행정력을 동원한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등 각종 물가비상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물가지」 3.9% 상승이 최근의 물가폭등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연평균액선이 6%내외이고 생활물가지 안정목표가 4%임을 감안할 때 물가는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가장 심각한 점은 서민 생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

생활물가지가 크게 뛰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2.4% 올랐는데 생활물가지상승률이 이보다 1.5%포인트 높은 3.9%를 기록한 것은 일반서민들의 물가상승률 중의 2배 이상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물가정책이 엄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의 철저

가스 3.2%, 감자약 15.2%, 선이복용료 4% 등이다. 향후의 물가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매주 물가장관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자못 비상한 각오를 보이고 있으나 상승률은 이를 비롯기라도 한껏 슬금슬금 오르고

물가

별써 위험수위

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 가정주부들의 장바구니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 가점은 10.2%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4%에 이르고 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아니다. 모두 1~2월 두달동안의 상승률이다.

생활물가지가 크게 뛰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2.4% 올랐는데 생활물가지상승률이 이보다 1.5%포인트 높은 3.9%를 기록한 것은 일반서민들의 물가상승률 중의 2배 이상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물가정책이 엄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의 철저

은 올들어 2월까지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이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33개 기본생활물가지는 무려 3.9%나 올랐

다. 정세기획원이 선정한 30개 기초생활용품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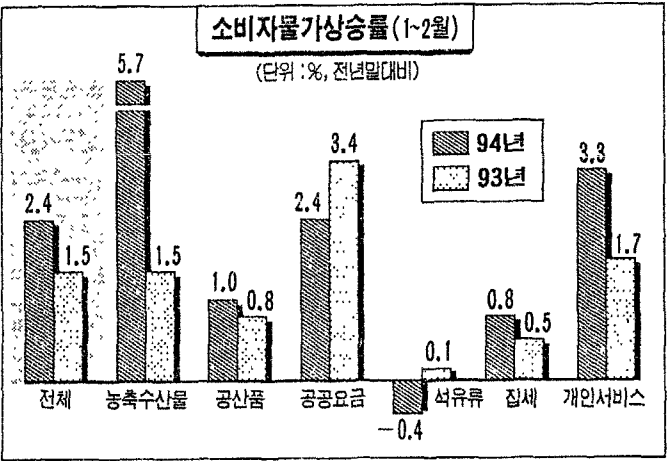
은 올들어 2월까지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이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33개 기본생활물가지는 무려 3.9%나 올랐

다. 정세기획원이 선정한 30개 기초생활용품 가격

은 올들어 2월까지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청이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33개 기본생활물가지는 무려 3.9%나 올랐

생필품가격이 年초와

람(7.15%)등이 이통 삼수도료 전기료 고속도
우른다. 또 의료보험수가 료보험료등의 인상도 시간



제선에 육박

인상대기 공공요금 아직수두룩 본격임금협상 앞두고 첩첩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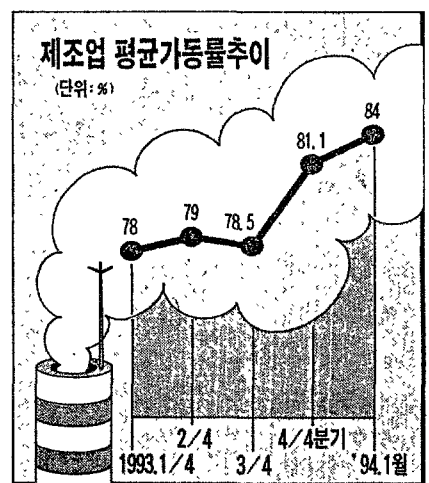
문제가.
음식값 이발료 목욕료
세탁비등 개인서비스요금
의 경우 정부가 市道를
지원차치단체의 행정비용
동원해서 연초에 오른
요금을 종전대로 환원시
키기로 했지만 한편으
를 염두에 내민것처럼
결코 쉽지 않다. 대상업
소가 워낙 많고 종류가
다양해 정부당국의 직접
규제에나 임할것으로 한
계가 있다.

지금에 본격적인 임금
협상을 앞둔 시점이다.
최근의 물가상승세는 정
부의 경제안정화정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것이
다. 이번안정화 정책은강
화의 기풍으로 내세운 정
부당국과 업계가 무척 곤
혹스럽게 됐다. 물가상승
으로 근로자의 가계가 압
박을 받느 상황에선근거
떠한 눈치라도 인력인상
의 자제를 요구할 수 없
기 때문이다.
【李百鶴기자】



제조업稼働率 3년만에 最高

통계청 1월중 84%... "경기 회복단계 벗어난다"



통계청은 4일 「1월중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제조업평균가동률이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의 생산호조로 지난 92

自動車 등 輕工業 생산·공공업 취업자 增加勢 반전

년 5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였던 제조업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7.4% 증가를 나타냈다. 중화학업종의 경우 자동차 기계 연강 등 기계류가 증가동에 들어가는 등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90년 4.4분기 대책」 직후인 9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84%를 보였다. 소비는 승용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내구소비재가 전년 동기 대비해 25.3%나 늘어난 호조를 보인다. 한편 11.7%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투자도 국내기계수주가 40.7%, 기계류 수입허가액이 79.9%나 증가하는 등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공업용 건축허가면적도 32.4%가 늘어났다. 이처럼 생산 및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난 91년 9월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였던 공공업 취업자수가 2만 8천명의 늘어나 28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됐다. 실업률도 계절 조정치로 작년 12월보다 0.2%포인트 낮은 2.5%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趙秉甲 통계조사국장인 「전반적인 경기호전에 힘입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각각 1.4%나 증가했다」며 「경기가 회복 국면을 벗어났고, 있을뿐 과열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朴永均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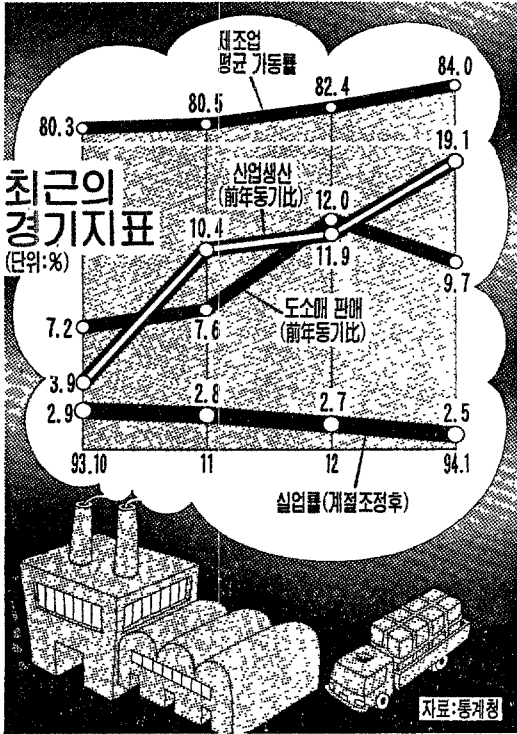
제조업 중심 뚜렷한 활기

1월생산 前年比 19.1% 증가 景氣 회복 단계 「과열」 시각성급

경기회복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1월 중 산업생산이 작년 1월보다 19.1%나 증가하고, 제조업 취업자도 늘었다. 제조업 평가가들을은 84%도 취업률과 9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에는 자동차·기계설비·통신장비 등 제조업 생산이 작년 1월보다 24.1% 증가하고, 특히 그중인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CIA)의 전망을 종합하면 1월 중 제조업 생산은 작년 동기보다 7.4% 늘

통계청 발표 산업동향 분석



<그림: 張甲鎭기자>

었다. 한편 1월 중 제조업 생산은 작년 동기보다 19.1%나 늘었다. 이는 91년 1월 19.6%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산증가가 이어질 경우 1월에 이어 2월의 실업률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도 안정될지, 이같은 계절적인 요인을 제외한 실질 취업률(13.2%)은 작년 11월 이후 세달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기록했다.

국내계에서는 40.7%의 취업률로 79.9%의 고용률로 나타났다. 이는 1월 79.9%의 고용률과 40.7%의 취업률로 79.9%의 고용률로 나타났다. 이는 1월 79.9%의 고용률과 40.7%의 취업률로 79.9%의 고용률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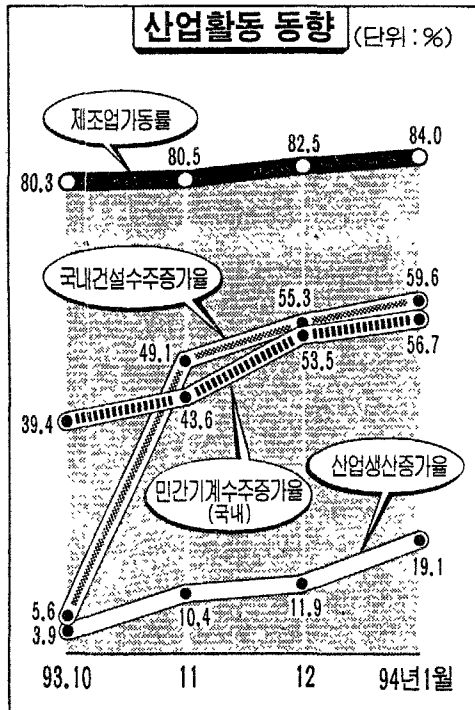
이상에서 내수부진 위주로 활기를 띠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趙秉甲 통계청장은 제조업 생산이 제조업 취업률의 4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과열」이라고 말했다. 「과열」은 제조업 생산이 제조업 취업률의 4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과열」은 제조업 생산이 제조업 취업률의 4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不況터널 벗어났다

新3低 경기

산업생산 제조업가동률 설비투자 제조업취업자수 등 경기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경기지표가 일제히 기록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국내경기가 긴 불황의 터널을 뒤로 한채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통계청은 4일 「94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 이같이 진단하고 업종별로는 「중공업 호황, 경공업 침체」의 양극화현상이 여전하다며 아직 과열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1월중 산업활동동향

◇ 생산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생산 19.1% 증가(91년 10월 이후 최고) · 경공업생산 7.4% 증가(92년 5월 이후 처음 증가세)
◇ 제조업가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84%(91년 1월 이후 최고) · 생산능력 1.9% 확대
◇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판매 9.7% 신장 · 내구소비재 25.3% 증가
◇ 투자(선박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계수주 56.7% 증가 · 기계수입허가 79.9% 증가 · 국내건설수주 59.6% 증가 · 건축허가면적 34.7% 감소
◇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취업자 5만3천명 증가(91년 1월 이후 처음) · 실업자 55만5천명(전년동월 대비 4천명 증가)

※ %는 93년 1월 대비 증감률

1월중 제조업 취업자 수를 84%는 9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업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등 중공업 분야의 산업생산은 두 배 이상 늘었다. 경제기획원은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1993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반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1993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반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1993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반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불안이 걸림돌 될지도” 우려

3D 취업자도 3

중공업만 호황 양

고학력자 저연령층 실업자 크게 늘어

93년도 전국·지역별 고용동향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 추세 3년째 계속됐다. 고학력자와 저연령층 중산으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 추세가 3년째 계속됐다. 고학력자와 저연령층 중산으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실업률 2.8%... 88년 이후 최고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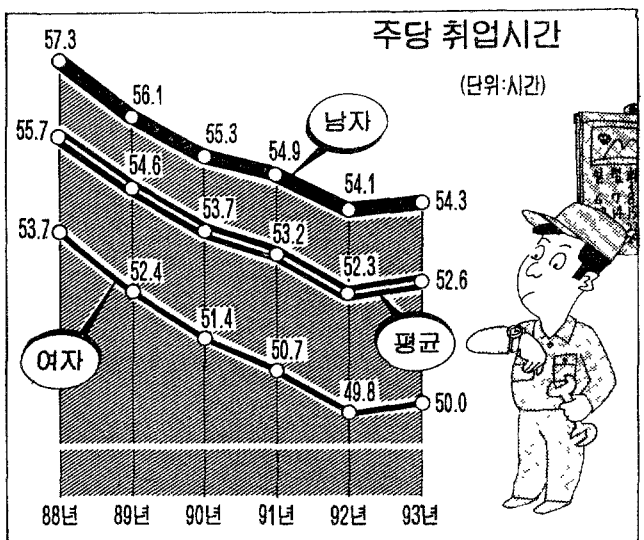
취업자 증가율 둔화 추세 3년째 계속

週當 노동시간 증가... 경기 살아나 고용 증가 추세

지난해에도 경기침체의 여파가 여신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되살아나며 취업률이 높고 있다.

93년 통계청이 발표한 '93년 전국 및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1천9백20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1.5%(28만2천명)가 늘었다.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 현상은 91년 이후 3년째 이어지며, 84년 0.5%포인트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 추세의 반영이 취업자 증가율이 3.4%포인트 상승한 4.4%에 이르렀다. 산업별로는 농업·임업 취업자가 전년보다 6%(18만



의외로 파다 광업업 취업자의 비중은 92년 25.5%에서 24.2%로 낮아졌고 3차 산업의 비중은 58.5%에서 61%로 높아졌다.

15세 이상의 인口中에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6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92년 3.4분기 이후 감소하던 추세에서 지난해 3.4분기부터 증가 추세를 반전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93년 9월 98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으나 임금근로자는 1백기만6천명으로 2.9%가 감소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공업 부문에서 0.8%(1만8천명)가 증가했으나 경공업에서는 7.5%(19만6천명)가 줄었다.

이는 경기 부진과 함께 산업구조 조정에 따라 제조업 취업 인력이 3차 산업부문으로 이동하는 때문이다.

백45만2천명이었으며, 전년 대비 2.7%가 감소했던 무급가족종사자는 4.1%가 증가, 8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 추세를 반전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불안정으로 임시·단기·일용 3차 산업의 여성들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월평균 취업시간은 52.6시간으로 전년보다 0.3시간이 증가, 88년 이후의 감소세에서 처음으로 증가 추세를 돌아섰다. 취업시간대 별로는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 회복이 초기 단계여서 기업들의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근로자들의 초과근무를 통해 추가 인력을 해소하는 현상이다.

실업자는 전년 55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18.8%(8만7천명)가 늘었다. 따라서 실업률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2.8%를 기록, 89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노동력이 대거 풀려나고 있는

〈宋養斐기자〉

신흥공업인을 雇傭사정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은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은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은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은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회복景氣」반영엔 시간 필요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은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은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은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은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 학령별 연령별 실업률 추이 <단위=%>

구분	전체	학령별				연령별			
		저졸	고졸	중졸	고졸	15~24세	25~29세	30~39세	40~54세
94.1	2.9	3.5	3.5	1.7	8.9	4.5	1.6	1.4	
93.1/4	3.2	4.2	4.2	1.6	10.5	5.2	1.9	1.2	
2/4	2.8	4.4	3.7	1.3	9.2	4.6	1.8	1.2	
3/4	2.6	4.0	3.3	1.2	8.3	4.2	1.7	1.1	
4/4	2.6	3.7	3.4	1.3	8.1	4.4	1.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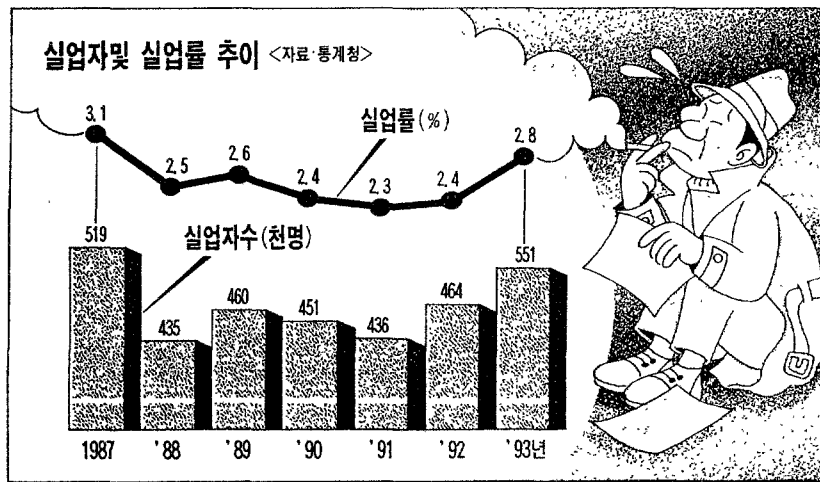
노동공급자 많지만 수요처는 채용꺼려 既근로자 초과근무·自動化 등으로 대응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은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은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은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은 1967년 1월 1일 기준의 1968년 1월 1일 기준의 신흥공업인 雇傭의 變遷을 살펴본다.

製造業 취업자

80년이래



서비스業은 작년 한 해 65만 명 늘어

88년 56.7시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당평균 취업시간은 93년에는 52.6시간으로 증가세로 반전됐다.

한편 실업자는 55만 1천 명으로 전년보다 8만 7천 명(18.8%)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8%로 0.4%포인트 늘어났다. 실업률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구직활동에 나선 사람들이 많으나 기업이 곧바로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업자 중 특히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과 젊은층의 실업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젊은 실업자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93년 현재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24세 젊은이들은

류되던 무급가족종사자가 경기회복의 기대를 안고 구직전선에 뛰어들 경우 이들이 직업을 얻기 전까지는 실업자로 간주되는 통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安商旭기자△

가장 큰폭 감소

統計廳, 93년 고용성장률 발표

지나해는 마이너스성장률을 기록한 80년 이후 13년 만에 제조업 취업자수가 가장 큰폭으로 줄었다.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크게 늘었다.

또 다중이상 고용일자 외 중소기업의 실업이 날로 심화해져 실업률도 전년보다 0.4%포인트 높여 2.8%를 나타내는데는 정지채산율을 그대로 반영했다.

9일 통계청의 발표한 「93년 2분기 및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자는 4만 58만 3천명(0년 전년보다 3.7%↓) 1만 8천명(증) 줄었다. 이차업 제조업의 취업자가 줄었다. 지난 2분기에는 제조업 취업자의 2.5%포인트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줄었다.

고용증가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 자본재 관련 중공업의 취업자가 전년보다 불과 1만 8천명(0.8%) 증가한 반면 건설업(인구)은 5만 9천명(의부) 6만 6천명(가) 주 및 신발(8만명) 등에서 모두 19만 6천명(△7.5%)이 감소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 한해동안 65만 3천명(5.9%증)가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지원별로 보면 일용직 취업자는 상승률로 24만 3천명(2.5%) 늘어났다. 일용직 취업자는 5만 1천명(2.9%)이나 줄었다. 일용직 취업자는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많이 감소했다.

비밀급근로자층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집안에서

정영하는 가계동향 등 취업자가 8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전년보다 8만명(4.1%)이 늘어났다. 이는 여자를 중심으로 아예 취

<연령계층 및 학력별 실업률>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대졸	이상
합 계	2.8	1.4	3.6	4.1	-	-
15~19세	11.1	14.0	10.2	13.3	-	-
20~24세	8.6	7.2	7.6	6.3	-	-
25~29세	4.6	3.8	3.7	6.3	-	-
30~59세	1.4	1.1	1.7	1.7	-	-
60세 이상	0.3	0.3	0.8	0.0	-	-

업을 단념하고 도소매업 등 식수반영 분야의 장사를 돕는 사람이 17.3% 늘어났는데 따른 것이다.

여의의 실업률은 13.3%에 이르러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을 6대 도시의 실업률이 3.7%로 전년보다 0.4% 높여 9개 도는 1.9%로 전년보다 0.3%가 늘었다. 부산(4.4%) 광주(4.2%)의 실업률이 특히 높았고 강원(0.9%) 제주(1.2%)는 전년과 수 준이었다.

통계청의 趙秉申 부계조사국장은 앞으로 실업률이 회복되더라도 실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어렵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우선 기업들이 이전비 부담을 의식, 인건수가 인데 따라 도이를 생산업이나 인력 절약으로 대처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취업자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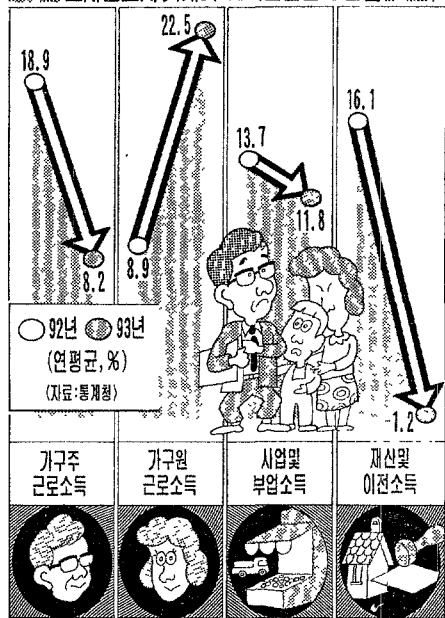
輕工業 고용急減: 3.7% 나 줄어 高學歷·점점증가失業도 심각한편

소득 증가
9%에 그쳐

家長 「혼자 벌이」로는 살림 빠듯하다

소비성향은 계속 높아져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득원천별 증감률



	92 (증감률)	93 (증감률)
◇ 소득 - 기	1,356.1(17.0)	1,477.8(9.0)
- 로타 소소득	1,156.6(17.3)	1,275.7(10.3)
- 특	199.5(15.7)	202.1(1.3)
◇ 지출 - 비	1,007.7(17.3)	1,105.5(9.7)
소 소비 지 지출	902.5(15.8)	986.2(9.3)
- 비 소비 지 지출	105.2(32.5)	119.3(13.4)
◇ 특자	348.4(16.3)	372.3(6.9)

(단위: 천원·%, 자료: 통계청)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 분석
 집값·주식·주식·연금
 이 증가에 비해 안정되고
 長 혼자의 월급으로는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경제·사회의 변화가 도시
 근로자 家計收支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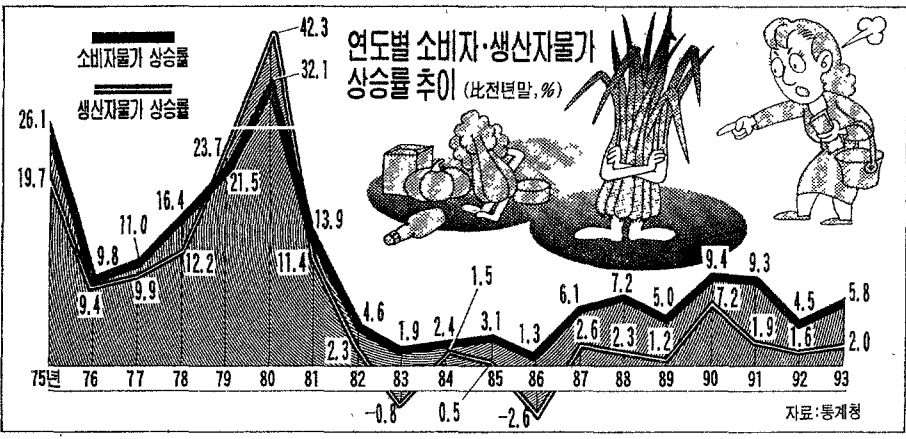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적인 도
 시근로자 가구는 한달에
 1백47만8천원의 소득
 을 올렸지만 85년 이후
 가장 낮은 소득증가율
 (6%)을 보인 가운데 투
 비성향은 계속 높아져(한

계소비성향 92년 71.6%
 에서 93년 77.8%로 과거
 의 소비행태가 상류층에
 맞춰 줄여지지 않겠고 이
 바를 반영한 것이 나타난 것
 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맞벌이가 늘어나는 추세
 도시근로자 월평균
 집계나 이자로는 버는 소
 득의 증가율은 지난해 아
 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가구당 합합평균 15만8천
 원의 재산소득을 올렸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
 라 가구 전체소득에서 재
 산 및 이전소득이 차지하
 는 비중도 전년의 11.8%에
 10.7%로 낮아졌다.

한편 지난해의 물가상승
 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증가
 율은 4%에 지나지 않아
 지난해 GNP(국민총생
 산) 성장률이 5.5%에
 5%로 추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처럼 실질

소득증가율이 GNP 성장
 률보다 뒤진 것은 90년 G
 NP 성장률 9.3%에 실
 질소득증가율 7.9%
 이후 처음이다.

파값 하나로 物價 들썩 1분기



經濟환경·정책 따라 物價 움직인다

우리 나라 물가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얼마간 時差는 있을지언정 물가의因果관계가 무엇인지 뚜렷이 드러난다. 폭풍시기엔 그럴 만한 「원인제공자」가 있었고, 安定期엔 안정기대로 내세울 만한 정책과 환경이 있었던 것이다.

82~86년까지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선에 머물렀던 사실은 그것이 비록 본질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정책의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이너스 예산편성·추곡수매가凍結등이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요소다.

87년이후 오히려 다시 커진 것은

「1.4분기중」 경제

성장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봐주기에 아쉬운 점이 많다. 「3低」호기때 쏟아지던 무역흑자와 환율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치 못했던 것이 큰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5共대 「강압」에 의한 물가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최근의 물가불안세에 대해 과거의 물가鳥獸散은 지금이 개방경제시대라는 점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대외적으로 수입개방, 국내적으로 進入장벽을 열어 경쟁을 촉진시켜 나가는 일이 「물가의 定石」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글: 沈相福·그림: 朴春奘기자>

올 1·4분기 물가가 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연간 물가 상승률을 6%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끊임없이 조정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물가의 결과 속

을 들여다 보면 적화 격정 인 것은 물가 통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연초부터 민심을 흔들며 높은 물가를 1·4분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면 정부나 여론이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우왕좌왕한 측면이 많은 것이다. 무역

규모 세계 13위云云하며 선진국으로 공인받지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둔 시점에 파하 나 때문에 「나라정체가 들썩거릴 꼴이 되었기 때문

이다.

실제로 파값은 물가의 식탁물안 2백44·5%나

3.3% 상승에 0.8% 차지

위수미룬 公共料 하반기가 더 문제

품목, 전체물가에 대한 파의 영향력은 4분의1에 달했다. 3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 3·3% 중 파 값 상승으로 인한 것이 0·8%.

문제는 지금과 같은 시 스태프인도 인제라도 제 2, 제3의 파波動이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위대한」 파가 탄생한 것은 작황의 악화인데 여져 란 말이나 늘 정부의 변명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면의 전부 대응과 前근대적인 유통구조가 하루 아침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대외 안고만」 간다면 앞으로의 물가 상황 역시 낙관할 근거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개방을 부분적인 전부가 개방을 의미하고도 별 상관없이 있을 때에 파 한 품목을 수입하듯 제 좌박 성립이나 결핵이 아닐 수 없다. 파만이 아니라 공공요금도 문제가 심각하다.

1·4분기중 공공요금은

은 아직도 많았어 울리지 않나? 백시요금을 비롯해 각종 교통요금과 학교납입금 등이 주무해 6% 올랐었다. 그래서 파값과 더불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 받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 같은 기간(7·1%)에 비하면 상승률이 우회적 낮다.

사실 공공요금의 양으로 가 부채다. 중근수입원·상수도요금·의보수가·전기료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적절한 것들의 「해결」 된 것이 아니라 무무한한 기의후로 「이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행정비를 동원해 인상된 가격을 도맡아 내민다는 유례선도 1·4분기중 개 인저비스요금 상승률이 작년(3·7%)보다도 높 은 4·2%에 달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물가에 집약되는 집이만 없다는 사실을 교통요금로 가늠되고 있는 것이다.

<沈相福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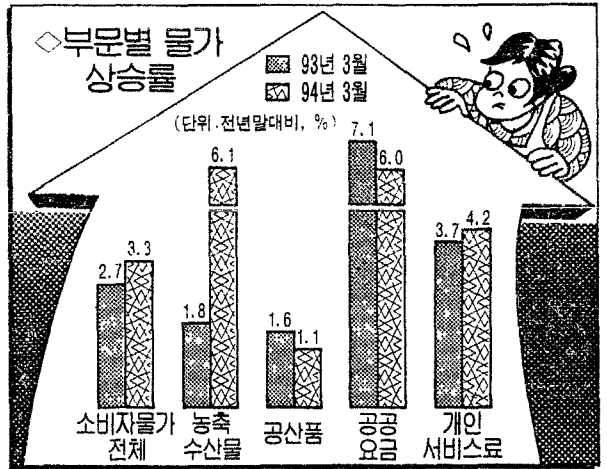
◇ 1·4분기중 費目別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말비, %)

구분	93년	94년
총지수	2.7	3.3
▲ 식료품	2.3	4.8
쌀등 곡류	3.2	1.6
바닥고기류	-3.9	1.8
채소류	3.1	20.9
조미료등	0.3	1.9
외식	2.1	4.4
▲ 식료품이외	3.1	2.6
주거비	1.3	1.2
가구등	2.2	2.6
기류	0.7	0.9
교육·오락	6.6	3.7
교통·통신	5.6	5.7

(자료: 통계청)

物價고배 아직 못잡았다

3월엔 0.6% 또 올라



↑ 물가 상승률의 상승은 물가의 고배를 잡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3월엔 소비자물가가 다시 0.6% 상승하여 0.6%가 올랐다. 전체기물업의 3월엔 물가 상승률이 1월엔 1.1%, 2월엔 1.1% 상승을 보였지만, 3월엔 1.6% 상승을 보였다. 3월엔 물가 상승률이 1.1% 상승을 보였지만, 3월엔 1.6% 상승을 보였다. 3월엔 물가 상승률이 1.1% 상승을 보였지만, 3월엔 1.6% 상승을 보였다.

↑ 물가 상승률의 상승은 물가의 고배를 잡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3월엔 소비자물가가 다시 0.6% 상승하여 0.6%가 올랐다. 전체기물업의 3월엔 물가 상승률이 1월엔 1.1%, 2월엔 1.1% 상승을 보였지만, 3월엔 1.6% 상승을 보였다. 3월엔 물가 상승률이 1.1% 상승을 보였지만, 3월엔 1.6% 상승을 보였다.

年末억제선 6% 절반넘어서 정부 "상승세 둔화" 애써 태연

↑ 물가 상승률의 상승은 물가의 고배를 잡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3월엔 소비자물가가 다시 0.6% 상승하여 0.6%가 올랐다. 전체기물업의 3월엔 물가 상승률이 1월엔 1.1%, 2월엔 1.1% 상승을 보였지만, 3월엔 1.6% 상승을 보였다. 3월엔 물가 상승률이 1.1% 상승을 보였지만, 3월엔 1.6% 상승을 보였다.

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월엔 2.3%로 물가안정과 유가 상승률이 높았으나 전체 소비자물가를 0.79%포인트 상승시키는 데 공헌했다. 3월엔 0.7%포인트 상승했다. 3월엔 물가 상승률 0.6% 중 약 4할에 가까운 0.25%포인트가 파생상품업에 올랐다.

↑ 물가 상승률의 상승은 물가의 고배를 잡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3월엔 소비자물가가 다시 0.6% 상승하여 0.6%가 올랐다. 전체기물업의 3월엔 물가 상승률이 1월엔 1.1%, 2월엔 1.1% 상승을 보였지만, 3월엔 1.6% 상승을 보였다. 3월엔 물가 상승률이 1.1% 상승을 보였지만, 3월엔 1.6% 상승을 보였다.

↑ 물가 상승률의 상승은 물가의 고배를 잡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3월엔 소비자물가가 다시 0.6% 상승하여 0.6%가 올랐다. 전체기물업의 3월엔 물가 상승률이 1월엔 1.1%, 2월엔 1.1% 상승을 보였지만, 3월엔 1.6% 상승을 보였다. 3월엔 물가 상승률이 1.1% 상승을 보였지만, 3월엔 1.6% 상승을 보였다.

올해 경기

회복초기인가

과 「94년 설비투자계획」(産銀)은 그동안의 경기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돼야 하는 지를 말해주는 이정표적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경기는 지속적인 상승추세이며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 78년 이래 최고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물의 흐름을 갈로 뿔 수 없듯이 경기회복의 속도와 방향을 자로 재듯이 관점하기는 힘들다. 그래서인지 통계청의 趙秉甲통계조사국장은 「지속적인 상승세」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진단한다.

정상인가, 과열인가, 아니면 회복초기인가, 호황조집인가. 국내경기는 지난 연말이후 초기의 회복국면을 벗어나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확장국면에 들어선 만큼 과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책당국 일각의 움직임과 회복초기인만큼 좀더 탄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민간업계사이 에 경기논쟁이 한창이다. 30일 발표된 「2월중 산업활동동향」(통계청)

과열조집인가

경기판단의 대표적인 지표인 제조업의 가동률(용역)은 1월 82%로 전년동기의 77.6%에 비해 분명히 높다. 이 가동률로 본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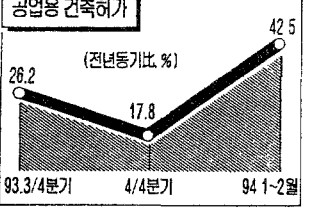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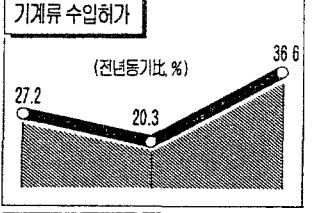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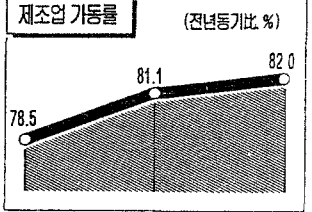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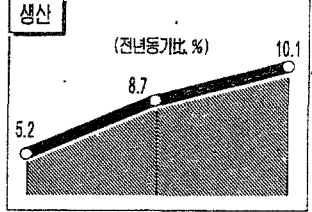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7%로 확대돼야만 제조업의 가동률도 정상치를 유지하게 된다. 그동안 구조적인 병폐로

나올 1~2월중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섬유화학 등 중화학의 생산이 14% 불어난 반면 기계류 및 신발, 가구, 섬유, 음식료 등 경공업은 0.2%

회전율은 전년 대비 40.9%가 증가할 전망이다. 92, 93년의 투자감소와 비하면 엄청난 설비투자증가를 기업유

“확장국면 진입” “아직은 미흡” 논쟁

주요산업활동 동향



설비투자 확대 가시화 「해빙기」 확실

인확장국면(金明浩 韓銀총재)은 1월 29일 「경제」에 발표한 「94년 경제전망」에서 “1~2월중 생산능력의 증가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설

비투자 확대 가시화 「해빙기」 확실... 지적판은 중화학과의 경영연간 경기의 양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정판은 추세이다. 발전사, 지물신발 등 일부 업종의 이익이 해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직도 질차가 큰 현이다. 다한스런 사실(기계)들의 설비투자가 가시화된다. 전

모텔도 보면 대기업의 전년 대비 61.3%, 중소기업(21.3%), 중소기업(11%) 등의 모두 10% 증가율을 보 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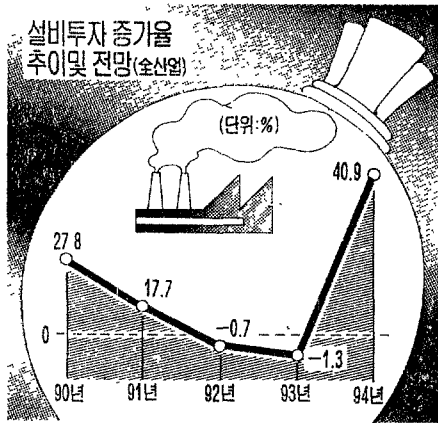
그러나 경기양극화의 대한

경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전하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이제라도 전망을 한다. 정부투자선정들이 단종의 의욕적인 6.7%를 생산능력을 것으로 의의하는 지금의 고비를 잘 관망해야 한다. 얼음이 녹는 해빙기나 환경기에 전진판단을 잘못하면 나중에 치명적인 후유증이 오기 때문이다.”

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과열이 무슨 소냐.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열을 막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없이만 위험한 수준이다. 2,4분기경에는 양극화면이 더 우려되고 있다.”

〈鄭錫錫기자〉

경기 2월에도 상승세 지속



투자심리의 회복
생산의 호황회복

국내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투자·고용·생산 등의 부문 호조를 보여 지난 1월의 이어 2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기업들이 올해의 설비투자계획을 작년보다 40% 이상 늘렸지만 등 투자심리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30일 통계청과 산업은행이 발표한 「2월경 상공업활동동향」 및 「94년 설비투자전망」에 따르면 지난달의 생산·설비투자로 주안업주가 작년 2월보다 수출 증여 전월의 비에 마이너스 4.1%, 전년동월의 비에 1.8% 증가에 그쳤으나 설업투를 감안할 경우 지난 1월과 비슷 한 증가추세이다.

투자노출률(순산업)보편기계수 주는 1~2월의 26.6% 증가, 작년동기의 마이너스 4.3%에 비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기계류의 수입회귀(1~2월) 전년동기에 비해 36.6% 증가했다. 설업투를 전년동월보다 0.1%포인트(2.5%계절조정)를 기록했다.

올 1~2월의 누계치를 보면 생산의 전년동월의 비에 10.1% 늘었다. 중화학공업은 14%, 경공업은 2%의 마이너스에서 0.2%가 증가했다. 제조업의 가동률(설업투)은 지난 1월의 84%에서 2월 중 79.9%로 낮아졌으나 1~2월 평균치는 82%를 기록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발표

설업투로 조업일 줄었어도 지표 개선
올 설비투자 41% 늘듯 産銀분석

올해 투자계획은 지난해 10월 같은 조사때의 34조 3천9백10억원보다 5.4%가 늘어난 것이다.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22조 9천9백80억원으로 92~93년의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 지난 84년의 58.5%

한편 産銀이 지난 2월 중 2천1백55개 기업을 조사, 분석한 결과 올해 국내 민간기업이 계획하는 설비투자규모는 36조 2천5백20억원으로 작년실적 25조 7천2백90억원보다 40.9%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78년의 54% 이후 16년만의 최고 증가율이다.

이후 10년만의 최고 증가율이며 비재정공업은 13조 2천5백50억원으로 23.6%가 늘어날 전망이다.

〈鄭鍾錫·禹得楨기자〉

동맹국인 상공·체제안정

30일 발표된 2월공업의 산업동향에 의하면 두 나라 경기가 생산 소비 투자 등 각 부문에서 그르체 상공부면을 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화학과 정유업의 경기가 엇갈린 경기의 양면화 현상이 었지 않지만 경기가 작년까지의 지리한 침체국면에서 양면의 발달을 보이고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산업을면의 이점을 어느 정도 지속된 것이 보추되고 있다. 지난 29일까지의 월간 수출액 수입액가운데 각각 10.0%, 15.1%의 증감률이 있다. 이 수치가 추정에 불과한 것이나

2월산업동향에 담긴 의미

이와따라 최근 판계와 재계에서 일고 있는 현경기가 확립되었다. 파벌과 면이다. 한편 신의 경기는 정인 대우 가벌을 전방이다. 한편 판계면의 경기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적어도 올해의 경기 자체를 과밀로 진단하는 사람이 별다른 잘못을 범한 것 같다. 다만 요즘과 같은 경기상승의 부면을 받기할 경우 경기판계의 추락할 가능성 이 있느냐가 정적인 것이 다. 정부가 사용하는 경기조절수단의 실효성 시차를

이 문제와 대해 정제기 회원의 趙國重은 한기회과 장은 비교적 부면한 여주 로 '적어도 올연말까지는 과열증상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92.93년 두해의 걸쳐 잠재성장률 (7%)을 밑돌았다.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7%를 다

지난 이태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는 수출입 불이런 것 설명이다. 통계청의 趙秉用은 제조사공도 이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최근 공장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있는 것은 그동안 생산이 회복되어 안정기 때문이며 잠재수준까지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 아니란

은 이처럼 최근의 경기를 과열 우려로까지 진단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힌다. 趙秉用은 재계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경제는 경기 과열 우려가 수반하는 통화 긴축론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정정부를 그릴지라도 불이국내에 비해 여전히 높은 국내

소리나 나오자마자 시중금리가 일제히 오르려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연구기관에서 제기하는 경기과열 우려의 논조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三井경제연구소는 최근의 부실자료에서 지난 1월의 신용지표는 '경기과열을 우려할만한 수준'이 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경기과열론자는 물가를 올릴 때가 멈추지 않고 있는 점을 중시한다. 경기침체의 물가 상승은 원가쪽에서의 상승 요인만 해소하면 돼 비교적 작다스리가 있지만 경기상승의 부면에서는 수요·공급 양면에서 상승요인의 발생하므로 진정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林某기자>

수출입 10.15%씩 동반 약진이 반증 당국·財界「過熱」노생「더욱 가열될 듯

이 문제와 대해 정제기 회원의 趙國重은 한기회과 장은 비교적 부면한 여주 로 '적어도 올연말까지는 과열증상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92.93년 두해의 걸쳐 잠재성장률 (7%)을 밑돌았다.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7%를 다

지난 이태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는 수출입 불이런 것 설명이다. 통계청의 趙秉用은 제조사공도 이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최근 공장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있는 것은 그동안 생산이 회복되어 안정기 때문이며 잠재수준까지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 아니란

은 이처럼 최근의 경기를 과열 우려로까지 진단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힌다. 趙秉用은 재계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경제는 경기 과열 우려가 수반하는 통화 긴축론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정정부를 그릴지라도 불이국내에 비해 여전히 높은 국내

소리나 나오자마자 시중금리가 일제히 오르려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연구기관에서 제기하는 경기과열 우려의 논조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三井경제연구소는 최근의 부실자료에서 지난 1월의 신용지표는 '경기과열을 우려할만한 수준'이 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경기과열론자는 물가를 올릴 때가 멈추지 않고 있는 점을 중시한다. 경기침체의 물가 상승은 원가쪽에서의 상승 요인만 해소하면 돼 비교적 작다스리가 있지만 경기상승의 부면에서는 수요·공급 양면에서 상승요인의 발생하므로 진정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林某기자>

景氣 감수룩 "활력"

2월동향 설연휴불구 산업生産 작년比 10% 증가

경기가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2월 동향은 내경기는 설연휴불구 조업인수가 작년 2월보다 줄었는데도 산업생산이 높고 공장가동률도 높아지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다.

설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1월과 2월 2개월간의 지표를 합해 비교해 보아도 산업생산은 작년보다 10.1% 증가하고 공장가동률은 4.4%포인트나 높아져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계속 감소추세를 보던 제조업생산이 취업자 수도 지난 2월 동향인 34개월만에 처음으로 늘었다. 경기양적기에도 모처럼은 기가 감를기 시작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지표에 따르면 지난 2월 동향은 산업생산이 자동차, 전자 등 중화학부문의 수출 및 내수 증대의 힘으로 작년 2월보다 1.8% 증가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지난 2월의 조업인수가 1월보다 24일이나 3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양적의 회복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 1월에는 1.1%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월을 합한 산업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1%가 증가했다.

이 중 중화학부문은 14% 늘어났고 제조업도 미미하나마 0.2% 증가세를 보였다.

생산활동의 활기를 본 2월 동향은 제조업생산이 79.9%를 기록, 작년 2월보다 1.7%포인트 높아졌고 1~2월을 놓고 봐도 작년의 77.6%에서 올해는 82%로 대폭 높아졌다.

기업들의 투자활동도 활발해져 2월 동향은 국내계수주가 작년 2월보다 14.5% 늘었으며 1~2월 동향은 26.6%의 증가율을

가동률도 4.4%P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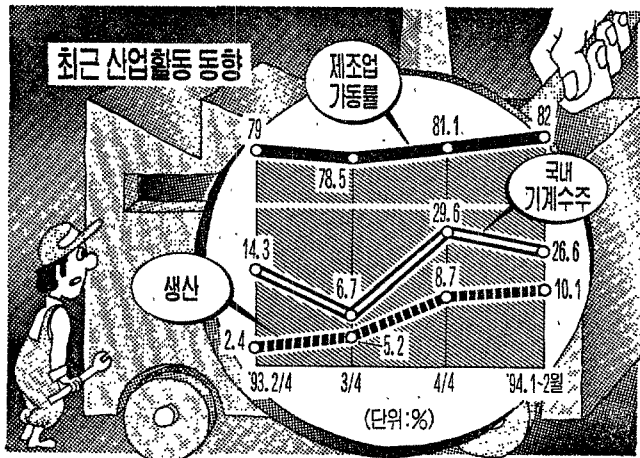
통계청 발표 성공업 취업자 34개월만에 늘어

기록했다.

1~2월 동향 소비는 지표 및 중화학업자와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5.5%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2월 동향 고용양적은 계절 요인 영향으로 실업률이 2.5%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4만 5천명 증가, 지난 91년 5월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林華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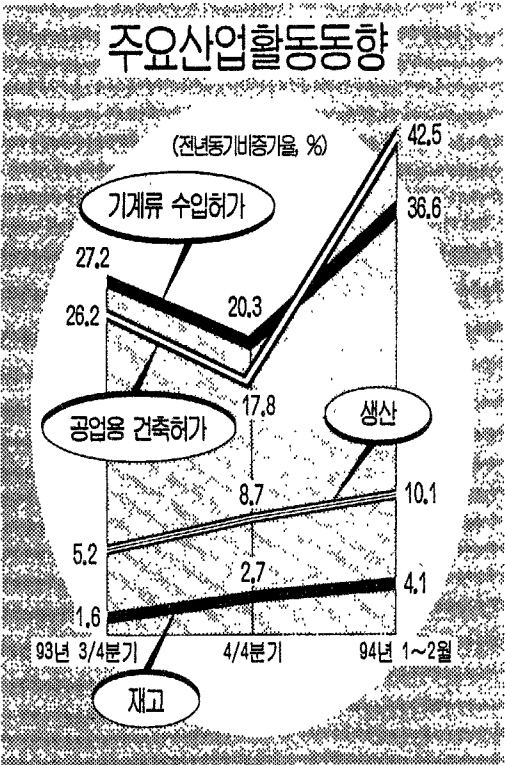


上昇勢 지속... 1,2월 1분기

국내총생산은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두달간 평균 1.1%의 성장과 소비투자고용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까지 산업생산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올랐고, 내수용 기계류는 31.9% 증가하며, 기계지출은 10.1% 증가하고 있다.

대미 4.1% 감소, 지표산업은 수출이 늘었지만, 이 기간에 수출의 증가폭은 1.1%로 줄었다. 민간기업은 1.1% 증가하며, 정부기업은 1.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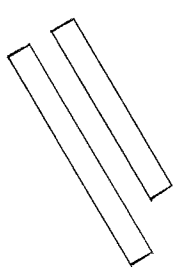
1,2월 산업동향으로 본 국내景氣

投資지표 호

산업생산 10%

장강 기간과 비관론이던 2월말 산업생산은 10.1%의 성장을 이룬 추경효과와 소비지출의 증가로 1분기 12.7%를 기록했다.

부각의해에 비관론이던 2월말 산업생산은 10.1%의 성장을 이룬 추경효과와 소비지출의 증가로 1분기 12.7%를 기록했다. 민간기업은 1.1% 증가하며, 정부기업은 1.1% 증가했다. 기계지출은 10.1% 증가하고 있다.



상위 경제권의 성장한 것이
 며 미국과 일본은 생산의
 복이로 나타난다. 경제권
 제 조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성장률도
 1971년 10.1%로 1970년
 10.2%보다 약간 높아지
 는데 이는 미국의 성장률
 11.9%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971년 11.9%로
 1970년 11.3%보다 0.6%
 상승한 것이다.

1971년 1월의 실업률
 4.7%지만 1970년 12월
 4.8%로 0.1%포인트가
 낮아졌다. 그러나 미국의
 실업률은 1971년 1월 4.7%로
 1970년 12월 4.8%보다
 0.1%포인트가 낮아졌다.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971년 10.1%로 1970년
 10.2%보다 0.1%포인트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71년 10.1%로 1970년
 10.2%보다 0.1%포인트가
 낮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실업률은 1971년 1월 4.7%로
 1970년 12월 4.8%보다
 0.1%포인트가 낮아졌다.
 이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971년 10.1%로 1970년
 10.2%보다 0.1%포인트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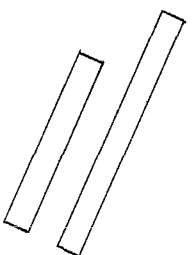
전세 뚜렷

증가重·경공업편차문제

1971년 1월의 경제성장률
 10.1%로 1970년 10.2%
 보다 0.1%포인트가 낮아
 졌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971년 11.9%로
 1970년 11.3%보다 0.6%
 상승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71년 10.1%로 1970년
 10.2%보다 0.1%포인트가
 낮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실업률은 1971년 1월 4.7%로
 1970년 12월 4.8%보다
 0.1%포인트가 낮아졌다.
 이는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971년 10.1%로 1970년
 10.2%보다 0.1%포인트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1971년 1월의 실업률
 4.7%지만 1970년 12월
 4.8%로 0.1%포인트가
 낮아졌다. 그러나 미국의
 실업률은 1971년 1월 4.7%로
 1970년 12월 4.8%보다
 0.1%포인트가 낮아졌다.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971년 10.1%로 1970년
 10.2%보다 0.1%포인트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社說

物價동향을 보는 視角과 대응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야단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지난 29일 발표한 「3월 중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0.9% 올라 올해들어 석달사이에 지난해말에 비해 3.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 1·4분기 물가상승률의 3분의1이 넘는 1.15%가 농산물물가의 불안때문이며 특히 0.79%가 파값이 너무 오른 탓으로서 해파가 출하되는 4월부터는 물가불안이 진정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값이 안정된다고 해도 전기세 수도료등 공공요금조정이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데다 국제금리와 원자재값도 오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올해 물가안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낙관할수 없는 상황에서 물가정책과 관련해 몇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물가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률이 벌써 올해 물가안정목표인 6%의 절반을 넘었다고 야단이지만 전년동기와 비교한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의 5.1%에서 올해 2월의 6.8%까지 계속 올랐다가 3월에는 6.4%로 오름세가 꺾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앞으로 계속 안정기조가 유지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할때 연말대비보다 전년동기와 비교한 물가상승률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연말대비로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더라도 지난해 1월의 0.8%, 2월의 1.5%에 비해 올해 1월의 1.3%, 2월의 2.4%가 유별나게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나치게 행정규제에 의존하다 보니 해마다 1·4분기에 물가상승이 집중되고 이것이 다시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행정규제를 풀고 시장자율에 맡겨 물가상승충격을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농산물이나 주택처럼 수급조정이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생활필수품은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들은 가격탄력성이 작아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경향이 높고 경기과열 통화공급과잉등 총수요측면에 불안요인이 있을경우 상승작용을 일으켜 물가불안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화관리 환율조정 노사협상등의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금융실명제로 풀린 돈의 상당부분이 이미 환수되었는데 지나친 통화관리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것은 좋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환율상승을 억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특히 지난해에 고등분담차원에서 동결된 공무원봉급을 포함한 임금의 인상률이 어느수준에서 결정되는나가 앞으로의 물가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2월 産業동향 評價와 시사점

며칠전 丁濞錫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취임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4분기 경제동향에 관한 각부문實績値가 조간간에 대부분 나올것이라면서 정부는 곧 생산 투자 고용등 實物경제동향과 통화 금리 국제수지등 巨視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점검의 의미는 경제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 微調整(fine-tuning)을 함으로써 안정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정책운용의 妙를 거두려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의 그 같은 발언은 시기적으로 특히 주목되었다. 일각에선 경기과열 경기가 돌출하면서 때아닌 경기는쟁이 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證市마저 북한核문제에다 금융긴축 우려가 겹쳐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통계청이 발표한 2월중 산업활동동향은 정부당국을 포함해서 각계가 썩 궁금하게 여기면서 기다려 온 실물경제동향 실적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는 모습이다. 즉 한쪽에서는 경기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내심 과열을 계속 경

계하는 입장인가 하면 다른 한쪽은 상당히 유보적인 진단을 견지하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2월중 산업생산과 출하 소비 제조업가동률등 諸지표가 한달전보다 대체로 감소되었을 뿐아니라 전년동기와 비교해 소폭증가만을 기록했고 그 배경이 설연휴타이라는 평가에 연유한다.

작년에는 1월중, 금년에는 2월중 각 3일간의 설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로 비교에 차이가 난다면서 통계청은 이례적으로 1~2월 두달간의 동향을 지난해 동기와 비교분석하기 까지 했는데 그래도 명쾌한 진단은 만나왔다. 이 분석이 시사하는 것은 설연휴차이로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금년1월중의 산업동향을 두고 너무 성급하게 과열논의를 제기하는 愚를 범한 것 같다는 점이다.

또 아무리 설때문이라고는 해도 2월의 저조한 실적치와 특히 경기先行및 同行지수의 마이너스 反轉은 우리 경제가 회복증인것만은 틀림없으나 아직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보다 확실한 경기평가와 거시지표점검은 좀더 기다리는게 좋겠다.

여 백

2/4분기 보도기사

(4월~6월)

여 백

◇ 여성취업자비율 변화추이

연도	취업자 총수	여 성	여성비율
86년	15,505	6,165	39.8
87	16,354	6,613	40.4
88	16,869	6,771	40.1
89	17,511	7,121	40.7
90	18,036	7,341	40.7
91	18,576	7,507	40.4
92	18,921	7,609	40.2
93	19,203	7,710	40.1

◇ 지역별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 <94년1월현재>

지역	대당 대수	대당 인구수
전국	3.3	10.9
서울	2.7	8.5
부산	3.8	13.3
대구	2.7	9.3
인천	3.2	10.6
대전	3.5	12.0
광주	2.8	9.5
경남	3.2	10.1
충청	3.7	12.8
전남	3.8	13.1
제주	4.6	16.2
충북	4.4	15.8
전북	6.7	23.1
경북	3.8	12.8
강원	3.4	11.8
경서	3.7	12.5

◇ 직업별 취업자 분포 <93년기준·천명>

종류	총 수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림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기타
남자	11,493	1,232	1,689	1,613	917	1,512	4,532					
여자	7,710	751	1,195	1,440	1,450	1,306	1,568					

자가용승용차 세집에 한대꼴

통계로 본 최근 사회경제 모습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통계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 비율이 90년대를 고비로 해 다시 줄고 있다. 여성의 취업률은 최근 수년간의 경기 불황과 여파가 반영되면서 여성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다. 여성의 취업률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률이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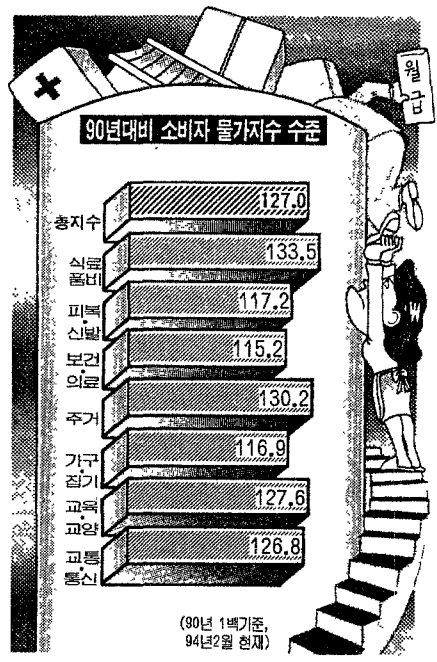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이 해마다 늘었다. 지난 1월 현재 3세대당 1대, 인구 11명당 1대꼴로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대도시의 보급률은 평균치를 웃돈다. 6·7세대당 1대꼴로 집계되는 전국 평균치를 두드러지게 지니고 있다. 지난 2월 현재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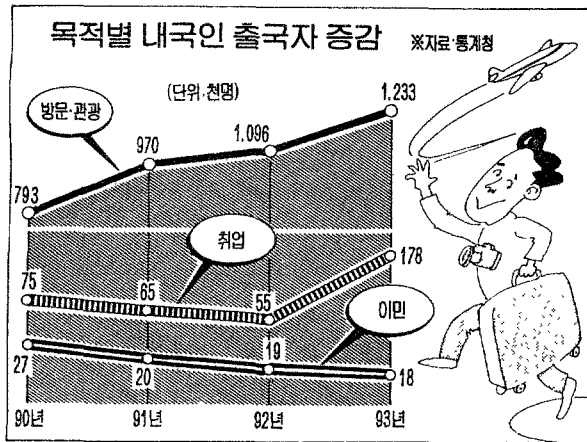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이 해마다 늘었다. 지난 1월 현재 3세대당 1대, 인구 11명당 1대꼴로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대도시의 보급률은 평균치를 웃돈다. 6·7세대당 1대꼴로 집계되는 전국 평균치를 두드러지게 지니고 있다. 지난 2월 현재 소비

2월 물價 90년비해 27% 올라 여성취업은 不況여파 감소세 개방화영향 농촌노동력 급감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이 해마다 늘었다. 지난 1월 현재 3세대당 1대, 인구 11명당 1대꼴로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대도시의 보급률은 평균치를 웃돈다. 6·7세대당 1대꼴로 집계되는 전국 평균치를 두드러지게 지니고 있다. 지난 2월 현재 소비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이 해마다 늘었다. 지난 1월 현재 3세대당 1대, 인구 11명당 1대꼴로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울·대도시의 보급률은 평균치를 웃돈다. 6·7세대당 1대꼴로 집계되는 전국 평균치를 두드러지게 지니고 있다. 지난 2월 현재 소비





승용차 하루 2천대 증가 3:3가구당 1대

'94통계월보로 본 오늘의 韓國

누만하면 불어나는 자가 승용차들. 도대체 하루에 몇대씩 늘어나는 것일까. 통계청은 31일 정부부처와 주요기관에서 집계한 각종 통계를 담은 '94년 한국

이다. 최근 6개월간 월평균 6만7백대씩 증가했다. 하루에 무려 2천23대씩 늘어났다는 계산이다. 지역별 보면 서울이 가장 높고 전라도가 가장 낮다. 서울에는 전부 승용차

이 가장 낮은 전남은 6.7가구당 1대인 수준으로 서울보다 3배나 높은 23.1명의 1대 꼴이다. 충청의 16.2명, 1대로 그다음의 자동차 총 보유대수는 1

16.5% 증가한 2백74만8천명이었다. 외국인 입국자는 이보다 약 17만명이 적었다. 출국자가 입국자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의도 외국인 입국자는 17만8천명이지만 내국인 출국자는 32만7천명으로 2배 가까이 많았다. 출국 목적은 방문·시찰과 관광 등 나들이성 출국의 전체의 51%이고, 상용 26.4%, 취업 7.4% 등이었다. 그중 연계 출국면 취업

가장 많이 유출되며, 비록 세계 타 몇 수산업 등 피복·서비스비로 90년보다 63.5%가 상승했고, 보건·의료비가 11.5%로 가장 낮았다. 이 삼점 중 승용차 및 아파트 관련비(62.4%), 교통비(36.1%), 교육비(36%)도 많이 올랐다.

서울 百29만대, 전국의 25%... 보급률 全南최저

출국자, 입국자보다 많아... 이민 줄고 취업 늘려

물가 4년전보다 27%올라... 大田·全州·水原順

통계월보「2월호」를 봤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전국의 자가용 승용차 수단을 1월 현재 4백12만대이다. 3:3가구에 1대 꼴이다. 국민 11명중의 1명만 승용차를 가진 셈

의 약 4분의1인 1백29만대가 몰려있는 8.5명 이하이다. 다음이 대구로 9.3명 및 2.7가구에 1대씩 있고 대전(9.5명), 경기(10.1명) 순이다. 보급률

월까지 6백35만대를 돌파했고 이 중 자가용이 5백92만대이다. ○해외 여행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외국인 입국자를 앞질렀다. 지난해의 내국인 출국자 수만 전년보다

목적의 출국은 지난해 17만8천명(10%)로 전년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이민은 90년 2만7천명, 91년 2만명, 93년 1만8천명 등으로 해마다 준다. ○4년 전인 90년과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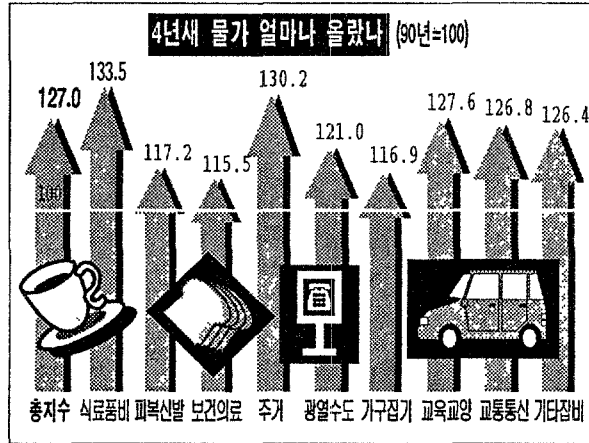
료할 때 물가는 올 2월까지 27%나 올랐다. 도시별로는 대전이 31.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주 29.2%, 수원 29.1%, 부산 28.7%이다.

〈宋泰憲기자〉

33% 오른 식료품값

4년간 물가 상승 주도

2월 통계로 살펴보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31일 내놓은 「한국물가연보(94월호)」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지난 90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4년간 계속 상승 27%가 오른 가운데 부문별로는 채소·과일

지난 4년간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부문은 채소·과일을 식료품비인

등 식료품비의 상승률이 33.5%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주거비(30.2%)와 교육·교양(27.6%) 비가 평균 이상의

반면 서울·인천·대구·대전 등에서는 보건 의료비가 가장 낮은 오

서울·大邱·仁川 등 食品비싸 교통비 많이 오른 곳은 釜山 자가용 592萬대...11명당 1대

상승률이 나타났다. 반면 피복신발·과복신발·보건의료 등 대부분의 품목이 평균 상승률을 밑돌아 최근 4년간의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단연 식료품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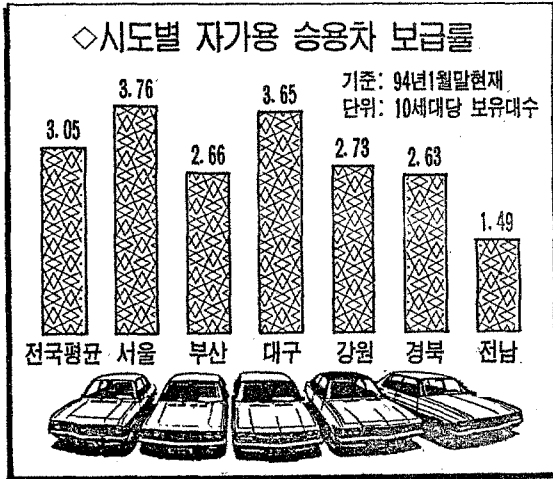
물가를 보이며 때때로 부산에서는 피복과 신발, 광주에서는 가구와 가사용품, 전주에서는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또 전국의 자동차대수는 지난해 9

또 최근 4년간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대구·인천·대전·광주·전주·충청 등에서는 식료품비가 가장 많이 오른 반면 부산에서는 교통·통신비, 수원에서는 주거비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월 6백만대를 넘어 올 1월 현재 6백35만대이며 이중에서 자가용은 592만대, 3월 5백만대를 넘고 올 1월에는 5백92만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자가용용차 보유율은 3세대당 한대꼴, 인구는 11명당 1대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가용용차의 보급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대구·대전·경기의 순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의로 인구 23명당 1대를 갖고 있어 서울지역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산업별 취업인구는 88만여명, 20.6%, 28.1%이던 것이 93년에는 14.8%, 24.1%로 떨어진 반면 서비스업은 50%에서 61%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李路平기자>



우리나라는 인구 10.9명당 1대, 3.3세대당 1대꼴로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현재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6백35만대로 집계됐다.

승용차 등록대수는 4백33만대, 승용차중 자가용은 4백12만대이다.

자가용승용차보급률은 91년 17.0명당 1

1월중 全國 412만대 人口10.9명당 1대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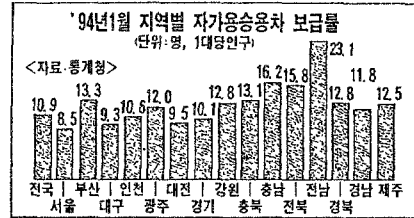
대, 92년은 13.4명당 1대였다.

지역별 보급률은 서울이 1백29만대로 8.5명당 1대, 2.7세대당 1대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70만대로 3.2세대, 10.1명당 1대꼴로 2위를 차지했다.

관광객수는 '93년중 외국인입국자가 2백57만1천명, 내국인 출국자는 2백74만3천명으로 내국인 출국자가 17만2천명 많았다.

지난 2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물가는 지난 90년보다 27% 오른 반면 식료품비는 33.5%가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보건의료비는 15.5%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禹源河】

서울 자가용 2.7세대당 1대



국내 자동차보급은 최근 6개월간 월평균 8만9,000대씩 늘어 올 1월현재 635만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12월에 400만대를 넘어선 자가용승용차는 올 1월말 412만대가 보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사람 11명에 1대, 3.3세대당 1대꼴로 자가용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31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통계월보」에 따르면 85년 90.9명당 1대를 보유하던 자가용승용차의 보급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자가용승용차수는 92년4월에 100만대를 넘어서 올 1월현재 129만대에 이르고 있다. 서울사람은 2.7세대당, 인구 8명당 1대꼴로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統計월보 집계

통계월보는 관광객수는 93년중 내국인출국자수는 274만3,000명으로 외국인입국자보다 17만2,000명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농촌 노동력은 지난86년 전체노동력의 20.9%를 차지했으나 93년에는 13.2%로 크게 낮아지는 등 이농현상을 반영했다. 농지구입가격은 올 1월현재 90년에 비해 2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90년에 비해 27% 상승한데 비해 식료품비는 33.5%가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의료비는 15.5%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90년 전국 총취업자중 40.7% (734만1,000명)를 차지하던 여성취업자비율은 93년말 현재 40.1% (771만1,000명)로 낮아졌다.

<安商旭기자>

自家用승용차 412만대... 3.3세대당 1대꼴

지난해 內國人출국자 274만명

男 67세
女 75세

30년새 평균수명 19년 늘었다

「보건·의료수준 변화」를 보면
〈통계청 발표〉

지난 30년은 경제개발을 위해 온 국민이 땀을 흘리지 않고 달려온 시기였다. 나라 살림의 규모도 불어났고 국제 사회에서 어엿하게 자리도 잡았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국민들의 건강 수준도 향상돼 건강 지표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통

다. 평균 수명의 남녀별 격차도 커졌다. 30년 전에는 남자 51.1세, 여자 53.7세로 2.6년 차이였다. 91년에는 남자 67.7세, 여자 75.7세로 8년 차이가 됐다.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남자 76.1세, 여자 82.1세이다. 인구 1천명 당 사망률도 92년에 5.3명으로 30년 전의 12.1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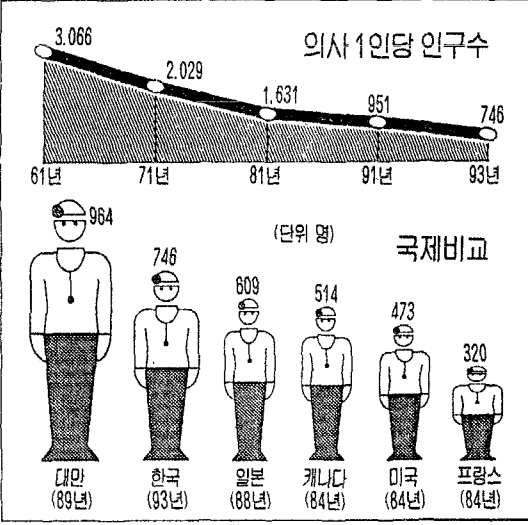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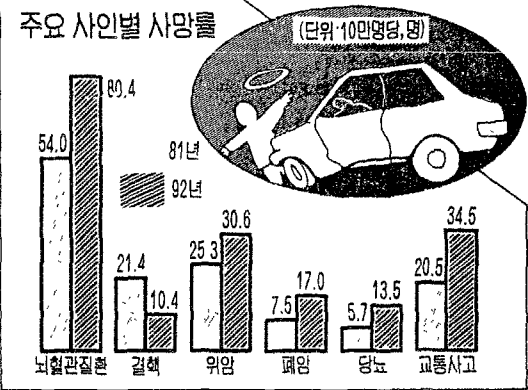
가장 높다. 영아 사망률도 62년 69명(출생 1천명 당)에서 90년 12.8명으로 크게 줄어 선진국 수준(10명)에 근접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사망률 감소에 따라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90년 3백32만명으로 30년 만에 두배가 됐다. 지역 별로는 경북이 12.1명으로 가장 높고 서

1천명당 사망률 12명서 5.3명으로
국교6년생 키 18cm·몸무게 10kg 늘어
60세이상 노령인구 90년 3백32만명

계청이 발표한 「30년간 보건·의료수준 변화」는 건강 수준의 괄목할만한 변화상을 담고 있다.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60년대 초까지는 52.4세였다. 환갑을 맞는 사람들이 드문 편이었다. 66년에 평균 61.9세를 기록했고 87년에 70세를 넘어서 91년에는 71.6세로 늘어났다. 30년 전 사람들보다 요즘은 평균 19년을 더 사는 셈이

다.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 일본 6.8명(91년), 미국 8.7명(89년), 프랑스 9.3명(90년), 영국 11.5명(89년)보다 낮다. 결핵 등 후진성 질환에 의한 사망은 81년에 10만명 당 21.4명에서 92년 10.4명으로 줄었다. 반면 당뇨병은 5.7명에서 13.5명으로, 교통사고는 20.5명에서 34.5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교통사고와 간암(23.7명)에 의한 사망률은 세계에서

올이 5.4명으로 가장 낮다. 체위도 월등히 좋아졌다. 11살짜리 국민학교 6학년생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의 아이들은 30년 전의 아이들보다 키는 연필 한자루만큼인 15~18cm가 커졌다. 몸무게도 10~11kg이나 늘어났다. 의료시설과 의료인력도 크게 개선됐다. 각급 의료기관은 92년 1만2천9백65개로 61년보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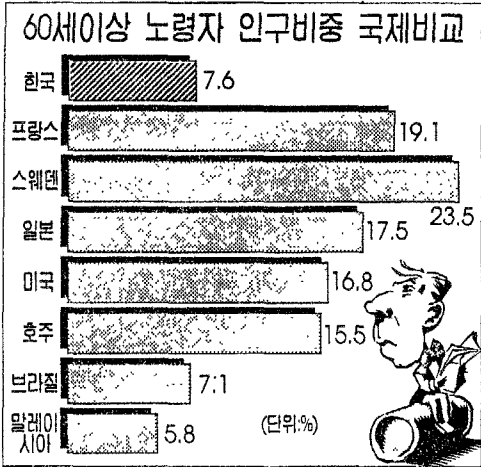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종합병원은 27개에서 2백36개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의사 한명 당 인구는 61년 3천66명에서 93년 7백46명으로 낮아졌다. 간호원 1명 당 인구도 61년 4천51명에서 93년 1백63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런 의료시설과 인력의 61%가 인구 비중으로 절반이 안 되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 불균형이 심한 셈이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도 89년 29.7%에서 92년에는 44.2%로 경증 뛰었다. 주로 운동(9.1%)과 식사조절(7) 방법을 사용한다. 흡연인구는 92년 38.5%로 2년 전보다 조금 줄었지만 하루 1갑 반 이상의 골초는 14.8%로 오히려 늘었다. 여성 흡연자도 89년 7.6%에서 92년 6.1%로 감소했지만 1갑 반 이상은 3.8%에서 4.8%로 증가했다. <宋泰燮기자>

94. 4. 7





영아사망 80% 감소

육류소비 7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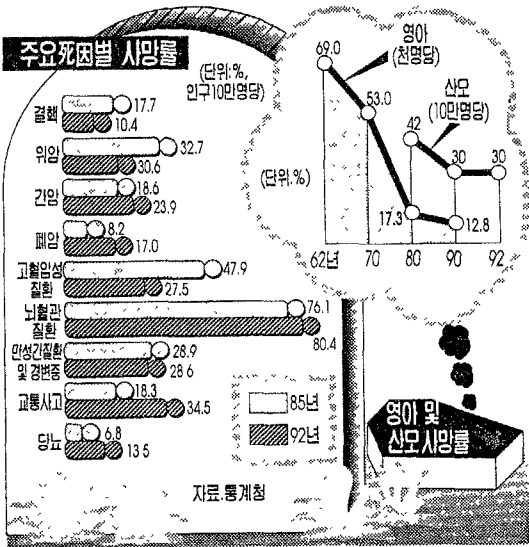
이로 변화하고 있으며, 칼슘
철분 비타민 등 영양소의 섭
취량이 크게 증가하고 육류
소비량의 증가와 함께 국민생
활 전반의 환경이 개선되고
분석했다.

특일 7
영양 선
진국의
비해사
악적 관
수준

한국인 보건수준 선진국형 탈바꿈

한국인의 보건수준은 지난
30년 사이 얼마나 높아졌을
까?
통계청이 7일 보건연말
을 맞아 발표한 「지난 30년
간 국민 보건연말수준 변화」에
보고서에서 보건수준의 최
도가 되는 영아(산아)사
망률과 평균수명의 선진국형
본 4.6명, 미부 9.1명, 일
62년의 69명 외 비해 현재의
82년의 8.8명이며, 사망한
영아수 98만 명, 출생인
구 1천만 명, 18.8%이며
출생후 1달 이내의 사망한
수가 영아사망률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였을 하
나, 영아사망률
한 나라 국민의 보건으로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였을 하
나, 영아사망률

통계청 「30년새 국민건강변화」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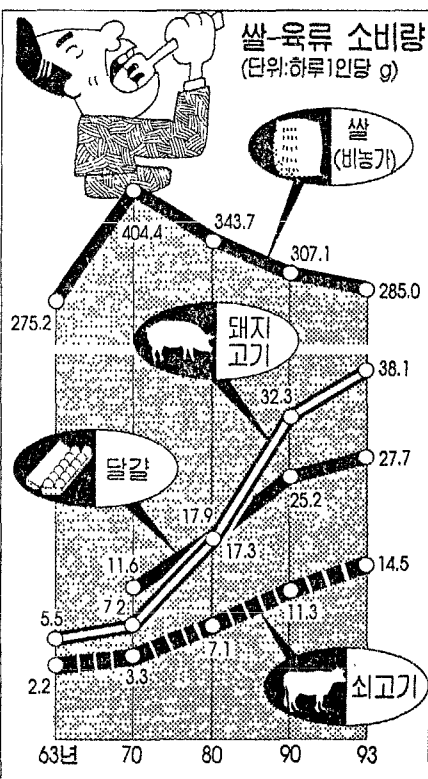


이 2배 가까이 떨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조
사한 사망률 국제 비교에 따
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과 간암사망률은 세계
주요국중 최고 수준인 것이

평년수명 교통사고

상인명 사망 급증 추세
사망률 보면 질병에 후천
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
아지고 있으나 당뇨병 등 성인
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
추세이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최근 10년사
상인명 사망 급증 추세
사망률 보면 질병에 후천
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
아지고 있으나 당뇨병 등 성인
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
추세이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최근 10년사

이나 빠른 속도로 절감되고
있다.
평년수명 76.1
출생 10만명당 30명으로 미
국의 8.4명, 일본의 10.8
명, 프랑스의 8.8명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로 나타났다.
92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 인구는 10만명, 프랑스는 34,500명, 미국은 23,700명, 일본은 12,800명, 서독은 9,600명, 브라질은 18,200명 등이다.

간암사망 "세계최고" 19세연장... 노령화가 속

년전보다 19세 정도 높아졌다. 50년파악 52.4세의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91년의 71.6세로 높아졌다. 평균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낸 것은 여자가 82.1세(91년 기준)를 기록, 우루과이가 80.4세, 여자 76.4세로 나타났다. 부인화(1960년)의 기준 80세자의 7%, 보편화되고 60년(11세)의 기준 15.5%나 커졌다. 일본에서는 6세 학년의 4%, 11세 학년의 10.5%가 나타났다. **해인생기 애수가 늘었다** 30년간의 사회과학자 조사에 따르면 해인생기 애수가 93년 현재 7백46명에서 91년 3천66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다, 6백90명(88년 기준), 4백73명(84년 기준), 3백90명(80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흡연이 23.7명** 14.9명, 미국

수출수입량의 10% 이상을 수출한다. 크게 달라졌

의료인력 크게 늘고 철분-비타민A 섭취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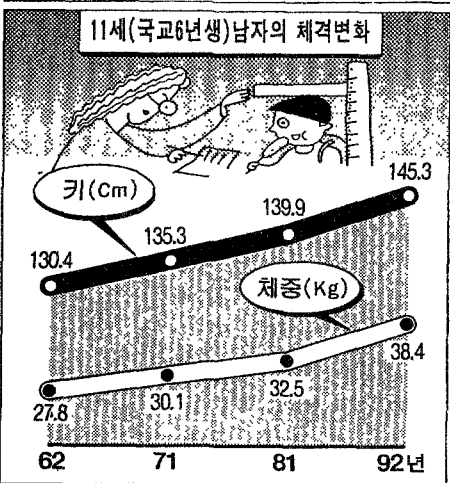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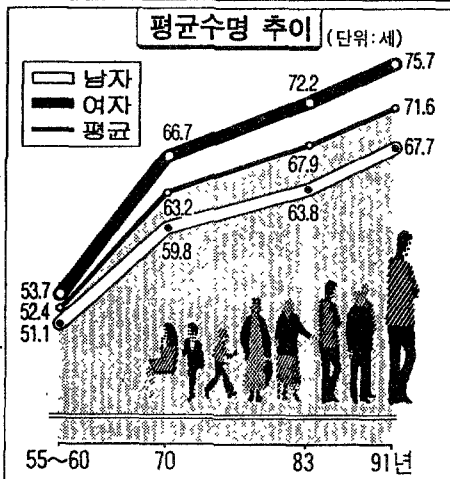
철분과 비타민A 섭취량이 20년전(71년)에 비해 각각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방산 섭취량의 증가는 1인당 하루 섭취량의 71년의 13.1%에서 91년 35.6%으로 3배 가까이 많아졌다. 하루 1인당 철분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63년 2.2%에서 93년 14.5%으로 20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었다. 인공적인 영양제인 돼지고기 소비량의 5.5%에서 38.1%으로 증가했다. 92년 흡연 인구의 20% 이상 인구의 38.5%로 89년의 39.3%보다 조금 낮아졌다. **산모의 탄자가 73.2%** 10명당 7명의 태아를 피어파, 요자가 6.1%의 탄자가 수 있다. **유자의 수가 48.3%**, 89년 57.9%로 높아졌다. **승인 허가자**

평균수명 30년새 19세 늘어

지난 30년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9.2세나 높아졌으며 국고6년 어린이의 평균 키는 15~18cm, 체중은 10~12kg씩 늘어났고 쇠고기 소비량도 7배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6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보건·의료(을)분야에 발표한 「지난 30년간 국민건강수준 변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80)이 지난 50년(1941) 52.4세(남자 51.1세, 여자 53.7세)에서 30여년이 경과한 91년에는 71.6세(남자 67.7세, 여자 75.7세)로 19.2세나 높아졌다.

통계청 발표 국민건강수준 변화



반면 남녀간 평균수명차이는 50년대말 2.6세에서 91년 8.0세로 크게 벌어져 여자의 수명이 증가 속도가 남자를 크게 웃돌았다.

어린이 키 15~18cm·체중 10~12kg 향상
 남녀격차 2.6에서 8세로 더 벌어져

나라이수록 남녀간 수명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리나라 질적향상이 기대된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전체 인구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령인구 구성비가 60년 6.0%에서 90년 7.6%로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인구 1백 명당 60세 이상 노인이 12.1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이 낮아졌고 충청으로 인한

산모의 사망도 80년 10만명당 42명에서 92년 30명으로 크게 줄었다. 사망원인별 사망률도 80년이후 결핵·고혈압성 질환이 크게 낮아진 반면 뇌혈관질환·교통사고와 암 등이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교통사고의 간접으로 인한 사망은 우리나라가 단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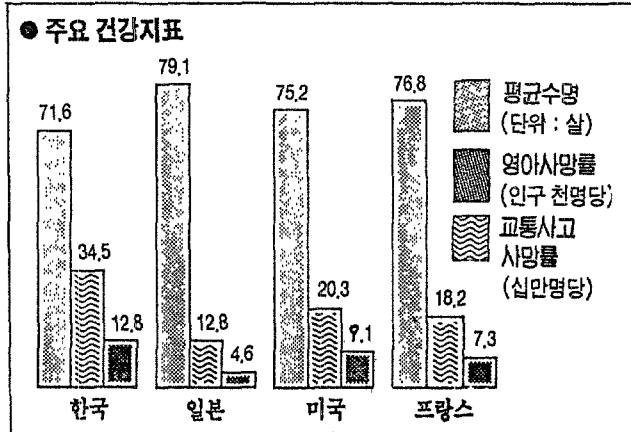
노령인구 비율을 국제 비교하면 스웨덴이 전체 인구의 23.5%로 가장 높고 프랑스(19.1%)·일본(17.5%)·미국(16.8%)·영국(15.9%) 순으로 조사되고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비중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임을 시사했다.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영양상태의 현저한 향상을 보이며 국민들의 영양상태의 개선을 반영해 만 1세(국고 6년생) 어린이의 평균 키는 82년 남자 1백30.4cm, 여자 1백28.4cm에서 92년 남자 1백45.3cm, 여자 1백43.3cm로 각각 15~18cm씩 증가했다. 또 체중도 62년 27.8kg, 여 27kg에서 90년 남자 38.4kg, 여 39.1kg로 각각 10~12kg씩 늘어났다. [柳基基기자]

지난 30년간 보건의료수준 개선 실태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지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영아 및 모성사망률이 높고 의료시설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에 너무 편중돼있는 등 후진적 부분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져 운동·보약섭취 등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인구가 크게 늘고 흡연인구도 줄고 있다. 그러나 여성 음주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인구는 늘고



영아·산모 사망률 아직도 높아

의사 1인당 인구 746명...의료시설 대도시 편중

국민 44% 건강관리...흡연 줄고 여성음주 늘어

있다.

통계청은 보건의 날(7일)을 맞아 지난 30년간의 보건의료수준 개선도에 대한 국가간 비교 지수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수준을 나타내는 전형적 수치인 영아사망률의 경우 지난 90년 현재 1천명의 출생아 중 12.8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개도국보다는 낮았으나 선진국인 일본(4.6%)·미국(9.1%)보다는 크게 높았다.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사망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모성사망률은 10만명당 30명(92년)으로 미국(8.4명·88년)·일본(10.8명·89년) 등 선진국은 물론 헝가리(15.4명·89년)·유고슬라비아(15.5명·89년) 등 동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았다.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의사 1인당 인구는 61년 3천66명에서

올해 7백46명으로, 병상당 인구는 61년 2천5백14명에서 92년 3백79명으로 줄어 선진국 수준으로 급속히 접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1인당 진료건수도 80년 1.7회에서 지난해 4.1회로 늘어났다.

그러나 의료시설의 지역적 편중이 심해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의 경우 인구의 48.1%가 살고 있는데도 의료인력의 61.6%, 의료기관의 61.4%, 병상수의 52%가 몰려있어 이들을 제외한 지역의 의료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섭취하는 영양소 가운데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은 지난 71년만해도 11.6%에 불과했지만, 91년에 이르러 42.7%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영양소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 62년 110.4cm였던 6살 여아의 키가 117.2cm

로 6.8cm가 커졌고, 몸무게도 4kg 이상 늘어났다.

한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떤 형태든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지난 89년 29.7%에서 92년 44.2%로 크게 늘어났다. 건강관리방식으로는 운동이 14.3%로 가장 많았고, 식사조절이 1.8%, 보약이나 영양제 복용이 7.8%의 비중을 차지했다.

20살 이상 흡연인구는 92년 현재 38.5%로 89년에 비해 0.8%포인트 줄었으나 하루 한갑반 이상 흡연하는 '골초'는 이 기간에 오히려 2.5%포인트가 늘었다.

반면 음주인구는 여성 음주인구의 증가로 86년 48.3%에서 92년 57.9%로 늘어났으나, 주2~4회 또는 거의 매일 마시는 '주당'의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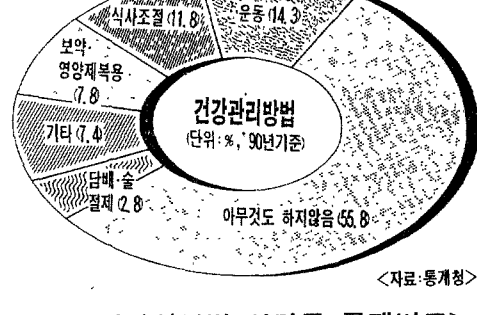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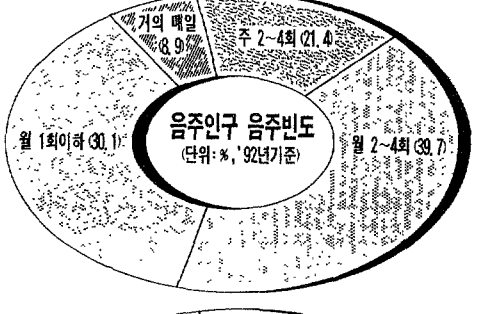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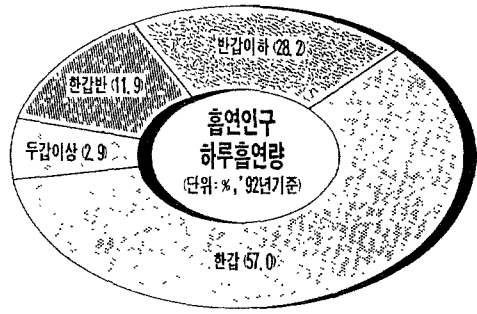
交通事故 사망률 세계최고 "불명예" 여전

통계청 발표로 보는 「국민건강수준」

우리나라사람들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 81년 인구 10만명당 20.5명에서 92년 34.5명으로 10% 이상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간접사망(인구 10만명당 23.7명)과 함께 이같은 교통사고사망률은 세계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40대까지의 사망률은 83년(남자) 1천명당 8.94명(까지 꾸준히 늘다가 감소추세를 보며 91년에는 1천명당 6.37명으로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5%에 달해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특히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이 89년에 29.7%에서 92년에 44.2%로 3년새에 15%포인트나 늘었다고 한다.

출생인구는 92년 현재 20세 이상 인구의 38.5%로 89년의 39.3%보다 줄어 들었는데, 이 가운데 출생률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14.8%로 90년의 16.3%에서 1.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57.9%로 90년 56.1%에서 1.8%포인트 늘었다고 한다.



<주요사망원인별 사망률 국제비교>
(단위: 인구 10만명당)

	결핵	위암	간암	폐암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교통사고
한국(92)	10.4	30.6	23.7	17.0	13.5	27.5	34.5
일본(91)	2.7	39.9	14.9	31.0	7.9	7.4	12.8
싱가포르(90)	4.2	13.5	-	27.2	12.4	7.8	9.6
미국(89)	0.8	5.7	1.5	55.2	18.8	12.9	20.3
프랑스(90)	1.7	12.0	5.3	38.1	11.4	10.9	18.2
한국(89)	0.9	17.9	1.4	70.0	-	6.8	10.5
일본(90)	7.8	29.7	-	35.7	6.3	7.8	27.0

* 괄호는 조사년도 자료: 통계청

평균수명 71.6세...노령화 추세

남(4월7일)을 맞아 발표된 「지난 30년간 국민건강수준 변화」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50년대말의 52.4세에서 91년 현재 71.6세로 19.2세가 증가했다. 남자는 67.7세, 여자는 75.7세로 남녀간 나이차도 50년대말 2.6세에서 8.0세로 넓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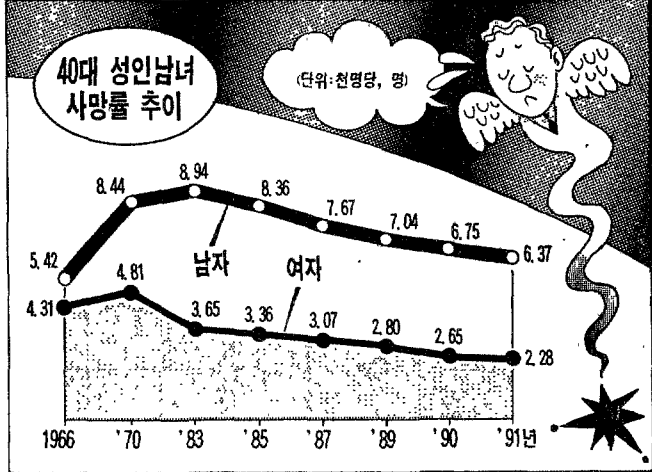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세계최고인 일본(남자 76.1세, 여자 82.1세)이나 스웨덴, 프랑스, 미국, 대만 등보다는 낮지만, 예스토니아(남자 64.7세, 여자 74.4

9세)가 리 필리핀 등보다 높은 것이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도 늘어나 60세 이상 인구가 60년 전체인구의 6.0%(1백50만명)에서 90년에 7.6%(3백32만명)로 증가했다. 현재 전체인구의 5%인 65세 이상 인구는 2001년에 노령화사회 진입 기준인 7%에 달하고 2021년에 13.1%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영양상태가 개선돼 학생들의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학교 6학년인 11세 남학생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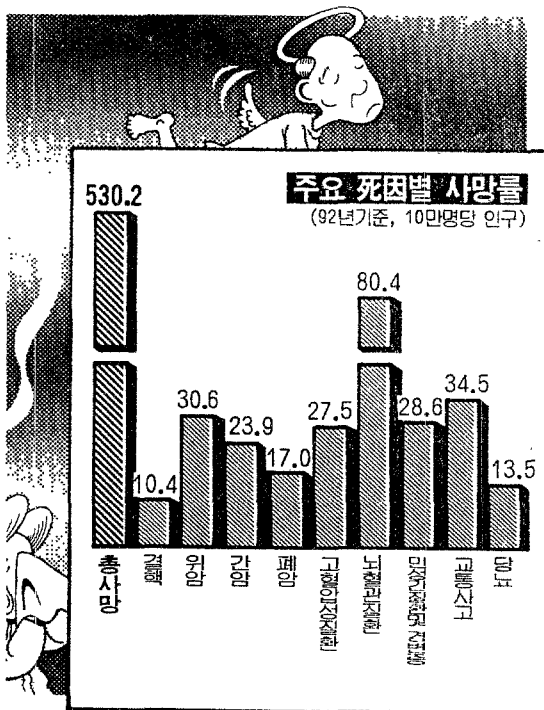
우키가 60년 1백30.4cm에서 92년에 1백45.3cm로 14.9cm나 커졌고, 몸무게는 62년 27.8kg에서 38.4kg으로 10.6kg이나 늘었다.

검체발견에 따라 의료혜택도 커져 의사 한사람이 맡아야 할 인구가 61년에 3천66명에서 93년엔 7백46명으로 의사의 부담이 줄어 들었다. 이는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 비해 4백73명(프랑스) 3백20명 등 선진국보다는 많을 수준이다. <安商旭기자>



국민 평균壽命 30년세 19년 늘어

통계청 발표 「30년간 보건의료 수준변화」



총사망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 남자 70% 이상이 "음주·흡연"

지난 10여년간 생활습관
후진정 질병의 의한 사망
은 상당의 감소한 반면 당
남을 심의명의 의한 사망
과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은 크게 늘었다.

또 우리 국민의 평균수
명(91년 71.6세)은 30여
년전에 비해 약 19세 증가
했다. 남자보다 여자의
증가속도가 빨라 남자의
평균수명조차(81년) 71세
이상의 30.4%를 증가한

이로 보아 사고양은 30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흡연의 수비율(91년 88년
39.3%에서 92년 38.5%
로 줄어 들었다) 이후의
향후 30년 이상 담배를 피우

계지표를 통해 실제성장과
더불어 향상되고 있는 우리
「건강지표」가 현재 91
수준의 위 양지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총사망
률(1인당연간 사망자
수)은 92년 12.1명에서
91년 5.3명으로 30여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
으로 떨어졌다. 死因별로
보면 질병이 92년 10만명당
21.4명에서 92년에 10
4명 정도로 줄었다.糖尿에
의한 사망(91년 5.7명에서
92년 3.5명)은, 고혈압에
의한 사망(91년 20.5명
에서 34.5명)은 각각 크게
늘었다.

「해피 스포츠」의 비활
성 운동이 늘고 있다.
飲酒인구비율(92년 58
%)은 86년 48.3%의 비
해. 흡연인구 추세의 나
주변보다 줄고 있어 남자
흡연인구의 약 40%와 여
자의 매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
자의 흡연과 음주인구비율
은 각각 73.2%, 84.7%
에 달했다.
통계청의 보건지표(7
일)을 맞아 6월 발표한
「지난 30년간 보건지표수
준변화」 보고서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이로한 과편을
한편의 보건지표(91년)를
어 의사수(91년 8천4백
5명에서 92년 5만9천69
명)은 약 7백,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수는 6천3백
60명에서 26만9천9백여
명으로 약 42배 증가했다.
의사 1인당 인구(91년)가
3천86명에서 7천46명(91
로 크게 감소, 선진국(4백
~5백명)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張倫榮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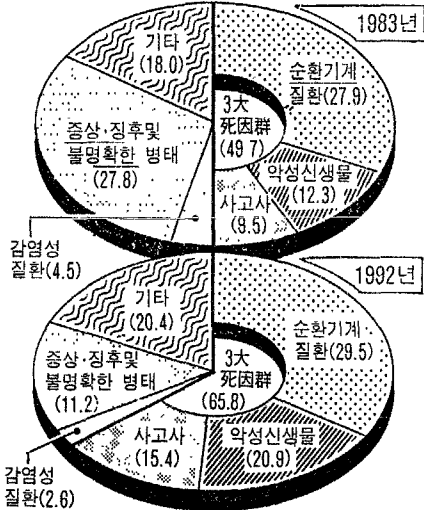
男子10만명중 136명 癌 사망 女子는 뇌졸중이 가장 많아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10만명중 1명 38.9명씩의 암이 발생하며, 특히 폐암(27.8%)과 위암(18.0%)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뇌졸중(45.7%)과 심장질환(45.7%)은 여전히 주요 사망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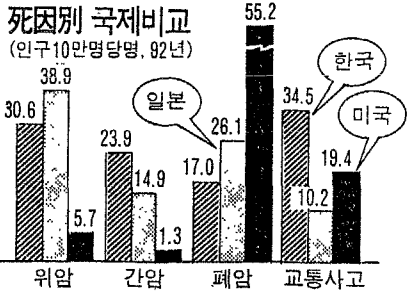
당 86.7명씩의 암이 발생하며, 특히 폐암(27.8%)과 위암(18.0%)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뇌졸중(45.7%)과 심장질환(45.7%)은 여전히 주요 사망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40대 이전까지는 폐암의 사망률이 낮았으나, 40대 이후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암은 60대까지의 사망률에서 90대까지의 사망률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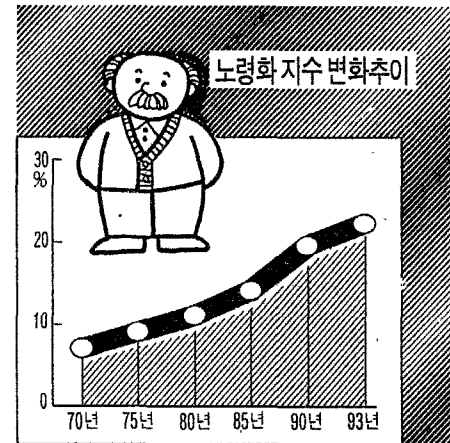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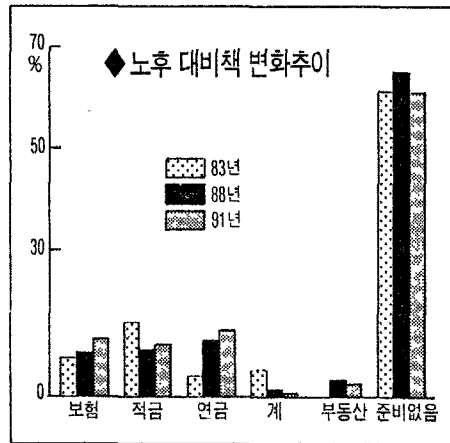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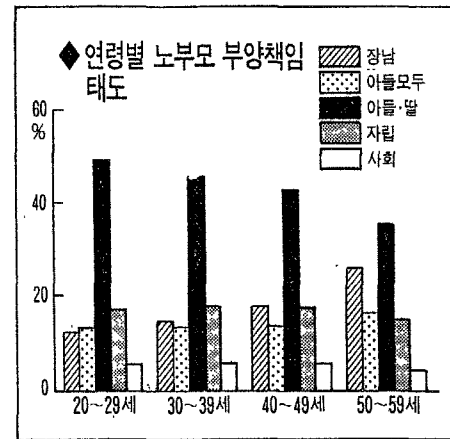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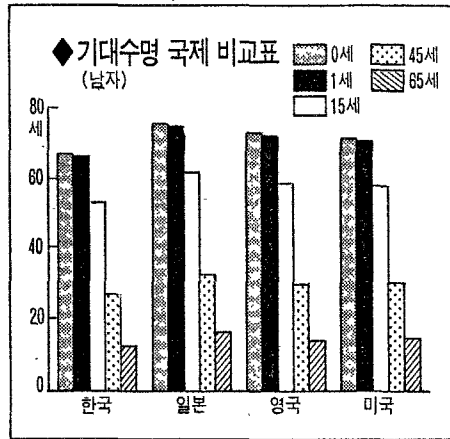
死因 구조 비교 (단위 - %)



死因別 국제비교 (인구 10만명당, 92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사망률이 10만명중 1명 38.9명씩의 암이 발생하며, 특히 폐암(27.8%)과 위암(18.0%)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뇌졸중(45.7%)과 심장질환(45.7%)은 여전히 주요 사망원인이다.



통계로 본 老後觀

·아급가급 사급제이 사급제
 1. 아급가급 사급제이 사급제
 2. 아급가급 사급제이 사급제
 3. 아급가급 사급제이 사급제
 4. 아급가급 사급제이 사급제
 5. 아급가급 사급제이 사급제
 6. 아급가급 사급제이 사급제
 7. 아급가급 사급제이 사급제
 8. 아급가급 사급제이 사급제
 9. 아급가급 사급제이 사급제
 10. 아급가급 사급제이 사급제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1.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2.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3.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4.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5.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6.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7.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8.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9.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10.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28.7.7년 80년 20.1
 2월 20년 21.49년
 1. 2월 20년 21.49년
 2. 2월 20년 21.49년
 3. 2월 20년 21.49년
 4. 2월 20년 21.49년
 5. 2월 20년 21.49년
 6. 2월 20년 21.49년
 7. 2월 20년 21.49년
 8. 2월 20년 21.49년
 9. 2월 20년 21.49년
 10. 2월 20년 21.49년

1.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2.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3.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4.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5.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6.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7.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8.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9.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10. 사급제이 사급제이 사급제이

평균수명男67·女75세

청산년봉 부모부양하겠다. 10명중 1명

노령인구 매년 급증세

노령인구 급증세
 1. 노령인구 급증세
 2. 노령인구 급증세
 3. 노령인구 급증세
 4. 노령인구 급증세
 5. 노령인구 급증세
 6. 노령인구 급증세
 7. 노령인구 급증세
 8. 노령인구 급증세
 9. 노령인구 급증세
 10. 노령인구 급증세

1. 노령인구 급증세
 2. 노령인구 급증세
 3. 노령인구 급증세
 4. 노령인구 급증세
 5. 노령인구 급증세
 6. 노령인구 급증세
 7. 노령인구 급증세
 8. 노령인구 급증세
 9. 노령인구 급증세
 10. 노령인구 급증세

1. 노령인구 급증세
 2. 노령인구 급증세
 3. 노령인구 급증세
 4. 노령인구 급증세
 5. 노령인구 급증세
 6. 노령인구 급증세
 7. 노령인구 급증세
 8. 노령인구 급증세
 9. 노령인구 급증세
 10. 노령인구 급증세

1. 노령인구 급증세
 2. 노령인구 급증세
 3. 노령인구 급증세
 4. 노령인구 급증세
 5. 노령인구 급증세
 6. 노령인구 급증세
 7. 노령인구 급증세
 8. 노령인구 급증세
 9. 노령인구 급증세
 10. 노령인구 급증세

정부의 물가통계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평을 자주 듣는다.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이 10%선에 머물고 있을때 주부들은 채소며 생선 값이 두배 가까이 뛰었다고 아우성을 칠 때가 많다. 물가당국이 통계수치에 나타나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능하면 물가상승률이 낮게 보이도록 노력하리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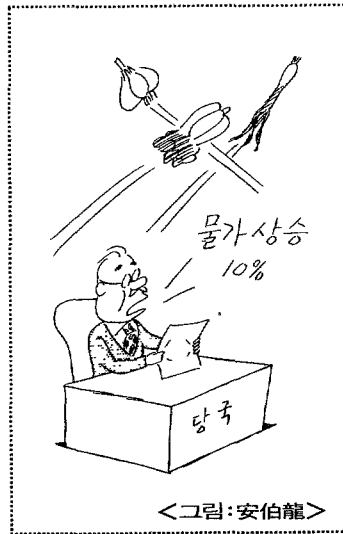
선진국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의 통계가 실제의 물가상승폭을 과장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우선 물가지수의 산정 방식 그 자체에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같은 쪽으로 올랐어도 쌀값이 오른것과 골프채의 값이 오른것이 똑같은 의미를 가질수없다. 물가지수를 구할때 비중이 큰 상품의 가격동향은 더 많이 반영될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가지수 산정과정에서 각 상품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삼는 것은 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상품의 거래량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때의 거래량에 입각하여 가중치를 선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스파이레스(Laspeyres)방식은 기준이 되는 한 해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삼은후 계속 이를 사용하여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85년도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삼으면 92년이나 93년의 물가

지수를 구할때도 줄곧 이 가중치를 사용하게 된다. 이 방식을 쓰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품의 가격동향이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컴퓨터나 휴대용 전화기가 그 좋은 예지만, 거래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품 중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들이 과소평가된 상태로 구해지는 물가상승률은 현실의 상승폭을 과장해서 보여 줄 가능성을 갖고 있다.

또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그 품질이 현저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싸졌다고 보아야 옳은 경우도 있을수 있다. 하여튼 품질의 향상을 감안한 실제의 가격상승폭은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 더 작을 것이 분명하다. 물가통계에서는 이 사실이 반영될수 없기 때문에 현실의 물가상승폭을 과장해서 보여 줄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에서는 작은 유통마진을 붙이는 대신 대량 판매를 노리는 대형유통체인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수 있다. 물가가 많이 뛰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곳을 더욱 즐겨 찾게 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이같은 할인판매장의 등장으로 인해 훨씬 둔화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유통구조의 변화에 의해 가격상승의 경향이 상쇄된다는 사실도 물가통계에 제대로 반영할수 없다. 이상의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정부의 공식 물가통계가 현실의 물가상승 정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납득이 가게 된다.



<그림:安伯龍>

경제데이터 이렇게 보자

70

누구나 함께 읽는 경제노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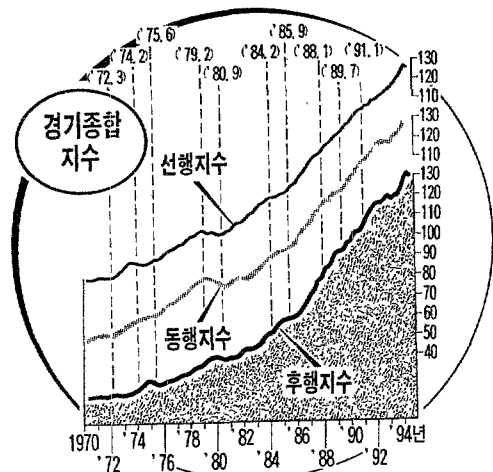


景氣종합지수

경기변동 방향·전환점·진폭 예측 指標 先行등 3가지로 구분

통계청은 최근 2월 중 경기종합지수동향을 발표했다.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감소하고 후행지수는 증가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전환점과 속도 및 진폭을 측정할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는 경기지표로는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와 경기동향지수(DI: Diffusion index)등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경기종합지수를 매달 작성 발표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를 단기적으로 예측할수있는 선행지수(Leading CI), 현재의 경기상태를 측정할수있는 동행지수(Coincident CI) 및 현재의 경기를 사후적으로 확인해주는 후행지수(Lagging CI)의 3가지로 구분한다. 이들 지수는 각각의 구성지표를 종합해 작성되며 개별구성지표의 월별통계자료(Original Series)에서 계절적요인 재해 또는 우발적사건과 같은 비정상적인 요인을 경기의적인 변동요인을 통계적방법으로 제거한다.

지난 2월중 선행종합지수는 123.1로 전월보다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데 현행 선행지수의 선행기간은 평균 약 6개월이며 10가지 구성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해 작성한다. 10가지 구성지표는 ▲건축허가면적 ▲기계수주액 ▲건설용중간재생산지수(이상은 투자관련지수) ▲수출신용장내도액 ▲수입승인액(무역관련지수) ▲통출유동성(M3) ▲예금은행대출금(통화금융) ▲제조업재고율지수(재고) ▲중간재출하지수(생산) ▲입직자수/이직자수(고용)등이다. 2월의 경우 이중 수출입승인액과 예금은행



대출금 두가지 지표는 증가한 반면 건축허가면적등 9가지 지표는 감소했다. 고용상황을 보여주는 입직자수/이직자수는 자료가 늦게 작성되기때문에 제외됐다.

2월중 동행지수 역시 125.3으로 전월보다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지수의 구성지표는 8개로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이상 생산관련지표) ▲생산자출하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비내구소비재출하지수(이상 소비관련지표) ▲수입액(무역) ▲시멘트소비량(투자) ▲비농가취업자수(고용)등이다. 2월중 동향을 보면 도소매판매액지수등 3개지표는 증가했으나 시멘트소비량등 5개 지표는 감소했다.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 판단하기위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조지표로 사용하기도 한

다. 동행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움직임과 경기의 상승및 하강움직임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움직임을 제거한게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대개 100을 기준으로 하여 95~105의 범위 내에서 상하로 움직인다. 순환변동치의 크기 또는 증감률은 큰 의미를 갖고있지 않고 움직이는 방향에 더 큰 의미가 있다. 2월중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0으로 전월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2월중 후행지수는 그러나 129.9로 전월보다 1.0포인트 늘어나 앞으로의 경기를 제법 밝게 전망해주고있다. 후행지수의 구성지표는 5가지로 ▲기계류수입액(투자) ▲생산자재품재고지수(재고) ▲내구소비재출하지수(소비) ▲회사채유통수익률(금융) ▲비농가실업률(고용)등이다.

<陸東仁기자>

통계정보 일반에 제공

44萬種 개방 PC 통해 미공개 자료까지

그동안 정부가 독점하던 시피했던 각종 통계정보를 통계청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개방해 보았다.

일반인들에게 양년도 민간 정보통신망회사의 컴퓨터 통신망에 가입하면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각종 통계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공기관 통계는 소득·보건·산업·노동·물가 등 5백여종의 약 44만종으로 개

인의 생활이나 기업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통계자료의 대부분은 미공개자료도 받아 볼 수 있다.

통계청은 14일 통계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3백29개 기관에만 제공되

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올해안에 천리안 등 민간부가 가진 통계정보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계자료가 공개될 부가가치통신망과 서비스개시 시기는 데이터의 천리안(6월), 산업기술정보원의 KINITI-IR(하반기), 한국기업평가의 KMCIFUNDS(6월), CCI-FUNDS(6월), 賢協의 KOTIS(6월),

한국신용평가의 KISI-LINE(4월), 한국신용정보의 NICETIP(S(7월), 한국증권전산의 STOCKINET(4월) 등이다.

통계정보는 컴퓨터통신망뿐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의 요청에 의해 디스켓 또는 磁氣테이프에 담아

서도 제공한다. 이때 이용자는 전산기기를 통해 10만원의 편의의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통계청은 또 일반 국민들이 자주 쓰는 기초 경제 및 생활에 관한 1천여개의 자료는 전화 한 통으로 알릴 수 있는 자료를 해 4.4분기 중 통계정보 서비스(ARS)도 가동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張倫樂기자〉

PC통신 對民 서비스 나선다

PC통신망인 천리안과 하이텔에 불공정거래신고센터가 개설돼 내년부터 기업체 및 일반민원인들이 PC를 이용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도 천리안 등 민간부가 가치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급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은

公正委 통계청

각각 이같은 내용의 종합사무자동화 및 통계정보공급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공정거래위의 사무자동화는 크게 두가지 목적으로 추진된다. 첫째는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천리안 및 하이텔에 불공정거래센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올 연말까지 전담인력등을 확보한 후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신고접수나 민원상담뿐 아니라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 사무자동화의 두번째 목적은 공정거래제도 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공정거래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통계청은 그동안 자체 통신망인 KOSIS만을 통해 제공해온 각종 통계자료의 공급망을 올 연말까지 천리안, KOTIS(무역협회), 스톡네트(한국증권전산), KIS라인(한국신용평가), S네트(삼성데이터시스템), 나이스팁스(한국신용정보), KINITI-IR(산업기술정보원) 등 민간부가 가치통신망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독점해온 각종 통계자료를 일반인들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통계청이 공급할 자료는 국토 인구 산업 등 20개 부문에 44만여종에 이른다.

통계청은 이밖에 이들 자료를 디스켓 등의 형태로 실비판매도 할 예정이며 올 4.4분기부터는 전화를 통한 음성정보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林革기자〉

신고접수·민원상담 등 내년에 가동
정부統計정보 44萬種 일반에 제공
통계청 公正委

44만종종류! 하반기부터 PC로 제공

통계청이 그동안 관공자 등에만 제한적이던 원근해 및 각종 통계자료를 하반기부터는 매킨토시 등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일반인에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자료
일반에 開放

통계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지난 30년간에 걸친 국민소득·보건·산업·노동·국제통계 등 5백여개 분야의 44만종류에 달한다.

회 사	통신망	서비스시작일	작업일
이정원	천리안 KINITI-IR	6월	하반기
기술정보시스템	S-NET	하반기	하반기
산업기타사업협력평가회	KMCC-FUNDS	6월	6월
삼성데이타시스템	KOTIS	6월	4월
한국국신	KIS-LINE	4월	7월
국국국국	NICE-TIPS	7월	
국국국국	STOCK-NET	3월부터	실시

통계청은 14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통계정보가 우선적으로 확대 공개돼야 한다고 보고 통계정보 제공통신망 구축사업에 각종 규정을 이미 개정했고 부가가치통신망을 통한 자료공급을 위해 데이타처리부문의 협회 등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의 선정을 마쳤다. 통계청은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자료중에서도 개인이나 기업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자료를 선별해 컴퓨터 디스켓이나 마그네틱 테이프 등에 담아 일반에게 공개하고,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전제하에 통계조사 대상 기업과 각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보서비스를 받으려면 통신망에 가입한 후 사업자가 정하는 사용료(분당 30원)를 내면 되고 통계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컴퓨터상용프로그램의 실행만을 부담하면 된다. <宋尙勳기자>

통계청자료 일반에 공개한다

500여분야 44萬種 민간통신망 연결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가 일반국민들에게 제공된다.

또 통계조사용 사업자명부 가구명부, 통계조사용 기본지도 등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자료들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에 공개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통계정보 공급확대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중 신뢰성이 극히 낮은 일부통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계를 공개키로 했다. 또 현재 「통계정보시스템」(KOSIS)을 통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3백29개 기관에만 제공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올해안에 천리안등 민간부가가치 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제공하기로 했다. 통신망을 통해 공급될 통계는 소득 보건 산업 노동 통화 환율 물가·국제통계

등 5백여개 분야에 걸친 44만종이다. 또 지금까지 보통 간행물 용지복사 등의 형태로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디스켓이나 마그네틱 테이프 등의 형태로도 공급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국토 인구 주택 등 1천여개의 기초 통계자료는 오는 10월경부터 전화를 통한 음성서비스(ARS)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자료가 공급될 민간 부가가치통신망은 △데이콤의 천리안(6월부터) △산업기술정보원의 카니티 I R(올 하반기) △삼성데이타시스템의 S네트(하반기) △한국기업평가의 KMCC펀드(6월) △무역협회의 코티스(6월) △한국신용평가의 키스라인(4월) △한국신용정보의 나이스팁스(7월) △한국증권전산의 스톡네트(시행중) 등이다. (許承虎)

통계청 자료 공개 확대

'비밀'최소화...컴퓨터통신·음성정보 서비스 제공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가 일반 개인 또는 민간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개인용 컴퓨터의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간단한 통계는 전화자동응답기(ARS)에서도 듣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통계청의 판단에 따라 공표기로 결정한 자료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특별히 신뢰성이 낮거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 통계 이외에는 모두 민간에 공개·제공된다.

14일 통계청은 민간의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통계정보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이러한 통계공급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지난 91년 설치된 현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3백29개 기관에만 공급중인 온라인서비스시스템(KOSIS)을 천리안·무역협회 통신망(KOTIS) 등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와 연계해 개인용 컴퓨터에 공급할 수 있

도록 했다.

이 시스템에는 국토·인구·노동·산업·국제수지 등 20개 부문 5백여개 항목에 총 44만 제열의 국내의 주요 통계자료가 수록돼 있으며 이들 정보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모두 공개·공급된다. 통계청은 또 이들 정보에 환경·사회·복지·지역통계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국내의 통계나 초·중·고교에서 많이 다루는 사회·경제·문화 등 간단한 통계정보들은 전화를 통한 음성정보서비스로 제공기로 했다. 음성정보서비스는 올해 안에 시작되며 국토·인구·주택·노동·임금·통화·재정·교육·문화·보건·환경·국제통계 등 1천여개 지표가 수록된다.

통계제공 컴퓨터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	통신망 이름	서비스시작예정
(주)데이콤	천리안	94. 6월
산업기술정보원	KINITI-IR	94. 하반기
삼성데이터시스템(주)	S-NET	94. -
한국기업평가(주)	KMCC-FUNDS	94. 6월
한국무역협회	KOT IS	94. -
한국산업평가(주)	KIS-LINE	94. 4월
한국신용정보(주)	NICE-TIPS	94. 7월
한국증권전산(주)	STOCK	이미 시작

통계청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계자료 보급매체도 현재의 간행물·용지복사본 아니라 디스켓·마그네틱 테이프 등 전자매체로도 공급기로 했다.

또 연구기관이나 학자, 기업 등이 특수하게 요구하는 통계자료는 인용된 개인이나 기업, 가구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자료를 따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자료제공에 있어서도 자료제공 대행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94. 4.15

통계정보

일반인에게 개방

천리안·무역협회 민간통신망에 연결

통계청이 만드는 각종 통계 자료를 국민들이 훨씬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각종 통계자료가 천리안 등의 민간 통신망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연결되면 음성서비스(ARS)로도 원하는 통계를 얻을 수 있다.

통계청은 14일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운영하는 통계정보시스템(KOSIS)을 연내 천리안 등 8

이 됐고 한국산업평가의 KIS-LINE과는 이 달 안에 연결된다. 데이콤의 천리안과 한국기업평가의 KMCC-FUNDS, 한국무역협회의 KOTIS와는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산업기술정보원의 KINITI-IR, 삼성데이터시스템의 S-NET, 한국신용정보의 NICE-TIPS와는

5백여 항목 44만가지 이용 가능 연내 1천종 음성정보서비스도

개 민간 부가가치 통신망(VAN)에 연결해 일반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만 공급해왔다.

한국증권전산의 STOCK-NET와는 지난 달 이미 연결

연내 연결이 끝난다. 개인용 컴퓨터를 이들 통신망과 연결하면 5백여 항목, 44만 가지의 국내의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 자주 쓰이는 국토·인구·임금·문화 등 1천여개

의 기본 통계지표를 전화로 자동응답해 주는 음성정보 서비스(ARS)도 연내 개발한다. 간행물, 복사 등 종이로만 제공하던 자료도 디스켓, 마그네틱 테이프 등으로 다양화 한다.

또 개인과 사업체에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통계조사용 사업체와 가구의 명단, 기본지도, 調査區 내역 등 통계의 기초 자료도 공급한다.

<宋泰燮기자>

統計자료 PC 통해 無料제공.

개인비밀등 제외 숏분야

통계청 국토·주택정보 전화응답서비스도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통계자료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일반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정보 공개확대 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가, 컴퓨터를 통해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보건, 산업, 노동, 통계, 화학, 물가, 성장, 국제통계 등 5백개 분야 44만종의 신회성이 일반인들에게나 사생활이나 기업의 비밀 보호를 제외한 것이라면 통계청이 보유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통계자료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일반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보건, 산업, 노동, 통계, 화학, 물가, 성장, 국제통계 등 5백개 분야 44만종의 신회성이 일반인들에게나 사생활이나 기업의 비밀 보호를 제외한 것이라면 통계청이 보유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

【金光賢】



94. 4.15

統計정보 공개 확대

부가통신망·ARS 등 통해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가, 컴퓨터를 통해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보건, 산업, 노동, 통계, 화학, 물가, 성장, 국제통계 등 5백개 분야 44만종의 신회성이 일반인들에게나 사생활이나 기업의 비밀 보호를 제외한 것이라면 통계청이 보유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가, 컴퓨터를 통해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보건, 산업, 노동, 통계, 화학, 물가, 성장, 국제통계 등 5백개 분야 44만종의 신회성이 일반인들에게나 사생활이나 기업의 비밀 보호를 제외한 것이라면 통계청이 보유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가, 컴퓨터를 통해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보건, 산업, 노동, 통계, 화학, 물가, 성장, 국제통계 등 5백개 분야 44만종의 신회성이 일반인들에게나 사생활이나 기업의 비밀 보호를 제외한 것이라면 통계청이 보유한 모든 정보가 제공된다.

통계청 北方7國 對역비교

우리나라의 對中國 수출은 1993년 1,222억 달러로 92년 1,071억 달러보다 15.1%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39억 달러로 92년 29억 달러보다 34.5% 증가했다. 그 외 기계·전자·화학제품 수출이 129.2억 달러로 92년 129.2억 달러를 나타냈다.

對中國 수출 가운데 31%를 차지하는 자동차가 93년 389억 달러로 92년 290억 달러(5.1천9백만 달러)보다 34.5% 증가했다. 승용차 수출은 전년보다 무려 52%나 늘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2년 0.3%에서 10.1%로 크게 높아졌다.

對中國 수입액도 1위인 미국(6억3천만 달러)보다 그중 대부분이 유수수(6억1천1백만 달러)였다. 무역수지 비록한 채수·과실·약재·유류는 中國産 농수산물에 의존해 줄어든 반면 석유·전체 수입(천만달러)은 대폭 증가했다. 93년 1,222억 달러로 92년 1,071억 달러보다 15.1%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39억 달러로 92년 29억 달러보다 34.5% 증가했다. 그 외 기계·전자·화학제품 수출이 129.2억 달러로 92년 129.2억 달러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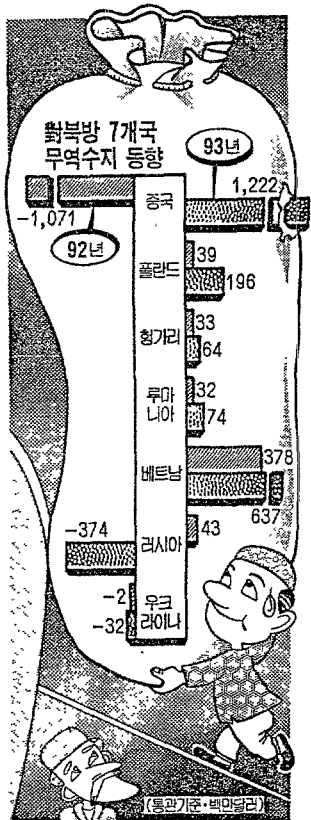
對中國 수출 가운데 31%를 차지하는 자동차가 93년 389억 달러로 92년 290억 달러(5.1천9백만 달러)보다 34.5% 증가했다. 승용차 수출은 전년보다 무려 52%나 늘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2년 0.3%에서 10.1%로 크게 높아졌다.

작년 對中 무역 첫 흑자

자동차호조로 수출 94%증가
對베트남수출도 67% 급신장

對中國 수입액도 1위인 미국(6억3천만 달러)보다 그중 대부분이 유수수(6억1천1백만 달러)였다. 무역수지 비록한 채수·과실·약재·유류는 中國産 농수산물에 의존해 줄어든 반면 석유·전체 수입(천만달러)은 대폭 증가했다. 93년 1,222억 달러로 92년 1,071억 달러보다 15.1%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39억 달러로 92년 29억 달러보다 34.5% 증가했다. 그 외 기계·전자·화학제품 수출이 129.2억 달러로 92년 129.2억 달러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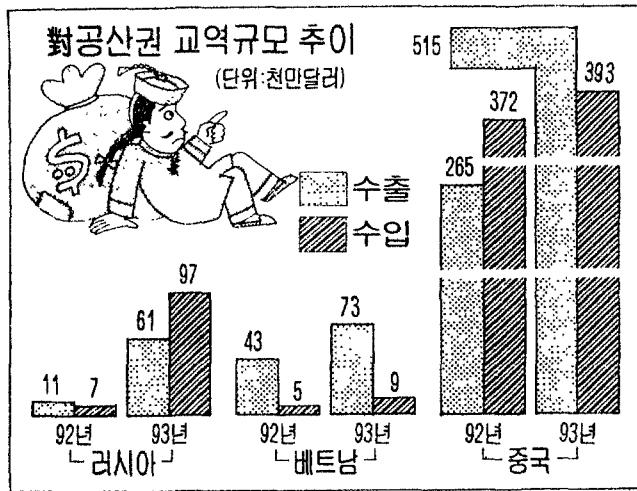
對中國 수출 가운데 31%를 차지하는 자동차가 93년 389억 달러로 92년 290억 달러(5.1천9백만 달러)보다 34.5% 증가했다. 승용차 수출은 전년보다 무려 52%나 늘어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2년 0.3%에서 10.1%로 크게 높아졌다.



전년도보다 67% 증가한 7억 2천8백만 달러로 경유 등 석유류와 TV·전자기 등 전기전자기류의 비중이 27%를 차지했다.

對베트남 무역수지(총액 기준)는 지난해 6억3천7백만 달러 수출을 넘겨 93년 11.2%의 증가로 9천3백만 달러 수출을 보여 對中國 흑자규모(2천5백만 달러)를 앞지르고 있다.

△張倫榮기자△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역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여제의 최대국들이 경제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다.

심이다. 국제 사회에서 는 열렬한 전도 동지도 없다. 만 실습하게 한다.

對公산권 교역 대폭 증가

통계청이 21일 펴낸 「한국통계월보」 3월호 「공산권추이」 특장부의 변화 추이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 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7개 공산국가에 대한 수출은 69억 1천만달러였다. 92년 34억 3천만달러에서 1백%가 넘는 증가율이다. 수입도 51억 2천만달러로 28.6%가 늘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무역수지도 92년 5억 5천만달러의 적자에서 작년엔 17억 9천만달러의 흑자로 반전됐다.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2년 4.7%에서 7.2%로 커졌다.

작년 120억弗 거래... 첫 흑자 반전

對러 수출 5배·수입 13배 급신장

달리로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반면 수입은 39억 3천만달러로 5.5%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해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자동차는 전년보다 52배 넘게 팔았다.

對베트남 수출은 전년보다 67% 증가한 7억 3천만달러, 수입은 58%가 불어난 9천 1백만달러로 역시 흑자였다.

러시아와의 교역이 가장 많이 늘었다. 수출은 5배, 수입은 13배나 증가했다. 6억 1백만달러를 수출하고 9억 7천만달러를 들여와 우크라이나와 함께 전자를 기록했다.

〈宋素賢기자〉

통계청 交易 변화 분석

中國 러시아 베트남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북방국가들과의 교역이 급신장을 보이면서 우리의 주력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북방 최대의 시장인 中國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러시아 베트남과의 무역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1일 통계청이 통계월보 3월호를 기초로 작성한 북방교역의 변화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북방 7개국에 대한 수출은 93년 69억1천만달러로 전년대비 1백1.5%증가했고 수입은 51억2천만달러로 28.6%가 늘어났다.

中國 對中 수출은 93년중 51억5천만달러로 전년대비 94.1%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39억3천만달러로 5.5%증가에 그쳤

구분	지역	수출	수입	무역
				수지
◇ 93년도 북방국가교역 변화	中國	5,150	3,930	1,220
	러시아	601	975	△374
	베트남	730	90	640
	폴란드	240	40	200
	헝가리	80	20	60
	루마니아	80	10	70
	우크라이나	20	50	△30

(자료: 통계청)

다. 이에따라 무역수지는 92년10억달러 이상의 적자에서 93년 처음으로 12억2천만달러의 흑자로 돌아섰다.

중국에 대한 수출실적은 철강류가 9억9천8백만달러로 1위였고 다음으로 자동차 및 부속품, 플라스틱과 제품,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 기계류 및 부품의 순이었다.

반면 수입은 곡물 석탄 등 광물성 연료 인조섬유의 순으로 규모가 컸고 고사리 파미꾸라지 냉동홍합 등은 수입분 전량이 중국에서 들어왔다.

베트남 수출은 작년중 7억3천만달러로 전년대비 67% 증가했고 수입은 58.1% 증가한 9천1백만달러에 머물렀다.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경유 벵커C유 등 석유류제품이 가장 많았고 수입은 무연탄이 총수입액의 21.8%를 차지했다.

러시아 수출은 작년 6억1백만달러로 5.1배 증가했고 수입은 9억7천5백만달러로 13배가 늘어 무역수지는 전년의 4천만달러이상의 흑자에서 3억7천4백만달러의 적자로 반전됐다. <徐廷禧기자>

對 북방 7개국 수출 51억弗 7개국 작년 69억弗 수입도 51억弗 규모

수입도 51억弗 규모

통계청 집계 「北方교역의 변화」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주요 북방국가들과의 교역량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들 국가가 주역(주요대상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해 동안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이 10% 이상 늘었다. 반면 수입은 1% 이상 줄었다. 무역수지 흑자폭이 커졌다. 교역규모에서 보면 1987년 17억 9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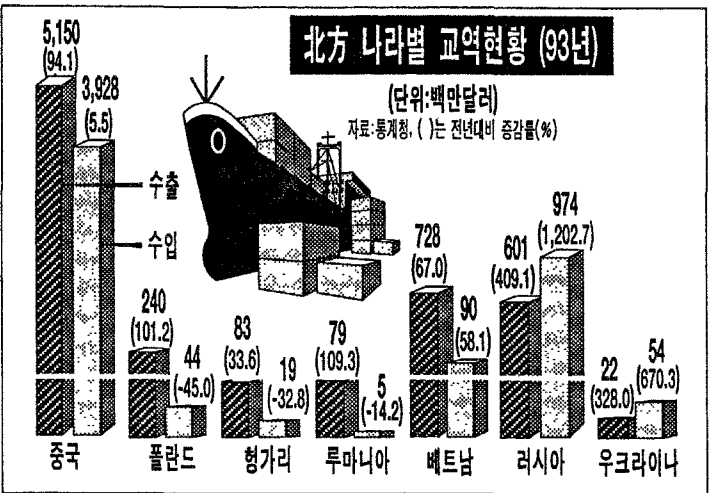
北方 7國과 貿易 69억 달러

북방 7국은 중국·러시아·베트남·헝가리·루마니아·우크라이나 등 7개국을 가리킨다.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1987년 11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8억 1천만 달러로 1986년 10억 1천만 달러에 비해 28.6%가 증가한 12억 1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다라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액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92년의 4.7%에서 지난해의 7.2%로 커졌다. 이번 분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1987년 1월 이후 10월 10일까지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10억 1천만 달러로 1986년 10월 10일까지의 수출액에서 전기·전사제

품이나 자용재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년 한해 동안 9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져 92년의 비

해 5배로 증가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각각 2억 6천만 달러와 1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70%와 100%가 증가한 7억 6천만 달러와 3억 8천만 달러를 차지해 전체의 76%를 차지해 전체의 76%를 차지해 전체의 76%를 차지



났다. 그러나 올 1월부터 3월까지는 기간상 러시아와 폴란드에 대한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배로 늘었고 폴란드의 경우 수출액이 5배로 증가했는데 중국이 차지한 교역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있다. 또 수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중이 1987년 10월 10일까지의 수출액에서 전기·전사제

黑字 18억弗... 총수출입의 7%차지

이전 수출입 총액을 모은 1987년 10월 10일까지의 수출액이 10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8억 1천만 달러로 1986년 10월 10일까지의 수출액에서 전기·전사제

한편 수입은 1987년 10월 10일까지의 수입액이 1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가 증가한 12억 1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번 분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1987년 1월 이후 10월 10일까지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10억 1천만 달러로 1986년 10월 10일까지의 수출액에서 전기·전사제



94. 4.22

物價 오름세 한풀 꺾였다

4월중 농·양·공·개 0.2% 상승 그쳐

파·양과 등 農作物 출하 증가 힘입어

韓銀·통계청 발표

1·4분기 중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던 물가가 이달 초 추세를 정점으로 한풀 꺾였다. 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로 지난 1월의 1.3%, 2월의 1.1%, 3월의 0.9%와 비교해 뚜렷이 낮아졌다.

그러나 3월 중 0.1% 떨어진 생산자물가는 조기·각진 등 일부 수산물의 공급선과 딸기 등 햇작물의 출하 증가로 강제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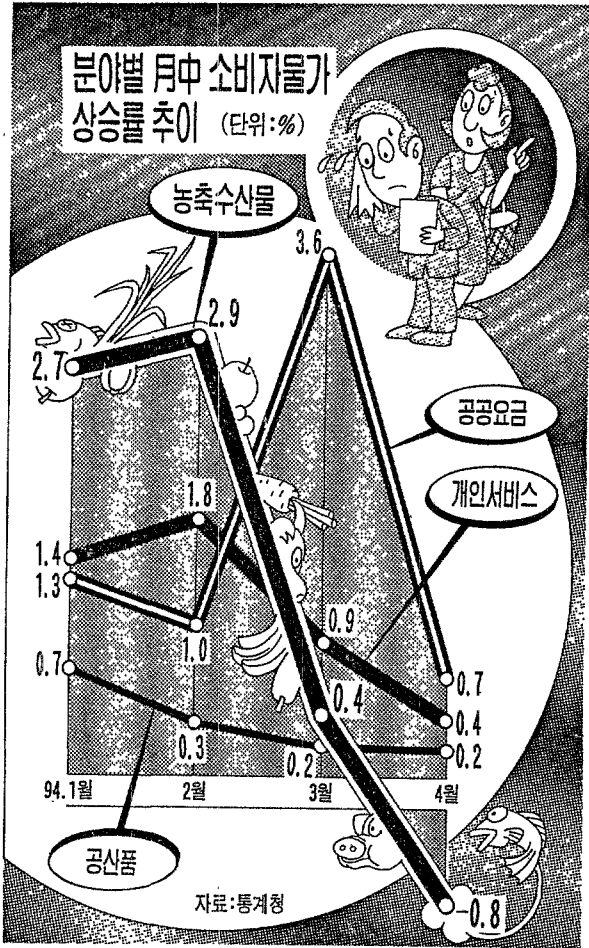
28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이 두 물가를 더한 내달부터 시장에 본격 출하될 열두·블랙주·오이·참외 등 농작물의 작황이 좋은 편이고, 개인서비스는 소폭 오름세(4월 중 1% 상승)로 돌아섰다. <그림 참조>

공산품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지도를 펼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4월 물가가 소폭 상승에 그친 것에 대해 통계청은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던 파·양과 등 농작물의 출하가 새로 출하되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4월 중 파장은 19% 하락, 전체 농·축·수산 물가 상승률은 0.8% 떨어졌다.

그러나 3월 26일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상승에 따라 이달 들어 공공서비스 요금은 0.7%, 공산품은 0.2% 오른 반면 개인서비스는 0.9%에서 0.4%로 둔화했다. <沈相福기자>

그러나 3월 중 0.1% 떨어진 생산자물가는 조기·각진 등 일부 수산물의 공급선과 딸기 등 햇작물의 출하 증가로 강제로 인해

그러나 3월 26일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상승에 따라 이달 들어 공공서비스 요금은 0.7%, 공산품은 0.2% 오른 반면 개인서비스는 0.9%에서 0.4%로 둔화했다.



<그림: 朴春奐기자>

物價 상승 금속 둔화 6%線 지킬수있다

물가올레가 현저히 둔화
되는데 物價 상승의 수급관계에
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난달과 견줘 19.0
% 내렸고 식재료와 고추는
각각 27.9%와 1.8% 하
라졌다.

여기에다 공산품과 전체
개인서비스업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뛰었다.
지난달 26일 인자면 시의
고속버스요금의 인상에 반영
됐지만 이달 물가는 월별오
를물론 전년 동기 3~4년간
가장 낮은 0.2% 올랐는데
그쳤다.
이달 물가는 지난 연말대
비 3.5%상승, 지난해 말
비 3.5%상승, 지난해 말

이달중 動向·향후 전망

시점의 3.3%와 견줘 7미
수한 수출을 기록했다.

의 물가수준으로까지 회복된
셈이다.

生産者물가도 지난해 4월수준 점근 當局 근심털고 소비자·福祉등에 역점

특히 이달 5일 물가가 3
.8%였다. 15일차와 25일
차의 각각 3.4%와 3.1
%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
다.

국가경쟁력을 가늘하는 것
대로 쓰이는 생산자물가도
지난 1월 1.1%에서 2월
0.2%까지 올랐고 3월
0.1% 하락했다. 이달 물
가 다시 0.1% 올랐지만
말대비 1.3% 상승했다.
지난해 4월까지의 생산자
물가와 결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 소 큰 폭으로 뛰
었다.
내달 출하될 농산물로는
쌀기와 불백추 열무 오이 토
마트 참외 등이 있다.
정세기회주의 金正國 국민
생활의진보에 대해 『중수
추진』의 특산 신기술하
고 『제품』이래 올랐지만
오디까지나 일사천이어서 곧

따라잡았다.
그렇다면 가파르도 잠은
물가 안정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를 위해선 이달 물가에
서 불합하게 움직였던 품목
과 내달 예상되는 변수를 미
리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달엔 농수축산물 가운데
꽃고추와 호박등 신규출하된
품목 일부와 돼지고기 마른

잠복요인 아직 많아 指數정책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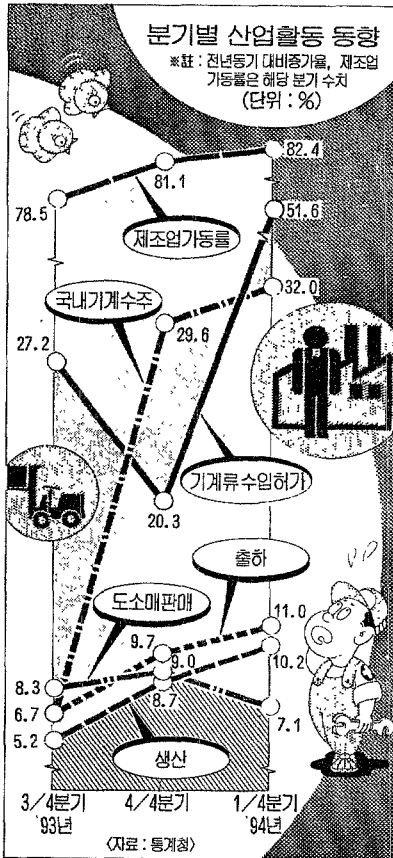
진정될 것이라며 『만약 하
나 물가를 자극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수급안정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당국은 이달 물가
불안에 대한 근근이를 의미할
어 버리고 고용안정인 소비자
정책과 유동, 복지시책 등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올 물가연제선인 6%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섰
기 때문이다.

급한 불은 졌으나 물가를
지수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했던 전물적, 법제가 물
선 풍기는 직접규제의 행정
지도는 상처를 남겼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했던 개인서비스요금을 다시
통제, 효과를 봤지만 그리개
운한 기분은 아닌데 경제
부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다시 일률적인
간접규제로 물가서건 곳곳
에 잠복요인이 많아 물가지
수에 엄청난 물가정책은 앞
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
다.
△文雄雄기자△

지난 1·4분기(1~3월)에 우리경제는 8%를 넘는 실질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4분기중 국내경제는 생산 및 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했고 소비도 늘어 92년부터 계속된 불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증가율은 지난 91년 4·4분기(10~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부자상황을 보여주

는 국내 기계수주나 기계류 수입허가 증가율도 90년대 들어 최고수준이었다. 소비자표인도 소매판매증가율은 이 기간중 7.2%로 작년보다 약간 낮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도 아직 소비성향은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1·4분기중 우리경제는 지난 91년 2·4분기(4~6월) 9.8% 성장 이후 가장 높을 것이 확실하다고 관계당국은 보고 있다.



1분기

통계청 발표 「산업동향」 내용

경기 회복세 뚜렷

不況 완전탈출... 실질성장률 8% 전망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8% 정도로 내년도에는 양호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8.4%의 성장률을 기록한 지난해 91년 수준이기에 1·4분기중 산업생산 증가율은 10.2%로 증가했다.

통계청 실무자들은 3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를 식상한 「경제까지」 나타낸 지표만으로 볼 때

통계청 실무자들은 3월 산업활동 동향 발표를 식상한 「경제까지」 나타낸 지표만으로 볼 때

경제기획원 朴鍾廉 경제기획장도 「1·4분기중 성장률이 8%를 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망이 나오는 것은 각종 통계지표가 증가율은 10.2%로 91년 2·4분기나 3·4분기보다 높고 91년 4·4분기의 12.3% 이후 최고치다. 투자지표는 더욱 고무적이다. 1·4분기 국내기계

이같은 수치는 경제성장률이 9.3%를 기록한 지난해 90년과 맞먹는 수준이다. 소비는 아직 금용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도소매판매가 작년 1·4

1·4분기중 나타난 이같은 호조는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훨씬 높아질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경제생산이 1.2%를 넘어 지난 92년 3·4분기 이후 처음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아직 구조조정, 인건비 상승, 임금 상승 등 경기호전 시기에 다시 기술투입이나 경영합리화를 개시한

생산증가율 91년말 이후 최고... 투자증가 30%

“물가도 안정... 과열 진단 아직 일러”

다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1·4분기중 각종 경기지표가 이처럼 예상치를 웃돌면서 과열 논의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획원 관계자는 경기가 완전히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열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다만 「정책기조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4월 들어 물가가 안정 추세고 과소미 기미도 나타나지 않아 경기가 과열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4분기 성장률이 높아진 것은 오히려 작년 1·4분기 성장률이 3.4%에 불과했던 반증으로 파악해야 한다.

30%를 넘게 나타난 투자증가 지표에 대해 통계청 趙秉申 통계조사국장은 「감기상자비를 고려해 20%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볼 때 그동안 투자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라고 분석했다.

(李尙永)

景氣 회복 빨라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비 10.2% 늘었다
지난 9년 4.4분기 이후 처음
이토록 두 자리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그 동안 전체의 물가 상승
비율도 1997년 4.4분기 이후
4.4분기 이후 첫 상승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취업자도 3개
월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분명히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1.4분기 산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의
8.7%에서 10.2%로 높아졌
다.

이처럼 증가율은 제조업 전체
이 8%를 기록했던 97년 1.4
분기의 9.9%보다 높은 것이
어서 1.4분기 산업 생산 증가
율도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
을 8%대를 앞지른 것으로 판단되
다.

輕工業 호조

경제활동人口 67만 4천명·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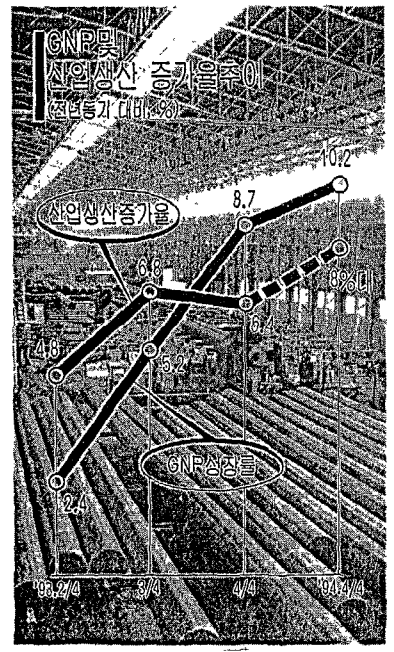
제조업稼動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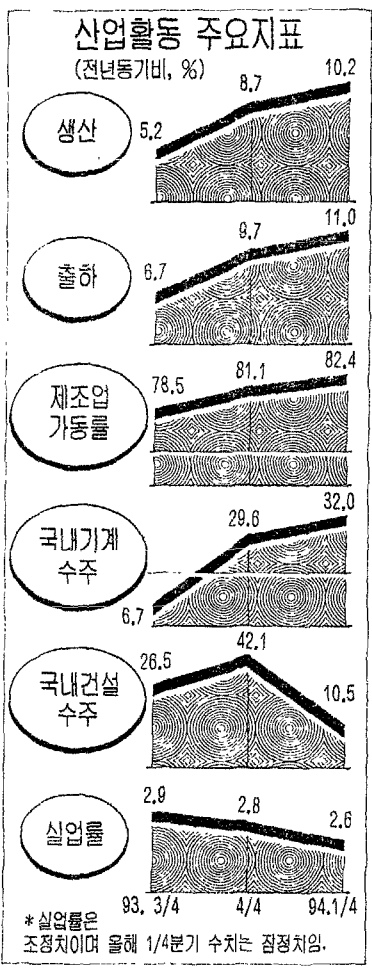
과나 가까이 증가했다.
제조업의 8월 10.2% 증가율은
1.4분기 산업 생산 증가율의 1.4
배에 이르는 증가세가 반영된
것이므로 전망이나 밝히는 것에는
조심해야 한다.

제조업 취업자가 67만 4천명에
달하는 가운데 제조업稼動率은
8.7%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다. 이는 1.4분기 9.2%
증가율에 비해 0.5%포인트 낮아
진 것으로 보인다.

1分期 생산 前年比 10.2% 증가

제조업 생산액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1.4분기 중 산업 생산액이





아직까지 전 중심도 떨어지지 않았지만, 특히 해외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등 수출이 13.7%나 감소했다. 반면에 내수 소비는 5.2% 증가했다.

兩極化 점차 해소

械수주 35.8% 늘어

3월 83%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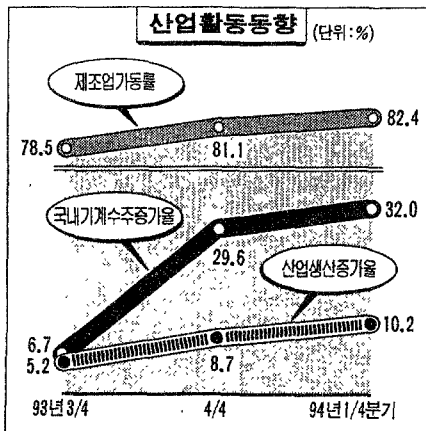
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계수주와 건설수주 등 1차 산업의 실적은 10.5%와 6.6%를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반면에 2차 산업의 실적은 1.4%를 기록하며,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이 13.7%나 감소했다.

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계수주와 건설수주 등 1차 산업의 실적은 10.5%와 6.6%를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반면에 2차 산업의 실적은 1.4%를 기록하며,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이 13.7%나 감소했다.

指標 상승세 뚜렷... 설비투자자는 부진

7%와 51.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기계수주와 건설수주 등 1차 산업의 실적은 10.5%와 6.6%를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반면에 2차 산업의 실적은 1.4%를 기록하며,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이 13.7%나 감소했다.

특정기업이나 산업군에 대한 투자 소망이
각 부분의 실적을 중심으로 나타내 경기 상승추세의 지속현상이
뚜렷하다고 28%만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은 기계설비 자동차 사무기기
등 9개 산업군을 제외한 1년전보다 10.5% 증가했



3월 산업활동 동향

다. 특히 지난해까지 침체를 면치 못했던 철강업도 10.5% 증가와
의존업종의 회복으로 1년전보다 3.0% 증가세로 반전했
다. 3월 수출과 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
.8%, 3.8%씩 늘어났다. 이에 따라 3월 중 제조업의 평
균가동률이 83.4%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공업 호조 / 경공업 회복

통계청은 그러나 제조업
의 생산이 1년전보다
2.2%밖에 증가하지 않
은 점을 감안할 때 기동률
수준은 높지만 아직 경기
과열현상을 띠고 있다고 보
았다.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각 업체를
1%, 내수용 소비재출하
가 8.8%씩 각각 증가해
건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는 국내기계수주가
전년보다 40.9% 늘어났
다. 柳葉川 통계조사국장은
합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3월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
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3년만에 증가세로 反轉

景氣상승추세 뚜렷

설비확충은 제자리... 아직 과열 아니다

기능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하반기부
터 국내기계수주와 기계
투수입이 일제히 증가했
으나 기계수주에서 설비
가동까지 보통 7~8개월
이 경기회복에 따라 설비
확충을 기다리지 않고 우
선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
문이란 분석이다.
소비품은 3월 중 도소
매 판매액이 1년전보다 6
고 기계류 수입허가액도
76.7% 증가해 지난해 3
·4분기 이후 큰 폭의 증가
세를 지속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설비
투자규모가 감소 내지 보
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

이 1년전보다 1.0% 포
인트 높아진 61.1%를 기
록했으며 실업률도 2.7
(계절조정치)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고용회복이 나
아지고 있다.
특히 91년 1·4분기에
후 출근 감소된 제조업부
문의 취업자수가 3년만인
을 1·4분기부터 증가세
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였
다.
종합경기지수는 2·3
개월뒤 경기시정을 예고하
는 선행지수가 전년보다
1.0%·동행지수는 0
·4%씩 증가한 반면 동행
지수수준변동지수는 0.3%
줄어들어 93.7을 기록했다.
통계청이「설비투자동향」
1·2월의 통계지표가 크
게 엇갈렸으나 1·4분기
전체를 볼 때 현재 국내경
기는 상승추세를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柳葉川 기자】

生産 증가율 10.2% 1분기

정공임도 1.2% 증가세로 反轉

차 생산 증가가 22.5%에 달한 것을 비롯해 기계 및 장비(24.2%), 산업회계용 기계(31.0%의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중 중화학공업 생산이 13.7% 늘어났다.

또 지난 92년 3분기에 2.5%의 생산감소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왔던 경공업 생산이 1분기에 처음으로 1.2%의 증가로 반전했다. 제조업가동률도 1분기 중 82.4%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소비재 중 내수용 소비재 중 약 6.6% 증가해 작년 같은 기간에 다소 못미쳤다. 양호도의 투자동향을 가늠하는 민간부문의 국내 기계수주와 기계투자액의 증가율도 각각 35.8%와 51.6%가 증가했다.

이처럼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3월 초 실업률은 2.7%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취업률이거나 직장을 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61.2%로 2월에 비해 0.4%가 상승했다.

〈宋尙勳기자〉

생산·투자·소비율이나 내는 각종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는 등 작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생산이 저조해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우려됐던 경공업 부문에는 10.2%를 기록, 9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반전세를 보였다.

이같은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 8%를 기록했던 지난 92년 1분기의 9.9%보다 높은 것이어서 올 1분기의 성장전망이 밝게 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3월 중 자동차

부채 상승 무드 탔다

自動車·기계 등 활황 힘입어

중소기업 자금 지원내용 자료:재무부

구분	외국표시 국산기계 입자금	신기술 창업지원자금
지원대상	신규개발 2년 이내 국산기계를 입하는 중소기업	新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중소기업
지원규모	3천억원	1천1백42억원
지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융자한도	·Liber+2% ·8년 이내 ·소요자금의 1백%	·6% ·3~10년 ·1백% ·기업당 5억원
취급기관	수업은행(예금은행, 산업은행, 장기신업은행)	산업은행, 신기술금융회사(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개발자, 한국기술진흥금융)
재원조달	産業은행이 外貨차입금으로 外債로 轉貸	장기산업채권 발행자금 활용
시행시기	5월 2일부터 신청	6월부터 신청접수

업종별로는 3월 중 자동차

차 생산 증가가 22.5%에 달한 것을 비롯해 기계 및 장비(24.2%), 산업회계용 기계(31.0%의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중 중화학공업 생산이 13.7% 늘어났다.

또 지난 92년 3분기에 2.5%의 생산감소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왔던 경공업 생산이 1분기에 처음으로 1.2%의 증가로 반전했다. 제조업가동률도 1분기 중 82.4%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소비재 중 내수용 소비재 중 약 6.6% 증가해 작년 같은 기간에 다소 못미쳤다. 양호도의 투자동향을 가늠하는 민간부문의 국내 기계수주와 기계투자액의 증가율도 각각 35.8%와 51.6%가 증가했다.

이처럼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3월 초 실업률은 2.7%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취업률이거나 직장을 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61.2%로 2월에 비해 0.4%가 상승했다.

〈宋尙勳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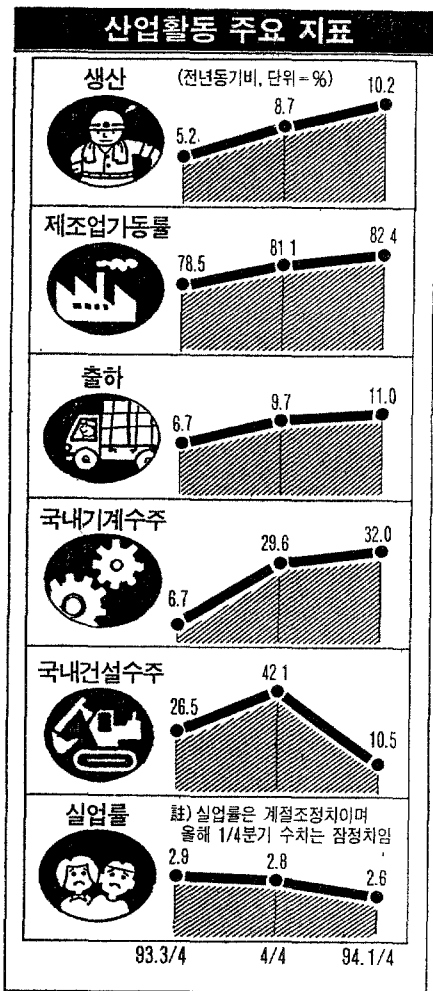
고성장시대

생산·出荷 호조 : 景氣양극화둔화 物價도 한풀썩여 「9%목표」 거둬

됐다. 또 지난해 1·4분기에 대량으로 허가됨에 따라 올해 1·4분기에는 증가율이 둔화된 건설부문을 제외하면 투자지표도 양호해 국내경제 수주와 기계류수입액의 경우 32%와 5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증가한 61·1%를 나타냈고 산업활동지표조정지수는 2·6%포인트 상승했다. 또 지난해 1·4분기에는 대량으로 허가됨에 따라 올해 1·4분기에는 증가율이 둔화된 건설부문을 제외하면 투자지표도 양호해 국내경제 수주와 기계류수입액의 경우 32%와 51·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동 1·2%에 비해 여전히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성의 생산이 지난해 92년 3·4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수출과 내수의 경기상대를 간점적으로 엮어볼 수 있는 출하동향을 보면 1·4분기 중내수(출하) 12·2%가 수출(출하) 7·4%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출과 내수의 경기상대를 간점적으로 엮어볼 수 있는 출하동향을 보면 1·4분기 중내수(출하) 12·2%가 수출(출하) 7·4%보다 높게 나타났다.



社說

景氣上昇期와 물가안정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기를 회복한 데로 돌아왔다. 지난 3월의 인플레이션 1.2%의 절기점을 넘어서 4분기에는 1.4%로 상승했다. 4분기에는 1.4%로 상승했다. 4분기에는 1.4%로 상승했다. 4분기에는 1.4%로 상승했다.

이러한 1.4분기 상승률과 4분기 소비고용률 등에서 좋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작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던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 달까지 무제한적인 경기회복의 兩極化 현상은 많이 완화되었다. 전체인구의 생산이 3·4분기 이후 0.9% 상승했고 증가가 최초로 돌아섰고 수출과 내수도 꾸준한 증가하고 있어 때문이다.

서는 3분기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2·4분기에는 1.4분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던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 달까지 무제한적인 경기회복의 兩極化 현상은 많이 완화되었다. 전체인구의 생산이 3·4분기 이후 0.9% 상승했고 증가가 최초로 돌아섰고 수출과 내수도 꾸준한 증가하고 있어 때문이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물가안정 판사가 매우 중요하다.

社說

改善된 指標에 가려진 問題들

국내 景氣가 상승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고 物價 소비 고용등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 92년 이래 최고수준인 8%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중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5.5%, 전년동월에 비해 10.5%, 1·4분기 산업생산은 전년동기에 비해 10.2%의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投資동향을 나타내는 국내기계受注와 기계류輸入허가는 3월중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40.9%와 76.7%나 늘어났다.

경기회복추세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과 특히 91년9월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던 제조업취업자가 올 1월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은 각종 경기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올들어 소비자물가는 3월까지 3.3%나 뛰어 올 억제목표 6%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내다보였으나 4월들어 0.2% 상승에 그쳐 물가상승세가 꺾인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얼어붙은 경기가 풀려 상승세를 타고 있고 물가마저 안정된다면 이처럼 바람직한게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봄이 와서 꽃이 핀다고 좋아하고 있을수만은 없는 일이다. 봄이 있으면 겨울도 있듯 景氣는 순환하며 변동하기 때문에 景氣동향 그 자체를 보고 지나치게 一喜一悲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경기상승과 물가안정을 반기면서도 몇가지 문제를 지적해두고자 한다.

첫째 생산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화학공업분야는 봄을 맞고 있으나 경공업분야는 여전히 찬기운이 가시지 않아 업종별 양극화현상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경기가 풀린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똑같이 상승세를 타야 한다는건 아니지만 경기흐름을 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경기상승세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노력이나 산업구조조정 노력의 결과인가, 아니면 경기순환과정의 底點으로부터 벗어나는 현상인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조정노력의 결과가 아닌,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강화의 결과가 아닌 국제경기회복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면 현재의 경기상승세는 단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4월들어 물가상승세가 주춤했지만 과연 이것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를 가질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올들어 물가가 뛰자 당국이 직접적으로 물가를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물가상승요인은 그대로 있는채 인위적으로 물가가 눌러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살펴보면서 우리경제의 成長능력을 키우고 물가상승요인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를 단순히 통계숫자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좁은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기준시점의 경제활동이 저조하면 비교시점의 보통수준의 경제활동은 돌보일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증가율 男性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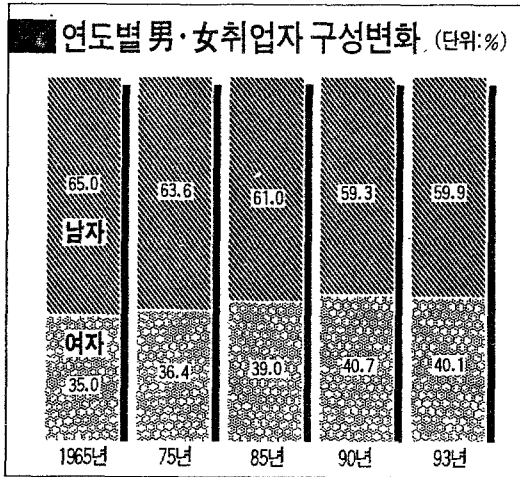
우

통계청, 「60년대 이후 男女경제인구 변화」 분석

먼

파

위



우리사회에서도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율이 남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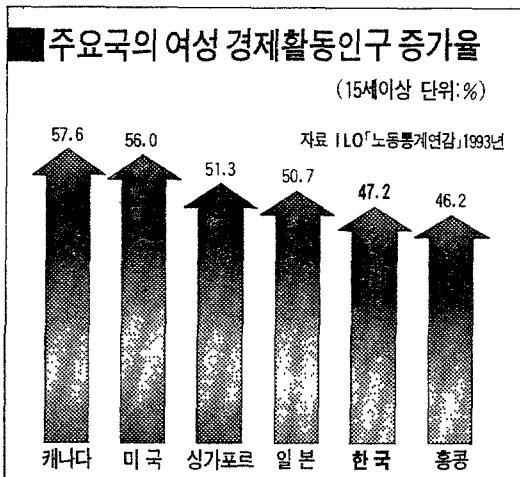
이러면 여전히 미흡하기는 하지만 교사의료종사자·문화예술계 등 전문분야에서 75만명의 여성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60년대 이후 여성취업구조의 변화」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65~93년 중 여성취업자 비중은 35.0%에서 40.1%로 5.1%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비해 남자는 같은 기간 중 65.0%에서 59.9%로 떨어져 상대적으로 많이 일자리를 찾았다.

남녀취업자수를 보면 지난 28년 동안 남자는 5백27만3천명에서 1천1백49만3천명으로 1백18%가 늘어난 데 비해 여자는 같은 기간 중 2백83만9천명에서 7백71만명으로 1백72%나 증가, 취업자 증가율에

근로비중 5%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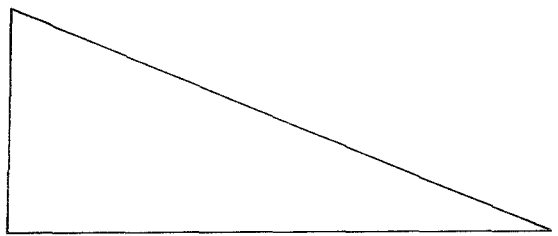
7백71萬명 활약 百72% 증가
20~24세 40~44세 참여분포 최고



서도 여자가 남자를 앞질렀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두드러진 것은 청소년기부터 대학 등 고등교육의 보급 및 주방시설의 현대화로 가사노동이 줄어든 데다 놀이방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증가로 육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연령인 20~24세에서 6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육아 부담에서 해방될 나이인 40~44세에서 62.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사와 육아 부담을 덜어주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유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강한 이들 연령층에 대해 사회적 원정화를 집중시켜 「산안락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하면 지난 65~93년 중 기존 여성취업자가 59.0%에서 62.3%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기간 중 유치원수와 원아수가 각각 4백23개, 1만9천5백60명에서 8천5백15개, 46만9천3백80명으로 20배 이상 늘어난 데 힘입은 것이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나라가 47.2%로 일본은 50.7%, 미국 56.0%, 캐나다 57.6%, 영국 51.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여성취업인구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15~19세는 지난 65년 16.0%에서 93년에는 3.6%로 크게 낮아져 학생기의 취업이 줄어든 반면 20~24세는 같은 기간 중 13.8%에서 16.6%로, 30~39세는 23.5%에서 26.1%로, 60세 이상은 3.4%에서 8.4%로 각각 높아졌다.

△宋河植기자▽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80년 1천 800만 명에서 93년 2천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64만 5천 명이 경제활동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의 56.7%인 1천 186만 명이 경제활동 인구의 57.6%인 1천 210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20~24세는 65%, 40~44세는 63%, 60세 이상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경제활동 인구의 15%인 150만 명이 65%인 95만 명이 20~24세, 63%인 40만 명이 40~44세, 27%인 17만 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20~24세는 65%, 40~44세는 63%, 60세 이상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경제활동 인구의 15%인 150만 명이 65%인 95만 명이 20~24세, 63%인 40만 명이 40~44세, 27%인 17만 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2명중 1명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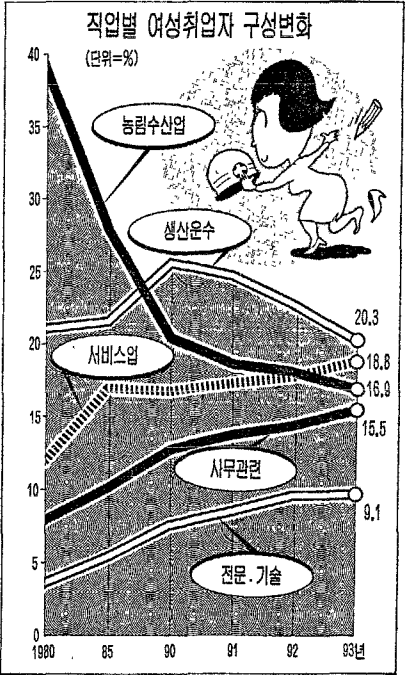
20~24세 65% 40~44세 63% 60세이상 27%

단순노동직 줄고 전문직 증가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20~24세는 65%, 40~44세는 63%, 60세 이상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경제활동 인구의 15%인 150만 명이 65%인 95만 명이 20~24세, 63%인 40만 명이 40~44세, 27%인 17만 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20~24세는 65%, 40~44세는 63%, 60세 이상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경제활동 인구의 15%인 150만 명이 65%인 95만 명이 20~24세, 63%인 40만 명이 40~44세, 27%인 17만 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20~24세는 65%, 40~44세는 63%, 60세 이상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경제활동 인구의 15%인 150만 명이 65%인 95만 명이 20~24세, 63%인 40만 명이 40~44세, 27%인 17만 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20~24세는 65%, 40~44세는 63%, 60세 이상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경제활동 인구의 15%인 150만 명이 65%인 95만 명이 20~24세, 63%인 40만 명이 40~44세, 27%인 17만 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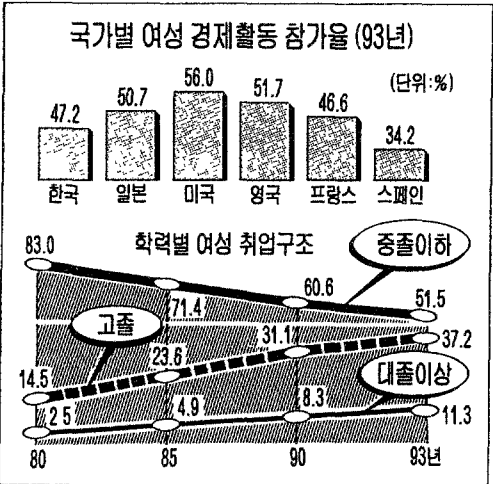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20~24세는 65%, 40~44세는 63%, 60세 이상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경제활동 인구의 15%인 150만 명이 65%인 95만 명이 20~24세, 63%인 40만 명이 40~44세, 27%인 17만 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20~24세는 65%, 40~44세는 63%, 60세 이상은 27%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경제활동 인구의 15%인 150만 명이 65%인 95만 명이 20~24세, 63%인 40만 명이 40~44세, 27%인 17만 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 30년새 3배 증가

통계청, 「취업구조 변화」 발표

다. 한세대 전인 60년대 초반에 비해 「일하는 여성」은 세 배 가까이 늘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크게 높아졌다.



경제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도 활발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어서 양적인 확대만큼 질적인 뒷받침은 이뤄지지 않았다.

6백가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의 증가율은 2.1배였다. 경제활동 참가율도 남성은 3.1%가 줄었는데 반면 여성은 37.2%에서 47%로 10%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24세가 64.7%로

은 3.6%로 남성(2.8%)보다 높았다. 따라서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35%에서 40.1%로 높아졌다. 남자들이 그만큼 일자리 내 준 셈이다. 임시직을 택한 여성 상당수도

가전제품의 보급과 주방시설의 현대화,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확대 등에 힘입어 여성취업자 중 기혼 여성의 비율이 80년 59%에서 93년 62.3%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성들이 받는 임금은 남자를 1백으로 했을 때 93년 현재 절반을 겨우 넘는 56.7%에 불과해 아직까지 여성의 취업이 저임 직종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실업률은 80년 3.6%에서 93년 2.3%로 감소했다. 그러나 대졸 이상인 여성 실업자는 13년 동안 3배 이상 늘었고 지난 해 실업률도 타자 대졸 실업률 3.8%를 크게 웃도는 4.9%를 기록했다.

총 7백71만명... 경제활동 참가율 47%

전문직 비중 늘었으나 임금 남성의 절반

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60년대 이후 여성의 취업구조 변화」의 따르면 15세 이상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93년 7백90만명에 이르렀다.

가장 높고 40~44세 62.6%, 45~49세 60.5%, 35~39세 59.3% 순이다. 여성 취업자 수는 2백83만명에서 7백71만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중 여성의 편입 취업자 증가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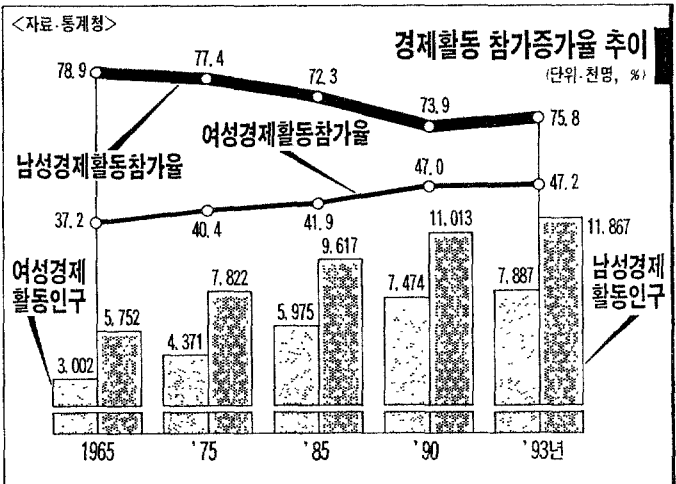
38만명에서 3백64만명으로 9.4배로 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28년 동안 한 해 고용자가 8.2배, 전문직 취업자가 21.5배, 대졸자가 21.6배로

단순 직종보다는 전문·기술 및 사무직 종사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80년 39%에서 93년 16.9%로 절반 이하로 준 반면 전문·기술·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는 11.5%에서

24.6%로 증가했다. 서비스직도 12%에서 18.8%로 늘었다. 전문직 취업자 비율은 캐나다(63.5%), 미국(58.8%), 일본(41%)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宋素賢기자〉

여성경제활동 참여늘고 전문화



<남녀간 월평균 임금추이> (단위: 원, %)

연도	75	80	85	90	93
전하력평균	46,654	150,747	268,766	501,992	975,125
남자	60,319	192,589	328,177	588,320	1,116,682
여자	25,465	85,674	158,486	323,691	632,665
비율(B/A%)	(42.2)	(44.5)	(48.3)	(55.0)	(56.7)
대출기준	123,573	348,513	564,800	833,004	1,034,898
남자	77,187	210,981	411,642	593,776	754,029
여자	46,386	137,532	153,158	239,228	280,869
비율(B/A%)	(62.5)	(60.5)	(72.9)	(71.3)	(72.9)

주) *표는 92년 기준

고학력여성인력의 불어나면서 여성취업률이 단숨에 노동시장에서 전문기술서비스직으로 바뀌고 있다. 또 남노자의 임금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의 이모저모」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문직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경제활동인구가 93년 현재 7백88만7천명으로 지난 65년(3백만2천명) 이후 28년만에 2.6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남자의 경제활동인

구 증가율의 2배를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또 여성의 취업구조는 농림수산업의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80년에 39.0%에서 93년 23.0%로 크게 감소하고 생산운수직 종사자 비중도 21.0%

작년 788만명... 28년새 2.6배 늘어

평균임금 男子의 57%로 높아져

통계청 「사회참여 확대」 분석

중은 16.5%(86만7천명)에서 18.7%(1백44만명) ▲서비스업종사자는 12.0%(63만명)에서 18.8%(1백45만명)로 각각 늘어났다. 75년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2만5천4백65원으로 남자(6만3백19원)의 42.2%에 불과했으나 93년에는 63만2천6백65

원(남자) 1백3만4천8백98원의 56.9%로 높아졌다. 대출자를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75년 7천1백87원으로 남자(12만3천5백73원)의 62.5%수준에서 92년 7만5천4천29원(남자) 1백3만4천898원의 72.9%에 육박했다.

90년 91.7% 5백27만명)에서 93년 96.8%(1천1백49만명)로 늘었다. 비례 여자는 94.6%(2백84만명)에서 97.7%(7백71만명)로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졌다. 더 높은 취업률과 여성인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통계청의 「중국의 사회참여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의 여성인구는 60세 이상 인구의 1.5배가 되고 있다.

기연 취업하지 않고 아예 가사 등 비경제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여성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년에 35.0%에서 93년엔 40.1%로 증가한 반면 남자는 65.0%에서 59.9%로 낮아졌다.

여성취업자 증가를 반영별로 보면 20~24세 여성취업자 비중이 지난 65년 13.8%에서 93년 16.6% 30대는 23.5%에서 26.1% 60세 이상은 3.4%에서 8.4%로 각각 높아진 반면 25~29세는 11.6%에서 11.0%, 40~49세는 20.6%에서 19.4%로 낮아졌다. 여성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여자가 93년 현재 35만4천2백명(10만3천5백명)에 비해 8.2백, 중졸대졸여자가 6만3백50명(10만2천5백명)에 비해 2.5배, 고졸대졸여자가 2천5백명(1만3천)에 비해 2.5배, 7만5천명(10만)에 비해 2.6배가 각각 늘어났다.

요즘의 경제활동참가율(47.2%)은 외국과 비교하면 50.7% 미루(56.0%)에 불과하다. 57.6%의 취업률(51.8%)은 주요 선진국의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중국의 사회참여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의 여성인구는 60세 이상 인구의 1.5배가 되고 있다.



「그린 GNP(국민총생산)를 아십니까」. UR협정과 함께 세계의 무역질서가 재편되면서 기존의 고정 관념들을 타파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민계정 등의 국가 통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린 라운드(GR)처럼, 환경 개념이 적용되는 「그린 GNP」 시대가 멀지 않아 닥칠 전망이다.

그린GNP를 아십니까

6월 통계청의 따르면 유엔(UN)제약(한)의 지난 해 2월 제27차 통계위원회를 열고 68년에 1차 개정된 현재 각국에서 쓰는 국민계정 체계(GNA)를 25년만에 다시 개정했다. 그 핵심은 환경 제정의 도입이다.

유엔의 지난 연말 1차 유엔(UN)제약(한)의 지난 해 2월 제27차 통계위원회를 열고 68년에 1차 개정된 현재 각국에서 쓰는 국민계정 체계(GNA)를 25년만에 다시 개정했다. 그 핵심은 환경 제정의 도입이다.

한국의 경우 GDP(국내총생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그린 GDP(국내총생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한국의 경우 GDP(국내총생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그린 GDP(국내총생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이런 것 모두 규정을 만들어 각국의 배포했다. 또 유엔 통계청 국민계정 과장과 환경에너지 통계과장 등 관계자들이 각국을 돌며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민계정의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1월 말 다녀왔다.

이런 것 모두 규정을 만들어 각국의 배포했다. 또 유엔 통계청 국민계정 과장과 환경에너지 통계과장 등 관계자들이 각국을 돌며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민계정의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1월 말 다녀왔다.

이런 것 모두 규정을 만들어 각국의 배포했다. 또 유엔 통계청 국민계정 과장과 환경에너지 통계과장 등 관계자들이 각국을 돌며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민계정의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1월 말 다녀왔다.

이런 것 모두 규정을 만들어 각국의 배포했다. 또 유엔 통계청 국민계정 과장과 환경에너지 통계과장 등 관계자들이 각국을 돌며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민계정의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1월 말 다녀왔다.

자연훼손·환경비용을 GNP에 포함

UN 권고안 각국 배포... 통계청 준비 착수

이런 것 모두 규정을 만들어 각국의 배포했다. 또 유엔 통계청 국민계정 과장과 환경에너지 통계과장 등 관계자들이 각국을 돌며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민계정의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1월 말 다녀왔다.

이런 것 모두 규정을 만들어 각국의 배포했다. 또 유엔 통계청 국민계정 과장과 환경에너지 통계과장 등 관계자들이 각국을 돌며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민계정의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1월 말 다녀왔다.

이런 것 모두 규정을 만들어 각국의 배포했다. 또 유엔 통계청 국민계정 과장과 환경에너지 통계과장 등 관계자들이 각국을 돌며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민계정의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1월 말 다녀왔다.

〈宋泰燮기자〉



통계청 고용동향 분석

3월 현재 244만여명
작년比 87,000 늘어

경공업에도 근로자가 돌아온다

“景氣양극화 해소 신호”

그동안 근로자들로부터 외면당해온 경공업분야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후반 이후 중공업분야를 중심으로 일부이었던 고용양극화가 경공업분야에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중공업분야의 취업자수는 2백4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5천명이 증가해 최근 수년내 처음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2월 44만1천명을 기록, 작년 3월보다 8만7천명이 늘었다. 경공업분야의 취업자수는 지난 80년대 후반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 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경공업분야의 고용양극화 해소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중공업분야의 지난해 8월 고용자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명이 상승한 데 이어 4월 7만명씩 고용자수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다소 중공업이 있지만 경기양극화 현상이 어느정도 해소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따라 제조업 전체의 취업자수는 92년 3월 4백87만4천명(頂点)으로 해 지난 3월 4백53만9천명(低점)으로 계속 줄다.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3월에는 4백66만명으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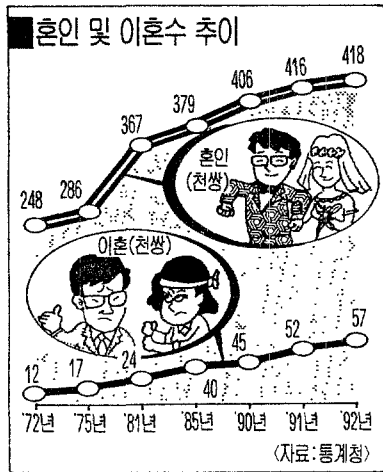
통계청 관계자는 “80년대 중반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경공업분야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고 전제, “최근 경공업분야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상당수의 경공업체들이 도산해 도산에 따른 고용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宋尙勳기자〉

離婚 확산 '내가 정은 어떤가'

지난 20년간 이혼이 4배 가까이 증가하면 서 이혼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자 사는 가구가 15년간 3.6배나 증가 1백만 가구를 넘어서

고 소년소녀가장도 지난해 7천3백22명으로



넵

92년 5萬 7千쌍 破鏡

8년전보다 50%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통계청이 세계 가정의 날(16일)을 맞아 발표한 '우리나라의 가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5만7천쌍이 이혼, 72년(1만2천쌍)보다 3.75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는 1.300건으로 높아졌다. 이같은 이혼율(4.73%)은 영국(2.5%)

비

"가정생활 그렇다" 64%

이혼율 증가로 가구수가 이혼한 가구는 75년 5만4천가구에서 90년 17만4천가구로 3.2배가 증가하면서 전체가구중 비중도 0.8%에서 1.5% 수준으로 높아졌다. 통계청은 이혼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사

통계청 '가정현황' 보고서

800(동서구에 비해 낮지만 일본(1.337)과 비슷하며 브라질(0.45)보다 훨씬 높다.

同居도 美·日보다 짧아

랑(13.4년) 브라질(16.9년)등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나 쉽게 '냄비사랑'이 만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75년 5.0명에서 90년 3.7명으로 줄어 들고, 3세대 이상이 같이 사는 가구는 70년 22.0%에서 90년 12.5%로 감소했다.

랑

또 우리나라 이혼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8.4년으로 미국(9.1년) 일본(10.8년)프

백년해로는 이젠 "고전"

91년의 가정생활 만족도에서는 36.0%만이 만족하고 나머지는 보통(52.8%) 불만(11.2%)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9.7%로 자녀관계(64.8%) 부모관계(42.2%) 배우자관계(58.3%)등 배후론 부분보다 만족도가 훨씬 떨어졌다. <金允浩기자>

사별 이혼 미혼등의 이유로 가구주의 배우자가 없는 가구가 80년 17.5%에서 90년 21.3%로 높아지고 여성 가구주의 비율도 14.7%에서 15.7%로 증가했다.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는 75년 85만가구에 90년 1백78만7천가구로 배이상 늘어났다.

결혼 → 파경기간 우리나라 부부 세계서 가장 짧다

통계청 가정현황 조사

핵가족화 이후 찾아오는 탈가족화, 가정해체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심해지고 있다. 이 현상이 빠른 속도로 西歐수준에 접근해가고 여성노동인 단독가구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제1회 「세계가정의 날」(매년 5월 15일)을 맞아 살펴본 우리나라 가정의 현주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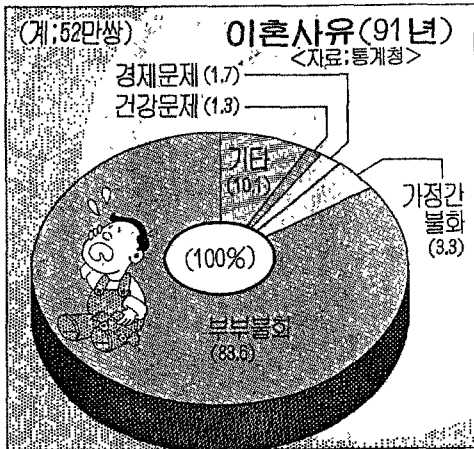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 점점 줄어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우리나라 가정현황을 살펴보면 부부간에 지켜져온 전통적 유린관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 등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현안도 드물지 않아 새로 결합하는 부부 중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자녀를 재혼하는 3.7%

다. 가장 활발한 부분은 초혼인 남자가 재혼인 여자와 결혼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72년 0.5%에서 4배 이상 증가, 여성의 정조관념에 대한 사회적식이 크게 변했음을 실감케 한다.

결혼에서 파경의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세계적으로 가장 짧다는 것은 쉽게 단아서 쉽게 헤어지는 「남비사랑」이 만연하고 있음을 의미케 한다. 이혼부부의 평균연령은 남자 37세, 여자 33세. 최근엔 결혼 10년이 지나서 이혼하는 부부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 가정해체의 주원인이 과거와 같은 고부간 불화보다는 부부관계 자체에 기인하고



이혼평균연령 男37-女33세
노인 단독가구가 전체 19%

연가구 비중의 감소에서도 나타나 비혼요망 단독가구 비중이 70년 전체가구의 6.5%에서 90년엔 10.7%로 늘었다. 이 중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1백2만2천가구가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지역(8.6%)보다 농촌지역(10.3%)의 단독가구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연령별 단독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단독가구가 전체의 18.9%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해체 현상에 따라 소년소녀 가장도 늘어 93년 전류의 소년소녀 가장은 7천3백22명(도 85년 4천9백1명보다 2천4백21명(49.4%) 늘었다. 여성가구수는 1백78만7천가구로 전체가구의 15.7%를 차지, 여성가구 중 한가구는 여성의 가구 주로 돼 있다. (金尙永)

「1인가정」 급격히 늘고 있다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 「전통」 사람들이 「근년」 들어 빠르게 가정의 양태와 구성원의 사고방식, 생활양식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전의 차대원은 도처에 이해가 안가는 부부의 많다고도 말한다.

우선 경제, 사회발전과 함께 생활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서 소가족화세가 중화. 핵가족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탈가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통계청이 93년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발표하면서 주목할만한 「우리나라의 가정양태」를 통해 과연의 사회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9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가구는 1천1백35만천가구로, 1가구수인 70~90년사이 20년동안 약 2배(5백50만)가구가 증가했으며, 85~

「核가족」 넘어 「脫가족」으로

통계청 「우리나라 家庭현황」 분석

90년에는 18·6%인 1백78만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구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약 3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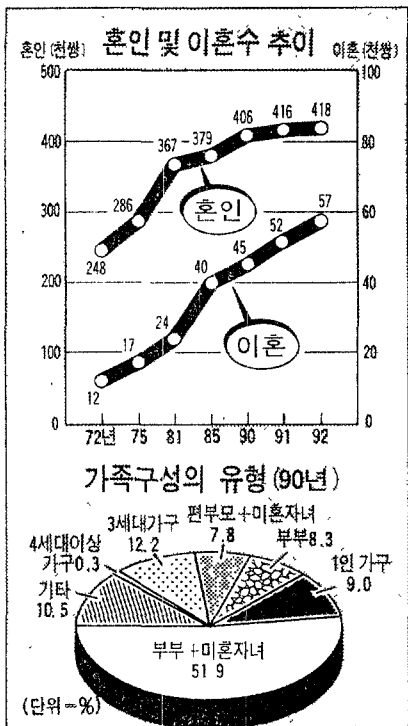
특히 한사람만의 가구는 배로 집계됐는데 이는 소가족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구분화가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85년 66만1천가구에서 90년 1백2만2천가구로 5년간 54·9%(36만1천가)가 증가해 전체가구 증가율 18·6%의 약 3배

90년 102만가구... 5년간 55% 늘어

「離婚가구」 64% 증가... 57%가 여자

가정생활 36% 만족... 11%가 불만 표시



정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해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엿보게 하며 이데올로기 영역이 주축수요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중에서도 노인 1인가구 증가로 시지역보다도 郡지역에서 1인가구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최근의 사회풍조의 한 단면을 짐작하게 한다. 혼자사는 사람이 47·4%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85년 66만1천가구에서 90년 1백2만2천가구로 5년간 54·9%(36만1천가)가 증가해 전체가구 증가율 18·6%의 약 3배를 보여준다. 특히 이혼가구는 90년의 경우 여자가 57·1%나 됐다. 특히 이혼중 40대 및 50대가 4분의1으로 많아 이들 자녀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밖에도 소년·소녀가 장이 85년 4천9백1명에서 93년에는 7천3백2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중 취직중인 자는 80%수준으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은 만이 아니라 교육비용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한 지 몇년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혼이 늘어나고 가족구성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함께 살아가던 가족이 이혼으로 흩어지고, 자식들을 출가시킨 후 노인들만이 혼자 살아가는 이른바 가정해체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14일 UN이 정한 제1회「세계 가정의 날」을 맞아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가정형태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구조가 선진화돼가면서 가정의 형태도 선진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가족구성원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 72년 평균 5명이었던 것이 92년에는 3.7명으로 1.3명이 감소했다. 또 혼자 사는 1인단신가구는 85년 66만 1천가구(전체가구의 6.9%)에서 90년에는 1백 2만 2천가구(전체가구의 9.0%)로 5년새 36만 1천가구가 늘어났다.

우리家庭 이렇게 변했다

92년 한해 5만 7천쌍 離婚

오늘「세계가정의 날」... 통계청 변화분석

이혼이나 死別로 혼자된 사람들이 많고 핵가족화돼 노인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특히 이혼에 의한 가정해체는 상층에 비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되고, 부분의 이혼이 36%의 탈해 「합계 만나 함께 헤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인구 1천명당 1.33건으로 일본(1.37건)과 비슷하고 미국(4.73건), 영국(2.88건) 등 선진국의 이혼율은 평균 2.4건으로 8.4%이므로 미국(9.1%) 일본(10.8%) 등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처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가정형태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자립증진이 그마를 키웠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론 여성이 가구주도 경제

72년 한해동안 1만 2천쌍이 이혼을 한데 비해 92년에는 5만 7천쌍이 이혼해 20년간 이혼이 4배(3배75%) 가까이 증가했다. 결국 작년에 7쌍의 부부가 새로 탄생하고 1쌍의 부부가 이혼한 셈인데 결혼한 지 채 5년이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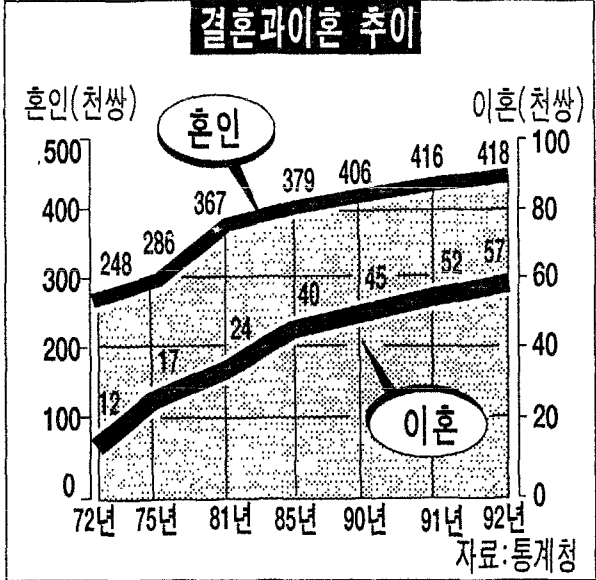
나라별 이혼율 비교 (단위: 천건, %)

연도	이혼건수	이혼율	이혼연령(세)		평균 동거기간(년)
			남자	여자	
한국	1992 57	1.30	37.0 ¹⁾	33.0 ¹⁾	8.4 ¹⁾
미국	1991 1,187	4.73	37.1 ²⁾	35.3 ²⁾	9.1 ²⁾
일본	1991 169	1.37	38.1	35.2	10.8
영국	1991 4	1.60	38.3 ²⁾	34.8 ²⁾	12.1 ²⁾
프랑스	1990 166	2.88	38.4 ²⁾	35.9 ²⁾	11.6 ²⁾
독일	1990 106	1.87	39.4 ²⁾	37.0 ²⁾	13.4 ²⁾
스위스	1991 28	1.88	40.0 ⁴⁾	37.2 ⁴⁾	11.1 ⁴⁾
네덜란드	1989 66	0.45	43.1 ³⁾	39.5 ³⁾	16.9 ³⁾
이탈리아	1990 43	2.49	39.5 ³⁾	36.6 ³⁾	12.1 ³⁾

주: 1) 1991년 자료임 2) 1988년 자료임 3) 1989년 자료임 4) 1990년 자료임
 ※자료: 통계청 일본은 1991년 인구총조사 통계연보, 다른나라는 1991년 유엔 인구통계연감

20년새
가족數 평균 3.7명...
4배늘어...

결혼과이혼 추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각구가 85~90년 기간중 2만8천6백가구(19.1%)가 증가해 같은 기간중의 전체가구 증가율(18.6%)을 상회하고 있다.

또 노부모가 자식 손자와 합계 사는 가족이 줄고 자식없이 부부만 사는 가족이 늘어나는 현상도 두드러진다.

72년 전체 가구의 21%를 차지

결혼과이혼 추이
「1인 家口」 100만 넘어

한편 3세대가구가 90년의 1.2%로 줄어든 반면 1인 가구가 6.5%에서 10.7%로 늘었다.

이상의 가정체 과정속에서도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사람이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많아졌다고 밝혔다.

노후와 대비해 평생기반에 저축을 하는 사람이 91년 현재 전체국민의 39% 불과해 83년과 같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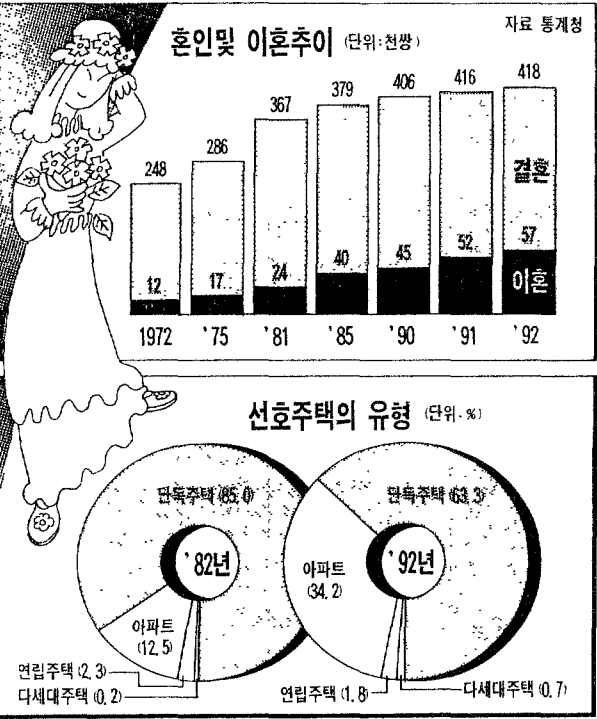
또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중 2명의 1명이었다는 사람이 88년 4.3%에서 91년에는 13.4%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를 띤다.

한편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이 교육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98년 현재 12만7천4백 원이며 취학전 아동의 월평균 교육비가 7만4천6백 원이며 국민 학생(6만1천9백명) 보다 많았다.

또 90년에는 가구당 교육비의 36.3%를 차지했던 과외비가 98년에는 49.6%로 늘고 과외비 고사의 부활에 따른 과외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宋尙勳기자 >

6집중 1집꼴 여성가장주



統計廳 「우리나라 가정현황」

이혼해 가족화합의 영향으로 여성과 노인 가구 수가 크게 늘고 있다.

13일 통계청이 세계가정 의 날(5월15일)을 맞아 발 표한 「우리나라 가정현황」 에 따르면 가구수가 연성 인 가구가 1백78만7천가 구로 조사돼 6가구중 1 가구가 여성가구로 구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 구 수 중 65세 이상인 노 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인 42만2천가구로 지 나 85년부터 61.7%나 증 가했다. 92년중 41만8천 쌍이 결혼을 했으나 같은 해에 5만7천쌍이 이혼해 이혼전수는 72년의 1만2 천쌍보다 4배(3백75%) 가 늘어난 것이다.

이혼한 부부의 평균연령 차는 91년 현재 8.4년 으로 미국(9.1년)이나 일본(10.8년)보다 짧고 이혼연령도 다른 나라보다 낮아 우리나라 평균 남 녀 사이의 열개만 두 열개 해 어지는 「남사장풍조」가

離婚증가·핵가족화등 영향 65세 이상 老人가구도 급증

만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화에 따른 가족해체 로 혼자사는 1인단식가구 가 85년에 66만1천가구 (전체가구의 6.9%)에서 90년에 1백2만2천가구 로 5년새에 36만1천가구 (54.6%)가 늘었다. 가 구당 평균 가구원수도 75 년 5명에서 90년에는 3.7명으로 줄었다.

특히 결혼후 5년이내 와결의 이혼비율이 36.3%로 가장 높아 이혼후 5년간의 부부생활의 고비 임을 통과했다는 우리나라 의 이혼이후 1천명 당 1.303건(일본(일본)1.1.37건)과 비슷하며 미국 (4.733건(영국)2.888건) 건(중)선진국의 이혼비율에 있는 수준이다. 또 이혼후 재혼인 경우가 전체 이혼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2 년에 2.4%에서 91년엔 3.7%로 높아졌다.

우리국민들의 자녀에 대 한 교육기대수준도 높아져 고아를 낳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 대학이상의 고등 교육에 대해 77년에 아들

56.3%, 딸 33.6%였으나 93년엔 아들 86.5%, 딸 79.4%로 높아졌다.

또 가족과의 이기, 학교입 입합보다 많이 늘고 국민화 생보다 취미생활의 비중이 높아졌다. 더 많은 여자들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학생의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93년 현재 12만7천4백원으로 추산되 전아들의 월평균 교육비는 7만4천9백원으로 국민 학생(6만5천9백원)보다 많았다. 90년엔 사교육비 의 36.3%를 차지, 학교 입입보다 비중이 작았던 과외비는 93년엔 49.6% 로 늘었다. 대학입시부활의 따라 과외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전을 마치고 87년에 6~9년 결린 사람이 20.8%로 가장 많았으나 92년엔 10~14년이 21.8%로 수위를 차지, 내전장 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 는 실정이다.

가구당 사육동물의 평균 수 는 전평기엔 70년 10.9 평에서 15.5평으로 늘었다.

〈安商旭기자〉

社說

家庭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離婚이 4배로 급증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통계청이「세계가정의 날을 맞아 발표한 가정현황보고서」는 92년에 이미 7쌍중 한쌍꼴로 이혼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이혼 남녀의 평균 결혼생활기간도 8.4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흥미자원으로 볼 수 없을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중대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할 만한 현상은 세대별일수록 결혼의 안정성이나 가정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응답자가 28%에 불과하다는 한 설문조사 결과도 결혼이나 가정의 위상을 떨어

말해주고 있다.

젊은 세대의 이혼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산업화가 가져온 또 하나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경제적 자립, 핵가족화에 따른 경제충족과 가족간 仲裁기능의 부재를 결혼체도 및 가정의 기쁨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깔려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화 경향도 가족의 해체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혼사유는 83.6%가 남편과 아내의 불륜 또는 성격차이를 부부不和로 나타난 것은 가정파탄의 주요인이기姑疑없게었던 과거와는 크게 달린 양상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핵가족화현상의 따라 가족구성원의 존재나 화해기능이 사라졌음을 반증하고 있다. 70년 71

5%였던 핵가족의 비율이 90년에 76%로 늘어난 것만 봐도 핵가족화 현상이 얼마나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서구에서 들었던 성계 개방주의와 핵가족의 확산은 건강 한 부부관계는 물론 개인인도덕성과 인간성을 미비시키고 끝내는 가정마저 파괴하는 독소가 되고 있다. 경제활동을 병행한 일부부의 절대문화가 성취 禁忌를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一夫一妻制의 윤리마저 흔들리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면서 가정의 행복보다는 일의 성취에서 보람을 느끼는「혼자 사는 여성」이 많아지는 것도 가족제도를 위협하고 있다.

가족은 세대를 이어 문화와 윤리를 전승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이다. 따라서 가족이 해체되면 사회의 질서와 도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혼률의 급증이 우리의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이 세게 알아야 한다.

「비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정상화시키고 회복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조직(이혼포함)에 의해 오늘날 가정은 밑바탕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그나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족」이란 영가노 신앙영구적 정수이다.

社說

우리사회가 맞은 「家庭해체」

「가정의 해체」라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서 이제 남의 나라일이 아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혼율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정관의 붕괴기에 접어들었음을 일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공개한 자료를 보면 92년에 갈라선 부부는 5만7천여쌍으로 한해 사이에는 10% 가까운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인구 1천명당 1.331쌍의 이혼을 했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같이 이혼율이 급속히나 증가할수록 서구나 다른 나라보다 낫지만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결혼에서 파장에 이르는 기간이 어느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사실이다. 쉽게 결혼해서 쉽게 헤어지는 경박한 세태를 의심하곤 할 수 있다.

이처럼 이혼율이 급속히 증가하면 우선 산업현황과 더불어 여성의 지위향상

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다. 활발한 사회참여로 여성의 경제자립이 가능해지면서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인식의 보편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가정의 평화를 지탱해준 女必從夫의 덕목이 점차 퇴색해 가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혼율을 높이는 더 큰 요인은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의 존귀함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 부부간의 성실의무를 도무히 사라져 버린 것으로서 사소한 다툼의 끝결이 혼란에 노장을 겪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부간의 하찮은 갈등조차 이해와 양보로 해소하기 보다는 서툰다툼 등을 들리려고만 해서 가정의 위기가 증폭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남편이란 만만 부부가 백년해로를 하자면 어떤 운고비가 따르거나

편이다. 성격적인 차이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미처 알지 못한 결합이 노출될 때도 있을 것이다. 함께 지내는 데서 오는 권태감 또한 부부사이를 갈라놓는 빌미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같은 위기요인들은 가정에 대한 신뢰와 책임의식이 확고하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

가정의 화목이 행복의 원천임의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家和萬事成」이란 옛말도 있듯이 단란한 가정은 사회생활의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가정이란 점을 감안할 때 건실한 가정은 곧 건실한 사회와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의 해체가 여러가지 사회병리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음은 우리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게 됐다.

아무리 합의에 의해 이뤄지더라도 이혼은 비극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늘어난 棄兒문제라든가 청소년 탈선의 상당부분이 결혼가정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 이같이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책임으로 가정의 존엄을 지키는 가치관의 재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관계법위반으로

국가통계조사 상습 불응자 통제청, 고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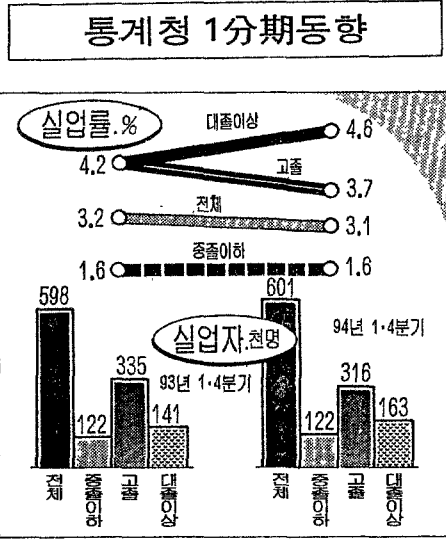
통제청이 국가통계조사
의 표본조사가구로 지칭되
고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조사고발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통제청은 24일 모 시중
은행간부의 부인인 W씨

(서울 서초구 반포동)가
지난해 6월부터 통계조사
원의 조사를 계속 거부합
에 따라 통계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까지 통계조사에 응하지
않아 고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현행 통계법 제4조와
7조는 중앙행정기관·지
정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과 법인 또는 단
체에 자료에 관한 신고를
명할 수 있고 통계조사원
의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
권을 명시하고 있다. 17조
는 이 조항을 어긴 사람에
대해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씨는 92년 10월 경제활
동인구조사의 표본조사가
구로 선정된 뒤 사전조사는
물론 지난해 6월부터 매
달 실시하는 본조사에 지
금까지 단 한차례도 응하
지 않았다. 심지어 반신반
에서 주민들에게 통제청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선
동까지 했다.
<宋泰靈기자>

저연령층·대졸失業 "심각"

총 3.1% : 91년 4분기 후 첫 감소

통계청 1分期동향
4.2%(14만1천명)와 견줘
0.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20~24세의 대졸이상
고학력자 실업률은 16.6%로
심각한 수준이다.
고졸이하의 10대 실업률은
11.6%로 매우 높은 편이다.
고학력자 실업률의 높은 실
업률은 학력간 연명계층사이
또한 나타난 이력수급의 2중
구조를 새삼 실증케 하는 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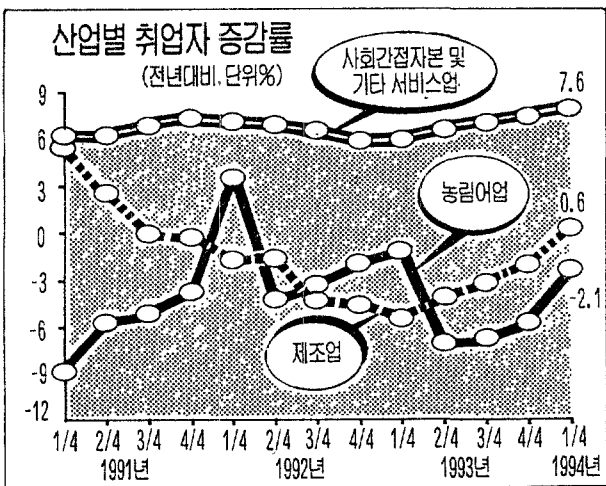


경기가 본격 회복국면에 접
어들었지만 대졸이상 고학력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
다. 전문가들은 대졸 이상 수
급 불응 사실에 비추어 이는
인력수급 불균형이 배후하
는 인력수급구조의 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한 결과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1·4
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졸
이상 실업률은 4.6%(16만3
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기간 고졸이하의 실업률
은 1.4분기 중 4.8%로 전
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중졸이하 수는 1천9백3만
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5% 늘어 88년 1·4
분기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실업률의 전년동
기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3.1%를 나타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91년 4·4분기가
후이던 것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실업률 또한
한 6대도시의 취업자가 전
년 동기보다 2.3% 줄었으나
나머지 지방의 실업률 4.3%를 여
쳤다.

여성취업 활발... 고용 46% 차지

1분기 就業 4.5% 82만명 늘었다



국민에게 최고



企業들 "올 채용 확대"

경제회복과 함께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조업 취업자도 2년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대졸이상 실업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전국 및 지역

大卒실업률 증가로 청년실업 심각화

통계청 발표 景氣회복 타고 제조업 상승

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1천9백3만6천명으로, 작년동기보다 4.5%(8만9천명) 증가, 지난 87년 2.4분기(5.3%) 이후 7년만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산업별 취업자는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농림업분야에서 2.1%가 감소하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분에서 7.6%가 늘어나 취업자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3차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도 4백58만9천명으로 2만8천명(0.6%)의 증가, 지난 91년 4.4분기부터 시작된 감소세가 2년여만에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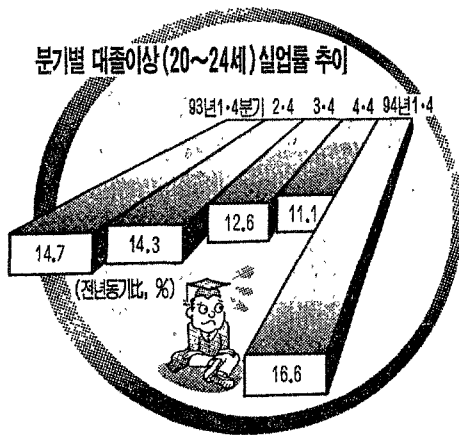
또 그동안 경기침체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렀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 전년동기에 비해 1.8% 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전반적인 고용동향

향후전에도 불구하고 대졸이상 실업자는 16만3천명으로, 작년동기보다 15.6%(2만2천명) 증가, 실업률도 4.6%로 0.4%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20~24세의 대졸이상 실업률은 16.6%에 달해 고학력 취업난을 반영했다.

전체 失業率 감소분구 大卒이상 실업자 급증

통계청 집계 1·4분기 고용동향 발표



정부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있지만, 가리블 때도 대졸이상 高學歷 실업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대졸 이상 20~24세의 실업률(전체의 1.4분기 중 실업률의 16.6%)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작년보다 15.6% 증가 인력수급불균형 갈수록 심화

대졸은 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다. 인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高學歷·低 연령층의 高실업추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전과 및 지역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의 실업률 추이

◇연령·학력별 실업률 (94년 1·4분기, %)

구분	전체	중이하	고졸	대졸
전체	3.1	1.6	3.7	4.6
15~19세	11.6	13.3	10.7	-
20~24	9.1	6.8	7.6	16.6
25~29	4.9	4.1	4.0	6.7
30~54	1.6	1.5	1.8	1.5
55세 이상	0.6	0.5	0.8	1.5

특히 그동안 경기침체로 비정규직의 증가로 더불어 있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다.

총 취업자 수는 1천 9백 3만 6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늘어 88년 1·4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게 증가했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줄어 91년 4·4분기 이후 처음 줄었다.

그런데 이면 고용지표의 기법 선형인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 인력수급의 2중구조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체 실업률에 감소했다. 대졸 이상의 실업률은 전년 동기 4.2%에서 4.6%로 0.4%포인트 높아졌다. 대졸 이상 실업자는 총 16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14만 1천 명보다 15.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세의 대졸 이상 고졸자 실업률이 16.6%로 매우 높았다.

▶(94년 1·4분기) 「전과 및 지역별 고용동향」

의 수요가 큰데도 불구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인력수급 구조의 불균형이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張梅榮기자

경기회복 반영 고용지표 호전 뚜렷

경기가 회복세를 타며 고용사정도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3D업종(기피현상)의 심화와 함께 저연령층과 고학력실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의 고용동향에 나타난 각종 고용지표는 경기의 회복세를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보다 4.4%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의 15세이상 인구증가율(1.8%)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진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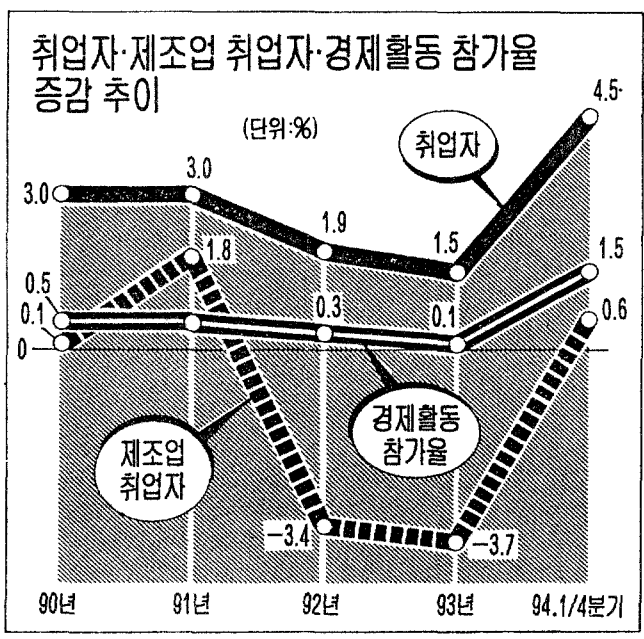
주요 노동시장계층인 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전년동기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가정에 서일터로 나간 여성도 늘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5.8%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취업자증가는 고용률수립이 큰

1분기 고용동향 무슨내용 담고있나

3차산업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이 10.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 기능·기계조작·조립 등의 직종도 4.9%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45.8%로 높아져
3D기피·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은 지속

에는 0.7% 감소했으나 올해에는 6%의 증가세로 반전됐다. 대졸이상 실업자는 지난 3개월동안 2만2천명이 늘어 실업률이 전년동기의 4.2%에서 4.6%로 높아졌다. 저연령층의 실업률은 전년동기보다 3.2%포인트 떨어졌지만 11.6%로 연령별로 가장 높았다. 3D기피현상과 인력수급구조의 불균형에 따라 이런 실업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宋泰燮기자〉

1·4분기 연령·학력별 실업자 및 실업률 ()는 실업률(단위:명,%)

전체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12만 2천 (1.6)	31만 6천 (3.7)	16만 3천 (4.6)	-
15~19세 1만 7천 (13.3)	4만 2천 (10.7)	-	-
20~24세 1만 1천 (6.8)	12만 7천 (7.6)	6만 5천 (16.6)	-
25~29세 1만 1천 (4.1)	6만 1천 (4.0)	6만 2천 (6.7)	-
30~54세 7만 2천 (1.5)	8만 3천 (1.8)	3만 1천 (1.5)	-
55세이상 1만 1천 (0.5)	3천 (0.8)	3천 (1.5)	-

통계청 발표 「1분기 고용성장」 분석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고용성장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근로의 변화가 곳곳에 스며들었다.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나 그동안 감소세를 보여 왔던 제조업 취업자를 비롯한 모든 산업의 취업자가 늘고 있는 점들이 그것이다.

특히 경기애 가장 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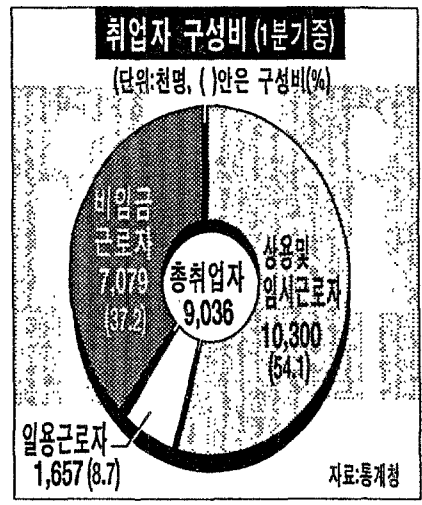
地方 대도시보다 就業활기

하계 방학동안 일용근로자의 수는 작년 4분기부터 증가(전년동기대비)하기 시작했다. 1분기에는 8%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감소세를 보였던 상용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 1분기의 평균 취업시간은 주당 51.4시간으로 작년 1분기(51.7시간)보다 0.3시간이 감소했

실업자 중 직장을 옮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회복으로 일자리를 옮긴 기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도 된다.



제조업등 일용·상용근로자 증가세 大卒이상 실업률 16.6%...계속높아

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수 증가가 서울 등 대도시를 앞지른 것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특히 취업자수의 경우 충청남도를 1분기에만 10만7천명이 늘어 작년 1분기에 비해 15%가 늘어났고 경기(10.0%), 전북(7.5%)도 근로력의 증가를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6대도시의 1분기중 제조업취업자수가 작년 1분기보다 2.3%가 감소한 것에 비해 나머지 지방에서는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중화학공업 중심이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중화학업종이 많은 지방의 고용이 늘고 있는 것이다.

<宋尙勳기자>

社說

高學歷失業은 사회적 낭비

학력이 높을수록 일자리 얻기 힘

든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른바 고학력 失業문제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전후 및 지역별 僱傭동향」은 한마디로 전체 실업률이 줄어 들고 大卒 이상의 실업자가 11.3%로 증가했다. 전체 실업률이 3.1%인데 비해 대졸 이상 실업률이 4.6%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더욱 높아졌다. 특히 20~24세의 大卒 이상 실업률은 무려 16.6%에 이르렀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진출의 부른 꿈이 고부를 나서자마자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회적 이면도 큰 문제다. 그것은 국가적 인 인력자원일뿐 아니라 잠재적 사회생산력의 손실이 된다. 대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행히 올들어 興氣가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고학력 失業문제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나야 할 것은 미지수다. 고학력 失業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산업구조 조정과 교육제도상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현상되었기 때문이다. 高學力 失業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대학의 量的 팽창으로 대졸자가 屢産되고 있는데다 첨단과학시대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보다는 人文系 졸업자가 더 늘어나는 등 人力需給의 불균형 때문이다. 여기에다 월급과 어렵고 위험한 일자리를 의미하고 소위 「3D業種」의 기피현상도 고용구조의 왜곡에 영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고학력 失業문제는 경제

대책 못지않게 교육개혁과 국민의식의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고학력 失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대책과 함께 經濟外的인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첫째, 대학교육을 산업현장의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實用的인 교육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 인문계와 실업계의 定員비율을 조정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고대부의 취업과 進學을 구분하여 지도함으로써 무더고 대학에 들어가자는 풍조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업계가 앞장서서 학벌인주의 僱傭관행을 고치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구하고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인식과 풍토가 바뀌어야만 「너도 나도 대학에 가야겠다」는 과열현상도 줄어들고, 현실에 적응 못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대학살인자가 줄어들 수 있다.

셋째로 경제발전과 國家富強을 가속화하여 고용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失業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해결된다. 이것은 상식이며 고학력 失業문제도 이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더 말할 필요도 없다.

社説

빈곤한 勞動공급정책

통계청의 발표한 1.4분기 고용현황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3.1%로 자연증가에 비해 0.1%포인트가 하락했다. 취업률도 보면 高卒층 취업률이 4.2%에서 3.7%로 떨어지는데 비해 大卒者의 취업률은 오히려 4.2%에서 4.6%로 상승했다....

대졸자보다 고졸자를 선호한다니 말의 있는데 왜 그런가. 이제 1991년의 또 싸기 때문은 아니다. 이와면 대학 4년 동안 배양된 인재보다 생산적인 고졸 실용인력이므로 선호한다. 하지만 관련만 따져서 보면 그렇지는 않다....

의 빈곤이다. 고용이 증가 불어남의 따라 경제생활수준도 좌변된다! 6%포인트나 더 높은 68.0%까지 상승하였다. 오히려 1991년에서 1992년은 1.1%포인트의 고용증가율을 나타내며 취업률도 1.1%포인트 상승하였다....

탁이 사실 확충의 대책이 필요하다. 노력이나 심혈을 보며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정책 부처의 대책의 주요인들을 요약하면 대안정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주부노동정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 정책이 바로 탁이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社說

景氣가 나아지면서 고용 확대가 이뤄지는 반가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중 고용현황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늘어난 8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91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년여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經總이 1천 3백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 역시도 35.7%가 생산노동자의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늘렸다고 대답했다. 이는 작년 조사 때보다 그 비율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고, 사무관리직과 기술직의 경우도 추세를 따라 증가했다.

별·연령별 人力需給의 2중구조가 개선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마저 나타난다. 大卒失業의 증가가 대표적인 예다. 1분기 大卒이상 합계수직자의 실업률은 4.6%로 전체 실업률 3.1%를 크게 웃돌

보다 1.9%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25~29세의 실업률도 6.7%나 된다. 대학을 나온 20대 인구가 총 12만 7천명이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스스로의 탓이 아니라 말할 나위가 없겠지

일자리의 절대수가 부족하게 아니다. 앞서 말한 經總조사에서도 기업의 부채율 30.5%는 전분기율치인 28.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인력채출업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의 고용수

인력需給 구조에 문제있다

뿐 아니라 전체 실업률이 작년 같은 때보다 몇 배정도 높아도 불구하고 大卒失業者의 비중이 0.4%포인트 늘어난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찾는 시기인 20~24세의 실업률은 무려 16.6%에 이르는데 이는 前年 같은 기간

만 高卒失業者의 量은 前年보다 1.9배나 늘었다. 이 같은 문제는 한마디로 잘못된 교육제도, 잘못된 가치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인력수급정책의 所産이다.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서는 대졸 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요와 현행 교육체제에서 배출되는 인력의 공급이 막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需給불균형을 초래한 원인 중 1차적으로 정책대응이 저야 한다. 理工系 대학의 増員, 기술대학의 설립, 직업교육의 강화 등 이와 관련된 수요와 정책 개발이 수없이 많지만 결과

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 아직 도수조정정책과 관련된 기술·교육부의 의견차, 기술대학 설립을 둘러싼 상하·교육부의 주도권 다툼 등으로 정책이 표류중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교육제도의 要諦다. 교육정책은 사회정책의 일종이므로 사회적 차질 배양과 함께 사회적정책 차원의에서의 인력수급안 필요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는 다들 동의한다면서 各論부문의 개선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뒷걸음질 친다. 이 「경」은 「부」가 타파해야 한다.

고학력 여성인력의 수요도 시급하다. 전체 취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0%를 넘어섰지만 여성 취업자

중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통계청이 지난 81~91년의 여성취업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 중 4년제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은 47.5%에서 37.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력 활용에 큰 영향이 있다는 얘기도. 전문기술직의 부족은 이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산업의 개선될 수 있다. 여성 스카우트도 인력의 보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입자관조차 구할 수 없다면, 또는 학력이 나 점수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면 대학학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부모의 생각할 바와 같다.

社說

雇傭확대속 고학력失業증가

최근의 경기회복추세에 따라 전체失業率이 감소되고 있지만 大卒이상 고학력失業者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인력수급불균형의 심각성에 비추어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고용동향에서도 나타났듯이 지난 92년 이후 부진했던 각종 고용지표들이 서서히 호전되고 있으나 고용지표뒤에 가려진 학력간 연령계층간 산업간 인력수급의 2중구조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大卒이상 20~24세의 젊은 고학력자의 실업률(1·4분기중 16.6%)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력수급 구조불균형에 따른 「高학력 低연령층의 高실업추세」가 심화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또하나 주목해야할 현상은 최근의 취업자 증가가 대부분 도소매 음식숙박업 공공및 개인서비스업등 3차산업부문에서의 고용증가에 힘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쉬운 일만 찾는 사회병리현상의 한 단면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처럼 인력 수급구조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현행 대학교육제도의 비효율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할것이다. 물론 몇년전부터 정

부담국이 理工系중심으로 대학정원을 늘려주는등 산업인력공급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여러가지 여건상 대학스스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젊은이들의 진로선택이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점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들어 사회 각분야의 급변추세에 따라 산업계의 고용구조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옛그제까지만 해도 관심 밖이던 업종이 하루아침에 대규모 고용을 일으키는 인기업종으로 변신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經總의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만 해도 기업들은 전문기술직 연구직 생산직등의 신규인력채용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정보통신등은 신규투자확대로 벌써부터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막상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인력은 태부족이라는 것이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설명이다.

고질적인 인력수급의 2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년후의 새로운 산업구조를 예측하고 젊은이들에게 그에 맞는 미래지향적 직업관을 심어주는 동시에 미래의 고용구조를 염두에 둔 신속성있는 교육내용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달 物價 보합세

소비자物價 4월比 0.07% 올라

농산물 안정·油價 하락 영향

크게 올랐던 농산물값이 안정세를 되찾고 정유회사들의 휘발유값 인하경쟁에 따라 5월 소비자물가가 보합세를 유지했다. 30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4월에 비해 0.07% 올라 올들어 5월까지 7% 올라 올들어 5월까지 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4%를 기록, 4월까지 3.47%의 상승세를 보인 것은 연초 폭등했던 과당이 전담에 비해 51% 양과 값이 25.1% 떨어져 농축수산물 전체로 0.4% 하락한 것이 큰 원인이다.

그러나 농산물중 새로 출하하기 시작한 참외는 70.4% 배추는 15.8% 올랐다. 석유류는 정유회사들의 가격인하 경쟁으로 전담보다 2.9% 내려 전체 물가를 0.08%포인트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 공산품은 5월중 0.3%, 개인서비스업은 0.6% 상승을 했고 전세금도 0.3% 올랐다. 한편 5월중 도매물가는 4월에 비해 0.1% 하락, 올들어 5월까지 도매물가 상승률은 1.2%로 집계됐다.



키워드인flation: 가격에 "정면" 대항

최근의 물가 안정은 정부의 "안정"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6월 물가부터 만만치 않다. 인상의 예정된 증가 교수업과 유치원비만

때문에 인상의 높을 수밖에 없어 상당한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물가에 잡혀 기 시작한 참가가 전체

인하 경쟁 요인이 반영됐 다. 휘발유값 인하 경쟁은 소비자물가를 4월에 0.01%포인트, 5월엔 0.08%포인트 끌어 내리는 역할을 했다. 이같은 각종 가격인상 요인들을 정부가 제대로 통제한다 해도 빠른 경기 회복에 편승, 민간 소비가 늘어난다면 정부의 물가 조정 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는 여전히 위험이 잔존해 있다 는 우려가 많다. (金尙永)

정기조"에 기쁨을 둔 것 이외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많다. 농산물값 폭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조급하리 도 줄이기 위해 인기에 높은 각종 농산물과 인상이 폭증하여 기다리고 있는데다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하반기 물가를 나쁘하기가 쉽지 않

해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나 끌어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새로 출하되기 시작하는 수박, 복숭아 등은 값이 떨어진 뒤인 작년 8월과 비교 대비되기

물가를 0.11%포인트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 것만 봐도 무시할 수 없는 인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4월과 5월 물가에는 정유회사들의 휘발유값

농산물·수산물 가격안정화 정책
안정시간 기간(9월)이며, 인
민물가액 9월이내 0.1%하
소비가물가(전월)과 0.1
1%상승을 나타내며, 0.1%가
상승을 나타내었다.

이중 9월에는 1~5%의
수급(전월)과 0.1%하
0.1%상승을 나타내며, 0.1%가
상승을 나타내었다.

이중 9월에는 1~5%의
수급(전월)과 0.1%하
0.1%상승을 나타내며, 0.1%가
상승을 나타내었다.

물가정밀대비 9월

전월 대비 1.2% 상승
다들었다.

이중 9월에는 1~5%의
수급(전월)과 0.1%하
0.1%상승을 나타내며, 0.1%가
상승을 나타내었다.

전월 대비 1.2% 상승
다들었다.

하한선의 비수출과 물가
0.4~0.6%상승을 나타내
물가하락과 물가상승이
물가안정화정책이
0.25~0.1%하한선을
이내에 전월 대비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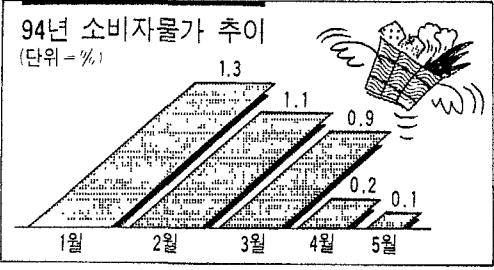
안정국면 5월 물가 0.1%상승

농산물·油類가격하락 영향... 올전체 3.5%
서비스·아파트분양가등 인위억제 불안상존

하한선을 나타내었다.
이중 9월에는 1~5%의
수급(전월)과 0.1%하
0.1%상승을 나타내며, 0.1%가
상승을 나타내었다.

전월 대비 1.2% 상승
다들었다.

이중 9월에는 1~5%의
수급(전월)과 0.1%하
0.1%상승을 나타내며, 0.1%가
상승을 나타내었다.



전월 대비 1.2% 상승
다들었다.

통계청 4월중 산업조사 영향

이달의 통계청의 확장세를 보여준 것이 4월 중 생산과 투자 증가율의 확대면 다소 주춤했다.

가장 큰 오차 요인의 원인은 4월 중 생산과 투자 확대를 반영한 4월 중 생산과 투자 증가율의 확대면 다소 주춤했다.

생활기율 81%

景氣 확장세 주춤

투자증가율 21.6%

도출기율분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통계청의 1월 발표한 「4월의 산업조사 영향」에 따르면 생산의 소폭 확대와 소비의 정체, 철강산업의 설비보수와 자동차의 수출 감소 때문인지

수행이나 확대한 것이지 10.1%포인트 상승의 13.0%보다 낮아졌다.

제1차산업조사(81.1%포인트)는 3월의 88.4%와 견줘 두달째 상승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고 재고 또한 신발과 의류업종의 재고조절

의 결과로 2.6% 증가하는데 그쳤다.

도시민 판매는 여름철 판매에 대한 수요 증가와 판매점의 확대 판매에 힘

자동차수출 감소·철강 보수 영향
건설수주부진...失業 2.6%로 개선

입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었고 내구수비재출입이 9.3% 증가, 1.4분기

8%에 비해 둔화됐다.

투자증가를 보면 설비를 제외한 기계수주는 민간부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분에서 감소해 전체 증가에 비해 21.6% 늘었지만 지난 3월엔 40.0%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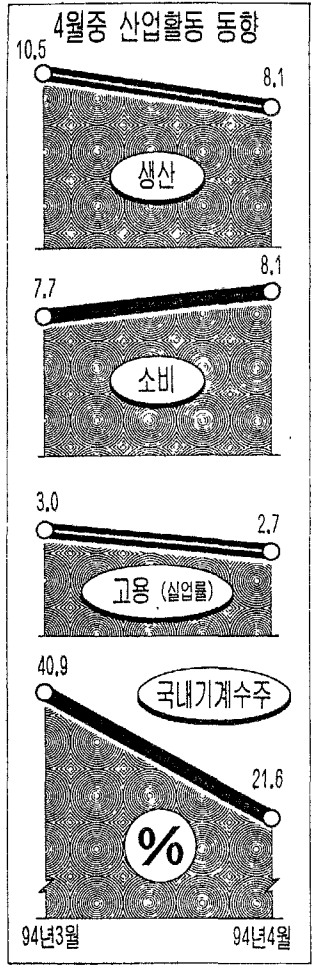
가계부 수임용이 50.5%로 전월의 76.6%보다 줄어든 반면 기계부 수임용은 26.4%로 3월의 20.2%에 비해 다소 늘었다.

건설수주는 0.6% 증가에 그쳐 전월과 마찬가지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건축비가 면적도 21.6% 감소해 3월의 감소세가 계속됐다.

고용증가를 보면 제조업은 4만69만2천명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만3천명의 증가율 1월부터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업은 2.9%(계절조정)로 3월의 2.7%보다 지난해 4월의 3.0%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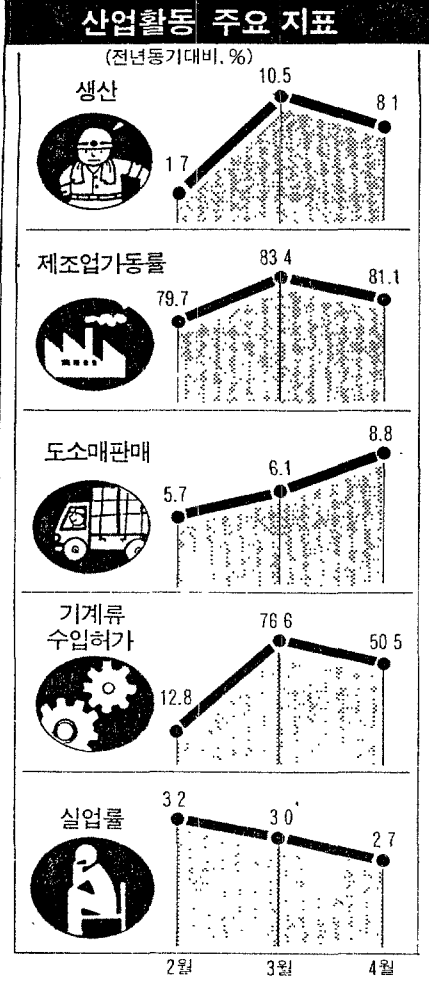
전월 대비 수주(0.0%)는 여전히 높은 증가율(0.2%)을 보였다.



통계청 발표 4월 산업동향

景氣 확장세 소비쪽 기운

1.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가운데 4월에는 생산 투자 증가세가 뚜렷한데다 소비도 확장을 계속해 온데다가...



통계청 발표 4월 산업동향... 4월에는 생산 투자가 확장을 계속해 온데다가 소비도 확장을 계속해 온데다가...

이와대응하여 정부는... 4월에는 생산 투자가 확장을 계속해 온데다가 소비도 확장을 계속해 온데다가...

동기대비 2.6% 증가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 투자부에서 국내...

생산·투자 주춤불구 판매 급증 重-輕격차도 줄어 「體感」근접치

다만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경기 회복의 주축이 되고 있는 민간기업의 영업 이익이 양호하다는 점이다...

다만 생산에서도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격차가 줄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중화학공업의 생산...

32도시 64개 시장 6천1백업소 대상
470품목 3회 조사 평균치 산출

각종 경제통계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이다. 동네 가게, 시장, 백화점 등에서 늘상 피부로 직접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도 많이 탈 수 밖에 없다. 조금만 올라도 정부에 비난이 쏟아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은 밤낮없이 물가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다행히 연초 가파르게 치솟던 물가는 지난 4~5월 두달 동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통계청이 조사한다. 매달 5일, 15일, 25일 세번에 걸쳐 조사한 평균치를 그 달의 물가지수로 발표하고 있다. 조사 대상품목은 4백70개로 농축산물 74개, 공산품 2백89개, 서비스 1백7개 등이다. 5년마다 바뀌는데, 현 품목들은 90년을 기준으로 한 평균 도시가구의 소비 지출계정 중에서 비중이 높은 것들이다.

전국 32개 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64개 시장에서 조사한다. 6천1백여개의 판매 점포와 서비스 업체가 대상업소이지만 조사요원은 50여명 밖에 안 된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 조사원이 관찰 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물론 이들 업소에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소-비-자-물-가
어떻게 조사하나

공산품조사 제조업체·모델링·크비로
쌀등가중치 하락·교육·오락비 상승

요청하며 업소 명단이나 개별적인 조사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않는다. 특히 공산품의 경우 대상 품목의 대략적인 내용은 업소에 알려주지만 제조업체나 모델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비밀이다. 조사에 응한 업소나 생산업체가 흑시라도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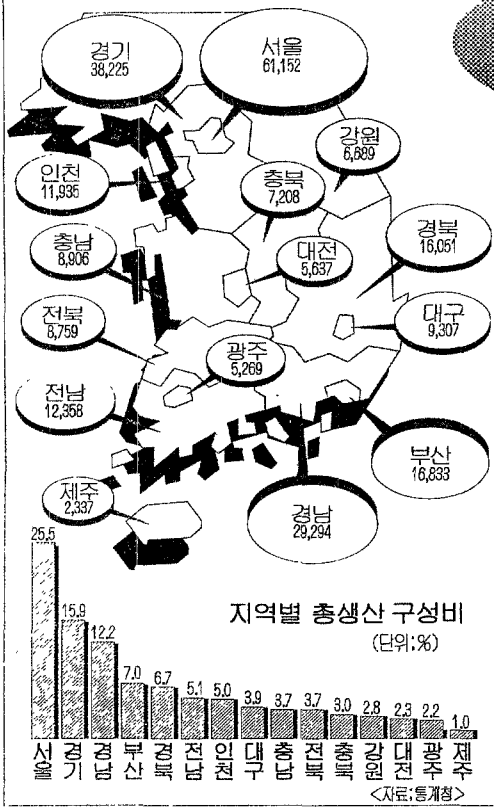
물가지수는 이렇게 조사한 각 품목별 물가에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한다. 가중치는 소비지출 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품목별로 천차만별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데 따라 품목별 가중치도 바뀐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미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다. 지금은 전세값이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높고 교육, 교양오락비도 가중치가 훨씬 높아졌다.

매달 초에 발표되는 물가지수는 기본적으로 90년과의 비교치이다. 즉 특정 품목의 물가지수가 1백16이면 이는 90년보다 16%가 올랐다는 뜻이다.

일본은 1백67개 지역에서 5백61개 품목을 월 1회, 신선식품은 월 3차례 조사한다. 미국은 85개 도시에서 3백70개 품목을 조사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주로 개별 방문을 통해 조사한다.

〈宋泰燮기자〉

'92년 지역별 총생산 규모 (단위:10억원)



GRDP <지역총생산액>

수도권이 전체의 46.4%

1인생산액은 경남 1만1百10달러로 "최고"

전국 15개 시도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GRDP)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으로 92년 현재 1만달러를 넘어섰다. GRDP

통계청 92년추계

총액으로는 서울이 전체의 25.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생산액의 46.4%를 차지했다.

2월 통계청이 추계발표한 '92년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92년 GRDP 성장률은 경남이 19.5%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3.8%로 가장 낮았다. GRDP는 각 시도에서 1년동안 산업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간 이전

소스를 고려하지 않기에 때론 최중점으로 해당 시도에 귀착되는 분배 소를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실태를 총체적으로 보아주고 소득수준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지표이다.

통계청은 자원에 사상 처음 GRDP를 공개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이 지표를 발표했다. '92년 1인당 GRDP는 1인당 1만1百10달러(6백원)로 1인당 10만 원(1만 1백10달러)으로 가장 많고 대구가 4만1千8百18달러(5천3백54달러)로 가장 낮다. 전체 평균은 5백49만6천원(7천30달러)이다.

발달하지 못한 전북, 강원, 제주 등도 1인당 생산액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1인당 생산액이 가장 적은 경남은 가장 적은 지역의 1.0배로 나타났다. '91년 최고 지역(충남)과 최저 지역(충남)의 1.7배보다 적지가 컸던 것이다. 15개 시도별 GRDP는 서울이 15개 시도

시도별 1인당 지역총생산 (92년) (단위:천원)

지역	1인당 총생산
울산	5,761.5
부산	4,456.5
대구	4,180.3
인천	4,116.1
대전	4,503.5
경북	5,150.5
경기	5,739.9
충남	4,443.5
충북	5,245.5
전남	4,604.9
전북	4,420.2
경남	5,234.9
제주	7,893.6
평균	4,552.6
평균	5,496.0

총액기준 서울 "최다" 제주 "꿀찌" 성장률 경남·충북·전북·충남 순

경남을 포함해 인천, 서울, 경북, 경기도, 제주 등이 발달한 5개 시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평균을 밑돌았다. 상대적으로 제주업이 의 GRDP는 61주 1천

의 GRDP 합계는 2백39조9천5백86억원으로 '91년보다 11.2% 늘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의 GRDP는 전체의 10%를 넘는다. 지역은 서

5백21억원으로 전체의 25.5%를 차지했고 가장 적은 제주는 2조3천3백70억원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GRDP가 전체의 10%를 넘는다. 지역은 서

울 경기 경남은 세 곳으로 이들을 3개 시도의 생산액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하는 한강권을 보이고 있다.

인구 비중보다 GRDP 비중이 큰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경북, 전남 등 5개 시도이다. GRDP 성장률 '92년 GR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9.5%)이며 경상과 경기(12.1%)가 전후 평균 11.2%보다 높았다. 부산은 지방산업이 양호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장률이 3.8%로 전국 평균 5.4%에 그쳤다. (金尙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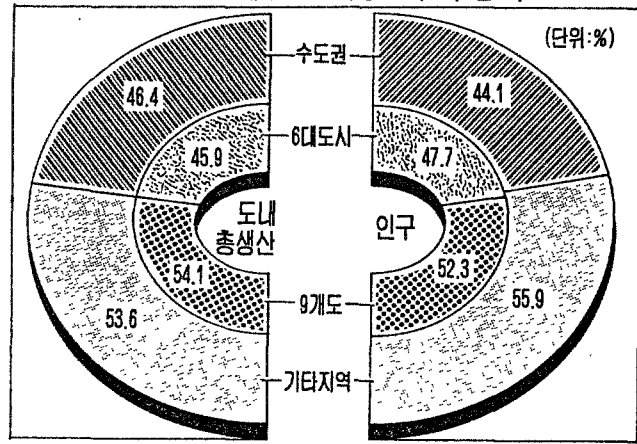
15개 시도별 지역총생산(경상) (단위:10억원, %)

지역	91년		92년		92년/91년	
	액	구성비	액	구성비	비율	비율
울산	55,578.8	18.2	61,152.1	18.2	109.8	25.5
부산	16,214.3	5.0	16,832.5	5.0	103.8	7.0
대구	8,558.2	2.6	9,306.7	2.8	108.8	3.7
인천	11,029.3	3.4	11,935.2	3.7	108.2	5.0
대전	4,682.1	1.4	5,268.9	1.6	112.3	2.3
경북	5,143.5	1.6	5,636.9	1.7	109.6	2.3
계	101,206.3	31.1	110,132.3	31.1	108.8	46.4
경남	34,098.2	11.0	38,224.6	11.2	112.1	15.9
충남	6,192.0	2.0	6,689.2	2.0	108.0	2.3
충북	6,377.0	2.1	7,207.9	2.3	113.0	3.0
전남	7,649.9	2.5	8,905.7	2.6	116.4	3.7
전북	7,722.3	2.5	8,759.1	2.5	113.4	3.7
경북	11,177.7	3.7	12,357.8	3.7	110.6	4.5
대전	14,633.9	4.7	16,050.7	4.7	109.7	6.7
대구	24,521.3	7.8	29,294.3	8.6	119.4	12.2
부산	2,157.2	0.7	2,337.0	0.7	108.3	1.0
계	114,529.5	35.3	129,826.3	35.3	113.4	54.1
총계	215,735.8	66.4	239,958.6	66.4	111.2	100.0

경제력 집중·지역별 불균형 심화

「92년 道内 총생산」에 담긴 뜻

권역별 道내총생산 및 인구 구성비



통계청이 지난 해에 이 두 번째로 발표한 「92년 道내총생산」(GRDP) 추계결과를 보면 지역별 경제력의 차이가 뚜렷하다. 15개 시도의 GRDP

수도권·6대도시가 각각 절반쯤 차지 30대권·화남권의 2·7배... 격차 더 커져

규모는 2백39조9천5백86억원이다. 부부의 11.7%인 수도권과 2.9%인 6대 도시의 비중이 각각 절반 가까이 되 경제력의 심층을 보여주고 있다. 영남권의 비중도 2.7배나 되고 제조업체가 모여있는 서울, 경기, 경남이 전체의 53.5%를 차지하는 것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추진해 온 경제개발 정책의 산물이다. 1인당 GRDP는 평균 5백49만6천원(7천393달러)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GNP) 5백50만

GRDP 성장률도 큰 차이가 났다. 비금속 광물제품 등에서 생산이 활발했던 충북(9.8%)과 EXPO 관련 공사 및 고속철 공사도 건설업에 호조를 보인 충남(9.4%)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부산(1.3%)과 대구(3.3%)의 저조한 성장률(주요 업종인 섬유, 의복, 신발 등의 부진

6천원(7천523달러)과 비슷하다. 전라북도를 1백43.6(인천)1백11.3(서울)1백4.8(경북)1백4.7(경기)1백4.4(충) 등 수도권과 영남권 5개 지역만 평균을 넘었다. 나머지 10개 지역은 평균 이하를 기록, 큰 격차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서울 등 6대도시에서는 70%를 넘어섰 다. 경남과 인천, 경기도 광공업의 비중이 45%를 웃돌았으며 영남의 비중 중의 20% 이상인 지역은 제조·중간·전반 전복이었다.

〈宋泰榮기자〉

1인당 道內총생산 慶南 789만원으로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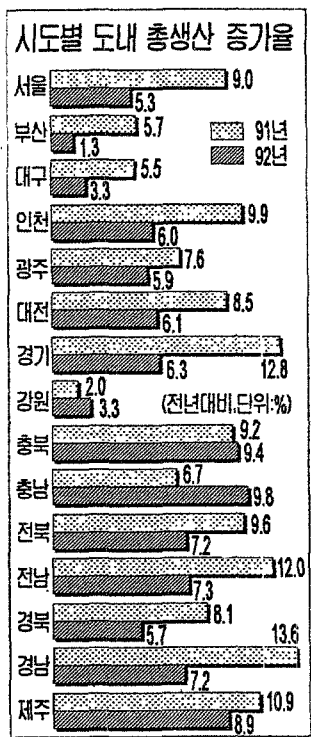
大邱 4백18만원으로 최저

15개 시도 평균 5백49만원... 10.2% 증가

통계청, 92년추계

지난 92년 결산의 1인당 道內총생산(GDP)이 전년보다 18.1% 증가하면서 1만1백9달러를 기록, 처음으로 1만달러를 넘어섰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 도내총생산의 46.6%를 차지했고, 호남권(29.8%)과 호남권(11%)의 격차도 줄어들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92년 도내총생산 추계결과에 따르면 15개 시·도의 1인당 평균 도내총생산은 전년보다 10.2% 증가한 5백49만6천원이었다. 결산이 7백88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낮은 대구는 결산의 절반 정도인 4백18만원이었다. 1도 전에 비해 최고와 최저 시도의 격차도 1.7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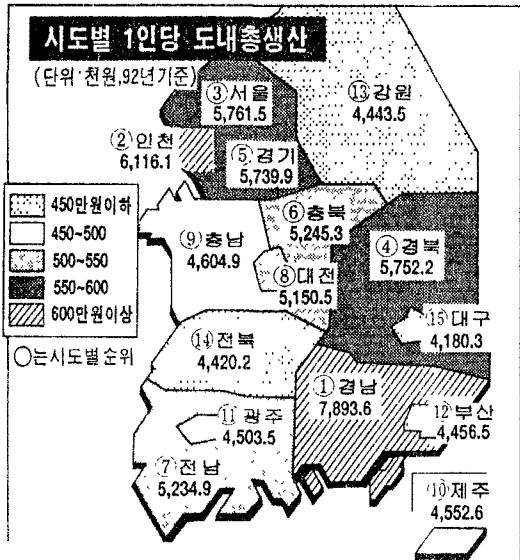
(결산 대 전복)에서 1.9배로 더 벌어졌다.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다. 불균형 전체 도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은 서울 25.5%, 경기 15.3%, 경남 12.2%, 인천 7% 순이다. 제주(1%), 광주(2.2%), 대전(2.3%) 등이 가장 지역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권이 인구 구성비(44.1%)를 상회하는 46.4%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6개 도시의 점유비도 45.9%였다. 전년보다 비중이 각각 0.2%포인트와 1%포인트가 떨어졌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제력 집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권이 인구 구성비(44.1%)를 상회하는 46.4%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6개 도시의 점유비도 45.9%였다. 전년보다 비중이 각각 0.2%포인트와 1%포인트가 떨어졌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제력 집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권이 인구 구성비(44.1%)를 상회하는 46.4%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6개 도시의 점유비도 45.9%였다. 전년보다 비중이 각각 0.2%포인트와 1%포인트가 떨어졌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제력 집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영남권(29.8%)이 호남권(11%)의 2.7배였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GRDP) 경남이 대구의 2배

〈통계청, 「92년기준」 발표〉

전국 15개 市道 가운데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 (GRDP)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꼴찌인 대구보다 2배 가까이 (1.9배) 많다. 또 경제성장률과 같은 개념인 시도별 GRDP증가율에서는 경남이 19.5%로 가장 높고 부산이 3.8%로 가장 낮다. GRDP총액에서는 서울이 전국의 25.5%를 차지하고 있고 인천과 경기도 각각 5.0%와 15.9%에 달해 전국 생산력의 46.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통계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2년도 지역내총생산 (GRDP)」을 발표, 15개 시도별 생산력을 비교해 분석했다.



경남에 경북

◇1인당 GRDP: 92년 기준이면 주민 1인당 생산액 (GRDP)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남이 7백89만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RDP이 91년의 18.1%를 웃돌았다. 2천원 이하인 지역은 1% (충청남도)를 차지하고 인구증가로 전체 GRDP 증가율보다 1인당 GRDP 증가율이 높았다. 경남은 통계청이 GRDP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85년 이후 처음으로

91년까지지만 해도 전북이 DP 급매달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1인당 GRDP가 가장 낮은 시도는 대구로 4백18만원의 불과 해 1인당 생산액의 불과 5.2%에 불과하다.

◇ 시도별 GRDP (지역내 총생산) (92년 기준)

시도	GRDP (10억원)	GRDP 증가율 (%)	1인당 GRDP (천원)	총인구 (천명)
서울	61,152.1 (25.5)	10.0	5,761	10,614
부산	16,832.5 (7.0)	3.8	4,456	3,777
대전	9,306.7 (3.9)	8.7	4,180	2,226
인천	11,935.2 (5.0)	8.2	6,116	1,951
광주	5,268.9 (2.2)	12.5	4,504	1,170

1,094	5,151	9.6
6,660	5,740	12.1
1,505	4,443	8.0
1,374	5,245	13.0
1,934	4,605	16.4
1,982	4,420	13.4
2,361	5,235	10.6
2,790	5,752	9.7
3,711	7,894	19.5
513	4,553	8.3

※괄호안은 구성비(%)

5,636.9	(2.3)
38,224.6	(15.9)
6,689.2	(2.8)
7,207.9	(3.0)
8,905.7	(3.7)
8,759.1	(3.7)
12,357.8	(5.1)
16,050.7	(6.7)
29,294.3	(12.2)
2,337.0	(1.0)

1인당 G R D P 면에서 만
년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다 92년에도 전북대신 대
구가 최하위를 면했다.
◇신노벨 G R D P : 15
개 시도의 92년 G R D P
총합인 2백99,586억 원

86억원. G R D P의 규모
가 가장 큰 지역이 서울로
61조1천억 원으로 전체 기
록, 전체의 25.5%를 차
지하고 있다. 또 가장 적
은 지역의 제주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2조3
천9백70억 원이다. 주요
전통별 G R D P 비중 ▲
서울 인전경기특수도권
이 46.4% ▲부산 대구와
경남·북해 한전 영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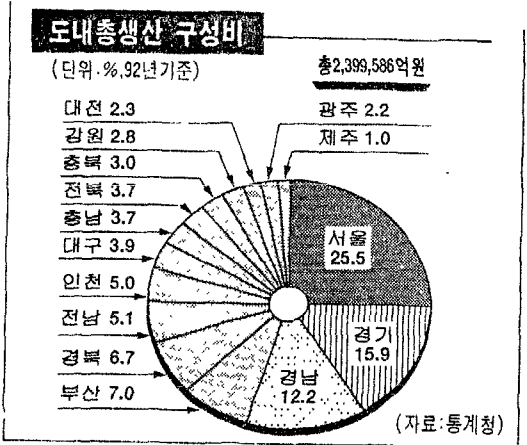
지역내 총생산인 시도에서 한해
동안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소득)
를 생산했는가를 측정할 것으로 목
민소득계정의 부가총생산(G D
P)과 같은 개념이다. G R D P은
단위의 생산량을 조사한 것이외
서 부문별면역상의 수급과도 차이
가 있다. 상품 생산 부문은 경기도
에 있어 92년에도 서울을 앞섰을
우 그 이상의 생산량이 경기도에
전혀 없다. 부산의 경제수준에 서울

GRDP는 무엇인가

를 집계한다. 1인당 G R D P가
가장 크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
주민의 소득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고 전액이 된다. 그러나
G R D P 통계는 지역내 생산량
만을 통해 지역경제의 상태를 판
단해볼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정
부가 그동안 지역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그만큼 G R D P
를 발돋움하지 않고는 정부가 국가행부
의 중심발판이 되지 않는다.

생산업만 단순조사... 주민소득과 큰 차이가
지역경제선택과 지역우회... 지역과 민별

1위·부산 끝까지



수도권에 전국생산력 46% 집중 전남·경기 1·2차산업 최대점유

인 28.0% ▲전북과 전남
·전남 최강지역인 11.0%
▲대전과 충청·북해 총생
지역이 6.0%에 불과하다.
◇신노벨 성장률: G R
D P 증가율(생산)에서 각
부산의 3.0%로 불특정
기불했다. 이 가운데 평년
치인 11.2%보다 부양 7
.4%포인트 가까이 수렴이
다. 부산의 92년도의
전·연간 성장률(전년 대비
증가율)이 2.2%로 부산의
주요업종이던 한전 신산업업
이 전기부문의 전6월달에서
부산전체의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반면 기연
의 실비부자가 지난해 평
년의 G R D P가 92년의
26.6% 성장한 데 이어 92
년전년 19.0%의 높은 신
장률을 보였다.
◇신노벨 산업구조: 신노
벨 G R D P를 주요산업별
로 보면 수도권(1차산
업)의 전액 92.7%, 충청
(2차산업)이 경기 32.7%,
서비스업이 31.4%, 1차
산업이 3.9%로 92년의 수
이다. 전국의 경우 전라 북
도도업생산량의 16.0%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는 평
년생산의 23.6%를, 서울
은 서비스업 기타산업생산
의 35.6%를 전담하고 있
다. 【취필필필】



경남 1인당 생산액 1만 섬유산업 사양 대구의

15개 시도별 92년 도내총생산 발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생산과 소득이 가장 높은 경남의 1인당 도내총생산(GRDP)이 지난 92년을 기준으로 1만달러를 넘어섰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5개 시도 지역별 도내총생산에 따르면 경남의 1인당 도내총생산액은 92년 불변가격 기준 7백89만3천6백원으로 이를 미국달러로 환산하면 1만1백10달러에 이른다. 경남 한 지역으로만 따지면 같은 해 1만달러선을 넘어선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수준이다.

92년의 전국평균 1인당 도내총생산(5백49만5천6백원)을 100으로 할 경우 가장 높은 경남은 143.6, 가장 낮은 대구는 76.1이었다. 가장 높은 1인당 생산액을 기록한 지역과 낮은 생산액을 기록한 지역의 비교치는 1.9배로, 47개 현을 기준으로 산출한 일본의 3.2배, 30개 성을 비교한 중국의 7.5배 등에 비해서는 지역격차가 덜한 편이다.

도내총생산 2위는 인천(6백11만6천원), 3위는 서울(5백76만2천원)이었다. 90년대 들어 섬유산업의 사양화로 고전하고 있는 대구는 4백18만3백원의 1인당 도내총생산을 기록했다. 통계 기준연도를 지난 85년에서 90년으로 변경한 결과 지난해 가장 낮은 생산액을 기록한 지역은 애초 발표된 충남이

아니라 전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연도를 정정한 결과 특히 전북은 도내총생산이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85년 이후 계속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고, 92년에는 대구경제가 워낙 침체되는 바람에 겨우 꼴찌를 벗어나 14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 불변가격 기준 증가율은 충남·북이 각각 9.8%, 9.4%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충남·북이 높은 것은 충북의 경우 비금속 광물 제품 및 제조업의 생산이 호조를 보였고, 충남의 경우 대전엑스포 관련 공사 및 고속철도 공사로 건설업의 성장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5.3%), 부산(11.3%), 대구(3.3%) 등 대도시는 제조업체의 지방이전 및 주업종인 섬유·

85년이후 전북 총생산 최하위 서울 전국 생산의 25.5% 차지 충남북 생산증가율 가장 높아 전남 농수산·경기 광공업 1위

◇ 시도별 도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92년 전국의 도내총생산 규모는 2백39조9천5백8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조2천2백28억원(11.2%)이 늘어났다. 서울은 61조1천5백20억원으로 전국 생산의 25.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15.9%인 38조2천2백50억원, 경남이 12.2%인 29조2천9백40억원을 기록했다.

의류 신발 등의 수출부진으로 전국 평균치(5.8%) 이하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등 고전했다. 강원도는 석탄광업의 부진으로 3.3%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 지역별 산업구성=전국의 농림어업생산물 가운데 전남이 16.0%를 생산했다. 다음으로 경북이 15.8%, 경남이 12.3%, 전북이 10.6%를 각각 차지해 이들 지역이

여달러 1.9배

농수산물의 주산지가 되고 있다. 광공업은 경기지역이 23.6%, 서울이 10.4%, 인천이 7.9%로 수도권만 합쳐 43.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남이 21.6%, 부산이 5.8%를 각각 차지해 이들 지역을 포괄한 부산-경남권이 수도권 다음의 광공업단지 구실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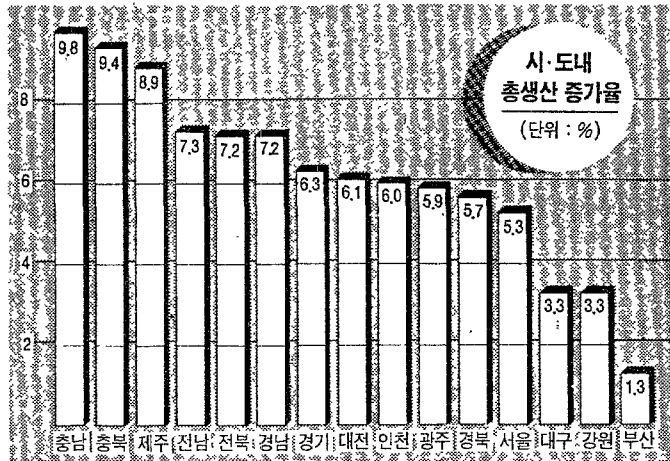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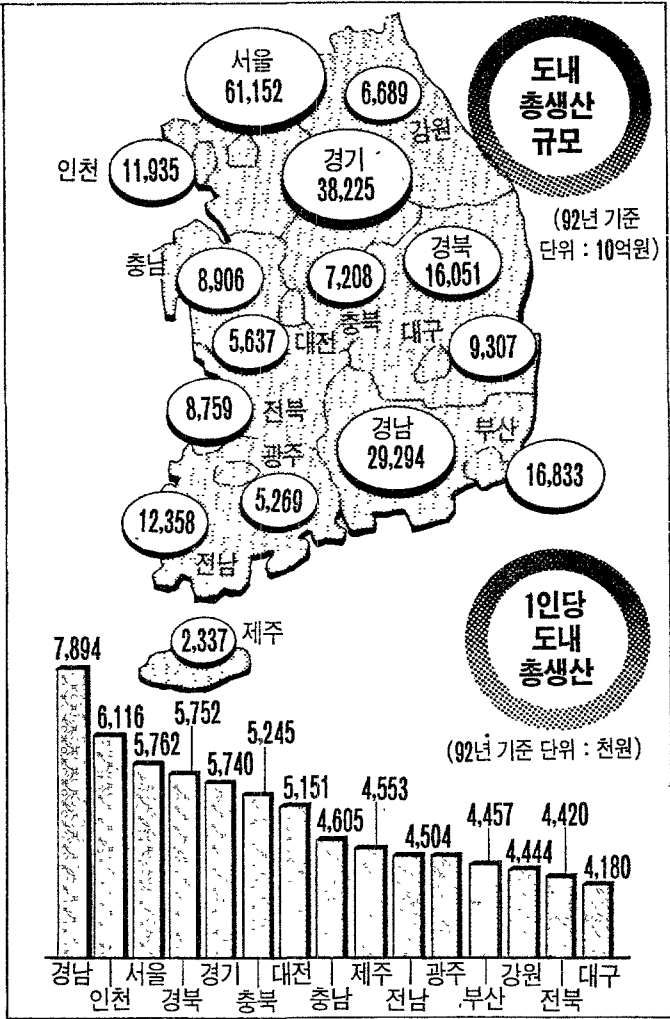
특히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4.1%, 도내총생산의 46.4%가 집중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아 과밀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2년 들어서는 광공업이 수도권에서 급속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광공업 비중은 91년에 비해 1.3%포인트 낮아졌다. 이와 함께 주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와 강원 대구 등의 공장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은 무려 3.2%포인트가 증가했으며, 충남·북 전남·북 등이 미약하나마 광공업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 보험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산업부문의 경우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52.6%의 높은 비중을 갖고 있으나, 새로 만든 수도권 새도시로의 이주가 본격화함에 따라 서울지역의 서비스업이 경기·인천 등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흥동 기자



통계청 92년치 분석을 보면...

통계청이 92년 발표한 15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A Regional Domestic Product)에 따르면 지역의 지역간 경쟁력 격차에 대한 분석이 주목적에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간 경쟁력 격차에 대한 분석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격차에 대한 분석이 주목되고 있다.



GRP (지역내총생산)는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내총생산의 총액이 2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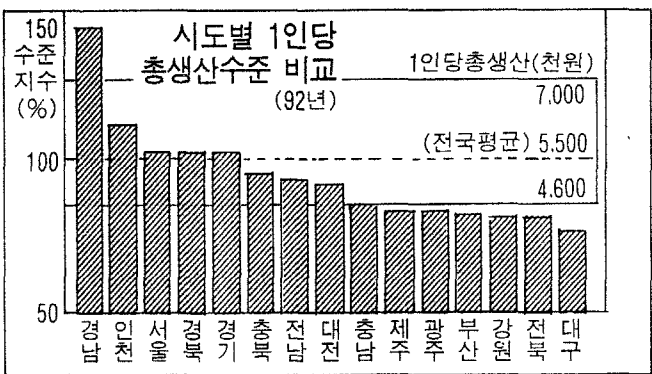
총 240조...전년비 11%증가

지역내총생산은 수도권 151조 9천억 원, 충청권 25조 1천억 원, 호남권 22조 8천억 원, 영남권 20조 1천억 원, 강원권 11조 9천억 원, 제주권 1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63%, 충청권 10%, 호남권 9%, 영남권 8%, 강원권 5%, 제주권 1%로 나타났다.

서울 61조 추가...

서울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6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전체의 40%에 해당한다.



구분	추계지역	단위	지역차
韓	157가	市道	5,496
日	47가	府縣	3,638
美	50가	州府縣	19,841
中	30가	地區	17,743
英	12가	州府縣	24,968
캐	19가	州府縣	14,186
아	20가	州府縣	16,107
러	13가	州府縣	5,625

※지역별 격차는 최상위지역 생산을 최하위지역 생산으로 나눈 것임

1인당 도내총생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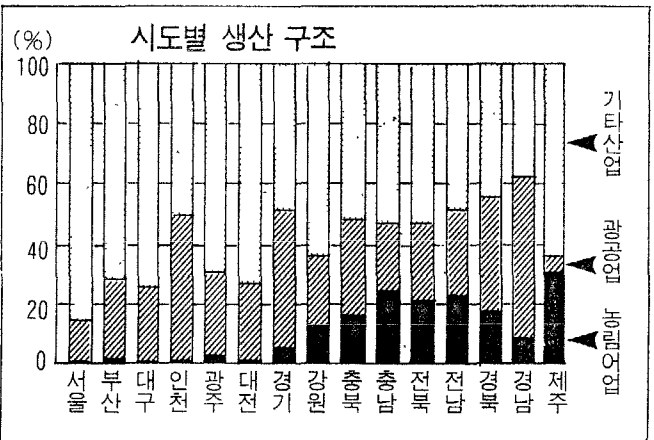
<단위=천원>

	1인당 도내총생산		증가율 (%)	순위	
	1991	1992		1991	1992
서울	5,268.1	5,761.5	9.4	5	3
釜山	4,306.6	4,456.5	3.5	10	12
大邱	3,864.8	4,180.3	8.2	14	15
仁川	5,890.9	6,116.1	3.8	2	2
光州	4,080.3	4,503.5	10.4	9	11
大田	4,827.8	5,150.5	6.7	6	8
京畿	5,357.6	5,739.9	7.1	3	5
江原	4,038.5	4,443.5	10.0	12	13
忠北	4,642.3	5,245.3	13.0	7	6
忠南	3,899.5	4,604.9	18.1	13	9
全北	3,835.8	4,420.2	15.2	15	14
全南	4,621.9	5,234.9	13.3	8	7
慶北	5,210.7	5,752.2	10.4	4	4
慶南	6,682.1	7,893.6	18.1	1	1
濟州	4,222.4	4,552.6	7.8	11	10
全國	5,215.3	5,741.4	10.1	-	-

※全國은 국방부문과 수입세가 포함된 수치임.

영남도 지역경제발전 총연합회
EXPO차별지역의 지역발전
전략을 100이며 100여명의
유망 지역을 예선했다.
전남(慶北)에 1월이내 중점
발전 지역을
76·1백 개를 선정
1·1·9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백43
9인 발전 지역을 9인 지역을
백 1개 지역을 선정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개의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개의

경기·경남順



영남도 지역경제발전 총연합회
EXPO차별지역의 지역발전
전략을 100이며 100여명의
유망 지역을 예선했다.
전남(慶北)에 1월이내 중점
발전 지역을
76·1백 개를 선정
1·1·9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백43
9인 발전 지역을 9인 지역을
백 1개 지역을 선정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개의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개의

EXPO 영향 충남成長 9.8% 으뜸 지역격차는 1.7倍서 1.9倍로 벌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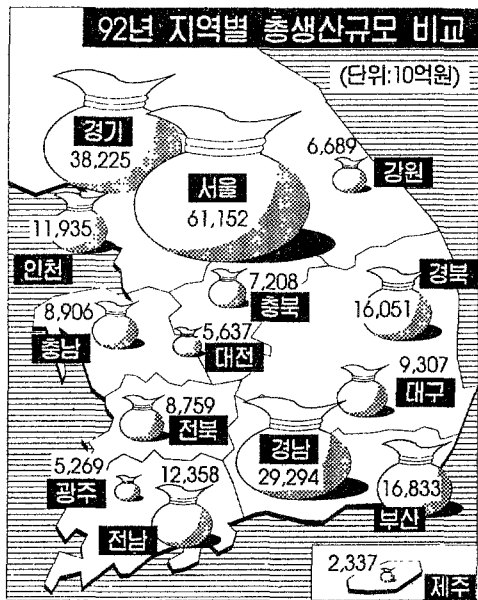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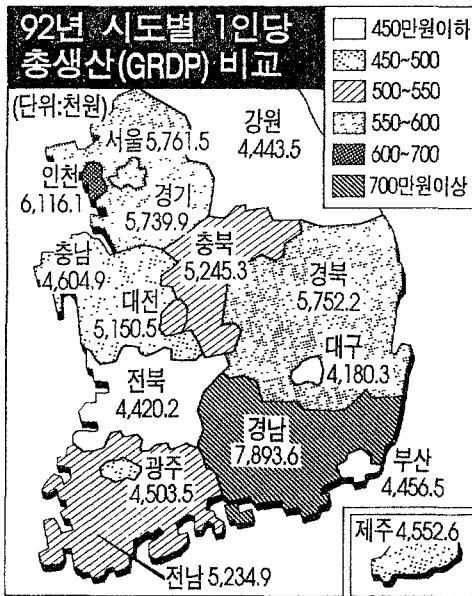
충남은 지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간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100이며 100여명의 유망 지역을 예선했다. 전남(慶北)에 1월이내 중점 발전 지역을 76·1백 개를 선정 1·1·9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백43 9인 발전 지역을 9인 지역을 백 1개 지역을 선정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개의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개의

전남도와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100이며 100여명의 유망 지역을 예선했다. 전남(慶北)에 1월이내 중점 발전 지역을 76·1백 개를 선정 1·1·9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백43 9인 발전 지역을 9인 지역을 백 1개 지역을 선정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개의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개의

전남도와 지역경제발전 전략을 100이며 100여명의 유망 지역을 예선했다. 전남(慶北)에 1월이내 중점 발전 지역을 76·1백 개를 선정 1·1·9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백43 9인 발전 지역을 9인 지역을 백 1개 지역을 선정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개의 백 1개의 중점발전 지역을 1개의

市·道간 총생산량격차 심화

92년 지역별 비교



각 지역간 생산량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92년도 지역내 총생산(도내총생산)」에서 전국 15개 시도중 1인당 도내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7백89만4천 원(오도 최저인 대구) 4백18만원)보다 1.889배에 달했다. 이는 91년에 경남과 전북사이의 격차가 7.4배였던 것에 비해 확대된 수준이다.

영남권 호남권의 2.71배 경남, 최저 대구의 1.889배

또 경북, 경남, 부산, 대구 등 영남권이 도내총생산에

서 차지한 비중은 29.8%로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권의 11.0%보다 2.71배였다. 이는 91년에 영남권이 29.7%로 호남권(11.0%)보다 2.70배였는데 비해 격차가 다소 벌어진 것이다. 인구구성

비로 영남권은 전체인구의 28.7%로 호남권의 12.6%보다 2.28배 큰 데 불과하다. 다만, 도내총생산중 9.0%를 차지한 충청, 충남, 대전 등 충청권은 91년 8.9%보다 다소 비중이 늘었다.

서울 등 중화학공업지역의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됐다. 서울의 도내총생산액은 61조1천5백20억 원(총액의 25.5%)으로 15개 시도중 1위를 차지했다. 15개 시도의 전체 생산액은 2백39조9천5백86억원이었다.

또 서울을 비롯해 중화학공업이 밀집한 경기(15.9%)와 경남(12.2%) 등 상위 3개지역이 53.6%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91년의 52.9%보다 더욱 확대된 수준이다. 특히 경남지역은 한해동안 도내총생산액의 증가율(19.5%)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91년의 46.6%에서 92년에는 46.4%로 다소 감소했다. 도내총생산은 또 전북도면적의 2.9%에 불과한 6대도시에 45.9%이 집중됐다.

서울등 경제력집중도 심해져

1인당 GRDP는 지역별로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충북, 전남, 대전, 충남, 제주, 광주, 부산, 강원, 전북, 대구 등의 순서였다.

〈姜孝祥기자〉

地方 통계조직 주먹구구 축소

15개市·道 人力 40% 줄여

地自制 알두고 업무차질 우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통계작성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있어 지역통계작성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통계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인력으로 사용되는 지역통계의 개발이 부실해지는 것은 통계조직비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통계작성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있어 지역통계작성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통계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인력으로 사용되는 지역통계의 개발이 부실해지는 것은 통계조직비교

	한국	일본
15개市道(일본은 47개都道府縣) 통계인력	139명	2,704명
1개市道당인력	5.6명	57.5명
통계조직	통계조사부 12부, 통계조사팀 12팀, 통계조사인력 12명	통계조사부 40부, 통계조사팀 40팀, 통계조사인력 40명
작성업무	인구조사, 주민등록, 주택조사, 태생조사, 등재조사, 등본작성, 등본정리, 등본인구조사, 등본작성	통계조사부, 통계조사팀, 통계조사인력, 통계조사팀, 통계조사인력, 통계조사팀, 통계조사인력

자료: 통계청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줄여 업무차질 우려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줄여 업무차질 우려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줄여 업무차질 우려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줄여 업무차질 우려가 있다.

統計업무에 차질 우려

지방의 통계조직과 인력이 축소돼 5년부기로 내년엔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통계청이 고신하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각市道가 조직을 축소하면서 통계담당인력을 질적·적적으로 감축, 통계요원수가 총 1백39명에서 84명으로 축소됐다. 이로인해 1개市도당 통계인원이 9.3명에서 5.6명으로 줄어 들었다. 특히 區市郡의 경우엔 통계계장을 비롯한 3~4

統計廳 인구조사 앞두고苦心

명의 직원이 통계업무를 담당,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방자치체실시를 앞두고 지방의 각종통계를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통계담당인력은 줄어 들고 있어 통계부실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 내년에 실시할 인구주택총조사에서부터 이런 부작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安商旭기자>

정부통계조사 불행우려

地自體 「담당관실」 축소 人力 크게 줄어
「합업」 부서 「만 기구개편 희생양」 비난

특히 지방자치체 실시를 앞두고 지역통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통계기구의 축소 등 정부조직축소는 「합업」 부서의 인력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비판이 일

지방자치단체 기구축소에 따른 市道 통계담당관실의 폐지로 농업·수산부 통계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통계조사 작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예정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담당인력부족으로 조사작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직에서 담당하는 △총조사실체 △공공사업 △노·소매업 △농림어업 △스키장기조사 등 중앙행정기관 위임·위탁업무의 인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통계의 정확성이 선진화의 원동력」인 통계전부문의 지적을 지방자치체 대를 맞아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수립과 개발정책의 결실을 꾀할 수 있는 통계조직 및 인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金政煥기자>

수요 느는데 **절후 통계** 조직은 축소

조사작업 차질 우려

15개 시도 1백39명서 84명으로 줄어

인구조사등부실화 불가피

오는 95년 본격적인 지자체 실시를 앞두고 지방통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통계 조직은 오히려 축소돼 각종 통계 조사 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통계란 한 나라의 경제 및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이것이 부실할 경우 정부정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시대의 경제·사회상을 반영하고 구조변화를 기록하는史料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13일 내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인 정부조직 축소 방침에 따라 지난 달 인부 및 통계계 등 2개 係로 구성된 통계담당관실을 전산담당관실과 통합, 「통계전산담당관

실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전국 15개 시·도의 통계담당인원은 1백39명에서 84명으로 줄었다. 시·도당 평균 9.3명에서 5.6명으로 감소한 셈이다. 일부 시·도는 구·시·군의 통계를 폐지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통계계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기획계에 통합했다. 인천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광업업 통계조사 대상업체 수가 3천6백여개로 전년도(2천9백개)보다

많은 데도 단 2명의 직원이 앞으로 각종 통계조사를 담당해야 할 판이다. 이같은 地自體들의 통계조직 축소로 내년으로 예정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내용이 부실할 면하기 어렵게 됐다. 통계청과 농림수산부 등 중앙정부가 위임·위탁하는 도·소매업·고용·구조·총사업체 조사 등의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 현재 통계청이 작성

하는 지역통계의 기초가 되는 지역총생산(GRD P) 통계작성도 앞으로 地自體에 넘기게 돼 있어 지자체가 통계조직과 인력을 늘리지 않는 한 내실있는 통계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은 우리의 시·도에 해당하는 47개 都·道·府·縣의 통계과 인원은 2천7백54명으로 평균 57.5명이다.

〈宋泰燮기자〉

생필품값

「政府의 제線」 3 배 이상 뛰어

1년새 3.4% 상승 버스·료 등 서비스·료가 주도

이를 실현하려면 정책의지가 약화돼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이전엔 큰 폭의 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金龍來기자〉

20개 생필품 가격동향

품목	단위	가격(원)		인상률(%)
		93.4	94.4	
쌀(일고)	중품 8kg	11,986	12,133	1.2
반(한우)	500g	7,061	7,457	5.6
미(우)	10개	714	761	6.6
지(고)	500g	2,142	2,124	-0.8
김	100장	4,285	4,352	1.6
면(통)	11	(115.6)	(124.7)	7.9
비(통)	11	304	302	-0.7
루(통)	11	101.7	99.7	-2.0
가(통)	10kg	2,320	2,465	6.2
생(통)	20kg	(110.9)	(114.5)	3.2
레(통)	11	(109.4)	(107.7)	-1.6
장(통)	11	2,144	2,111	-1.5
월(통)	11	3,194	3,412	6.8
월(통)	11	(119.7)	(119.7)	0.0
월(통)	11	(125.4)	(126.0)	0.5
월(통)	11	1,609	1,759	9.3
월(통)	11	6,600	6,600	0.0
월(통)	11	250	290	16.0
월(통)	11	2,350	2,350	0.0

쌀·쇠고기·연말등 정부가 지난 1년간(93년4월~94년4월) 가격인상을 1%내에서 억제하겠다는 공표한 20개 생필품값이 실제로는 목표치의 3배가 넘는 평균 3.4%나 올랐다.

특히 시내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의 16배인 16%까지 올랐으며 성인물류료(9.8%), 실업보험료(8%)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런 기간중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5.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었다. <표 참조> 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이들을 생필품과 상승률 1%내에서 억제키로 한 정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정부의 의지를 제기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경제 1백일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들 생필품값의 상승률을 향후 1년간 1%내로 억제키로 한바 있다. 11월 통계청에 따르면 이를 20개 생필품 가운데 1년간 1%이하의 가격상승률을 보인 품목은 가루비누(△2.0%), 학생복(△1.6%), 라면(△1.5%) 등 10개며 나머지 10개 품목은 1%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물류료는 시내버스로(이월)가 작년 4월 2백50원에서 금년 4월말 현재 2백90원으로 인상돼 16%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목욕료(성인) 1회가 1천6백9원에서 1천7백59원으로 9.3%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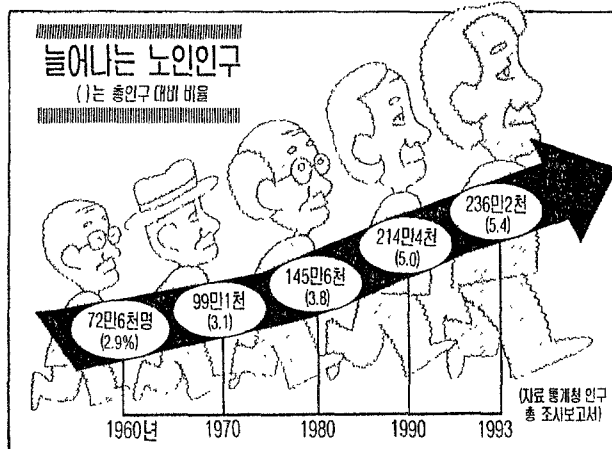
정부 관계자는 「1년간 1%내에서 물가상승률을 억제겠다는 목표 자체가 당초부터 무리였다」며 「특히 경제성장이 바뀌면서

경기호전 영향...을 53시간대 예상

週當 근로시간 매년 늘어난다

경기호전을 가늘하는 데는 일하는 시간도 중요하...
정기가 좋아지면 연장은...
남아 있는 경우가 적게...

런이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면 그 전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취업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전년보다 0.3시간 늘어난 52.6시간이었으며, 北核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올해 주당 근로시간은 53시간대로 올라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은 3低 호황기였던 88년 주당 55.8시간까지 올라갔으나 그후 매년 낮아져 왔...
다. 89년은 54.5시간, 90년은 53.7시간, 91년은 53.2시간이었다.
(沈相福기자)



<그림=金 弘 烈기자>

그림으로 보는 보건의료

65세 이상 老人인구 236만명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어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총체적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1960년만 해도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9%에 불과했고 숫자도 72만명 정도였으나 93년에는 5.4%에 2백36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01년에는 노령화 사회의 기준으로 통하는 전체 인구의 7%수준에 이르게 되며 2021년에는 13%를 넘어서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

된다.

선진국의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스웨덴이 23.5%(88년), 프랑스 19.1%(이하 90년), 日本 17.5%, 美國 16.8%, 濠洲 15.5%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금부터 노인전문 의료기관·노후휴양시설 등 노인 관련 사회복지 시설 확충과 노인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할수 있는 정년후 활동방안 등 노동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도 노인 관련 상품개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蔡仁澤기자>

老齡化 추세 급속히 진전

한국의 인구 노령화 속도가 미국을 앞질러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도달한 때는 90년 통계청이 2000년 노령인구 비중이 7%에 달하고 2023년에는 그 배인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각 11년과 33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셈이다.

이런 추세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이 영향을 미친 출산율의 낮아짐과 요양비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체인구는 70년대를 고비로 증가율이 감소하는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급속하고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0년 9.4%에 머물던 노인인구 비중은 90년 48.3%, 2000년 48.4%로 커질 예정이다. 이연파 라 노령인구 비중은 2000년 6.8%, 2001년 9.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이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세대의 부담도 무거워지게 마련이다. 지난 80년에는 성인이 16.1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 부양했으나 90년에는 13.8명, 2000년에는 10.6명, 2001년에는 9.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 40대 부모를 부양하는 「미지막」 세대의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부끼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한국의 인구 노령화 속도가 미국을 앞질러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도달한 때는 90년 통계청이 2000년 노령인구 비중이 7%에 달하고 2023년에는 그 배인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각 11년과 33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셈이다.

이런 추세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이 영향을 미친 출산율의 낮아짐과 요양비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체인구는 70년대를 고비로 증가율이 감소하는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급속하고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0년 9.4%에 머물던 노인인구 비중은 90년 48.3%, 2000년 48.4%로 커질 예정이다. 이연파 라 노령인구 비중은 2000년 6.8%, 2001년 9.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이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세대의 부담도 무거워지게 마련이다. 지난 80년에는 성인이 16.1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 부양했으나 90년에는 13.8명, 2000년에는 10.6명, 2001년에는 9.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 40대 부모를 부양하는 「미지막」 세대의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70년 9.4%에 머물던 노인인구 비중은 90년 48.3%, 2000년 48.4%로 커질 예정이다. 이연파 라 노령인구 비중은 2000년 6.8%, 2001년 9.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이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세대의 부담도 무거워지게 마련이다. 지난 80년에는 성인이 16.1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 부양했으나 90년에는 13.8명, 2000년에는 10.6명, 2001년에는 9.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 40대 부모를 부양하는 「미지막」 세대의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70년 9.4%에 머물던 노인인구 비중은 90년 48.3%, 2000년 48.4%로 커질 예정이다. 이연파 라 노령인구 비중은 2000년 6.8%, 2001년 9.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이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세대의 부담도 무거워지게 마련이다. 지난 80년에는 성인이 16.1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 부양했으나 90년에는 13.8명, 2000년에는 10.6명, 2001년에는 9.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 40대 부모를 부양하는 「미지막」 세대의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70년 9.4%에 머물던 노인인구 비중은 90년 48.3%, 2000년 48.4%로 커질 예정이다. 이연파 라 노령인구 비중은 2000년 6.8%, 2001년 9.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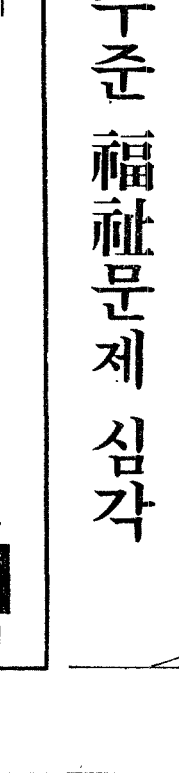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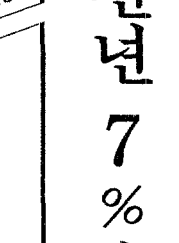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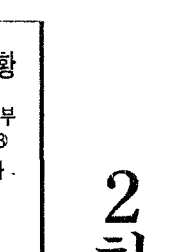
노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이를 부양해야 하는 자식세대의 부담도 무거워지게 마련이다. 지난 80년에는 성인이 16.1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 부양했으나 90년에는 13.8명, 2000년에는 10.6명, 2001년에는 9.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 40대 부모를 부양하는 「미지막」 세대의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부기리 사는 노인들세대가 총인구의 1천61명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년층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과 노인 혼자 살거나 홀부



所得향상·女性 사회진출 증가로 2천년 7% 수준 福祉문제 심각각

所得향상·女性 사회진출 증가로 2천년 7% 수준 福祉문제 심각각

所得향상·女性 사회진출 증가로 2천년 7% 수준 福祉문제 심각각

所得향상·女性 사회진출 증가로 2천년 7% 수준 福祉문제 심각각

외식비·교통비 급증 소득증가율 앞질러

통계청 1분기 都市근로자 家計 동향

우리 이웃들은 어디에 돈을 많이 썼나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소비증가율, 전년동기비·%)



◇도시근로자가구의 月평균 소득 (단위:천원,%)

구분	93. 1/4		94. 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1,428.9	10.5	1,616.4	13.1
근로소득	1,229.6	13.0	1,371.1	11.5
·가구주	1,065.7	15.6	1,133.2	6.3
·가구원	163.9	△1.7	237.9	45.1
기타소득	199.3	△2.7	245.3	23.1
부업소득	38.6	11.9	50.2	30.1
재산소득	160.7	△5.7	195.1	21.4
가처분소득	1,320.5	10.1	1,482.7	12.3
·가족	345.6	10.9	389.5	12.7
·개인	73.8	△0.2P	73.7	0.1P
·연세	72.1	△1.5P	72.9	0.8P

※△는 증감률, P는 %포인트
※자료=통계청

1인당 국민총생산(GNP) 8천달러 시대엔 경제수(소비지출)중 식료품비 비중(가) 높아지는 현상이지만 1·4분기 중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현상이 달라진 것

이다. 1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4분기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외식비로 쓴 돈은 월평균 9만2천8백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3%나 늘어났다. 이 결과 영저액수가 작년 1·4분기의 26.9%에서 올해는 27.4%로 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백61만6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1%나 늘어났는데도 영저액수가 0.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부분별 소비는 교통·통신·주거비도 유달리 늘었다. 특히는 자가용을 차 구입 및 유지비가 60.3%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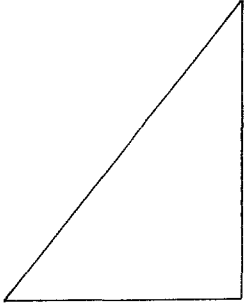
들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대가수요를 자극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통계청은 해석했다. 잘 살게 되면 좋은 차를 타고 마시는 음식물 사며는 일이 당연해 늘어나지만 일부에선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느냐고 걱정하기도 한다. 여쭙은 이같은 현상은 가라앉아 있던 경기 흐름이 호전되고 있다는 징표가 되고 있다. 경기회복세는家長이 아닌 가구원들이 별도로 늘어나는 데

경기가 풀리면서 주부층 가족들의 취업이 늘어나 (가구당 취업자가 작년 1·4분기 1·39명에

서 올해는 1·49명으로) 가구 전체 소득에서 가구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1.5%에서 14.7%로 높아졌다.

한편 소득에서 非소비지출(세금·차입금·이자 등)을 뺀 가처분소득을 1·4분기 중 1백48만3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3% 늘었다. 또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돈(39만원)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누는 도시가계 후자율은 26.3%로 작년보다 0.1%포인트 향상됐다. <沈相福기자>

外食 月9만원·엔겔계수 상승 승용차구입·유지비 60% 증가 月收 百61만원·13%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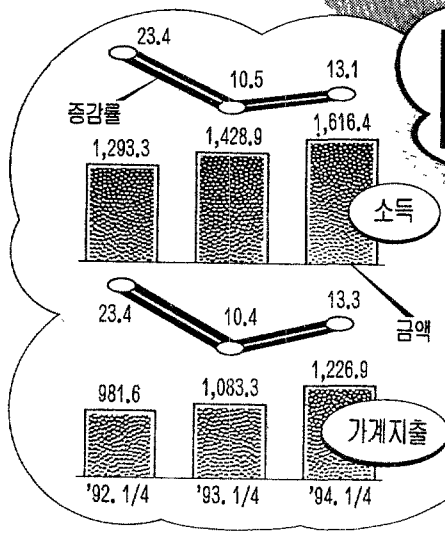


<그림=張甲鎭기자>

月161만원 벌고 122만원 썼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단위=천원, %)



도시근로자가구는 지난 1분기 동안 월평균 소득이 1백61만6천164원으로 올랐고, 이 기간 동안 지출이 1백22만6천900원으로 늘었다. 소득과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전례 각각 13.1%와 13.3%를 올린 것이다. 또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양상과 경향이 나타나면서 소비부족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음을 드러냈다. 소비부족의 선봉이 외식비를 포함한 식료품비 지출이 많아 지난해 이보다 연평균 증가 27.4%로 전년 동기와의 28.9%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을 보였다. 전 체수입가운데 식료품비의 지출규모를 가늠하는 연평균 수율은 대개 소득이 늘면서 수

소득 13·1% 증가 비해 지출 13·3% 늘어
 엔겔계수 27·4로 전년 동기보다 높아져

1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나 1·4분기 동안 늘어난 물가 탓에 외식비(30·3%과 식비(22·5%) 채소류(20·3%) 지출이 늘었던 결과다. 통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61만6천164원으로 전년 동기(1백42만8천900원)보다 13·1% 올랐고 지난해 같은 기간(1백29만3천300원)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6·2%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가족의 구성원수

남이 지게 마련이어서 생활수준의 향상을 보인다. 엔겔계수가 올기간 것은 지

전체소득의 70·1%를 차지. 전년 동기(1백6만5천7백원) 소득 대비 74·6%보다

구입의 영향으로 가구당 개인 교통비가 작년 1·4분기의 4만1천1백원보다 60·3%나 많은 6만5천9백원에 달했고 버스와 열차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2만9천1백원에서 3만4천4백원으로 18·2% 늘어났다.

처분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1백48만2천7백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32만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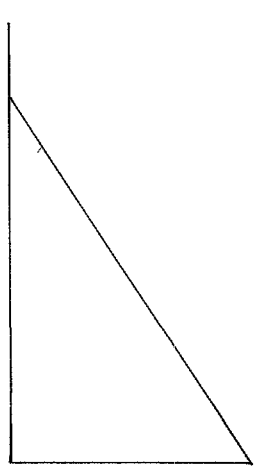
6만7천5백원 늘었다. 전체소득에서 가구주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은 경기회복에 힘입어 가구당 취업인원이 1·3분기에서 1·4분기로 증가했고 임대료와 이자 주식 등 재산 이전소득과 부업소득이 각각 21·4%와 30·1%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월평균 지출은 1백22만6천9백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08만3천300원보다 13·3%나 92년 3·4분기의 14·9% 증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양상과 경향이 나타나면서 소비부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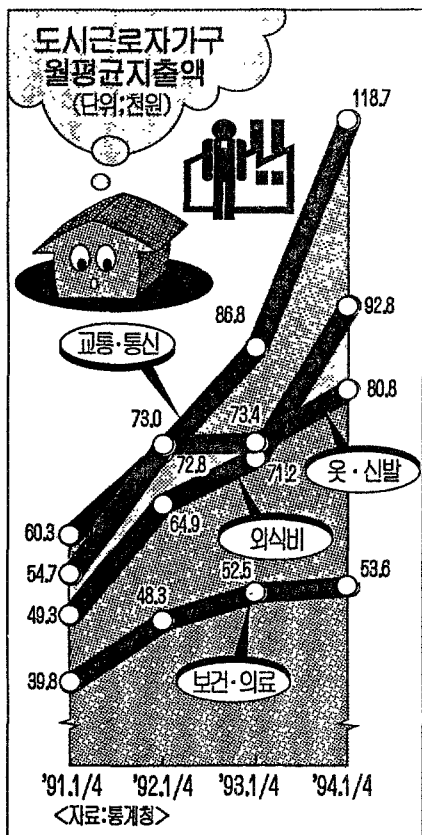
보다 12·3% 증가했다. 한편 가처분소득 중 얼마를 소비했는지를 나타내는 소비성향(엔겔계수)은 73·7%로 작년 1·4분기의 73·8%와 비슷했으나 가처분소득 증가액에서 소비지출 증가액을 가리키는 소비지출성향은 72·1%에서 72·9%로 0·8%포인트 상승. 소득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文聖雄기자>

개인교통비 작년對比

60·3%나 많아



「가계지출」 소득증가 “추월”



과 소비 고개 든다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 동향

경기회복과 함께 도시근로자 가구의 외식비와 승용차 구입 유지비가 급증, 가계지출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앞지르는 등 소비풍조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외식·후유지비 급증

엔겔계수 다시 상승 작년보다 0.5 높아져
 월평균소득 百62만원...한달 39만원 흑자

통계청은 17일 「1·4분기(1~3월)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을 발표, 한달 평균 외식비는 9만2천8백원으로 작년 1·4분기의 7만1천2백원보다 30.3%(2만1천6백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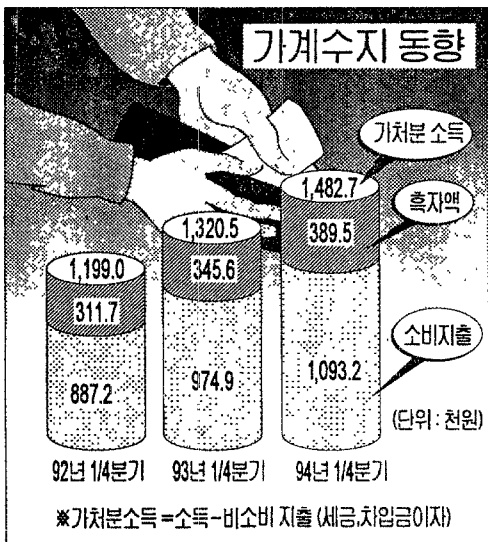
외식비 항목으로 가계지출 중 식료품 구입비 비율인 엔겔계수는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역행, 작년 1·4분기의 26.9%보다 높

은 27.4%를 기록했다. 월평균 개인교통비는 6만5천9백원으로 작년 동기 4만1천1백원보다 60.3% 늘었는데 이는 자가용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백61만6천4백원으로 작년 동기의 1백42만8천9백원보다 13.1%(18만7천5백원) 늘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6.5%)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6.2%였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이 비교적 큰 폭 늘어난 것은 임대료이자 주식등의 재산 및 이전소득이 21.4%

도시근로자 月 161만원 벌어 122만원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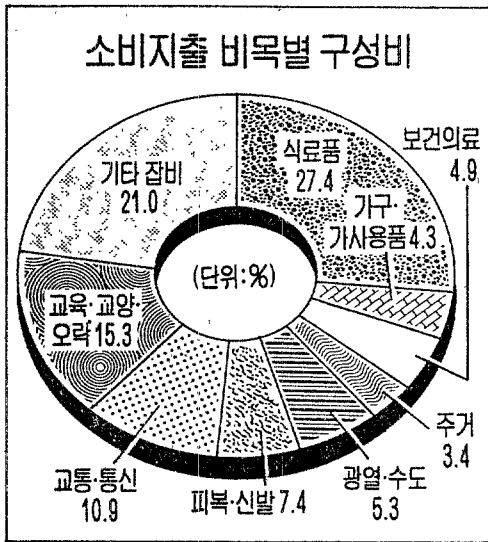
의식비 30% 늘어 9만원, 교통비 "정중"

통계청, 1분기 가계수지 동향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1백61만6천4백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1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4분기(14.7%)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자들이 상승세를 감인한 실질소득증가는 6.2%이다.

경기 회복되면서 가구당 취업자가 1.39명에서 1.49명으로 늘어 주부 등 가구구성원의 소득도 45.1%로 크게 늘었다. 부업(30.1%)과 자영업대리점 등의 재산 및 전소득(21.4%)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출 13.3% 증가, 소득증가를 상회... 품위유지비도 한몫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3.7%로 전년 동기보다 0.1%포인트 줄었지만 가처분소득증가액 중 소비지출증가액을 나타내는 한계소비성향은 72.1%에서 72.9%로 높아졌다. 소득보다는 지출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진 것이다. 소비의 시대가 너무 성숙하게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宋泰燾기자〉

각종 회비와 부조금 등 품위 유지에 드는 잡비도 18만6백 원이나 됐다. 개인교류비와 의식비, 잡비 등 3개 항목이 소비지출증가를 주도한 셈이다. 차·골리며, 먹고·노는 소비행태가 번지는 징후이다.

전체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1백48만2천7백원으로 12.3% 증가했다. 여기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전년 동기보다 12.7% 증가한 38만9천5백원이다. 그러나 쓰지 않고 저축한 돈(흑자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흑자율은 26.3%로 0.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자가용 타고 외식 추세 두드러져

1분기 都市근로자 가계收支동향 통계청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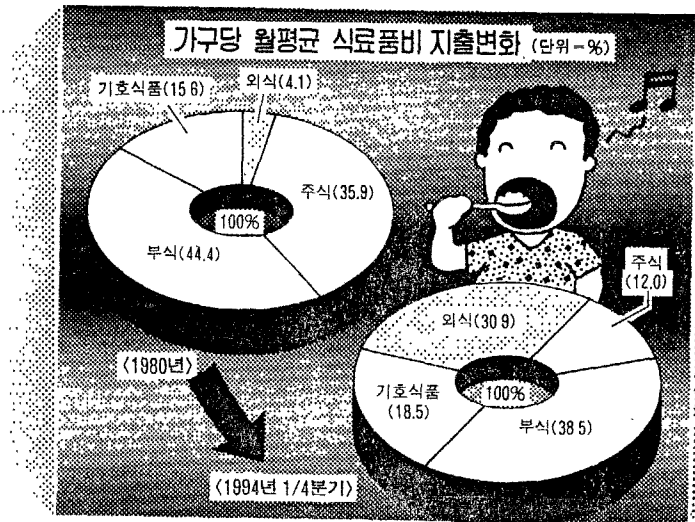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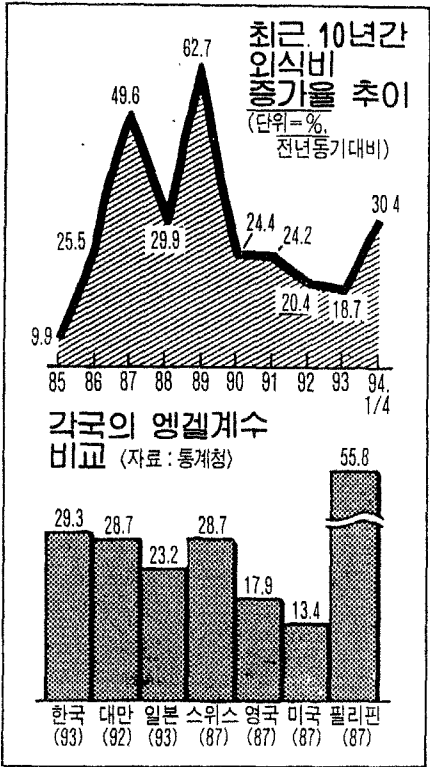
최근 경기활황장면이 지속되면서 자가용 구입과 외식비 지출이 급증해 토를막아선 높은 고소득층 가계 소비 패턴이 나타났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1·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의 따르면 이 기간 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소비는 각각 1백61만6천원과 1백22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1%와 12·1%의 비수향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그런데 지출은 특히 자가용 구입, 주택비와 외식비가 각각 60·3%, 30·3%의 비중을 기록, 소비패턴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특히 자가용과 사회전반의 활황이 겹쳐 주택비나 사정이다 소외계층이나 자가용 구입을 타고 외식을 즐기려는 경향이 뚜렷히 나타난 셈이다.



지난 10년간의 외식비 증가율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라면 당연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지난 80년 각국당 월평균
신용부담중 4.1%의 불
과하면 임시비 비중이 90
년엔 21.6%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28.1%까지
올라갔다. 또 다음 1.
4분기엔 이 비중이 30.
9%로 과거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불태 지난해 18.
7%도 못 채 내다갔던 임시
비중가율이 올 1.4분기
부상했다.

신용부담의 이같은 증가
로 인해 1.4분기 중 영월
계수, 즉 가처분소득 가운
데 신용부담이 차지한 비
중이 지난해 1.4분기의
26.9%에서 27.4%로 상
하가 열반대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부의 지출
내역을 보면 피복, 식량이
10.1%의 증가율을 보였
고 주거비 9.6%, 교육
유락 8.1%, 가구 가사

합계 소비성향이 불황 때
과소비로 볼 수 있게 돼 아
직은 그 향처 양도가 계통
계층의 실명이다. 1.4
분기의 경우 가처분소득
가운데 지출이 차지한
평균 소비성향이 73.7%
였던 반면 가처분소득 중
가액 중 소비지출이 약이
차지한 비중은 합계 소비
성향이 72.9%였다.

그런데 최근 합계 소비성
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

7% 이후로는 가장 높
게이다.

대기업자가구의 소비
이 확대되며 평균이 정
경기 회복이냐, 취업기회가
확대되면서 기업 취업인
원수가 1.39명에서 1.
49명으로 늘었다. 기업
의 근로수율이 크게 증가
한 데 따른 것이다.

가구추의 근로수율은 1
백 13만 5천 2백 원이며 전
년 동기 대비 6.3% 증가
에 그쳐 전체 가구수율에
서 차지한 비중이 74.
6%에서 70.1%로 줄어
들었다. 이 때문에 가구원
당 근로수율은 23만 7천 5백
원으로 45.1% 증가, 가
구소득 비중이 11.5%에
서 14.7%로 높아졌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의
올 평균 지출이 18.3% 중
가액인데 이 중 소비지출이
12.1%인 반면 세금이
자부담 등 비소비지출이
23.3%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평가연도
를 두고 보면 1994년은 38
만 6천 4백 원이던 출자
율에 비해 소득평가연도 미치지
는 12.7%의 증가에 그
쳤다.

경기好轉 반증...구소득형 패턴

월평균 161만원 벌어들여 122만원 써

税金·이자등 非소비지출 13%증

올 38.4%로 비록 신용부담
중임이긴 하지만 지난해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또 합
계 수입이 1.4분기의
과거와 비교하면 14.3%의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나타
냈고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38
만 6천 원 정도 높았다.

합계 소득 38.4%, 잠비 6.1%,
광물수입 3.4%, 보충
의료 2.1% 등이었다.

임의소득과 공방비를 제외
하면 이 중 소비지출이 그
다지 절반이 넘지 않는다. 영
수입이 늘지 않았고 영
수입이 늘지 않았다.

이런 출현에서 정부정책
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자세히 과거 상황을 따
져보면 과소비 경향의 이
태는 최근 나타나고 있지
않고도 여전히 과거에
비해 현상수준에 머무
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소
비의 우려는 줄어들어 있다
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최근 경기의 향조세는
수출증가의 속도가 빨라진
점영신과 향이 있다.

1.4분기 중 수출증가율
은 13.1%로 아직 그다
지 빠른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비례적
조였던 지난해보다 상승
율만은 수중이 될 때가 마
지 92년 4.4%분의 14

7.4%, 잠비 6.1%,
광물수입 3.4%, 보충
의료 2.1% 등이었다.

임의소득과 공방비를 제외
하면 이 중 소비지출이 그
다지 절반이 넘지 않는다. 영
수입이 늘지 않았고 영
수입이 늘지 않았다.

이런 출현에서 정부정책
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자세히 과거 상황을 따
져보면 과소비 경향의 이
태는 최근 나타나고 있지
않고도 여전히 과거에
비해 현상수준에 머무
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소
비의 우려는 줄어들어 있다
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최근 경기의 향조세는
수출증가의 속도가 빨라진
점영신과 향이 있다.

1.4분기 중 수출증가율
은 13.1%로 아직 그다
지 빠른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비례적
조였던 지난해보다 상승
율만은 수중이 될 때가 마
지 92년 4.4%분의 14

7% 이후로는 가장 높
게이다.

대기업자가구의 소비
이 확대되며 평균이 정
경기 회복이냐, 취업기회가
확대되면서 기업 취업인
원수가 1.39명에서 1.
49명으로 늘었다. 기업
의 근로수율이 크게 증가
한 데 따른 것이다.

가구추의 근로수율은 1
백 13만 5천 2백 원이며 전
년 동기 대비 6.3% 증가
에 그쳐 전체 가구수율에
서 차지한 비중이 74.
6%에서 70.1%로 줄어
들었다. 이 때문에 가구원
당 근로수율은 23만 7천 5백
원으로 45.1% 증가, 가
구소득 비중이 11.5%에
서 14.7%로 높아졌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의
올 평균 지출이 18.3% 중
가액인데 이 중 소비지출이
12.1%인 반면 세금이
자부담 등 비소비지출이
23.3%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득평가연도
를 두고 보면 1994년은 38
만 6천 4백 원이던 출자
율에 비해 소득평가연도 미치지
는 12.7%의 증가에 그
쳤다.

〈徐廷禮기자〉

차 구입·외식에 돈 '핑핑'

30%이상 늘어 소득증가율 앞질러...주부 취업소득 급증

1분기 가계수지 동향

지난 1/4분기중 도시노동자들의 가계소득은 1년 만에 매우 높은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늘어난 소득의 상당부분을 차를 구입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는 데 쓰는 등 소비행태가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식비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면 역으로 줄어들게 마련인 엔겔계수가 다시 높아지는 드문 현상도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1/4분기중 도시노동자 가계소득이 명목금액으로 월평균 1백61만6천4백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42만8천9백원에 비해 13.1%가 늘어났다고 17일 발표했다. 가계지출 총액은 1백22만6천9백원으로 13.3% 늘어났다.

인플레이 등을 감안해 산출한 실질소득 증가율도 6.2%에 이르러 지난해 평균 4.0%와 비교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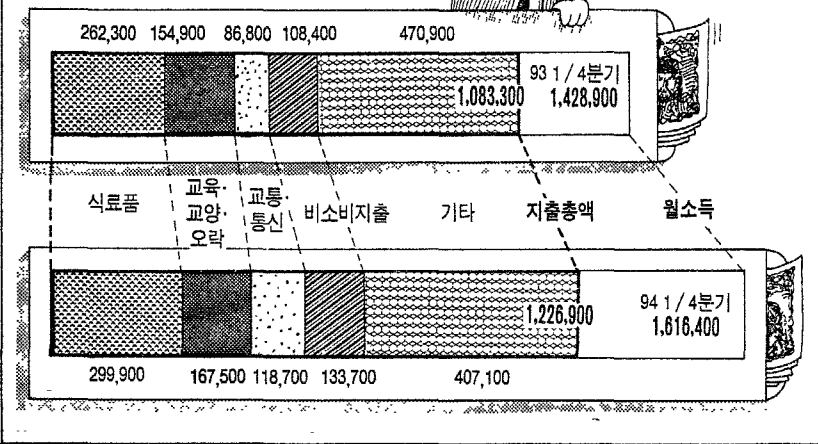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가계소득을 원천별로 보면 가구주 소득은 평균 6.3% 증가에 그친 반면, 가구원소득이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취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무려 45.1% 늘어났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확대됨에 따라 주부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지출에서는 최근의 급속한 승용차 붐을 타고 승용차 구입 및 유지를 위한 개인교통비가 무려 60.3% 늘어나는 등 교통통신비 증

도시근로자 가계 지출 구성 추이 (단위 : 원)



가율이 36.8%로 가장 높았다. 외식비도 30.3%나 증가해 식료품비 증가율을 14.3%로 높여놓았으며,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율인 엔겔계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높아진 27.4를 기록했다.

가구당 월외식비는 9만2천8백원으로 평균 주거비(3만7천7백원) 광열·수도비(5만8천2백원) 기구·

가사용품(8천8백원) 보건의료비(5만3천6백원) 등 대부분 항목보다 많았다.

반면 지난해 1/4분기중 27.3%가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던 교육비는 올해는 10.4% 증가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했다. 그래도 가구당 한달 평균 교육비는 11만3천3백원으로 식료품비(29만9천8백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한겨레신문
94. 6. 18

社說

消費패턴 변화와 政策과제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갈수록 해파리고 있다. 올 1·4분기중 도시근로자들의 가구당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3.1%가 늘어나며 비핵外食費는 30.3%나 증가하고 自家用구입 및 무차비지출은 60.3%나 늘었다. 소득증가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 보통인 엔셀계수, 즉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엔셀계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1분기의 26.9%에서 27.4%로 되며 높아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가계면 가계의 지출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웃돌면서 한계소비성향도 0.8%포인트가 높아져 증가하는 소득이 저축보다는 소비쪽에 더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결국 우선 쓰고 남는 것이 소비패턴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지출을 덜치게 어렵다.

소득이 늘어난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열심한 일하는 근면적인 젊은이들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은 소비증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소비비와 자가용을 늘리기 위한 지출이 이처럼 과격히 늘고 있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의식비만 해도 그렇다. 물가가 올랐는데도 있겠지만 불과 1년 남짓한 동안에 바깥에서 먹고 마시는 지출이 3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소비심리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신통이 해하기 어려

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신통치 못한 주위를 둘러보면 도대체 얼마나 별거에 자투리 축적만 생각하고 마시는가 싶을 정도도 外食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덕분에 이른바 의식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지목될 정도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의 경제사정의 비추어 과연 人的 物的 자원이 그런 쪽에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자가용 구입 및 유자비가 늘어난다는 것 역시 전반적인 소득증대에 따른 당연한 추세인데 틀림없다. 그러나 자가용을 늘리기 위한 지출이 불과 1년새 60% 이상이나 급증하고 있는 것은 過消費현상의 재연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미 주렘보다는 자동차 구입을 우선하는 소비패턴이 일반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자가용주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는 이제 「1家口 1車」가 아니라 「1人 1車」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처럼 급속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물론 정통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막연히 過消費를 적정하고 안 좋을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실정에 맞는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稅制를 비롯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物價 6월중 0.7% 상승

올들어 4.3% 기록 개인서비스·농수산물 주도

이달 물가는 당초 우려된 비인상심규율하된 농산물 대로 증고교수업료유치원 의수급차질때문에 지난달

보다 0.7% 뛰었다. 이달은 올들어 2.4분기 물가

했다.

이달 물가가운데 쌀값의 경우 농가에서 출하할 물

과 23.4%, 수박은 17.7% 급등했다.

새로 출하된 농산물의 특성상 애초의 수급차질을

전적으로 막진 어렵더라도 이미 예상한 만큼은 현저



■ 소비자물가추이

(단위: %)

30일 통계청의 따르면 이달 물가를 부추신 요인은 중고교수업료(0.1%), 개인서비스(0.17%), 농수산물(0.16%), 유류(0.03%), 접세(0.02%) 상승이다. 특히 중고교수업료와 유류가 상승한 반면 미역은 0.1% 하락했다. 이달 인플레이션은 0.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0.5%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나 집배노조를 통해 이르면 7월경에 물가 상승도 있지 않느냐는 점에 선의 수급이 바뀐다. 연중부터 물가를 둘러싸고 린과장(31.9%) 내렸고 제철을 맞은 참외와 토마토 역시 35.1%와 25.0% 하락했다. 33.1% 하락했다. 농산물은 일부의류가 격 상승으로 수확 뛰었고 석유류는 지난해의 원유도입가가 오르면서 영향을 받았다. 정유율을 가늠하는 잣대인 생산자물가도 0.4% 올라 연말 대비 1.6% 상승했다.

△文聖雄기자△

통계보도기사모음집

발행일 : 1994년 11월

발행인 : 이 강 우

발행처 : 통 계 청(T. 222-1829~30)

Ⓣ 135-08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인쇄처 : 강문인쇄사(294-6651~3)